



3 독일통일 총서

구 동독지역 재건 특임관 분야

관련 정책문서





3

독일통일 총서

구 동독지역 재건 특임관 분야 관련 정책문서



독일통일 총서 3

구 동독지역 재건 특임관 분야 관련 정책문서

발행일 2013년 12월

발행처 통일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전화 02)2100-5757

디자인·제작 애드밴 (전화 02-2264-8494)

CONTENTS



구 동독지역 재건 특임관 제도와 재건 현황

제1장 구 동독지역 재건(Aufbau Ost) 프로젝트의 도입	10
제2장 구 동독지역 재건 담당 특임관의 업무와 과제	13
제1절 동, 서독 관계 담당 부서	13
제2절 구 동독지역 재건 담당 특임관 제도의 필요성	15
제3절 특임관의 개념 및 종류	17
제4절 구 동독지역 재건 특임관 제도 개요	19
제5절 구 동독지역 재건 특임관의 과제	24
1. 정치적 통합과 연방정부 각 부처(部處) 간 업무조정	24
2. 구 동독지역 재건(Aufbau Ost) 프로젝트의 진행	26
3.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례보고서 작성	28
4. 구 동독지역 재건 재정지원 조달	29
제6절 독일 통일 비용	36

제3장 구 동독지역 재건과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례보고서	39
제1절 구 동독지역 재건(Aufbau Ost)	39
1. 구 동독지역 재건(Aufbau Ost)의 필요성	39
2. 공동체 이니셔티브(Gemeinschaftsinitiative) 제안	41
제2절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례보고서	46
1. 연례보고서 제출 동기	46
2. 1997년 이후 매년 연례보고서 개요	49
3. 연례보고서 정리	57
제3절 구 동독지역 재건에 대한 각 정당의 제안과 논쟁	58
1. 정당들의 구 동독지역 경제재건 촉진 요구	59
2. 사민당(SPD)/녹색당(Die Grünen) 정부 출범	61
3. 민사당(PDS)의 구 동독지역 재건 특임관의 활동 질문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변	62
4. 사민당(SPD)/녹색당(Die Grünen) : 독일 통일 10년 보고서	64
5. 기민당(CDU)/기사당(CSU) :	
독일 2015-현대 독일 모델 위한 구 동독지역 재건 제안	67
6. 자민당(FDP) : 구 동독지역 재건 10개 프로그램과 구 동독지역을 변화의 첨단지역으로 육성하자고 제안	67
7. 사민당(SPD)/녹색당(Die Grünen) : “구 동독지역에 지속적 성장을 보장” 제안	70
8. 좌파당(Die Linke)의 구 동독지역 재건에 대한 질의	72
9. 독일 통일 현황 2011년 연례보고서에 대한 연방의회 총회 토론	82
제4장 특임관 제도와 구 동독지역 재건 계획의 시사점	83

CONTENTS



구 동독지역 재건 특임관의 특징

들어가며	92
제1장 독일 연방정부의 특임관 제도	95
제1절 통일과 내독관계부 그리고 연방수상실의 역할	97
제2절 특임관 제도의 도입	102
제3절 구 동독지역 재건담당 특임관 업무의 특성	104
제4절 구 동독지역 재건담당 특임관의 과제	107
제5절 한국에 주는 시사점	115
제2장 역대 구 동독지역 재건 담당 특임관 인터뷰	118
제1절 요하네스 루데비히	118
제2절 로프 슈바니츠	133
제3절 크리스토프 베르그너	140
제4절 만프레드 슈틀페	146



구 동독지역 재건 특임관 분야 정책문서

문서 목록	174
문서 요약	187
1. 인터뷰(문서번호 I, II)	187
2. 문서요약(문서번호 1~144)	189

독일어 원문 자료(CD 수록)



표 목차

표 1-1) 구 동독지역 재건 담당 특임관	23
표 1-2) 연대협약 II, 카테고리 1의 연도별 액수	35
표 1-3) 매년 연례보고서에 나타난 구 동독지역의 주요 경제지표 비교	57
표 1-4) 연방정부 내 구 동독지역 재건 담당	73
표 1-5) 구 동독지역 관련 업무회의 조직	74
표 1-6) 부처별로 담당한 구 동독 관련 중점 업무	78
표 2-1) 역대 구 동독지역 특임관 명단	94
표 2-2) 연방정부와 구 동독지역 재건 담당 “신연방주 특임관”	116

구 동독지역 재건 특임관 제도와 재건 현황

한우창
(한양대학교 강의교수)



구 동독지역 재건(Aufbau Ost) 프로젝트의 도입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독일 통일은 외교적 노력과 흡수통일이라는 정치적 결단으로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다. 1990년 10월 통일 이후에 정치, 행정 부분의 통합 작업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던 반면에 경제 통합과 구 동독지역 재건 사업은 상당한 어려움이 대두되었다.

통일된 구 동독지역의 주민들은 같은 독일 국민이지만 구 서독지역 주민들과 현저한 경제수준의 격차에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구 동독지역의 경제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구 동독지역 재건 프로젝트를 실시하게 되었다.¹

구 동독지역 재건(Aufbau Ost) 프로젝트는 구 동독지역(신연방주)의 경제, 재정 독립성을 높이고 실업률을 감소시켜 구 동독지역의 생활수준을 구 서독지역의 수준과 동등하게 만들기 위한 통일독일의 경제정책이다. (문서번호 22-25)

신연방주지역은 구 동독 시절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에서 공산주의 계획경제와 냉전시대의 군사무기 제조로 인한 과대한 국방비 지출 등으로 국민경제가 거의 붕괴 상태였다.

¹ 구 동독지역 재건 프로젝트의 독일어 명칭은 Aufbau Ost이며 이는 “구 동독 지역의 재건”이 적합한 번역일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신연방주와 구 동독지역을 같은 의미로 혼용하고자 한다.

동, 서독 사이의 경제 격차가 컸던 이유로는 구 동독의 경제 상태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열악했기 때문이었다. 통일 이후 경제 통합 목표는 10년 이내에 동, 서독 지역의 평균 생활수준을 동등하게 만드는 것이었으나 구 동독 경제의 급속한 몰락으로 실업급여, 의료비 등 소비성 지출이 예상보다 과다하게 지출되었다.

독일 통일 직후 구연방주(구 서독 州)들은 신연방주를 연방주 간의 재정 균형분배(Finanzausgleich)제도에 포함시키기를 거부하였다. 그래서 독일 통일기금이 만들어졌으며 이 기금에는 구연방주들도 참여하였다. 1995년부터 연대협약 I이 시작되어서 신연방주도 연방주 간의 재정균형분배제도에 포함되게 되었다. 그러나 2005년부터 연대협약 I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연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여기서 구 동독지역 재건 특임관의 임무는 재정 수요의 규모를 측정하고 그것을 조정하는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²

구 동독지역 재건 프로젝트는 구 동독지역 주민들의 구 서독지역으로의 대량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독일 통일기금(Fonds Deutsche Einheit), 통일연대세(Solidaritätszuschlag), 연대협약(Solidarpakt) 등의 재원을 가지고 독일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서로 협력하여 시행하였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에서 구 동독지역 재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중심조직으로는 신연방주를 위한 특임관(Der Beauftragte der Bundesregierung für die Neuen Bundesländer)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구 동독지역에 막대한 자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구 동독지역 재건 계획이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여 구 동독 주민들의 불만은 높아 가고 구 동독지역은 경제난과 만성적인 고실업에 시달리고 있었다.³ 이에 야

² 크리스토프 베르그너(Christoph Bergner) 현 구 동독지역 재건 특임관이 2012년 7월 베를린 자유 대학 한국학과와의 인터뷰에서도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인터뷰 p. 3 참조

³ 녹색당(Die Grünen)을 중심으로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요청하는 제안서의 배경

당을 중심으로 독일의 정당들은 구 동독지역에 일자리 창출, 주거시설 현대화 및 주택시장 안정화, 청년층과 여성층 실업 극복, 구 동독지역 생산품 판로 개척, 인프라 확충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구 동독지역 재건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였다. 연방정부 측에서는 구 동독지역의 재건 사업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처해야 하며, 동, 서독의 생활수준을 완전히 동등하게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며 어디서나 구조적 차이는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에서는 독일 통일 이후 구 동독지역 경제 발전을 담당할 특임관 제도를 먼저 알아보고 구 동독지역 재건을 위해 지원된 재정(財政)의 조달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또한 구 동독지역 재건에 대한 독일 정당들의 여러 가지 제안들과 정치적 논쟁을 분석하여 한반도 통일 이후 재정조달 방법과 경제적 통합에 대하여 참고자료로 삼고자 한다.

.....
 설명문 참조(문서번호 16).

제2장

구 동독지역 재건 담당 특임관의 업무와 과제

제1절 동, 서독 관계 담당 부서

1949년 5월 서독은 독립국가를 건국하면서 분단국임을 감안, 헌법(Verfassung)이라는 표현 대신에 기본법(Grund Gesetz: GG)이라는 명칭으로 공포한 법은 독일이 통일되기까지 과도기 동안 유효한 헌법이며 독일이 통일 되면 독일 국민 전체의 의사에 따라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기로 하였다.

서독은 향후 통일에 대비하여 1949년 기본법 23조에 “이 기본법은 우선 바덴, 바이에른, 브레멘, 그로스-베를린, 함부르크, 헤센, 니더작센, 노드라인-베스트팔렌, 라인란트-팔츠, 쉘레스비히-홀스타인, 뷔템베르크-바덴 그리고 뷔템베르크-호엔졸렌주에 효력을 발생한다. 독일의 다른 주가 독일연방공화국에 가입하면 그 주에도 기본법은 효력을 발휘한다”라고 규정하여 동독이나 기타 다른 지역이 서독에 편입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다.⁴

또한 기본법 146조에서는 “이 기본법은 독일 국민의 자유로운 결정으로 제정된 헌법이 발효하는 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고 하여 독일 통일이 완수되

.....

⁴ Hesse, Joachim Jens und Ellwein, Thomas : Das Regierungssystem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7. Aufl. Band 1, p. 23 참조

면 새로운 헌법을 제정할 수 있게 하였다.⁵

동, 서독이 각각 독립국가로 건국한 이후 동, 서독 간의 접촉, 교류를 담당하는 부서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시각을 보였다. 서독은 양독(兩獨) 간의 관계를 외국 간의 관계가 아니라 민족 내부의 특수 관계로 보는 반면에 동독은 양독 관계를 서로 별개의 국가, 즉 국제적 관계로 보았다. 서독은 양독 간의 문제를 내독간(innerdeutsche)의 문제로 접근하였지만 동독은 양독 간의 문제를 외국 간의 문제와 동일시하였다.

이러한 양측의 입장 차이는 동, 서독 정부의 담당 부서에서도 그 차이점을 볼 수 있다. 서독은 총리실에 통일 정책 담당관을 두고 각 부처의 통일 정책을 조정하였고, 동독과 실질적 접촉은 내독관계부(內獨關係部)를 통해서 하였고, 총리실에서는 동, 서독 관계 발전을 위한 여러 정책을 수립, 시행하였다.

동독은 서독을 하나의 외국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동독 외교부의 서독 담당관실이 당서기국과 함께 독일문제를 다루었다. 또한 양측의 상주대표부(ständige Vertretung)도 서독은 총리실에 동독은 외교부에 소속되었다.⁶

1949년 서독 건국 후에 동독과의 관계 및 통일 문제를 담당하는 부서로 “전 독일문제 담당부(Bundesministerium für gesamtdeutsche Fragen)”가 창설되었다.

그러나 이 부서의 명칭은 1969년 10월 빌리 브란트(Willy Brandt) 총리 시절 동방정책(Ostpolitik)으로 동독을 하나의 외국으로 보지 않고 동, 서독

⁵ Hesse, Konrad : Grundzüge des Verfassung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20. Auflage, C.F. Müller Verlag, Heidelberg 1999, p. 36. 독일 통일 협상 당시 볼프강 쇼이블레의 회상에 의하면 기본법 146조에 의거하여 통일을 추진할 경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동, 서독이 불안정해지며, 유럽 인접국의 안정을 위협하는 우려 때문에 기본법 23조에 의거해 조속한 통일을 서둘렀다고 밝혔다. 볼프강 쇼이블레: (한우창 번역) : 나는 어떻게 통일을 흥정했나, 서울, 동아일보사, 1992, p. 32 참조

⁶ 김영탁: 독일 통일과 동독 재건과정, 서울, 도서출판 한울, 1997, p. 87

관계를 내부의 하나의 특수관계로 여겼기 때문에 “전 독일문제 담당부”를 “내독관계부(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서독 정부에서 동독과의 관계는 “내독관계부”에서 담당하였으나 실제적인 동독과의 관계에 대한 정책 결정은 주로 총리실에서 이루어졌다.

이 “내독관계부”는 1990년 독일 통일 이후에 해체되어 동독 문제를 담당하는 공식적인 법적 기능은 “연방내무부”로 이관되었으며, “내독관계부” 해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⁷

구 동독지역의 경제 재건을 위한 업무를 담당할 연방 부서가 없었다는 사실은 독일 각 주의 자치권을 인정하는 연방주의에 입각한 연방정부의 각 부처와 각 주 간의 이기주의에 기인한다는 주장이 있고, 동독이 기본법 23조에 의거하여 서독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기본법을 수정, 담당 부처를 신설할 만한 법적 근거가 미미했다는 주장도 있다.⁸

또한 독일 통일 총리인 콜 총리가 통일 이후의 구 동독지역의 경제재건 문제를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여 총리실에서 그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오판하였다는 주장도 야당인 사민당(SPD)에서 제기되었다(문서번호 5).

제2절 구 동독지역 재건 담당 특임관 제도의 필요성

1990년 10월 3일 동독이 서독에 서둘러 편입하여 이루어진 통일 이후에

.....

⁷ 독일 통일 당시 연방 내독관계부 발터 프리스니츠(Walter Prinsnitz) 차관은 내독관계부가 통일 이후 동독의 건설을 담당할 부서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인터뷰-구 동독지역 재건 특임관, 베르그너 내무부 차관, 2012. 7.9. p 2.

⁸ 동독이 서독의 기본법 23조에 따라 새로운 주로 편입되는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새로운 연방주의 건설을 위한 정부기구를 설립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Hänsel, Heiko : 동서독 통합 관련 기관 편람, 통일부, 2006 참조

동, 서독은 서로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부족하였다. 서독은 동독이 그래도 동부 유럽 국가들 중에서 제일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이고 사회체제도 안정된 국가로 인식하고 있었다. 동독에서도 서독은 세계에서 2~3위 하는 막강한 경제력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동독도 머지않아 서독처럼 경제적으로 풍요해지고 또한 안정된 정치체제를 가지게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환상은 통일 이후 서서히 깨지기 시작하여 몇 년 후에는 “동독의 모든 상황이 이렇게 나쁠 줄은 정말 몰랐었다”라는 서독 사람들의 탄식이 나오기 시작하였고⁹ 동독이 서독처럼 정치적, 경제적으로 안정되기 위해서는 해결되어야 할 숙제들이 너무 많고, 그의 해결을 위한 시간과 재정적 부담도 예상보다 엄청나게 더 소요될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1990년 통일 초창기에는 동독의 건설, 경제지원 등 구체적인 통일 이후의 계획이 준비되지 않아 우왕좌왕할 뿐이었으며, 서독의 성공적인 제도를 그대로 동독에 적용시키도록 하는 방법만이 최선의 방법처럼 생각되었다. 그러나 이런 시도는 정치, 경제제도에 어느 정도 안정감은 주었는지 모르나 효용성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독일의 많은 정치인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제안들을 제시하였다.¹⁰

-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 주지사 만프레드 슈톨페(Manfred Stolpe)는 신연방주를 “특별 경제지역”으로 선포하여 특별 지원하자고 제안하였다.
- 바이에른(Bayern)주 에드문트 슈토이버(E마르크und Stoiber) 주지사는 구 동독지역을 “특별법 적용지역”으로 선포하여 법적, 행정적인 절

⁹ 서독 정부에서 동독의 국가부채나 국가자산 상황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있지 못했다고 1994년 테오 바이겔(Theo Waigel) 당시 재무장관이 시인하였다. Müller, Uwe(이봉기 역) : 대재앙 통일(Supergau Deutsche Einheit), 서울, 2006, p. 51

¹⁰ 베르너 페니히/이은정, “연방정부의 구 동독지역 재건 특입관”, pp. 13-14 참조

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튀링겐(Thüringen) 주지사 디터 알트하우스(Dieter Althaus)는 연방정부의 각 부처마다 “구 동독지역 담당관(Ostbeauftragter)”을 설치하자고 제안하였다.

정치가들의 이런 제안은 각각 의미가 있을 것이나 특별 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은 통일 이후에도 지역적 분리로 오해될 위험이 있고, 각 부처에 구 동독지역 담당관을 두자는 제안은 업무의 전문성은 인정되나 종합적인 집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제안들은 채택되지 않았으나 정치적 통일 이후 사회적, 경제적 통합의 한 방법으로 참고할 만한 내용이다.

제3절 특임관의 개념 및 종류

특임관이란 “위임자가 특별하게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는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기타 관공서에서도 지정할 수 있는 업무 담당자”라고 사전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¹¹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대통령이 지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무임소장관, 즉 특임장관을 임명한 예가 있으며 또한 산림청이나 지방 관공서에서도 특수한 업무를 부여하는 특임관을 지명하는 경우가 있다.¹²

독일에서는 여러 정치 분야에서 특임관을 임명하는 경우가 많았다. 연방 정부 뿐만 아니라 주정부 또는 정부 각 부처에서도 중요하게 부상하는 정치 분야이거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에 특임관을 별도로 임명하

¹¹ Fuchs, Michael : “Beauftragter” in der öffentlichen Verwaltung, Berlin, 1985, p. 8

¹²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처리하는 데 부서를 따로 만들기에는 곤란하고 해당 업무를 일시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신설한 임시적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여 독립기관으로 자문 역할을 하며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처리하고자 하였다.

독일의 대표적인 특임관 제도에는 연방총리실 산하의 “이주민, 피난민의 사회통합 담당 특임관”, “문화, 언론 담당 특임관”, “구 동독 비밀경찰 문서 담당 특임관” 등이 있으며 외교부 산하에는 “인권정책과 인도적 지원 특임관”, “독일-프랑스 협력관계 특임관” 등이 있으며 보건부에는 “환자들의 관심사 담당 특임관”, 법무부에는 “인권문제 담당 특임관” 등 각 부처에도 많은 특임관이 존재하였다.¹³

또한 독일 법령에 의거한 “쓰레기 처리 담당 특임관”, “돈세탁 방지 담당 특임관”, “부패 방지 담당 특임관”, “동물보호 담당 특임관” 등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임명한 “자전거 담당 특임관”, “남녀평등 담당 특임관” 등이 현재에도 활동하고 있다.¹⁴

독일 통일과 관련해서 임명된 특임관은 “구 동독지역 재건 담당 특임관” 이외에도 “독일 수도이전 담당 특임관”이 있었다. 독일 통일 이후 1994년 4월 연방의회에서 베를린으로 수도 이전법이 통과되자 “베를린 이전과 본(Bonn) 보상 담당 특임관”이 임명되어 수도 이전을 계획에 따라 진행하였다.¹⁵

독일민주공화국(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 동독)이 1990년 10월 3일 독일연방공화국(Bundesrepublik Deutschland : 서독)에 흡수 통합된 후에 통일문제를 전담할 부처를 창설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통일 관련 부서, 즉 “통일부”를 신설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동, 서독의 통일 방식이 서독의 헌법인 기본법(Grund Gesetz : GG) 146조에

¹³ Hopp, Helmut. Beauftragte in Politik und Verwaltung. Bonn, 1993. p. 16

¹⁴ Beauftragter를 특임관으로 이해한다면 Koordinator는 조정관으로 번역이 가능하다. 조정관은 특임관보다 직급이 낮으며 담당업무도 한시적인 것이 많고(예: 2006 축구 월드컵 담당 조정관 등) 일반적인 것보다 특수한 경우에 조정관을 임명한다.

¹⁵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베르너 페니히/ 이은정, “연방정부의 구 동독지역 재건 특임관”, pp. 5-6 참조

의거하여 새로운 통일헌법을 제정하여 통일한 것이 아니라 기본법 23조에 의거, 동독지역이 서독의 새로운 주(州)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독일식 ‘통일담당부’를 새로 만들 법적인 근거가 부족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¹⁶

제4절 구 동독지역 재건 특임관 제도 개요

독일 통일 이후 정치적 통합은 용이하게 이루어 졌으나, 가장 큰 문제가 동, 서독의 지역적 격차를 줄이는 문제였다. 같은 독일연방공화국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삶의 질이 서독과 동독 지역에서 많은 격차가 있다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통일, 통합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통일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동, 서독 간의 지역 격차가 벌어진다면 동독 지역의 주민들이 서독으로 대량 이주하는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 동독 지역의 발전을 신속하게 추진할 정책이 절실하게 요구되었으며 이에 “신연방주(구 동독지역) 재건(Aufbau Ost)” 프로그램이 탄생하였다.¹⁷

“구 동독지역 재건”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 동독지역 재건 특임관”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가 공식적으로 도입된 것은 게어하르트 슈뢰더(Gerhard Schröder) 총리 시절이었지만 그 이전에도 “구 동독지역 재건 담당 조정관(Koordinator)” 또는 “연방 특임관” 등의 이름으로 구 동독지역의 경제 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은 존재하였다.

내독관계부(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가 통일 이후 구 동독지역의 경제 발전, 재건 업무를 맡을 전담 부서가 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였으나 헬무트 콜(Helmut Kohl) 총리는 그의 측근인 요하네스 루데비히(Johannes Ludewig)를 연방총리실 구 동독지역 재건

¹⁶ Hänsel, Heiko : 동서독 통합 관련 기관 편람, 통일부, 2006

¹⁷ 앞으로 “신연방주”라는 개념과 “구 동독(지역)”이라는 개념을 혼합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두 개념은 동일한 의미이지만 경우에 따라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 때문에 단순한 반복을 피해 혼용하고자 한다.

담당 조정관으로 임명하고 1995년에는 그를 연방경제부 차관 겸 연방정부의 구 동독지역 재건 담당 특임관으로 임명하였다. 콜 총리의 절대적 신임을 받았던 루테비히는 총리실에서 독일 통일에 관한 각 부처의 업무를 조정하며 비교적 많은 일을 추진할 수 있었다.

1997년 루테비히의 후임으로 루디 가일(Rudi Geil)이 임명 되었으며 가일은 연방경제부 차관으로 주로 신연방주의 경제, 건설 업무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당시 야당이었던 사민당(SPD)은 구 동독지역 담당 특임관의 소속이 총리실에서 연방경제부로 이관된 것은 통일 이후 연방정부가 동독지역의 경제부분에만 너무 치중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문서번호 34).

1998년 9월 27일 연방의회 총선거에서 콜 총리의 기민당(CDU)/기사당(CSU)-자민당(FDP) 연립정부가 패배하고 사민당(SPD)-녹색당(Die Grünen) 연립정부가 출범하자 게어하르트 슈뢰더 총리는 총리실 차관이었던 롤프 슈바니츠(Rolf Schwanitz)를 구 동독지역 재건 특임관으로 임명하였다(문서번호 41).

지난 정부, 콜 총리에게 신연방주 특임관의 소속 부처를 총리실로 하고 많은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사민당(SPD)이 집권하자 특임관 제도의 소속 부처는 경제부처에서 다시 총리실로 환원되었다.

슈바니츠는 신연방주 담당 특임관실이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독립적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각 부처로부터 통일 및 구 동독 지역의 정보를 수집하여 자체적으로 정책을 결정하였다. 슈바니츠는 연방정부의 독립된 장관은 아니었지만 신연방주에 대하여 각 부처의 업무를 조정할 기능은 보유한 셈이었다.

슈뢰더 총리 아래 구 동독지역 재건 특임관의 주된 업무는 구 동독지역 재건 상임위원회, 연대협약의 연장 문제, 구 동독지역의 도시개발 등이 주를 이루었다. 슈뢰더 총리는 슈바니츠의 특임관에 많은 신임과 지원을 하여 슈바니츠는 총리 주재 회의에도 참석할 수 있었으며 총리의 재정적 지원도 많

이 받았다.¹⁸

특히 슈바니츠는 1999년 내각에 통일 각료위원회를 창설하여 신연방주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조직으로 활용하였으며 정부 각 부처 간의 협력, 조정 역할을 하였다. 또한 연방의회의 구 동독지역 재건 상임위원회는 신연방주 건설과 관련된 부처 간 영역을 넘어서는 주제를 의회에서 다루기 위해 1998년부터 업무를 시작하였다.

슈바니츠는 통일 이후 90년대에 구 동독지역 건설을 담당할 독립된 부처가 신설되기를 희망하였으며 구 동독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결정할 고유한 임무를 가진 부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의 “내독관계부”가 확대, 개편되어 구 동독지역의 정책을 총괄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통일 당시 야당인 사민당원(SPD)이었던 슈바니츠는 독일 통일 이후 통일 관련 새로운 부처가 신설되지 않자, 기민당(CDU) 콜 총리가 구 동독지역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비판하였다.

2002년 구 동독지역 재건 특임관 제도는 만프레드 슈톨페(Manfred Stolpe) 연방 교통건설주택부 장관(Bundesministerim für Verkehr, Bau- und Wohnungswesen)에게로 이관되었다. (문서번호 78)

그 이유로 구 동독지역 재건 특임관의 주요 임무가 거의 해결된 상태라고 연방정부가 판단하여 그 기능을 총리실에서 건설교통부로 인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슈톨페는 연방정부의 구 동독지역 재건 특임관실을 총리실에 두지 말고 전문 부처에 두기를 슈뢰더 총리에게 제안하였다. 재무부, 환경부, 노동부 등 각자 전문영역과 재원 그리고 조직을 갖고 있는 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내각회의에서 총리실 소속의 구 동독지역 재건 특임관에게는 신연방주 관련

.....

¹⁸ 인터뷰: 볼프 슈바니츠-전 연방정부 구 동독지역 재건 특임관, 2012.7.12. p. 3

사안을 관철시키는 것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구 동독지역 재건 특임관을 부처의 장관이 담당하도록 하라고 제안한 것이다. 그것도 실권이 있고 재원을 움직일 수 있는 부처의 장관이어야만 한다고 하였다. 그럴 경우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처는 연방정부의 재정을 담당하는 재무부 또는 인프라 구축을 담당하는 건설교통부였다. 건설교통부는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진행되어야 할 단순히 도로건설 뿐만 아니라 도시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관장하였으며, 각 분야마다 하위조직을 갖고 있었다.

슈톨페가 연방 건설교통부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구 동독지역 재건 특임관직을 겸임하였던 3년 간 연방정부의 건설교통부는 사업 중에서 어느 부분이 신연방주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신연방주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해야만 하는지 각별히 열정을 가지고 추진하였다고 그는 술회하였다.¹⁹

이러한 특임관의 소속부처 이관은 장, 단점이 공존하였는데 장점으로는 교통건설부 장관이 특임관을 겸직함으로써 자신의 고유한 부처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와 반해서 단점으로는 교통건설부 한 개의 부처에 속하기 때문에 여러 부처의 경계를 넘는 주제를 취급할 때 총리실에 있을 때처럼 조정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는 점이다.

2005-2009년까지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총리의 기민당(CDU)-사민당(SPD) 대연정 시기에는 볼프강 티펜제(Wolfgang Tiefensee)가 교통건설부 장관으로 구 동독지역 재건 특임관을 겸직하다가 2009년 구 동독지역 재건 특임관의 임무는 다시 연방내무부(Bundesministerium des Innern)로 이관되었다(문서번호 124).

2009년부터 2011년 3월까지 연방 내무부 장관 토마스 드 메지에르(Thomas de Maiziere)가 특임관을 겸직하다가 2011년 3월부터 현재까지 크리스토프 베르그너(Christoph Bergner) 연방 내무부 차관이 구 동독지역 재

¹⁹ 만프레드 슈톨페 인터뷰, 베를린 자유대 한국학과, 2013년 11월 4일 참조.

건 담당 특임관을 맡고 있다.

구 동독지역 재건 특임관 제도가 연방정부의 독립부서로 확실히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거나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특임관의 소속부처가 변경되었고 직급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되기도 하였다.

구 동독지역 재건 담당 특임관을 도표로 보면 아래와 같다.

표 1-1) 구 동독지역 재건 담당 특임관

이름	재임 기간	당시 연방총리	소속 정당	소속 부처
요하네스 루데비히 (Johannes Ludewig)	1991-1995	헬무트 콜	기민당 (CDU)	총리실 구 동독지역 재건 담당 조정관
요하네스 루데비히 (Johannes Ludewig)	1995-1997	헬무트 콜	기민당 (CDU)	연방경제부 차관, 구 동독지역 재건 연방정부 특임관
루디 가일 (Rudi Geil)	1997-1998	헬무트 콜	기민당 (CDU)	연방경제부 차관, 구 동독 재건(Aufbau Ost) 담당 연방정부 특임관
롤프 슈바니츠 (Rolf Schwanitz)	1998-2002	게어하르트 슈뢰더, (사민당(SPD)-녹색당(Die Grünen) 연립정부)	사민당 (SPD)	총리실 차관
만프레드 슈톨페 (Manfred Stolpe)	2002-2005	게어하르트 슈뢰더, (사민당(SPD)-녹색당(Die Grünen) 연립정부)	사민당 (SPD)	연방교통건설 주택부 장관
볼프강 티펜제 (Wolfgang Tiefensee)	2005-2009	앙겔라 메르켈 (기민당(CDU)-사민당(SPD) 대연정)	사민당 (SPD)	연방교통건설 도시개발부 장관
토마스 드 메지에르 (Thomas de Maiziere)	2009-2011	앙겔라 메르켈 (기민당(CDU)-자민당(FDP) 연립정부)	기민당 (CDU)	연방 내무부 장관
크리스토프 베르그너 (Christoph Bergner)	2011-213	앙겔라 메르켈 (기민당(CDU)-자민당(FDP) 연립정부)	기민당 (CDU)	연방 내무부 차관
Iris Gleicke 이리스 글라이케	2013-현재	앙겔라 메르켈 (기민당(CDU)-자민당(FDP) 연립정부)	기민당 (CDU)	경제·에너지부 정무차관

제5절 구 동독지역 재건 특임관의 과제

독일 연방정부에서 구 동독지역 재건 담당 특임관에 대해 공식적인 법령과 제도를 도입한 것은 1998년 슈뢰더 총리의 사민당(SPD)/녹색당(Die Grünen) 연립정부 시절이었다. 구 동독지역의 지속적인 경제건설과 연방정부와 각 주 사이에 조정이 필요하였기에 슈뢰더 총리는 1998년 10월 27일 조직령을 발표하고 구 동독지역 재건 담당 특임관 직을 공식적으로 신설하였다.

이 직위의 공식명칭은 “신연방주를 위한 연방정부의 특임관(Beauftragter der Bundesregierung für die Neuen Bundesländer)”이다.

특임관의 과제는 “신연방주에 관련된 업무의 조정”이 가장 중요한 임무이다. 구 동독지역 재건(Aufbau Ost)을 위한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연방의 관할에 속하는 구 동독지역 재건과 관련된 업무를 조정하며 구 동독지역과 연관된 사안에 대해 부서권을 갖는다.

또한 구 동독지역 재건 특임관으로서 연방정부 내각에서 구 동독지역 재건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였으며 시민, 단체, 기업 등에 의해 제기되는 구 동독지역 재건 관련 질문에 답변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초창기 구 동독지역 재건 특임관의 주요 업무는

1. 구 동독지역 재건 관련 문제를 각 부처 간 업무조정을 통해 해결하고 공동과제의 원활한 진행을 추진함
2. 구 동독지역 재건(Aufbau Ost) 프로젝트의 진행
3. 연방의회에 제출할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례보고서 작성 등이었다.²⁰

1. 정치적 통합과 연방정부 각 부처(部處) 간 업무조정

1990년 10월 4일 베를린 제국 의사당에서 전 독일 연방하원 구성 당시 하

²⁰ 베르너 페니히/이은정, “연방정부의 구 동독지역 재건 특임관”, p. 20

원의원 663명 중에서 144명이 구 동독 출신이었으며 로타 드 메지에르(Lothar de Maiziere) 전 동독 총리 등 구 동독 정치인 5명이 연방정부의 특임 장관으로 임명되었다.²¹

구 동독은 중앙집권적 정치체제로 주의회(州議會)가 없었기 때문에 통일 후 구 동독지역 5개 주에 주의회를 구성하는 일이 시급하였다. 통일 직후 1990년 10월 14일 실시된 구 동독지역 주의회 선거에서 기민당(CDU)이 4개 주, 사민당(SPD)이 1개 주에서 승리하였다.²²

독일 통일 이후에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과 신연방주 지역의 건설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전담부서가 없었기 때문에 구 동독지역 재건 특임관의 역할은 정부 각 부처의 통일 관련 및 구 동독지역 재건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조정하는 능력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전담 부서가 없는 상황에서 각 부처의 업무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를 장악할 어느 정도의 권력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콜, 슈뢰더 연방총리는 자신이 절대적으로 신임하는 인사를 특임관으로 임명하여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였다.

연방총리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었지만 특임관이 각 부처와 통일문제, 신연방주 건설 문제 등을 효율적으로 협력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구 동독지역 재건을 담당하는 각 부처 간의 공동 협력은 관할 영역과 업무 구조문제 등으로 어려움에 노출 되었으나 연방정부로서도 구 동독지역 재건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인력이나 부서를 창설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

.....

²¹ 독일 기본법(GG) 64조에 의거하여 로타 드 메지에르 이외에도 사비네 베르크만-폴(Fr. Dr. Sabine Bergmann-Pohl), 귄터 크라우제(Dr. Günther Krause), 라이너 오르트렐(Prof. Rainer Ortleb), 한스 요하임 발터(Prof. Hans-Joachim Walther) 등이 특임장관으로 임명되었으나 이들의 역할은 그리 크지 않았다.

²² 통일 이후 처음 치루어진 주의회 선거에서 기민당(CDU)은 작센주(Sachsen), 튀링겐주(Thüringen), 작센-안할트주(Sachsen-Anhalt),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Mecklenburg-Vorpommern)에서 승리하였으며, 사민당(SPD)은 브란덴부르크주(Brandenburg)에서만 승리하였다.

었다(문서번호 106, 107, 109).

각 부처 간 구 동독지역 재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서로의 협력, 조정이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부처 이기주의, 어려운 업무 서로 회피하기, 유사한 업무의 중복 집행 등 관료주의의 전형적인 폐단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료주의적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에 1995년 연방정부의 통일 5주년 기념 보고서에서 “통일 이후 신연방주 건설의 가야할 길의 절반을 벌써 왔다”고 아주 낙천적으로 기술하기도 하였다.²³

2. 구 동독지역 재건(Aufbau Ost) 프로젝트의 진행

1990년 통일 당시 동독의 경제 상황이 매우 열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독은 화폐, 경제, 사회적 통합을 추진하였다. 동독의 산업계 물품 생산성은 70% 수준으로 감소하여 서독은 동독 경제가 서독에서 분리되는 것을 막아야 했다.

구 동독지역 재건 비용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에 “독일 통일기금(Fonds Deutsche Einheit)과 1, 2차의 연대협약(Solidarpakt)의 조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구 동독지역 재건 프로젝트는 2차 연대협약이 끝나는 2019년에 종료된다.

독일 통일기금이 1994년까지 1,607억 마르크를 지원하고 1995년부터 구 동독지역 재건(Aufbau Ost) 프로젝트가 시작되어 연대협약 I 기금이 1995년~2004년까지 지원되었다.²⁴

매년 연방정부가 연방하원에 제출하는 독일 통일 현황과 구 동독지역 재

²³ 1995년 9월 29일 연방정부는 “신연방주 지역 건설-가야할 길의 나머지 반-현황과 전망”(Aufbau Ost-Die zweite Hälfte des Weges-Stand und Perspektiven)이라는 보고서에서 구 동독 지역의 건설 재건 현황을 낙관적으로 보고하였다. 이에 야당인 녹색당(Die Grünen)과 사민당(SPD)은 향후 구 동독지역 주 지역에 대한 재건 현황을 매년 보고하라는 연례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였다. 문서번호 15, 16, 17 참조

²⁴ 베르너 페니히/이은정, “연방정부의 구 동독지역 재건 특임관”, pp. 21-22 참조

전(Aufbau Ost)에 대한 보고서에 의하면 긍정적 발전과 경제성장에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이 지적되어 있다.

특히 2007년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은 3%이며 실업률은 1.4% 감소하였고 동독의 경기지수는 서독과 비슷한 2.4%이었으며 노동시장도 빠르게 개선되고 있었다(문서번호 112).

2008년 구 동독지역 담당 특임관이었던 볼프강 티펜제 장관은 “할 것도 많고 많은 성과도 있었다(Viel erreicht, viel zu tun)”고 묘사하였다.

이때 동독의 실업률은 18%에서 12%로 감소하였고 경제성장률도 독일 전체 평균 수치보다 높았다.

2008년도에는 구 동독 지역이 구 서독지역 전체 경제성과의 70% 정도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장기실업, 서독보다 낮은 임금, 연금문제 등으로 “이등국민”(Bürger zweiter Klasse)으로 여기는 동독의 젊은이들과 전문 직업인 등 25% 정도가 서독으로 이주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문서번호 116).

서독 지역에서도 너무 과도한 통일세금으로 주정부의 재정이 파산할 정도라는 불만이 높아 동, 서독 주민들 사이의 사회적 내적 통합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대두되었다.

2012년 노드라인 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 주지사 하네로레 크라프트(Hannelore Kraft)가 구 동독지역 건설(Aufbau Ost) 프로젝트를 다시 재조사를 해야 한다며, 구 동독지역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구 서독의 구조가 취약한 주(州)도 구 동독과 같이 평등하게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⁵

여러 경제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구 동독지역이 구 서독과 같은 수준으로 발전하도록 많은 지원과 계획이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 동독 지역의 경제는 정체상태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

²⁵ 크라프트 주지사는 구 동독지역에 너무 많은 지원으로 구 서독지역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 이제는 구 서독지역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례보고서 작성

독일 통일 5년이 지난 후에도 많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통합 성과에도 불구하고 동, 서독 간의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동독인들은 “이등국민”으로 느끼게 되었다.

이에 녹색당(Die Grünen)과 “연합 90(Bündnis 90)”은 1995년 10월 10일 연방정부에 통일 이후 구 동독의 발전 과정을 매년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제안하게 된다. 녹색당과 “연합 90”은 연방정부에 특히 구 동독지역 생활 개선을 다음과 같이 요구하였다(문서번호 16).

- 신속한 일자리 창출, 특히 여성에게 균등한 일자리 제공
- 장기적 연금 보장
- 일자리 창조에 도움이 되는 투자기업에 경제적 지원
- 구 동독 생산품의 판매시장 확보
- 친환경적인 농업 개발 및 지원
- 소유권 문제의 조속한 해결
- 동, 서독 주민들의 법적 평등 보장
- 사회주의 독재정권의 희생자에 대한 효과적 보상 등을 요청하였다.

또한 사민당(SPD)도 통일 5년 후에도 동, 서독 간의 격차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고 비판하며 연방정부는 매년 독일 통일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기술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여기에 나타난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토론하자고 제안하였다(문서번호 17).

이 보고서에는

- 노동시장의 상태
- 구 동독지역의 경제재건 현황
- 구 동독지역 여성들의 경제적, 사회적 상황
- 구 동독지역 청소년들의 직업교육을 포함한 향후 전망
- 구 동독지역의 환경보호 문제
- 동, 서독 주민들의 독일 통일에 대한 입장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²⁶

1997년 이후 매년 연방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연례보고서에 관해서는 후반부에서 상세히 기술하기로 한다.

4. 구 동독지역 재건 재정지원 조달

구 동독지역 재건 특임관의 주요한 업무 중 하나는 구 동독지역 건설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정하고 준비하는 것이었다. 이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각 연방주 간의 재정균형분배(Finanzausgleich)제도가 중심적 역할을 하였다. 구 동독지역 건설을 위해 필요한 재정을 조달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기금을 활용하였다.

독일 통일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사용되는 방법은 채권발행을 들 수 있다. 공채 발행은 단기적으로 국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정치가들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다.

통일 당시 서독의 공공재정 상태는 매우 건실하여 공채를 쉽게 발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공채는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있으며 국가재정의 신

.....

²⁶ 사민당(SPD)의 요구도 녹색당, 연합90과 유사하게 제일 먼저 구 동독지역의 일자리 창출, 여성 지위 향상과 평등권, 구 동독의 환경문제 개선 등을 포함하고 있다.

회도와 관련되어 있어 함부로 발행할 수는 없다.²⁷

특히 유럽연합(EU)의 마스트리히트조약에 의하면 유로존(유로화 사용지역) 가입조건으로 정부의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 이하여야 하고 정부의 공공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60% 이하여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공채 발행에 많은 제약이 있다.

이외에도 통일 비용을 조달하는 방법에는 세금 및 각종 사회 보험료의 인상, 예산절감 등을 들 수 있다.

1) 독일 통일기금(Fonds Deutsche Einheit)

독일 통일기금은 1990년 5월에 체결된 화폐통합 조약에 근거하여 연방정부 특별예산으로 설립되었다. 이 기금의 목적은 1994년 연말까지 과도기 동안 구 동독지역의 공공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통일 전 서독에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그리고 주정부 상호 간에 부가가치세 배분 및 연방정부의 교부금 지원을 통해 각 주정부의 1인당 평균 조세 수입이 동일하게 배분되도록 하는 재정균형 제도가 있었다. 즉 공동세금인 법인세와 소득세는 각각 50:50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배분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 56%는 연방정부에, 44%는 주정부에 분배했다.²⁸

주정부에 할당된 부가가치세 중 75%는 각 주의 인구수에 따라 분배하고 25%는 세금 징수액이 빈약한 주에 분배한다. 여기서 주정부는 최소한 1인당 평균 세수(독일 전체의 조세 수입을 전체 인구로 나눈 것)의 92%까지 보장한다.

재정이 풍부한 주(州)가 재정이 빈약한 주에 조정교부금을 지원하여 1인당 평균 세수의 95%까지 보장한다(수평적 재정균형). 수평적 재정균형을 통

²⁷ 김영탁; 독일 통일과 동독 재건과정, 서울, 도서출판 한울, 1997. p. 313

²⁸ 김영탁; 독일 통일과 동독 재건과정, 서울, 도서출판 한울, 1997. p. 308

해서도 1인당 평균 세수가 100% 보장되지 못하면 연방정부가 일반교부금 또는 특별교부금을 지원해 보충해 준다(수직적 재정균형).²⁹

이러한 제도를 통해 브레멘주(Bremen), 자알란트주(Saarland), 니더작센주(Niedersachsen) 등 재정이 빈약한 주들은 조정교부금을 수령하였으며, 바덴 뷔르템베르크주(Baden-Württemberg), 헤센주(Hessen) 등 부유한 주들은 조정교부금을 지급했었다.

그러나 이런 제도를 5개 신연방주에 당장 적용할 경우, 신연방주의 조세 수입이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지금까지 조정교부금을 지출해 오던 서독의 부유한 주들은 몇 배나 더 많은 액수를 납부해야 하며, 지원을 받던 서독의 주들도 통일 이후 조정교부금을 지출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통일독일은 1994년까지 재정균형 제도를 신연방주에 적용하지 않는 대신에 독일 통일기금을 설치하여 신연방주의 공공재정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신연방주는 1995년부터 재정균형제도에 진입함으로써 통일 이후 재정제도의 완전한 통합을 이루었다.

독일 통일기금 액수는 처음에는 1990년~1994년까지 약 1,150억 마르크 정도로 예상했었으나 이 액수는 1993년에 약 1,600억 마르크 정도로 상향 조정 되었다. 1990년에는 220억 마르크, 1991년 350억 마르크, 1992년 339억 마르크, 1993년 352억 마르크, 1994년에는 346억 마르크가 지출되어 총액은 1,607억 마르크이었다.³⁰

이 기금은 연방정부가 496억 마르크, 서독의 주정부들이 161억 마르크, 그리고 신용대출로 950억 마르크가 모금되었다. 신용대출의 부채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50%씩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주정부는 배당액의 20%를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지원받았다.

²⁹ 김영탁; 독일 통일과 동독 재건과정, 서울, 도서출판 한울, 1997, pp.308 -309

³⁰ 김영탁; 독일 통일과 동독 재건과정, 서울, 도서출판 한울, 1997, p. 309

2) 통일연대세(Solidaritätszuschlag)

통일 이후 재정지원을 마련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소득세 및 법인세에 7.5%씩 부과하는 통일연대세를 1991년 7월 1일부터 1992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시행하였으며, 그 이후 세수의 감소로 인한 재정부족으로 1995년 1월부터 다시 도입되었다.

그러나 많은 논란이 제기되어 1998년 1월부터는 세율을 5.5%로 인하하였다. 이 부과금은 기본법 106조에 의거해 징수하는 세금으로 연방 상원의 동의가 필요없는 연방정부의 직접세이자 단독 재원으로 2012년에는 약 136억 유로가 징수되었다. 이 부과금은 1991년 독일 통일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징수한 세금이었으나 독일의 이라크전쟁 참전비, 동부유럽 국가들 지원금으로도 사용되었다.³¹

이 통일연대세 도입 이후 수년 간 이 세금의 합헌성을 두고 많은 논쟁이 벌어졌다. “독일 납세자 연맹”은 2006년 독일연방 헌법재판소에 이 세금이 위헌이라고 제소하였다.

2008년 헌법재판소는 이 제소를 이유 없다고 기각하였으나 니더작센주 재정법원은 독일 통일 비용은 일시적인 지원 보조금으로 충당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정부의 재정정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통일연대세가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³²

그러나 뮌스터(Münster), 쾰른(Köln)의 재정법원은 통일연대세가 합헌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통일연대세는 목적세가 아니기 때문에 독일 통일 재건에 필요한 모든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헬무트 자이츠(Helmut Seitz)는 뚜렷한 사용 목적처를

³¹ Seitz, Helmut; Zur Versachlichung der Diskussion um die Verwendung der Osttransferleistungen, 2006. p. 21

³² Niedersächsisches Finanzgericht hält Solidaritätszuschlag für verfassungswidrig
Presseinformation Niedersächsisches Finanzgericht, 25. November 2009.

정해놓지 않은 이런 세금은 이제 2020년부터는 신연방주에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전체 독일에서 구조가 취약한 지역에 지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³³

통일연대세에 대해선 불만이 아직 많이 존재하고 있다. 엠니트 연구소(Emnid-Institut)가 2004년 9월에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서독인의 50% 이상이 동독에 제공하는 지원금이 너무 많다고 불만을 터트리고 있었으며, 최근 2013년에 실시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구 동독 주민의 58%, 구 서독 주민의 86%가 통일연대세를 폐지하자는 주장에 찬성하고 있었다.³⁴

3) 연대협약(Solidarpakt)

연대협약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에 독일 통일 이후에 신연방 지역에서 발생하는 통일비용을 특별히 지원하기 위해 주정부 간 재정균형의 구도에서 지급하는 연방지원금이다. 독일 국민 개개인이 내는 세금인 통일연대세와 구별되고 이 지원금은 동독 재건(건설)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① 연대협약 I

1993년 3월 13일 독일연방정부와 주정부 총리들은 다음 사항에 합의하였다.

- ㉠ 독일 통일기금으로 1,607억 마르크를 마지막으로 지급하고 이 독일 통일기금은 1995년부터 폐기한다.
- ㉡ 신연방주들도 주 재정균형제도에 참여한다.
- ㉢ 각 주의 부가가치세의 분배 비율은 37%에서 44%로 증가한다.
- ㉣ 연방 지원보조금이 도입된다. 이로써 각 주정부 간 재정균형은 연방 평균의 99.5%까지 달성될 수 있도록 한다.

.....

³³ Seitz, Helmut; Zur Versachlichung der Diskussion um die Verwendung der Osttransferleistungen, 2006. p. 27

³⁴ Umfrage: Mentalitätsunterschiede bei Ost- und Westdeutschen, YouGov, 2. Oktober 2013

㉔ 신연방 5개주와 베를린은 10년 동안 연방으로부터 매년 206억 유로의 지원금을 받는다.

㉕ 구 서독 주들의 재정 부채는 약 40%까지 지방자치 단체가 부담한다.³⁵ 연대협약 I은 1995년에 도입되어 2004년 연말에 종료되었다.

연대협약 I로 신연방주와 구 동독 지방자치단체들은 연방정부와 구 서독 주들로부터 총 945억 유로를 지원받았다. 이 지원금은 구 동독지역의 환경 폐기물을 제거하는데 사용되었고 구 동독지역의 인프라 현대화 구축사업에 쓰였고 산업시설과 주택건설 사업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② 연대협약 II

연대협약 I이 실시되고 몇 년 지나지 않아 구 동독지역을 구 서독지역 수준으로 끌어 올린다는 목적이 쉽게 달성될 수 없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 결국은 연대협약 II가 연계되어 실시되어야 한다고 2001년에 합의하였다.

연대협약 II를 통해 2019년까지 총 1,564억 유로를 구 동독지역에 지원하기로 연방 하원과 연방 상원에서 결정되었다.

이 지원금은 2가지 형태로 지급되었다.

㉖ 카테고리 1

연방 지원보조금 형태로 주 재정균형 차원에서 지원되는 이 자금은 인프라 구조가 취약한 지역과 타 지방에 비하여 재정 상태가 열악한 지방자치 단체에 지급되며 2019년까지 총액은 1,053억 유로에 달한다.

.....
³⁵ Mading, Heinrich : Öffentliche Finanzen, in: Andersen, Uwe, u.a.: Handwörterbuch des politischen System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Opladen, 2003, p. 135 참조

㉔ 카테고리 2

연방의 기타 지원금 형태로 지급되며 2019년까지 총액은 511억 유로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 사용처에 대해서는 2006년에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에 합의하였다.³⁶

그러나 카테고리 1의 사용에 대해서 많은 신연방주에서 그 목적과 용도에 부적합하게 사용된 것이 밝혀졌다. 특히 베를린은 모든 지원금을 잘못 집행한 것으로 지적되었다.³⁷ 카테고리 1은 매년 액수가 결정되면 5개 신연방주와 베를린은 인구비례에 따라 분배되었다. (표2 참조)

표 1-2) 연대협약 II, 카테고리 1의 연도별 액수

연도	액수 (유로)
2005	105억
2006	105억
2007	104억
2008	102억
2009	95억
2010	87억
2011	80억
2012	73억
2013	65억
2014	58억
2015	51억
2016	43억
2017	36억
2018	28억
2019	21억

.....

³⁶ Presseerklärung des Bundesverkehrsministeriums: Tiefensee: Planungssicherheit für neue Länder-Bundeskabinett stimmt Korb II des Solidarpaktes zu, Pressemitteilung vom 13. Dezember 2006

³⁷ Seitz, Helmut: Zur Versachlichung der Diskussion um die Verwendung der Osttransferleistungen, 2006. p. 29

이 액수는 매년 베를린에는 19%, 브란덴부르크주에는 14.3%,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는 10.6%, 작센주는 26.1%, 작센-안할트주는 15.7%, 튀링겐주에는 14.3% 비율로 배분되었다.

제6절 독일 통일 비용

독일 통일 비용 총액을 산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연구자들에 따라 통일비용을 2,500억 유로에서 1조 2,000억 유로까지 다양하게 주장하기 때문이다. 어느 경제학자는 국가의 채무까지 합산하면 2006년도에 이미 1조 5,000억 유로에 이른다고 주장하기도 한다.³⁸

독일 통일 이전부터 서독은 동독에게 베를린으로 향하는 고속도로 비용, 정치범 석방을 위한 보상금 등으로 매년 약 15억 마르크를 지원해 주고 있었다. 통일 이후 에곤 크렌츠(Egon Krenz)의 표현대로 동독은 70년대 이후 이미 서독의 이러한 경제적인 원조가 없었더라면 존속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다.³⁹

통일 비용의 정확한 수치는 계산하기 힘들지만 몇몇 기금은 어느 정도 산출할 수 있다. 먼저 독일 통일기금은 약 1,607억 마르크 정도이지만 화폐통합, 경제, 사회 통합으로 들어간 비용은 산출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동독의 공장들은 통일 이후 약 80% 이상이 파산하여 동부 유럽의 체코나 폴란드보다도 경제발전 속도가 느렸다. 이의 주요한 원인은 사회주의 체제 아래 낙후된 생산시설에 노동 집약적인 생산체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³⁸ Paqué, Karl-Heinz : Transformationspolitik in Ostdeutschland: ein Teilerfolg. In: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28/2009 (6. Juli 2009). Klaus Schröder라는 역사학자의 말을 인용하여 통일비용이 1조 5천억이라는 주장을 제기하였으나 베를린 자유대학 연구소에서는 1990년부터 2009년까지 통일비용이 1조 6천억이라는 주장도 나왔다.(Die deutsche Einheit kostete 1,6 Billionen Euro. In: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21. August 2009.)

³⁹ Müller, Uwe (이봉기 역) : 대재앙 통일 (Supergau Deutsche Einheit), 서울, 2006, p. 51-62

라고 볼 수 있다.

동, 서독 화폐의 적정 교환 비율은 1:4 정도로 평가되었으나 콜(Kohl) 정부는 임금, 연금 및 일정액의 저축에 대해서는 1:1로 교환하여 동독 지역의 물가와 임금이 상승하여 동독지역 경제가 자생력을 잃는 결과를 가져 왔다.⁴⁰

동독의 콤비나트 생산 시스템들이 신탁청(Treuhandanstalt)에 의해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부정확하게 평가되거나 “식민지화” 또는 “모욕감”을 주게 됨으로써 동독 주민들에게 심리적인 피해를 주었다.⁴¹

높은 실업률 탓에 1990년~1991년 간 약 200만명이 동독을 떠나 서독으로 일자리를 찾아 이주하였다. 4년 정도만 지나면 동독의 경제가 발전하여 서독 수준의 임금과 봉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어왔던 동독 주민들의 꿈은 1992년부터 이미 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통일 이후 “구 동독지역 재건” 프로젝트의 추진으로 동독 주민들의 1인당 GDP는 1991년 서독의 42%에서 7년 만인 1998년에는 65%로 상승하였으며 소득도 1991년 서독인의 48%였으나 1998년에는 78%까지 상승하였다.

세금혜택과 지원금을 모두 포함하면 동독인들의 가계는 서독인 생활수준의 87%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통일된 지 20년이 지난 시점에도 동독인과 서독인의 소득 격차는 아직도 17%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⁴²

동독의 경제성장 속도가 느린 이유 중 하나로 동독의 임금제도를 지적하는 학자들이 있다. 동독의 임금이 생산성보다 높게 평가되어 빠르게 상승하

.....

⁴⁰ Müller, Uwe (이봉기 역) : 대재앙 통일 (Supergau Deutsche Einheit), 서울, 2006, p. 55-62 참조
⁴¹ Schmidt, Helmut : Auf der Suche nach einer öffentlichen Moral. Deutschland vor dem neuen Jahrhundert. Deutsche Verlags-Anstalt, Stuttgart, 1998, p. 31
⁴² Enormes Lohngefälle zwischen West und Ost. in : Focus Online 2011. 7. 12. 통일 20년 평가에 대해서는 “20 Jahre Wiedervereinigung. -Bewertung und Zukunftserwartung. Konrad-Adenauer-Stiftung. 2010 참고

여 산업체의 경쟁력이 약화되었다는 주장이다.

“대재앙, 통일(Supergau Deutsche Einheit, 2006)”을 저술한 우베 뮐러(Uwe Müller)도 신연방주들이 경제, 화폐 통합을 너무 서둘러서 동독 기업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실시되어 동독 기업들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잃어 버렸다고 지적하고 있다.⁴³

통일독일 정부는 매년 연방 예산의 25-30%를 신연방주에 투입하였으나 2005년까지 통일독일은 경제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슈뢰더의 사민당(SPD) 정부가 2003년 사회보장 혜택을 축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젠다(Agenda) 2010” 계획을 추진한 후 2006년부터 독일 경제는 호전되어 통일 이전의 활력을 되찾고 통일 후유증을 어느 정도 극복하였다.

각 주정부에 분배되는 지원금의 사용처를 연방정부나 다른 주에서 상세히 심사할 수가 없었다. 많은 지원금들이 구 동독지역 건설에 사용되지 않고 소비재나 사치품(구조 취약 지역에 휴양 리조트 건설, 인구 이동이 적은 지역에 신공항 건설 등)에 투자되었다. 소규모 판매시장과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에서도 서독의 노동조합 주도로 서독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들어났다.

⁴³ Müller, Uwe (이봉기 역) : 대재앙 통일 (Supergau Deutsche Einheit), 서울, 2006, p. 60

제3장

구 동독지역 재건과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례보고서

제1절 구 동독지역 재건(Aufbau Ost)

1. 구 동독지역 재건(Aufbau Ost)의 필요성

독일 연방정부는 구 동독지역 재건을 위해 1991년 3월 “경기 부양을 위한 공동 대응책”을 마련하였다. 이 정책은 투자와 고용창출 계획을 빠르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상공업 분야에 대한 지원과 경제 인프라 건설에 200억 마르크 이상을 투입하였다. 장기적인 구 동독지역 재건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실행하였다.⁴⁴

1) 민간 투자의 촉진

구 동독 경제성장을 위해 무엇보다도 민간 투자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투자자들에게 특혜를 부여하고 투자에 방해되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하였다. 투자 촉진 조치는 주로 용자 지원, 세제 혜택, 투자보조금 지원 등이 있었다. 이와 같은 투자 촉진 조치는 서독 기업과 외국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어들여 구 동독지역에 많은 투자가 유입되었다.

.....

⁴⁴ 김영탁: 독일 통일과 동독 재건과정, 서울, 도서출판 한울, 1997, p. 317-321

1991년~1996년 동안 구 동독지역에 총 투자액 9,500억 마르크 중 8,000억 마르크가 민간투자였다.

2) 투자 장애 요소 제거

구 동독 경제 발전을 위해서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투자 장애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명확한 소유권 문제, 행정체제의 미비, 사회 간접자본 시설의 부족,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 동독지역의 투자 활성화에 장애가 되었던 요소들을 제거하는 데 연방정부는 노력하였다.

3) 인프라 시설의 확대

구 동독지역 경제 재건에 필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효율적인 인프라 구조를 확대하는 것이다. 인프라 시설의 확충 없이는 기업이 경쟁력을 높일 수가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통일 후 연방정부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 교통, 우편 및 통신, 환경보호, 도시건설 및 지역개발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했다. 아직도 완료된 상황은 아니지만 많은 지원으로 동, 서독 간의 사회간접 자본시설의 격차도 많이 줄어든 상태이다.

4) 구 동독지역 기업의 생산품 판매 지원

구 동독지역 경제 재건에 시장 확보문제도 중요한 요소이다. 동구권 국가와 무역 관계 감소로 구 동독지역 상품의 시장 확보를 위하여 연방정부는 소련시장 보존뿐만 아니라 서방 세계의 시장 개척에 주력하였다. 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구 동독기업의 국내외 상품 전시회(Messe) 참가 지원, 해외무역 사무소 등을 통해 판촉 활동, 기업별 특수 마케팅, 연방정부의 공공사업 발주 시 구 동독지역 기업체에 우선권 부여 등을 들 수 있다.

5) 일자리 창출 정책

통일 후 대량 실업자 구제를 위해 고용창출 조치, 직업훈련 등으로 적극적인 고용정책을 실시하였다.

구 동독지역 재건(Aufbau Ost) 사업으로 1991년 독일 국내 총생산(GDP)의 7%를 차지하던 구 동독지역 총생산이 2008년에는 11.7%로 증가하였으며 2008년 구 동독지역 주민 1인당 총생산(GDP)도 구 서독 주민의 71%까지 근접하였다.

또한 2009년 구 동독지역 실업률은 13%로 구 서독지역 8.2%보다는 높았지만 1997년 이후 계속 20% 내외였던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

2. 공동체 이니셔티브(Gemeinschaftsinitiative) 제안

독일 통일 당시 야당이었던 사민당(SPD)은 통일 이후 연방정부의 사회, 경제적 통합 정책은 잘못된 예측으로 실패하였다고 지적하고 신연방주의 재건을 위한 공동체 이니셔티브(Gemeinschaftsinitiative) 구성을 1992년 6월 연방의회에 제안하였다(문서번호 5).

연방정부의 독일 통일 정책은 급격한 국가채무의 증가로 재정적 압박이 커졌으며 구 동독지역 재건정책이 탈산업화 과정으로 전환되면서 구 동독 주민들을 실업으로 빠지게 하는 경제적 압박이 증대되었고 구 동독 주민들은 주택 부족, 보건 서비스 부족, 노후 복지제도의 부당한 처우 등으로 사회적 압력도 증폭되었다고 비판하였다.

구 동독 주민들이 전체 독일 국민의 20%를 차지하지만 독일 국민 총생산량의 7%에 해당하는 국민 총생산을 이루어 구 서독 수준의 생활 상태를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은 요원하다고 사민당(SPD)은 주장하였다.

사민당이 연방하원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 경제계, 노조 등에 공조를 요

청한 공동체 이니셔티브의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실업 대신 일자리 창출

신원방주의 경제발전을 단순히 시장의 힘에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구 동독지역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적극적인 경제정책과 노동시장 정책을 추진하는데 활용해야 한다. 최우선 목표는 경쟁력 있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충분히 창출하는데 있다.

①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체제 개편 프로그램

신원방주에 공동체 이니셔티브인 “지역 경제” 프로그램 예산을 증액하고 12% 대의 투자수당 지급을 연장하고, 주택, 공공건물 건축비를 증액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민간부문의 자본투자를 활성화하여 재건 과정에서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 이와 같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존 일자리를 선별하여 시행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지원과 부문별 산업 지원을 확충해야 한다.

“실업 대신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은 최소 3년간 50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② 구 동독의 생산품 및 서비스의 경쟁력 제고

구 동독 기업이 경쟁력을 창출하도록 지원하여 구 동독지역에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데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투자장벽 철폐, 투자확충 가속화 등을 시행해야 한다.

③ 구 동독 제품의 판매 지원

구 동독 기업의 경쟁력 창출 때까지 구 동독 제품의 생산 및 판매 안정화 조치를 지원해야 한다. 구 동독의 전통적인 판매시장인 동유럽을 대상으

로 하는 영업활동 지원은 필수사항이다. 동유럽과 구 소련의 시장은 개방화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이들 국가와 계약관계를 유지, 확대하는 것은 유럽적인 관점에서 국가지원을 정당화하는 경제적인 이해관계 뿐만 아니라 전략적인 이해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

④ 환경보호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삶의 질 개선

구 동독지역에는 자연 환경적 측면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들이 있으며, 또 상당수 지역은 생태학적으로 심각한 문제에 처해 있다. 많은 지역의 자연환경은 지속적으로 파괴되어 가고 있고 환경오염 또한 가속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거주민의 보건, 위생상 위험뿐만 아니라 생활의 질 또한 보장 받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야 향후 경제적인 전망도 밝다고 할 수 있다.

⑤ 연구 및 기술 확충

대학의 부속 연구기관과 기타 연구기관에 발전 기회를 주기 위해 구 서독 소재 유관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연구기관을 구 동독지역에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로써 구 동독 출신 연구자와 대학생들의 구 서독으로 유입을 방지할 수 있다. 또 상당수 연구자들을 재편한 구 동독지역 대학으로 유입시키는 방안은 연구자 통합 프로그램의 기한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도 방법이다.

⑥ 구 동독지역 노동시장에 긴급 구호 조치

일자리 창출 추진 정책으로 고용 비율은 전년도 보다 높은 목표치를 달성해야 한다. 구 동독 출신 근로자가 구 서독 기업에서 업무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기업별로 고용주와 노조가 상호 협력해야 한다.

⑦ 여성 권리 신장 노력

독일 통일에서 구 동독 출신 여성은 많은 피해를 보았다. 특히 구 동독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들은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여성을 대상으로 전문교육 및 직무 연수교육을 시행하고 초기 직업 활동에 안정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여성이 직장 내에서 남성 동료들과 동일한 처우를 받도록 보장하는 양성평등법 제정이 필요하다.

2) 미해결 재산문제 청산

해결되지 않고 있는 재산문제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재건에 필요한 투자를 저해하는 요소이다. 법적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손해배상법이 빨리 제정되어야 한다.

3) 산업지역의 핵심 유지-신탁청의 업무 개혁

구 동독지역에서 탈산업화 경향을 막아야 한다. 신탁관리법을 개정하여 신탁관리청이 구 동독지역 기업들을 향후 미래지향적이고 체계적으로 안정화된 기업으로 정화시킬 목적으로 관리 및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업정화의 목적은 신탁청이 아닌 기업 자체에 두도록 해야 한다. 민영화의 목적은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신탁관리청은 신연방주의 체제, 지역 발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독일 연방의회의 분과위원회 중의 하나인 “신탁관리청 위원회”를 통한 효과적인 의회의 관리, 감독권이 시행되어야 한다.

4) 사회적 조건 균등화 문제

① 청소년에게 비전 주기

구 동독지역 출신 청소년들은 독일 통일 이후 사회적 통합과정에서 많은

부담감과 내적 자존심, 정체성을 상실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구 동독지역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비전을 갖도록 하고 생활여건을 균등하게 맞추어 주도록 해야 한다. 연방정부는 지속적으로 청소년단체 신설, 확충을 지원하는 재원을 조달할 필요가 있다.

② 주택난 해결

통일 이후 구 동독지역의 주택난은 구 동독 생활수준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사회복지 정책과 관련하여 주택건설이 증가하고 임대계약 및 임대비를 제한하는 규제안이 제정되었다. 주택공급이 부족할 경우 임대비 인상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임대비 인상은 소득 발전 양상을 고려해야 하고 물론 개선된 주거수당 지급으로 임대비 인상분을 상쇄시켜야 한다.

③ 교육, 문화, 스포츠

교육, 문화, 스포츠는 통일과정에서 중요한 촉매 역할을 한다. 또한 경제 지원이 수반되는 체제개혁 정책을 구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영역이다. 양적, 질적으로 충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과 청소년 대상 직업학교를 설치, 운영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이다. 전체 독일에 광범위한 범위 내에서 대학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다.

구 동독이 추구해 온 문화적 본질을 훼손하지 않은 것도 중요한 일이며 문화적 상이성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스포츠 발전은 전체 인구수에 준하여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스포츠 시설을 확충, 운영하는 데 있다. 연방 정부 소유의 스포츠 시설을 무상 또는 저리로 지방자치체에 임대하여 구 동독지역 스포츠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토록 해야 한다.

5) 통일 재정 확대와 통일 부담의 공정한 배분

독일 통일 과정에서 발생한 재정비용은 동독, 서독에 소재한 지방자치단체, 주정부, 연방정부가 부담한다. 재정부담 능력에 따라 배분을 다르게 한다. 구 동독지역 재건에 대한 사업비를 위해 긴축재정을 실시하고 고액연봉자를 대상으로 보조세를 징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일연대 세금은 약 10%에 달하는 고액 연봉자들로 제한함으로써, 역시 연방정부가 추진하는 조세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

사민당(SPD)의 “공동체 이니셔티브” 제안은 기민(CDU)/기사당(CSU)의 반대로 연방의회에서 결의안으로 채택되지 못하였으나 구 동독지역 재건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사민당이 여기에서 제안한 구 동독지역 경제 회복 방안은 이후 각 정당에서 제안하는 “구 동독지역 경제재건 계획”에 자주 포함되는 내용들이다.

제2절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례보고서

1. 연례보고서 제출 동기

1) 녹색당/연합90(Die Grünen/Bündnis 90), “독일 통일 과정에 대한 연례보고서” 제출 요구

녹색당(Die Grünen)은 1995년 9월 연방정부의 독일 통일 5주년 보고서를 받고 나서, “독일 통일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제안을 1995년 10월 10일 다음과 같은 이유를 첨부하여 연방의회에 제출하였다(문서번호 16).

- 독일은 분단을 극복하고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아직도 동, 서독 사이에 정치, 사회, 경제적 격차는 매우 심하다. 많은 시민들의 의식에는 동, 서독 사이에 불평등이 예전과 같이 팽배해 있다고 본다. 구 동독 주민들은 구 서독의 경제, 사회, 법적 통합으로 소유재산을 상실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 특히 여성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주택시장도 악화되어 월세가 대폭 인상되어 소득도 많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으며 연금 사정도 많이 악화되었다. 5년 전 경제, 화폐통합으로 구 동독의 허약한 경제체제는 무너졌으며 구 서독체제에 강제적으로 적응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많은 일자리도 상실되었다. 신탁관리청은 구 동독 경제를 해체하였으며 생산적인 구조변화는 거부되었다. 제조, 가공(加工) 산업은 환경보호 문제를 전적으로 해결하여야만 하는 부담감도 안고 있다.

독일의 통일은 법적 평등이나 공동체 정신의 민주주의적 정치문화를 달성하지 못하였고 헌법적으로 대등한 통일이 아니라 서독으로 편입되는 통일이었기 때문에 구 동독 주민들은 2등 국민으로 느끼고 있다.

구 동독지역 재건(Aufbau Ost) 계획의 종합적인 청사진이 부실하여 구 동독 주민들은 불안하고 연대의식이 감소되어 국민적 화합에 어려움이 있다. 연방정부의 통일정책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어떤 목표로 어느 정도의 시간적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지를 발표해야 한다. 또한 시민들이 부담해야 할 재정적 부담도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연방정부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 일자리 창출 문제
- 일자리에서 여성의 차별 금지와 재취업 지원
- 주택사정 향상(안정된 월세와 주택 개량 사업 추진)
- 연금 보장제도 확립
- 구 동독지역의 생산품 판로 확보
- 농업의 구조변화 과정 지원(환경보호 차원)
- 소유권 문제 조속 해결
- SED 독재정권 희생자 효과적 보상

이러한 보고서는 매년 독일 통일 기념일(10월 3일)에 즈음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 서독 지역 삶의 평준화 실현 과정과 시간적 계획, 문제점 등을 적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2) 사민당(SPD),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례보고서” 제출 요구

사민당도 녹색당(Die Grünen)에 이어 1995년 10월 11일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례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였다(문서번호 17).

- 독일이 통일된 지 5년이 지났지만 동, 서독 간에 격차는 더욱 심화되어 구 동독 주민들은 구 서독 수준으로 복지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기대가 허물어져 정치적 무관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연방정부가 제출한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바탕으로 1년에 한번은 모든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토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례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노동시장 상황
- 구 동독지역 재건 사업 현황
- 구 동독의 주택 사정, 삶의 질 문제
- 구 동독지역 청소년들의 직업교육 전망
- 환경보호 문제
- 동, 서독 주민들 사이에 통일에 대한 입장 차이

녹색당과 사민당의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례보고서 제출 요구는 1996년 5월 9일 연방의회 총회에서 여당인 기민당(CDU)/기사당(CSU), 자민당(FDP) 그리고 야당인 사민당(SPD)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문서번호 21).

연방의회의 요구에 따라 연방정부는 매년 구 동독지역의 건설 및 경제현황을 진단하는 연례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그 첫 번째 연례보고서는 1997년 9월 1일 연방의회에 제출되었다.

2. 1997년 이후 매년 연례보고서 개요

1) 매년 연례보고서 주요사항

① 1997년 연례보고서(문서번호 31, 1997. 9. 1)

독일 연방정부는 독일 통일 이후 동, 서독 통합과정을 매우 낙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구 동독지역의 인프라와 경제 상황이 많이 개선되었고 정치, 행정적 면에서도 발전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1995년부터 신연방주들이 전 독일 연방주(聯邦州) 사이에 실시된 재정균형분배제도(Finanzausgleich)에 진입하면서 통일 과도기는 끝났다고 진단하였다.

연방정부가 신연방주를 위해 지출한 금액은 1995년~1997년 사이 매년 약 1,400억 마르크에 달했으며 구 서독 국민 총생산의 4%~5%가 구 동독지역에 이전되었다고 보고하였다.

1997년의 공식 실업률은 18.7%이었으며 1995년 말에 구 서독 임금의 87%이었던 구 동독지역의 평균 임금이 1996년 말에는 89%까지 상승하였으며, 1997년 연방정부는 구 동독지역에 도시건설을 위해 약 5억 2천만 마르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물질적 측면의 경제통합은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내적(사회적) 통합”은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다.

② 1998년 연례보고서(문서번호 37, 1998. 5. 27)

연방정부는 1998년 보고서에서 구 동독의 물질적 발전보다 1997년 7, 8월에 오더(Oder)강에 대홍수가 발생하였을 때 전 독일 국민들이 힘을 모아 극복했던 내적통합을 주로 다루었다.

물론 구 동독지역의 산업수출이 26% 증가하였으며 구 동독지역의 의료혜택 비율도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연금수준도 현저히 상승하여 기준연금이 1990년 후반기에 670 마르크였던 것이 1997년 후반기에는 1,680 마르크로 상승하여 구 서독의 기준 연금과 비교해도 40%에서 85%로 상승하였다고 기술하였다. 구 동독지역에 50만호 이상의 주택이 새로 건설되었으며 기존의 주택도 50% 이상 개량공사를 완료하였으며 570만개의 신규 전화가 가설되었다고 밝혔다.

구 동독지역에 16개 국립대학, 28개 전문대학, 14개 예술, 음악대학이 있으며 학생 인원도 21만명에 달한다고 기술하였다.

1997년 구 동독지역 총생산의 실질적인 성장률은 1.6%로 구 서독의 성장률 2.2%보다 처음으로 낮았다. 구 동독 전체 산업 중에서 제조, 가공 산업의 성장이 높았으나 구 동독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6%에 그쳤다고 보고했다.

③ 1999년 연례보고서(문서번호 47, 1999. 10. 18)

1999년 보고서에서도 통일은 단순한 재정적 도움과 경제성장을 넘어서 내적 통합과 공동체 의식, 사회적 책임감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과거 소련군 점령기간, 구 동독의 역사와 분단 독일의 역사 청산 작업도 장기적인 과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구 동독의 1만 1천명의 군인이 독일군인으로 통합되었고 구 동독지역 출신 40만명의 청년들이 연방군에서 병역 의무를 마쳤다고 보고하였다.

1999년 연방 예산에서 구 동독지역 건설, 혁신, 연구 등을 위해 지출된 비용은 약 400억 마르크였으며 구 동독으로부터 인계된 채무 부담을 상환하기 위해 1995년 1월 1일부터 상속 채무상환기금이 연방 특별기금으로 도입되었다. 신연방주의 정부가 자체 세입으로 예산을 충당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8년에는 42%가 되었다(구 서독 연방주의 자체 세입 충당 비율은 68%).

④ 2000년 연례보고서(문서번호 61, 2000. 9. 26)

독일 통일 10주년을 계기로 실시한 1999년 여론조사에서 구 동독지역 주민의 약 절반이 통일이 이득을 가져왔다고 생각하였고 약 40%는 잘 모르겠다, 15% 정도가 개인적으로 손해를 보았다고 평가하였다.

1999년에 구 동독지역에 약 134만명이 실업자로 등록하였으며 실업률은 1998년의 18.2%에서 1999년에는 17.6%로 감소하였으나 구 서독과 비교하면 아직도 두 배가 높은 것이라고 밝혔다.

1998년 구 동독지역의 경제성장률은 2.0%로 구 서독의 경제성장률 2.8%에 비해 다소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1999년에 구 동독지역에 약 92,000개의 회사가 창립되었다. 주택 공급도 많이 개선되었으며 갈탄 사용에 대한 환경 개선 지원금이 1999년에 11억 마르크가 사용되었다고 밝혔다.

⑤ 2001년 연례보고서(문서번호 71, 2001. 9. 26)

구 동독지역의 건설에 집중되었던 경제구조가 이제 산업생산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고 전하며 통일 이후 구 동독지역에 53만개의 회사가 창립되었고 그 중 11만개가 수공업 분야에 창설되었다고 보고했다.

구 동독지역의 총생산에서 경제인구 1인당 총생산 수준이 1991년에는 구 서독 수준의 34%이었다가 2000년에는 68%로 상승하였다.

구 동독지역의 지난 5년간 수출성장률은 1995년의 11.8%에서 2000년 21.2%로 거의 두 배나 상승하였다. 특히 자동차산업이 구 동독지역의 경기를 주도하는 산업 분야로 발전하였다. 구 동독지역 안에서도 지역적인 차이가 나타나 경제성장의 중심지역이 형성되고 있다고 하였다. 국경 접근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구 동독의 국경지역에 총 219억 마르크 지원과 추가로 유럽연합에서도 거의 같은 금액의 지원을 하였다고 밝혔다. 연방정부는 “구 동독지역 도시 재건” 계획에 의거해 주택과 도시건설에 2002년~2009년까지 22억 마르크를 지원하여 교통 인프라에 투자하였다.

⑥ 2002년 연례보고서(문서번호 77, 2002. 9. 9)

2002년 발생한 엘베(Elbe)강 홍수 때 연방정부는 5억 유로의 즉시 지원과 전체 지원사업을 위해 재정규모를 약 100억 유로로 결정하여 구 동독지역을 도왔다.

사민당(SPD)-녹색당(Die Grünen) 연립정부는 구 동독지역 건설이 몇 년 안에 완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세대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혀 독일 통일 직후 가졌던 구 동독의 신속한 경제 발전 달성이 환상이었음을 보여주었다.

“아젠다(Agenda) 2010”에 관해 유럽연합 회원국들과 협상을 통해 신연방주가 2000년~2006년 사이에도 유럽 지역 정책에서 최우선 순위의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구 동독지역에 교통분야 투자와 “지역 경제 구조의 개선” 공동과제 프로그램을 통해 투자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⑦ 2003년 연례보고서(문서번호 80, 2003. 9. 17)

2003년 보고서에서는 연방정부가 신연방주 건설과 지원에 관련해 실행한 정책과 정치 분야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장기적인 지역 정책과 구조 정책을 통해 지역의 역동성 강화, 균형 있는 발전, 지역 정책과 상이한 정치 영역의 통합 등에 노력하였다.

2002년에 구 동독지역 건설을 위한 지원 장치를 투자지원, 혁신지원, 인프라 확충과 노동시장 지원으로 새롭게 창설하였다.

유럽연합이 2004년 5월에 10개 국가가 새로이 가입하여 확장되면 구 동독지역은 거대한 유럽 내수시장의 중심지가 되어 긍정적인 동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2002년 엘베(Elbe)강과 도나우(Donau)강의 홍수 피해를 제거하기 위해 도입된 “홍수” 특별 프로그램 지원은 농촌지역의 인프라 재건에도 지원하였다.

“지역 경제구조 개선”과 “투자 보조금” 계획으로 구 동독지역의 투자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⑧ 2004년 연례보고서(문서번호 86, 2004. 9. 24)

2004년 연례보고서는 구 동독지역의 경제성장이 2003년에 비해 0.2% 상승해 구 서독지역보다 약간 높은 수치라고 기술하였다.(구 서독은 0.1%) 2000년 이후 처음으로 구 서독과 구 동독의 격차가 좁혀졌다.

경제인구 1인당 생산성이 구 서독지역 수준의 74.6%에 달해 격차가 줄어드는 추세이며 구 동독지역은 1992년~2003년 연방정부의 지원으로 관광산업을 발전시켜 전 독일 여행객 중 구 동독지역에서 숙박한 비중이 10.1%에서 20.2%로 상승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구 동독지역의 자원을 잘 연계하여 대기업 부재로 발생하는 경제의 어려움을 연구와 개발을 통해 극복하기 위해 혁신적인 지역성장 거점, 미래를 위한 지역 간 연대, 혁신능력 배양을 위한 센터 설립을 통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신연방주들은 2005년~2019년 사이에 연방보조금으로 총 1,050억 유로를 지원받는다. 또한 유럽연합으로부터 통합기금을 지원받아 구 동독지역을 경제적, 사회적 거점으로 만들어야한다고 지적하였다.

연방교육부는 구 동독지역의 인구가 독일 전체 인구의 20.8% 임에도 불구하고 2003년에 전체 예산의 24.2%인 20억 2천만 유로를 신연방주 지역에 지원하였다고 밝혔다.

⑨ 2005년 연례보고서(문서번호 91, 2005. 9. 28)

통일 15주년이 되는 2005년 연례보고서에서 연방정부는 2002년~2004년 사이에 신연방주와 베를린의 공공 이익을 위해 약 63억 유로의 지원을 하였다고 밝히고 이 지원금을 포함한 총 투자액이 약 264억 유로에 달해 상업

부분에 6만 6천개의 일자리(그중 2만 1천개는 여성 일자리)가 창출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유럽연합의 지원을 강조한 2005년 연례보고서는 신원방주들의 많은 지역이 2007년~2013년 사이 1,000억 유로의 재원이 지원되는 사업의 혜택을 받을 것이라 예상하였다.

“농업구조와 해안보호를 위한 공동체 과제” 지원에도 연방 지원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의 재원이 추가로 지원되었다. 유럽연합을 통해 구 동독지역에 많은 구조 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⑩ 2006년 연례보고서(문서번호 102, 2006. 10. 2)

메르켈 총리의 기민당(CDU)/기사당(CSU) 정부는 임기 내에 신원방주에 7개의 활동 영역을 중점 사안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하였다.

- ㉠ 투자유치 개선
- ㉡ 중소기업 지원
- ㉢ 연구와 개발에 더 많은 투자
- ㉣ 노동시장을 위한 노력 강화
- ㉤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연대 지원과 성장 중심지와 그 주변지역을 집중적으로 강화
- ㉥ 농촌지역의 삶의 질을 보장하여 발전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지원
- ㉦ 적극적인 시민사회의 지원

구 동독지역은 지난 5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이 1.0%에 달해 0.8% 성장한 구 서독보다 약간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전체적인 생산성은 2005년에 구 서독의 79% 수준이며 제조업은 구 서독의 85.5%에 해당되어 생산성의 격차가 매년 1.5% 정도 감소되고 있으며 소득 격차는 구 동독지역의 소득 수준이 구 서독의 82%까지 접근하였다고 보고하였다.

⑪ 2007년 연례보고서(문서번호 112, 2007. 9. 21)

100페이지에 달하는 2007년 연례보고서에서 연방정부는 신연방주들이 2005년~2019년 사이에 연대협약 II의 카테고리 I에 의해 제공될 1,050억 유로 연방보조금을 목적에 부합하여 효과적으로 사용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구 동독지역 재건 특임관도 2006년 11월 신연방주들과 카테고리 II를 통해 지불되는 연방정부의 지원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히고 2005년에 지원될 카테고리 II의 규모는 58억 유로라고 규정하였다.

주민 1인당 경제성과는 구 서독의 67.3%이고 구 동독의 세금 징수 능력은 구 서독의 37.8%이며 근로소득은 77% 수준이라고 보고하였다.

실업률은 2005년의 18.7%에서 17.3%로 감소하였으나 구 서독의 실업률 9.1%에 비하면 여전히 두 배나 높다.

구 동독지역에 인구변동의 결과로 숙련 노동력 부족과 극우파적인 현상이 우려스럽다고 밝히고 있다.

⑫ 2008년 연례보고서(문서번호 116, 2008. 9. 22)

2007년도 구 동독지역의 경제성장률은 2.2%이었으며(2005년은 0.4%, 2006년은 1.9%) 2000년 이후 구 동독지역의 산업가치생산이 총 44% 정도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독일 자동차산업에서 생산한 제품의 11.9%가 구 동독지역에서 생산되었고 정보 산업분야도 2000년 이후 생산이 134% 증가하였으며 화학산업도 2000년 이후 생산이 48.4% 증가하였다고 강조하였다.

첨단산업 클러스터 선발 경쟁에서도 구 동독지역에서 2개가 선정되었으며(구 서독 3개) 풍력 발전기의 약 40%가 구 동독지역에 있다고 밝혔다. 실업률도 2% 감소하여 2006년의 17.3%에서 15.1%로 감소하였으나 구 동독지역 인구는 2005년에 비해 2025년까지 11.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하였다. “농업구조와 해안보호 개선” 프로그램에 6억 6천만 유로가 지원되었

으며 농촌지역에 광케이블을 설치하기로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⑬ 2009년 연례보고서(문서번호 123, 2009. 6. 11)

2009년은 1989년 가을 베를린장벽 붕괴로 표현되는 구 동독에서 일어났던 평화적 혁명의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통일이 된 지 20년이 다 되어가지만 동, 서독 간의 경제적 격차는 여전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 동독지역 제조업의 임금은 구 서독의 88% 정도이고 실업률은 11.8%로 1991년 이후 최저 수준이지만 구 서독 지역의 6% 실업률에 비교하면 여전히 두 배나 높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연방정부는 구 동독지역에 약 51억 유로를 지출하였으며, 유럽연합의 구조기금을 통해 2007년~2013년까지 구 동독지역은 약 151억 유로의 지원금을 받는다고 보고하였다. 세금부담을 줄이고 사회보장비 지출을 안정화하였으며 경기활성화를 위해 2009년, 2010년에 기업의 조세부담을 70억 유로씩 절감해 주기로 하였으며 총 300억 유로에 달하는 경기부양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고 기술하였다.

⑭ 2010년 연례보고서(문서번호 128, 2010. 9. 22)

독일 통일 20주년을 맞이한 2010년 연례보고서는 구 동독지역의 1인당 국내총생산은 2000년~2008년 사이에 약 14.5% 증가하였으며(구서독은 9.2% 증가), 2009년에는 구 동독지역이 경제금융위기 타격을 적게 받아 1인당 국내 총생산이 구 서독의 73% 수준으로 상승하였다고 밝혔다. 2009년의 국내총생산의 실질적 변화는 독일 전체가 -4.9%, 구 동독지역은 -2.9%로 구 서독보다 좋은 수치를 보였다. 구 동독지역 실업률은 2006년 이후 감소 추세이며 2005년 18.7%, 2008년 13.1%, 2009년에 13.0%로 약간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⑮ 2011년 연례보고서(문서번호 140, 2011. 11. 9)

통일이 된 지 20년이 지난 2011년에는 통일결산으로 통일 과정이 구 동독, 구 서독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동, 서독의 생활수준을 동등하게 발전시키려는 노력과 구 서독 경제상황에 근접하려는 시도에서 탈피하여 이제는 “인구 변동 속에서 같이 더불어 안정된 사회보장제도 아래에서 미래를 설계하자”는 계획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연방정부가 구 동독지역을 지원할 때 이제는 유럽연합의 지원 방침을 고려해 지원비용을 제한하고 주의해야 한다는 세부사항을 규정하기도 하였다.

3. 연례보고서 정리

표 1-3) 매년 연례보고서에 나타난 구 동독지역의 주요 경제지표 비교

연도	실업률	임금수준, 1인당 총생산	경제성장률	기타 사항
1997년	18.7 %	서독 임금의 89% 수준	1.6 %	서독 국민총생산의 5% 정도가 동독으로 이전
1998년		연금이 1990년 670 마르크에서 1997년에 1,680 마르크로 상승		새로운 주택 50만호 건설
1999년	18.2 %			동독 재건비용 4,000억 마르크 지원
2000년	17.6 %		2.0 % (서독 2.8%)	동독에 1999년 9만 2천개 회사 창립
2001년		동독 주민 1인당 총생산, 1991년 서독의 34%에서 2000년 68%로 상승		동독지역에 통일 이후 53만개 회사 창립. 5년 간 수출 성장률 11.8%에서 21.2%로 상승
2002년				엘베강 홍수 지원금 100억 유로 지급
2003년				
2004년		동독 주민 1인당 총생산성이 서독의 74.6% 수준		연방 교육예산 20억 유로 지원(24.2%)
2005년			0.4 %	동독에 264억 유로 투자, 6만 6천개 일자리 창출

2006년	18.7 %	동독 주민 1인당 총생산성이 서독의 79% 수준	1.9 %	동독 주민 소득 서독의 82% 수준
2007년	17.3 % (서독은 9.1%)	동독 주민 1인당 총생산성이 서독의 67.3% 수준	2.2 %	
2008년	15.1 %			자동차 총생산의 12%가 동독에서 생산
2009년	11.8 % (서독은 6%)	서독 임금의 88% 수준		일자리 창출 위해 51억 유로 지원
2010년	13.0 %	서독 임금의 73% 수준 (세계금융 위기)		

제3절 구 동독지역 재건에 대한 각 정당의 제안과 논쟁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방정부는 독일 통일 5주년에 즈음하여 1995년 9월 29일 “구 동독지역 건설-가야할 길의 나머지 반-현황과 전망” 이라는 보고서를 연방의회에 제출하였다(문서번호 15).

연방정부는 이 보고서에서 통일 이후 구 동독지역의 건설이 완성되기에는 아직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아 있지만 지금까지의 건설 평가는 긍정적이라고 자평하고 구 동독지역의 법적, 조직적 통합은 거의 완성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경제적 자립은 아직 달성되지 않았으며 1994년의 경제성장률이 6.5%로 구 동독지역이 세계적으로 역동적인 지역에 속한다고 기술하였다. 독일 국내 총생산에서 구 동독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1년 7.2%에서 1994년 10.4%로 상승하였으며, 경제활동인구 1인당 국내 총생산을 근거로 산출한 구 동독지역 경제의 생산성은 1991년 구 서독의 31%에서 1994년에는 구 서독의 53% 수준이었다.

그러나 구 동독지역 경제의 자체적 성취 능력은 여전히 낮아 많은 경제적 지원을 받았으며 1995년부터 개편된 독일 연방주 사이에 재정균형배분을 받게 되었다. 구 동독지역에 투자는 1991년에 920억 마르크, 1995년에는 2,100억 마르크에 달해 외국기업도 많은 투자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구 동독지역의 경제재건에 관해 독일의 각 정당에서는 경제재건의 규모와 진행과정에 많은 비판과 요구서를 연방의회에 제출하였다. 여기에서는 각 정당들이 의회에 제출한 요구서를 중심으로 구 동독지역 경제재건에 관한 문제점을 조명하고자 한다.

1. 정당들의 구 동독지역 경제재건 촉진 요구

1) 사민당(SPD)과 녹색당(Die Grünen)의 구 동독지역 경제재건 촉진 요구
사민당과 녹색당이 1996년 5월 22일 구 동독지역 재건을 위한 제안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문서번호 22, 23).

- ① 구 동독지역의 실업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노동시장 지원정책 유지)
- ② 구 동독지역의 여성을 위한 지원(일자리 및 양성평등 정책)
- ③ 주택건설, 노후주택 현대화, 인프라 구축, 환경 개선
- ④ 구 동독지역 청소년들의 직업교육 및 인성교육
- ⑤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환경산업 육성
- ⑥ 구 동독 생산품의 판로 확보(동유럽, 중유럽 및 구소련 지역)
- ⑦ 구 동독지역 건설비용 조달

2) 자민당(FDP)의 신연방주 지역 재건을 위한 제안

야당인 사민당(SPD), 녹색당(Die Grünen)과 다르게 연립 여당이었던 자민당(FDP)은 1996년 6월 19일 신연방주 지역 재건을 위한 제안에서 다음 사항에 초점을 맞추었다(문서번호 24).

- ① 구 동독지역에 새로운 기업의 정착 지원
- ② 투자 지원 개선
- ③ 인프라 확대 구축
- ④ 경제 관련 행정 간소화 등을 제안하였다.

3) 연방의회 토론

사민당(SPD)의 롤프 슈바니츠 (Rolf Schwanitz)는 1996년 6월 20일 연방 의회 총회 연설을 통해 구 동독지역이 붕괴 위협에 있으며 경제성장의 꿈은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⁴⁵

그는 ① 구 동독의 경제성장률이 1994년 말 9.4%에서 1996년 초에 0%로 하락했으며 ② 구 동독의 건설경기는 파산상태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③ 구 동독에 대한 투자도 축소되어 내년에는 3% 이상 투자가 감소할 것이며 ④ 독일 통일 이후 6년 동안 350만개의 일자리가 상실되었으며 ⑤ 1996년 5월 공식적 실업자는 14만명이지만 실질적 실업자는 195만명, 실업률은 27.8%에 이르며 이는 구 서독의 2배에 달한다고 비판하였다.⁴⁶

4) 녹색당(Die Grünen)의 구 동독지역 재건 제안

녹색당은 구 동독지역 재건은 단시일 내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긴 안목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구 동독지역 재건을 위한 지원금의 액수도 최소한 5년 동안은 현재 지급되는 액수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1997년 6월 강조하였다(문서번호 29). 장기적인 안목으로 제조업과 성과가 좋은 산업중심지를 거점으로 지원하고 자영업과 중소기업에 많은 지원을 해야 하며 신연방주의 인프라 구축을 연방과 주정부의 공동과제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녹색당은 1997년 10월 “동독을 위한 새로운 기회” 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구 동독지역 재건의 문제를 지속적

⁴⁵ 1990년 10월부터 연방 국회의원이었던 슈바니츠는 1998년 슈뢰더 정부에서 1998년 10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연방총리실 차관 겸 구 동독지역 재건 담당 특임관을 지냈다.

⁴⁶ 문서번호 25,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Plenarprotokoll 13/113의 10040 쪽에 의하면 “Die Zahl der registrierten Arbeitslosen steigt saisonbereinigt, im Mai 1996 allein um 140 000. ... Die Zahl der Unterbeschäftigten, also derjenigen, die arbeitslos sind, und derjenigen, die in irgendwelchen Massnahmen der Bundesanstalt für Arbeit stecken, lag im Mai 1996 bei 1,95 Millionen oder 27,8 Prozent ...” 라고 기재되어 있다.

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문서번호 32).

5) 기민당(CDU)/기사당(CSU) 제안

1998년 가을 총선을 앞두고 집권 연립여당인 기민(CDU)/기사당(CSU), 자민당(FDP)은 “신연방주를 위한 성장과 고용정책의 지속” 이라는 프로그램을 1998년 5월 제안하였다(문서번호 35).

그 주요내용은 ① 현재 가장 중요한 과제는 실업률의 감소와 경제발전 달성이며 신연방주에 몇 년 동안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 ② 연방정부는 구 동독지역에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동 이니셔티브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③ 독일 통일 과정에서 독일사회주의통일당 (SED) 독재 후유증 극복을 위해 활동한 전문위원회(Enquete-Kommission)의 성과를 기민당(CDU)/기사당(CSU)은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6) 연방정부 답변

연방정부도 총선거 이전에 “구 동독지역 건설 우선” 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해 신연방주 건설이 절대적으로 우선 순위를 가진다는 정책을 발표하며(문서번호 39) 구 동독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구 동독 주민에게 일자리 창출과 높은 소득을 약속하였지만 결국 1998년 9월 총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기민당(CDU)/기사당(CSU), 자민당(FDP)의 연립정부가 패배하고 야당이 승리하며 사민당(SPD)/녹색당(Die Grünen) 연립정부가 탄생하였다.

2. 사민당(SPD)/녹색당(Die Grünen) 정부 출범

사민당/녹색당 연립정부가 출범한 후 연방정부의 구 동독지역 재건 특임관으로 임명된 로프 슈바니츠는 “독일 연방총리는 향후 2달에 한 번씩 신연방주를 방문해 주정부 대표들과 지역 간 문제, 특히 경제 상황과 노동시장

정책에 대해 논의 한다”라고 1998년 12월 9일 발표하며 구 동독지역 재건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다(문서번호 42).

민사당(PDS)도 구 동독지역의 생활수준을 구 서독과 동등하게 만들고 법의 안정적 집행을 위해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이러한 계획은 연방총리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1999년 6월 발표하였다⁴⁷(문서번호 44).

이 계획에는 독일 통일이 10년이 지났지만 구 동독지역의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더 많은 권한이 연방에서 신연방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역경제의 순환모델을 만들고 고용정책의 지역화를 강조하며 연방주 차원에서 사회-친환경적 혁신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보수적인 자민당(FDP)도 구 동독지역의 재건 사업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하며 독일 통일 교통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창업자와 중소기업자 지원 프로그램의 복잡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라는 제안을 1999년 9월 7일 제출하였다.

3. 민사당(PDS)의 구 동독지역 재건 특임관의 활동 질문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변

1) 민사당(PDS)의 연방정부에 대한 질문(문서번호 57)

- ① 연방정부 구 동독지역 재건 특임관의 1년 반 동안의 성과는 무엇인가?
- ② 연방정부 구 동독지역 재건 특임관은 어떤 특별한 이니셔티브를 발취하였나?

⁴⁷ 민사당(Partei des Demokratischen Sozialismus)은 독일사회주의통일당(Sozialistischen Einheitspartei Deutschland 약칭 SED, 구 동독 사회주의 정당)의 후신으로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후 1989년 12월에 당 명칭을 SED-PDS로 하였으나 1990년 2월에 PDS로 변경하였다. 그러다가 2005년 7월에 Die Linkspartei.PDS로 변경하였다가 2007년 6월 좌파당(Die Linke)으로 변경하였다.

- ③ 연방정부 구 동독지역 재건 특임관이 어떠한 새로운 법안제안, 프로젝트, 규정, 법안수정 등을 통해 신연방주 발전에 기여하였나?
- ④ 구 동독지역에서 발생한 어떤 문제점들이 특임관에 의해 해결되었나?

2) 연방정부의 답변

연방정부는 슈뢰더 총리가 로프 슈바니츠를 특임관으로 임명한 이후 슈바니츠 특임관은 신연방주에 관한 모든 문제를 처리하였으며 “구 동독지역 재건(Aufbau Ost)”과 “신연방주 각료회의(Kabinettausschusses neue Länder)”를 통해 구 동독지역의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노력했다고 답변하였다.

다음은 구 동독지역 재건 담당 특임관의 활동에 대한 연방정부 답변의 주요 내용이다.

“구 동독지역 재건의 조정을 통해 통일독일의 생활수준을 동등하게 만드는 일을 특임관은 연방정부와 협조 하에 무난히 추진하였다.

1999년 연례보고서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동, 서독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동등하게 만드는 일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1999년 연례보고서는 구 동독지역 재건을 위해 추진한 연방정부의 경제적 실적을 중요하게 다루었으며 특히 구 동독지역 청소년 실업 문제 해결에 정치적 중점을 두고 실행하여 성공을 거둔 바 있다.

특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들 수 있다.

- ①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추진(실업문제 해결)
- ② 교통시설 투자 강화
- ③ 구 동독지역 생산품의 시장 확보 지원
- ④ 구 부채의 처리
- ⑤ 주거시설의 현대화(주거정책 구조 변화 위원회 설치)
- ⑥ 독일 사회주의통일당(SED) 독재정치 피해자 보상 문제

특히 특임관은 구 동독지역 재건 정책이 모든 정부정책 중에서(예산, 재정 정책 등에서) 가장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되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동, 서독 생활수준을 동등하게 만드는데 많은 도움을 준 연대협약 II를 실현하도록 노력하였다.”

4. 사민당(SPD)/녹색당(Die Grünen) : 독일 통일 10년 보고서

사민당/녹색당 연립정부는 “독일 통일 10년”이라는 보고서를 2000년 9월 26일 연방의회에 제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문서번호 60).

1) 독일 통일 10년 평가

독일 통일 10년을 맞이하여 많은 실책과 실망도 있었지만 동, 서독 통합 과정은 종합적으로 성공적이라고 평가한다.

구 동독 주민들의 목표 달성 의지, 창조성, 유연성 등으로 통합이 큰 성과를 거두어 구 동독 주민들의 자긍심을 한층 고취시켰다. 구 서독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 지원, 단결심으로 통합은 더욱 큰 성과를 거두었다. 전 독일의 생활수준을 동등하게 만드는 것이 통일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다.

1990년 이후 구 동독 주민들의 생활수준은 많이 개선되었으며 임금은 2배 이상, 연금은 3배 이상 상승하였으며 가계소득도 서독의 85%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인프라 구조도 현대화되었고 구 동독의 국영기업은 민영화되었으며 회사 시설도 1990년 이후 약 80% 이상 새로이 건설되었으며 제조, 가공 산업도 서독수준에 거의 접근했다고 볼 수 있다.

구 서독의 사회보장적 수준도 구 동독에 확장되었고 구 동독지역에 76만 가구의 주택이 건설되었고 주거시설의 50% 이상이 현대화되었으며 주택보급률도 상승하고 환경오염도 많이 감소하였다. 구 동독은 유럽의 중심시장으

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연합도 동부지역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구 동독지역은 유럽 최고의 인프라시설, 통신시설망, 도로, 기차, 선박 수송의 중심지, 현대 첨단산업의 우수한 인력 확보 등으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

신연방주는 경제부문에서 성공적으로 발전하여 구 서독보다 빠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1999년 신연방주 국내총생산은 1.5% 성장하여 구 서독과 비슷한 성장률을 보였으며 제조, 가공산업 생산 성장률은 평균 9%를 기록하였다.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건설업은 1990년 통일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긍정적인 요소로 2001년에는 동, 서독의 격차가 많이 감소할 것이다.

그러나 구 동독지역의 경제적 전환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특히 높은 실업률은 1999년의 경우 서독의 2배나 높았다. 그러나 일자리는 증가 추세이며 특히 가공 산업의 실업률은 1999년 평균 2% 감소하였다. 구 동독지역의 경제적 미래는 경쟁력 강화, 기업들의 혁신 추진, 인프라의 확장, 청소년 근로자의 질적 향상 등에 달려 있다. 경쟁력 있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공적, 사적인 혁신활동을 활용하여 지역 전문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일 후 10년이 지났지만 또 하나의 어려운 문제는 통일독일의 내적통합이 완수되지 못한 것이다. 지금까지 연방정부가 통일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동, 서독 주민들에게 행복감을 주지 못하고 실망감만 안겨준 것이다. 앞으로 동, 서독 생활수준을 동등하게 만들고 높은 실업률을 감소시키고 많은 일자리 창출에 국가뿐만 아니라 임금계약 당사자들도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노력해야 한다.

신연방주의 재정문제 해결을 위하여 1993년에 합의하여 2004년까지 지급된 연대협약에 이어 구 동독지역의 지속적인 재건을 위해 연대협약 II의 협의를 위해 2000년 7월 15일 베를린회의에서 연방정부 장관들과 주정부 주지사들이 구 동독지역 재건을 연방정부, 주정부의 연대 재정정책으로 결정한 것

을 환영한다.

독일 통일 10년 이후, 구 동독지역의 민주주의도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구 동독 주민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부족하며, 극우파와 네오나치의 득표 상황이 하나의 위험신호를 보내고 있다. 또한 외국인 혐오, 인권 침해적 테러는 민주사회 발전과 경제성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구 동독지역에 극우파 해결은 중요한 정치적 과제이며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확립에 필요하다. 관용과 소수자 보호는 사민당(SPD)/녹색당(Die Grünen)의 주된 관심사항이다.

2) 향후 계획

연방정부와 연방의회는 동, 서독의 생활수준을 동등하게 만들고 실업률을 줄이고 경제구조의 발전, 국제적 수준의 교육과 연구 활동, 인프라 확장과 민주적 문화 강화에 도움이 되는 모든 노력을 지원하고자 한다.

- ① 연방의회 14회기에 연방주 재정균형제도에 합의하고 연대협약 II를 결정함
- ② 신연방주에 인프라 구조의 확장에 집중하여 투자 지원, 교육과 연구에 투자 등으로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어야 함
- ③ 지역 연결사업 지원과 시장 확보 기회 개선 노력
- ④ 구 동독지역의 생산품 판매 지원
- ⑤ 환경보호를 위한 산업 육성을 위해 구조 변화
- ⑥ 유럽연합에 가입하는 동부유럽 이웃 국가들에 인접하는 국경 인접지역과 구조 취약지역 지원
- ⑦ 청소년 실업해소 프로그램 지속 지원
- ⑧ 노동시장 활성화 및 고용정책 개발
- ⑨ 모든 영역에서 여성 지원정책 개발
- ⑩ 극단주의와 폭력에 대항하는 관용과 민주주의 연대 구성

5. 기민당(CDU)/기사당(CSU) : 독일 2015-현대 독일 모델 위한 구 동독지역 재건 제안

야당인 기민당(CDU)/기사당(CSU)은 2001년 5월 15일 연방의회에 “독일 2015년 : 현대적인 독일을 위한 모범으로서 신연방주 지역 건설”이라는 제안을 하였다(문서번호 66).

1) 주요내용

- ① 경제와 연구 중심지로 구 동독지역을 개발
- ② 인프라 개선
- ③ 교육정책 개선
- ④ 도시 개발-빈 주택 감축 노력
- ⑤ 친환경적 농업경제 구조 유지
- ⑥ 현지 사정에 알맞은 노동시장과 임금정책
- ⑦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행정의 현대화
- ⑧ 유럽연합 동부지역 확대에 따른 구 동독지역을 유럽 중심지로 개발
- ⑨ 연대협약 II와 연방주 사이에 재정균형제도 협상 종결

6. 자민당(FDP) : 구 동독지역 재건 10개 프로그램과 구 동독지역을 변화의 첨단지역으로 육성하자고 제안

또 다른 야당이었던 자민당(FDP)도 “신연방주 장래를 위한 적극적 투자 시작-인구 유출 중지-구 동독지역 재건 위한 10개 프로그램”을 2001년 5월 16일 연방의회에 제안하고 2004년 5월 26일 “구 동독지역을 변화의 첨단지역으로-구 동독지역을 위한 종합적인 지침”을 제안하였다(문서번호 67, 83).

1) 구 동독지역 재건을 위한 10개 프로그램의 주요내용

- ① 교통 인프라 확장
- ② 학술 연구 인프라 확장
- ③ 젊고 유능한 인재 유출 중단
- ④ 중산층 정책은 노동자 중심의 정책임
- ⑤ 창업자에게 더 좋은 기회를 부여
- ⑥ 주택건설과 재산형성 지원
- ⑦ 현대적 전일제 보육제도 지원
- ⑧ 법률체제 강화
- ⑨ 국경 인접지역 지원
- ⑩ 연대협약 II와 연방주의 재정균형제도 확정

자민당(FDP)의 제안내용도 같은 야당인 기민당(CDU)/기사당(CSU)의 제안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다.

2) 자민당(FDP), “구 동독지역을 변화의 첨단지역으로” 제안

자민당(FDP)은 2004년 5월 “구 동독지역을 변화의 첨단지역으로-구 동독지역을 위한 종합적인 지침”에서 구 동독 드레스덴(Dresden) 도시는 반도체, IT산업의 중심도시로, 화학, 바이오 테크닉(Biotechnologie)은 작센-안할트(Sachsen-Anhalt)주가 지역특화 사업 성공지역으로 꼽힌다고 밝혔다(문서 번호 83).

그러나 통일이 14년 지났지만 많은 재정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직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최근 통계자료는 밝히고 있다. 동, 서독의 생산성 차이는 평균 30%이며 구 동독의 기업 파산 비율은 20.5%로 서독의 9%보다 2배나 높으며 2003년 실업률은 18.5%로 여전히 서독의 2배에 달한다. 1991년 이후 구 동독지역 인구는 1백만명 감소하였다.

이런 통계를 보면 통일이 된 지 14년 지났지만 좌절감과 불만족이 팽배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동독의 장점과 이점을 살려 경제정책적 전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하나의 종합적 개념이 필요하다.

- 구 동독은 유럽의 중심에 위치한다.
- 훌륭한 교육을 받고 부지런하고 높은 작업 동기를 가진 능숙하고 우수한 인력을 보유해야 한다.
- 기능적으로 잘 분화된 첨단 연구산업단지를 구성해야 한다. (예; IT 산업-드레스덴)
- 효율적인 인프라 구조가 필요하다.
- 높은 생산성을 보장해야 한다.
- 매력적인 보조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자민당(FDP)은 연방의회가 연방정부에 다음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 ① 구 동독지역 재건을 위한 종합적 개념 도입 : 경제정책, 사회정책, 연구 지원을 위한 교육정책, 인프라 구조, 재정, 세무정책에서 노동정책까지 포함하는 종합적 개념이 필요하다. 지원은 기업적 투자와 특히 경제적 연구와 발전 사업에 집중되어야 한다.
- ② 연방 건설법, 임금법, 노동법의 규정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더라도 모델 지역을 선정하도록 한다.
- ③ 인프라 구조 확장을 위해 독일 통일 교통 프로젝트에 우선권을 부여해 구 동독지역이 유럽연합의 동부 교통 중심지로 부상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 ④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연구 지원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그리하여 연구제도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특성에 맞는 이득이 창출되도록 한다.
- ⑤ 구 동독지역에 투자 지원은 가치창조 부분, 고용효과, 연구개발 성과에 더 많이 고려되어야 한다. 구 동독기업의 연구, 개발, 지출은 구 서독 기업들보다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 ⑥ 비양심적인 대금지불 지연으로 인해 이자부담과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독일 전역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금을 책임량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에서 실질적인 거래수량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 ⑦ 유럽연합 동부 확장 계획에서 접경지역이 된 지역을 위해 1994년까지 실행되었던 접경지역 지원법에 상응하는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
- ⑧ 중소기업에 위험자본을 회전시켜 지원금을 쓸 수 있도록 한다.
- ⑨ 유전자 기술에 관한 법을 혁신으로 장려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여 친 환경적인 유전자 기술의 잠재력을 충분히 이용하여야 한다.
- ⑩ 환경보호와 자연보호, 소비자보호와 동물보호 부문에서 유럽연합의 지침을 따르는 과정에서 독일만 특별한 방법을 채택하는 것을 중시하고 시정하여야 한다.
- ⑪ 관광산업을 위한 제반조건을 개선해 미래 산업인 관광산업이 안정되고 일자리 창조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7. 사민당(SPD)/녹색당(Die Grünen) : “구 동독지역에 지속적 성장을 보장” 제안

사민당/녹색당은 “구 동독지역에 지속적 성장을 보장”이라는 제안을 하면서 연방의회가 먼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였다(문서번호 84).

- 구 동독지역의 지원정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2019년까지 지원하기로 합의한 연대협약 II 지원금 1,560억 유로를 승인
- 연방주 위원회의 결정을 고려하여 “지역 경제구조의 개선”이라는 공동 과제를 국가 경제 지원의 효과적인 장치로 유지

- 1) 사민당/녹색당은 연방의회가 연방정부에 다음사항을 요구하라고 제안하였다.
 - ① 연방주들과 함께 구 동독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강점과 발전 잠재력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 여기서는 신연방주들을 위해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연방정부, 연방주, 유럽연합의 지원수단을 집중적으로 사용하여 구 동독지역의 특별한 성장기회를 개선하는 것이다.
 - ② 혁신지원과 연구지원에서 중점사안을 분명히 규정하여 기존의 학술적으로 국제경쟁력이 있는 연구 분야를 우선적으로 확충하는 것이다.
 - ③ 중산층 지원과 중소기업 재정을 보조할 경우 구 동독지역 경제의 특수한 수요를 항상 주목할 것.
 - ④ 전체 독일의 지속적인 과제로 관료주의 제거를 계속 추진할 것. 성장 지원 관련, 고용 지원 관련, 규제완화 또는 간소화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것.
 - ⑤ 한 지역의 특별한 강점과 잠재력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으로, 예를 들면 잘 구성된 친소비자적인 농업을 계속 지원하는 것과 같은 방법을 통해 구조가 취약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것.
 - ⑥ 구 동독지역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전략, 특히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전략을 계속 유지할 것.
 - ⑦ 이미 시작된 노동시장 개혁을 지속할 것. 노동시장의 현대화는 구 동독지역에 존재하는 일자리 허점을 경제지원 도구나 혁신지원 도구를 통해 보완할 것.
 - ⑧ 구 동독지역에 정당한 수요가 있는 훈련교육 장소를 확보해 줄 것.
 - ⑨ 유럽연합의 구조정책 결정 시 2007년부터 최상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을 위해 공정한 과도기 규정을 적용하고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역에 집중하도록 영향력을 발휘할 것.

8. 좌파당(Die Linke)의 구 동독지역 재건에 대한 질의

구 동독지역에서 정치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았던 좌파당(Die Linke)은 구 동독지역 재건에 대한 연방정부 각 부처들의 업무협조 구조를 중심으로 연방정부에 질문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연방정부는 2007년 2월부터 답변하였다(문서번호 105, 106, 107).

- 1) 좌파당(Die Linke), 2006년도 독일 통일 연례보고서에 관한 질문에 연방정부의 답변(문서번호 105)
 - ① 신연방주 지역의 전문인력 부족 현상에 대한 질문에 연방정부는 전문 지식이 필요한 기술자라든가 IT산업에는 구 동독지역에 인력난이 발생하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구 동독지역에 전체 경제적인 환경을 적합하게 만들고 특히 세금정책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중산층을 위해 방해되는 규제를 없애고 효율적인 교육체계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 ② 구 동독지역의 일자리 보장과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연방정부는 신연방주에 경제성장 조건을 개선하고 경제구조 취약점을 제거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답하였다. 또한 구 동독지역에 투자와 혁신을 지원하고 수요에 알맞은 인프라를 확충하고 산업계와 학계의 연계사업이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 ③ 젊은 층 인구가 구 동독지역에서 유출되는 것에 대한 질문에 연방정부는 인구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더 매력적인 곳이 되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취직 전망이 좋은 지역, 사회적 인프라를 포함한 지역시설, 삶의 질에 대한 평가, 그리고 지역의 좋은 이미지 등이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2) 좌파당(Die Linke)의 구 동독지역 재건을 위한 연방기관의 업무구조 질문

- ① 연방정부의 각 부처에서 어떤 인력이 구 동독지역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냐는 좌파당(Die Linke)의 질문에 연방정부는 아래의 도표를 제시하며 설명하였다(문서번호 106).

표 1-4) 연방정부 내 구 동독지역 재건 담당

연방부처	구 동독지역 관련 업무를 전담하거나 주로 담당하는 업무자의 수	구 동독지역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최상급직 업무자의 수
연방총리실	2명, 그밖에 기타 범(凡)부처 정책과제 수행	1명
외무부	없음	
연방내무부	범부처 정책과제 수행 ¹⁾	
연방법무부	3.5명	2.5명
연방재무부	21명, 기타 범부처 정책과제 수행	10명
연방교통·건설·도시개발부	36명, 기타 범부처 정책과제 수행	25명
연방경제·기술부	7명, 기타 범부처 정책과제 수행	4명
연방노동·사회부	범부처 정책과제 수행	
연방교육·연구부	5명, 기타 범부처 정책과제 수행	3명
연방식량·농업·소비자보호부	1명, 기타 범부처 정책과제 수행	1명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범부처 정책과제 수행	
연방보건부	범부처 정책과제 수행	
연방환경·자연보호·원자로안전부	범부처 정책과제 수행	
연방국방부	범부처 정책과제 수행	
연방경제협력·개발부	없음	

주1) 연방내무부 내에는 총 7인의 업무담당자가 배속되어 있으나, 이들은 구 동독지역 관련 업무만을 전담하거나 주로 담당하지는 않으며, 주로 범부처 정책과제를 수행하고 있음.

- ② 구 동독지역 주제와 관련하여 연방, 주, 지자체들이 어떤 주제로 얼마나 자주 협의하는가? 라는 질문에 아래의 도표로 대답하였다.

표 1-5) 구 동독지역 관련 업무회의 조직

연방부처	구 동독지역 주제와 관련하여 연방, 주, 지자체 차원에서 존재하는 업무추진 조직명	업무추진 협의 빈도 수
연방총리실	연방총리와 16개 주(州)총리들 간의 회담	
외무부	없음	
연방내무부	극우주의를 저지하는 연방(연방내무부,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주(州) 간의 조정 그룹	연 3회 예상
연방법무부	없음	
연방재무부	구 동독 관련 정책과제 수행을 연방-주(州) 간 위원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협의함	
연방교통·건설·도시개발부	과거 채무 지원법에 대한 운영위원회 구 동독 도시개발에 대한 연방-주(州) 간 프로그램의 평가를 위한 운영위원회 구 동독의 주총리 협의회(MPK-Ost)에 업무담당자들이 배석함 구 동독과 관련된 기타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연방-주(州) 간 위원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협이가 이루어짐	연 1~2회 2006년 11월부터 2007년 5월까지 총 6회, 연 2회
연방경제·기술부	구 동독과 관련된 기타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연방-주(州) 간 위원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협이가 이루어짐	
연방노동·사회부	구 동독과 관련된 기타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연방-주(州) 간 위원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협이가 이루어짐	
연방교육·연구부	구 동독과 관련된 기타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연방-주(州) 간 위원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협이가 이루어짐 혁신정책에 중점을 둔 문제들에 대해 구 동독 혁신 토의	
연방식량·농업·소비자보호부	구 동독 내 농업 관련 전문담당자 업무팀	연 2~4회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구 동독과 관련된 기타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연방-주(州) 간 위원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협이가 이루어짐	
연방보건부	구 동독과 관련된 기타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연방-주(州) 간 위원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협이가 이루어짐	
연방환경·자연보호·원자력안전부, 연방재무부	갈탄 정화 사업에 대한 조정 및 예산위원회 (참여위원: 연방 및 브란덴부르크주, 작센주, 작센-안할트주, 튀링겐주)	연 4회
연방국방부	없음	
연방경제협력·개발부	없음	

각 부처들은 구 동독지역과 관련된 정책과제를 연방과 주(州)위원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협의한다고 답변하였다.

- ③ 연방정부가 신연방주에 추진한 정책의 영향력을 검토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연방정부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 특임관은 신연방주에 대한 총괄정책을 집행,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입법 의도가 신연방주에 미친 영향도 평가하여 다음 입법절차에 반영한다. 또한 특임관의 활동은 신연방주를 위한 지원정책을 지속시키고 최적화하는 것도 포함한다. 이것은 연방정부와 구 동독 주정부 관련 부처들 사이에 긴밀한 협조로 진행된다.

3) 좌파당(Die Linke)의 구 동독지역 재건 관련 연방부처들의 업무구조 질문 (문서번호 107)

- ① 구 동독지역 재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구조가 모든 연방부처에 다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향후 구 동독지역 재건 담당 인력을 확보할 예정인가?

연방정부의 답변 : 대다수 연방부처들은 구 동독지역 재건 관련 사안을 범부처의 과제로 인지하고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또한 향후 구 동독지역 재건 과제만을 전담할 인력을 충원할 계획은 없다. 연방부처는 구 동독지역 재건 관련 주제를 관할 전문부서에서 처리한다. 이 경우 구 동독지역 주(州)들의 특수상황을 고려해 각자 전문적인 관점에서 우선순위를 둔다.

- ② 구 동독지역 재건 지원 부처들 간의 차관회의에 참석한 범위와 그 빈도는?

연방정부의 답변 : 2002년 연방하원 선거가 실시된 후에 정부가 구성

됨에 따라, 구 동독지역 재건 관련 정책과정을 전담할 연방정부 특임관의 직책이 연방교통·건설·주택부 장관에게 주어졌다. 당시 구 동독지역 재건들을 전담하게 된 연방정부 특임관은 2004년 말에 구 동독지역 재건을 위한 대규모 지원 프로그램을 맡고 있던 부처들의 차관급 회의를 개최하였다. 그 회의에는 연방 교통·건설·주택부(BMVBW), 외에 연방 경제·노동부(BMWA), 연방 교육·연구부(BMBF)와 연방 소비자보호·식량·농업부(BMVEL) 차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2005년 연방하원 선거가 실시된 후에는, 신연방주들 관련 정책과정을 전담할 연방정부 특임관의 직책이 연방 교통·건설·도시개발부 장관이 겸직하게 되었다. 구 동독지역 재건 지원 부처들의 차관급 회의는 계속해서 개최되었으며, 본 회의 상임위원으로 연방재무부 차관이 참석하였다. 연방 경제·노동부가 연방 경제·기술부와 연방 노동·사회부로 분류되면서, 연방 경제·기술부와 연방 노동·사회부는 본 회의의 상임위원이 되었다. 특히 연방 노동·사회부(BMAS)가 상임위원이 된 것은 구 동독의 재건과 관련하여 노동시장 이슈가 정치적으로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추가로 상임위원이 된 부처는 연방 교육·연구부(BMBF)와 연방 식량·농업·소비자 보호부(BMELV)이다.

본 차관급 회의는 지금까지 다섯 차례 개최되었으며, 회의는 매번 공무 인력 차원에서 조직된 실무그룹의 회의를 거쳐 준비되었다.

③ 갈탄 정화 사업 위원회의 2004년-2006년도 회의 개최 결과는?

연방정부의 답변 : 구 동독지역 소재 갈탄 광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정화하기 위해 1991년부터 지금까지 10만 헥타르가 넘는 면적에 80억 유로 이상을 투자하였으며 이 중 약 75%는 연방정부가 지원하였다.

④ 구 동독지역 재건을 담당하던 연방총리실 산하 기획개발팀을 이번 회기에 왜 해산하였으며, 왜 다른 부서로 병합 되었는가?

연방정부의 답변 : 특임관 직책이 제 15차 입법회기부터 연방 교통, 건설, 도시개발부 장관에게로 위임되었기 때문에 구 동독지역 재건 전담 기획개발팀은 연방 교통, 건설, 도시개발부로 이관되었다.

⑤ 연방부처 내 구 동독지역 재건 과제를 맡은 직책 중 현재 공석인 직책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연방정부의 답변 : 연방 교통, 건설, 도시개발부 내에 7.5명이 현재 공석이며 이 중 6명의 직책이 2007년에 신설되어 현재 선발, 임용절차를 준비 중에 있다. 나머지 1.5명의 직책은 상황변화로 공석이나 정식으로 선발하여 임용, 준비하고 있다. 다른 연방부처에는 구 동독지역 재건 담당 직책 중 공석은 없다.⁴⁸

⑥ 구 동독지역 재건을 위해 구 동독지역 재건 담당 부서가 추진하는 주요 업무와 목표는 무엇인가?

연방정부의 답변 : 신연방주들 관련 정책을 전담하는 연방정부의 특임관은 연방교통·건설·도시개발부 내에 “구 동독지역 재건” 부서를 조직하여 지원을 받고 있다. 구 동독의 재건을 위해서 연방정부 특임관이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 “구 동독지역 재건” 부서가 추진하는 중점적인 업무들은 아래와 같다:

- 구 동독의 재건 관련 연방정부의 총괄정책에 대한 조정
- 구 동독의 재건 관련 지원정책을 준비하는 과정을 특임관과 논의함
 - 신연방주들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재무정책, 노동시장정책, 경제정

.....

⁴⁸ 2007년 8월 10일 답변에서 공석 7.5명 중 3명은 인원을 충원하였으며 2.5명은 결정 단계에 있으며, 2명은 직책을 거부하여 재선발 중이라고 밝힘(문서번호 110번).

책, 중소기업정책, 경제정책 및 기술정책 등의 전문분야 문제를 특임관과 논의하여 진행함

- 구 동독 주(州)정부들과 토론을 진행함

연방정부 특임관은 매년 구 동독지역의 재건을 위한 전략과 신연방주들에 대한 연방정부 조치를 다룬 가장 중요한 정책원칙 백서로서 “독일 통일현황에 대한 연방정부 연례보고서(Jahresbericht der Bundesregierung zum Stand der Deutschen Einheit)”를 제출한다. 이 연례보고서는 매년 10월 3일 이전에 연방하원에 전달된다.

- ⑦ 2006~2007년 각 부처별로 구 동독지역 재건 관련 주요 사업을 설명
 연방정부의 답변 : 2006년과 2007년에 연방부처별로 중점적으로 추진한 구 동독지역 관련 업무현황은 아래의 표에서 참고할 수 있다. 정책업무의 수행 결과가 법규와 시행 조치의 형태로 발표된 경우,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표 1-6) 부처별로 담당한 구 동독 관련 중점 업무

연방부처	2006년과 2007년에 수행한 구 동독지역 관련 중점 업무
연방총리실	공동협약 이행 시 관계 부처들이 같이 추진함.
연방내무부	신연방주들과 과거의 동베를린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스포츠 시설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 프로그램인 “골든 플랜(Goldner Plan)” 을 추진.
연방법무부	“피해자 연금”을 포함하여 사회주의 통일당(SED) 피해자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공동협약 이행; 형법과 직업복권법, 그리고 행정법상의 복권법에 따라 그 신청기한을 연장함. 연방행정법원으로 소송이 접수되기 전에 연방정부 측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대리인을 준비하는 것을 비롯하여, 재산법 및 복권법에 따라 신청서를 처리하는 업무를 진행함 . 신연방주들 내에 소재한 토지와 관련된 법적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법규를 담당하여 적용함.

연방재무부	<p>연방정부와 연방재무부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신연방주들이 자생력을 갖춘 경제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 지역의 경제력을 강화하고 실업률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p> <p>〈2006년〉 : 토지매각관리회사(BVVG)가 보유하고 있는 나머지 60만 헥타르 농경지를 민영화로 추진하는 데 대해서 표결함.</p> <p>〈2006/07년〉 : 신연방주들과 베를린 내에 소재한 기업 중에 조세 의무자로서 지원받을 권리가 있는 가공업을 비롯하여, 특정 제품에 근거한 서비스업, 그리고 숙박시설 업종을 대상으로 투자보조금으로 기업투자를 지원함(2007년 투자보조금법에 근거).</p> <p>재정조정법 11조 3항에 따라 신연방주들과 베를린을 대상으로 한 “구 동독지역 재건” 관련 경과 보고서에 대하여 연방정부 측이 의견서를 제출함.</p>
연방경제·기술부	<p>하이테크놀로지 전략에 입각하여 대규모로 혁신 지원을 확대함(특별히 구 동독에 중점을 둔 특별 프로그램인 INNO-WATT, PRO INNO II와 새로운 프로그램인 “산업공학 관련 事前 연구 Industrielle Vorlauforschung” 를 지원함).</p> <p>신연방주들을 감안하여 좀 더 효과적인 투자자들을 모집함(“독일 내 투자 Invest in Germany” 와 “산업투자 위원회 Industrial Investment Council” 를 통합하여 “독일 내 투자 연방회사 Bundesgesellschaft Invest in Germany” 를 신설했음. 현지 마케팅과 투자자 모집에 대한 새로운 규정).</p> <p>부문별·주제별 전문회의의 계속(기계공학 미래전망 회의가 2007년 3월 14일과 15일 앙일 간 라이프치히에서 개최되었으며, 베를린에서 기업재정지원 회의와 작센-안할트주에서 화학 회의를 개최하기로 계획함).</p> <p>마케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구 동독지역 판매 촉진지원을 지속하고, 부문별 회의를 개최하여 일부 선별된 특정국들 대상으로 협의한 프로젝트를 보완함.</p>
연방노동·사회부	<p>신연방주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중점업무를 추진하지 않음</p>
연방교육·연구부	<p>후진양성, 우수자 지원, 혁신지원, 클러스터(cluster) 지원 및 혁신 관리.</p> <p>위에 명시된 주제들과 관련하여 신연방주들과 직접 “구 동독 혁신 토의” 를 진행하여 중요한 문제들과 해결책을 논의하고, 구 동독 내의 혁신정책, 연구정책, 교육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공동 계획 안(案)을 구상함.</p>
연방교통·건설·도시개발부	<p>신연방주들을 전담하는 연방정부 특임관으로 임무를 수행함.</p> <p>구 동독지역 도시개발에 대한 연방- 주(州) 간 프로그램을 시행함.</p> <p>독일 통일 교통 프로젝트의 시행을 완수함.</p>
연방식량·농업·소비자 보호부	<p>기민(CDU)/사민당(SPD) 대연정 협약 사항을 이행: 독일 바이오매스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부문별 회의를 개최함.</p>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p>신연방주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중점업무를 추진하지 않음</p>

연방보건부	<p>신연방주들 내에서 의사와 환자들의 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2007년 1월 1일에 “계약직 의사 권리 개정법”을 도입하였으며, 2007년 4월 1일자로 효력을 발휘한 “법정 의료보험-경쟁력 강화법”을 도입함(계약직 의사권리를 유연화하고, 의료 부양에 애로사항이 생길 위험을 예방하고,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역들을 위해 2009년부터 보건기금을 통해 의료 보험 사이에 재정상환 능력을 균등화하기 위한 “법정 의료보험-경쟁력 강화법”을 도입함).</p>
연방환경·자연보호·원자력안전부	<p>“국립 자연 유산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도록 “그린 벨트” 안에 수용되어 있는 연방 토지를 이관시킴(연방 재산청, 토지매각관리회사), 이관 규정에 대한 연방과 주(州)들 사이의 협의는 아직 완결되지 않았으며, 협의는 2007년에도 계속되고 있음.</p>
연방환경·자연보호·원자력안전부/연방재무부	<p>갈탄 채굴광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정화사업(갈탄 정화사업에 대한 연방-주(州) 간 제3차 행정협약, 기한: 2003~2006년까지) 추진</p>
연방국방부	<p>신연방주들 내의 최대 고용주이자 주문자인 이 지역 노동시장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함. 경제 분야와 연방군대 사이의 협력을 증진시킴, 특히 “베를린 모델(Berliner Modell)”을 기초로 하여 한시적으로 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민간 직업교육 및 지속 교육 과정을 운영함. 연방군대에서 현재 진행 중인 연구 및 기술 계획의 범위 내에서 동독 내 연구 소재지들을 강화하는 데 기여함.</p>
연방경제협력·개발부	<p>개발정책의 맥락에서 국내 교육업무를 추진함: “남북 교량(Nord-Süd-Brücken)” 재단을 통해 신연방주들을 대상으로 국내 교육프로그램을 특별 지원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정책의 맥락에서 교육업무를 시행하기 위해 민간 담당업체와 최대 3년의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에 대한 소요경비를 지원함 • 밀레니엄-개발 목표와 관련해서 동독에 소재한 비정부기관(NGO)들에게 지원함.

4) 좌파당(Die Linke)의 질의 : 2020년까지의 구 동독지역의 발전 전망(문서 번호 108)

연방정부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 ① 재정 이전 관련 : 1991년~1998년 사이에 이전된 재정총액은 6,850억 유로에 달하고 그 이후는 재정 이전에 관하여 별도 조사를 하지 않았다.
- ② 독일 인구 관련 : 2020년에 전체 독일 인구는 0.5% 감소할 것임(인구 8,250만 명에서 8,210만 명으로 감소) 구 동독지역 인구는 약 6.7% 감

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③ 유럽연합(EU)의 지원 : 구 동독 지역은 2000~2006년 사이에 유럽연합(EU)으로부터 총 195억 5천만 유로를 지원받았다.

5) 좌파당(Die Linke) 제안 : 구 동독지역 담당 차관 임명을 연방의회에 제안(문서번호 136)

- ① 구 동독지역 재건 특임관을 “구 동독지역 담당 차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연방총리실 소속으로 한다.
- ② 연방정부 업무 규정을 개정하여 구 동독지역 차관이 연방정부 회의에 참석할 권한을 부여하고 정치적 의미가 있는 모든 문제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도록 한다.
- ③ 좌파당(Die Linke) 프랑크 템펠(Frank Tempel) 의원의 “구 동독지역 재건 담당 특임관이 장관직에서 차관직으로 강등된 것 아닌가?” 라는 질문에 연방정부는 “구 동독지역 재건 담당 특임관직이 2009. 10. 28 자로 연방 교통, 건설, 도시개발부에서 연방내무부로 이관되었다. 한스 페터 프리드리히 (Hans Peter Friedrich) 장관 취임 후 전 작센-안할트 주지사였던 크리스토프 베르그너(Christopf Bergner) 의회 차관(Parlamentarischer Staatssekretär)을 구 동독지역 재건 특임관으로 임명하였다. 크리스토프 베르그너 차관은 2011년 3월부터 당시 장관 토마스 드 메지에르(Thomas de Maiziere)로부터 특임관 직을 인계 받았다”라고 답변하였다(문서번호 138).

구 동독지역 재건 특임관을 구 동독 담당 차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자는 좌파당(Die Linke)의 제안은 2011년 6월 20일 기민당(CDU)/기사당(CSU), 사민당(SPD), 자민당(FDP) 등의 반대로 부결되었다.

9. 독일 통일 현황 2011년 연례보고서에 대한 연방의회 총회 토론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2011년 연례보고서 채택을 앞두고 연방의회 토론에서 베르그너(Christoph Bergner) 특임관은 구 동독은 이제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하였다고 밝히고 구 동독지역 기업도 경쟁력이 있으며 구 동독의 전반적인 생활수준도 서독과 비슷해 졌다고 주장하였다(문서번호 143).

또한 독일 통일 당시 동독의 1인당 GDP는 서독의 43% 정도 였으나 이제 구 동독의 1인당 GDP는 서독의 약 75% 정도 수준이다. 이는 서독에서도 함부르크(Hamburg)와 슐레스비히 홀슈타인(Schleswig-Holstein)의 격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런 격차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기민당(CDU)의 아놀드 파츠(Arnold Vaatz) 의원도 동, 서독의 격차는 2가지 차원, 즉 기존의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와 비교하고 또 1990년 상황과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야당인 사민당(SPD)의 이리스 클라이케(Iris Gleicke) 의원은 구 동독의 경제력이 서독의 73% 수준에 멈추고 있다며 생산능력도 80% 선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구 동독의 실업률은 서독의 2배이며 동, 서독 간의 임금격차는 15~30%에 달해 구 동독지역의 사람들이 서독으로 이전하여 구 동독에 전문 인력이 점점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연립정부 여당인 자민당(FDP)의 파트릭 쿠르트(Patrick Kurth) 의원은 구 동독도 많이 발전했다며 실업률도 점차 향상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구 동독 주민들은 유연성을 발휘하여 최단 기간에 새로운 구조에 적응하여 직업교육을 받고 소유권 유지와 재산을 축적하는 방법도 배우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그는 구 동독지역에 중소기업이 발달하여 빠르게 현대화 되었고 혁신력이 뛰어나다고 강조하였다. 구 동독지역 재건 프로그램이 담당하는 부서의 관할 소관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전 독일적(全獨逸的) 과제로 인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임관 제도와 구 동독지역 재건 계획의 시사점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분단된 한국과 독일은 그 분단 원인과 역사가 다르다. 한국은 아무런 잘못없이 전쟁의 희생자가 되었으며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겪어 분단의 고통은 독일보다 더욱 심하였다. 독일 분단시대의 통일정책은 한국에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여 주었다.

1972년 동, 서독의 기본조약(Grundvertrag)으로 양국이 관계를 개선할 즈음, 한반도에서도 1972년 7. 4 공동성명으로 남북관계가 잠시나마 화해의 분위기가 감돌았었다. 베를린 장벽이 1989년 11월 붕괴되고 1990년 10월 통일을 조속하게 완수하자 한국 국민들은 독일 통일을 부러워하였으며 한반도에서는 1991년 12월 남북기본 합의서 체결에 만족해야만 하였다. 동독이 서독에 흡수통일 되는 것을 목격한 북한 체제는 흡수통일에 강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한국에서는 독일 통일 이후 서독의 막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통일비용에 대한 논쟁이 활발하게 벌어졌다.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는 분단국의 통일사례에서 독일 통일을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삼아 연구하고 분석하고 있다. 물론 한국과 독일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은 많은 차이가 있다. 그러나 통일은 제3자가 우리에게 선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준비하여야 하는 것이다. 통일이라는 것은 두 강물이 천천히 질서있게 섞이는 것이 아니라, 댐이 터지듯 한꺼번에 큰 소용

돌이를 치면서 모든 것이 뒤섞이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하여야 한다.

독일 통일 초창기에 많은 사람들은 동독이 서독과 비슷한 수준에 도달하는 시기와 동, 서독 사이에 깊이 파인 이질감이 해소되는 시기를 동, 서독 주민들의 한 세대(약 25년)가 지나가면 없어질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베를린 장벽 붕괴가 25년이 되어 가는 시점에 과연 동, 서독의 격차와 불균형은 해소 되었는가?

독일의 구 동독지역 재건 담당 특임관은 통일 이후 동, 서독의 사회적, 경제적 통합을 위해 설치한 제도이다. 구 동독지역의 경제수준을 구 서독의 수준으로 균등하게 재건시키는 업무를 주로 하였지만 창설 초기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독일 통일 당시 내독관계부(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가 양독 관계를 담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독관계부를 해체하고 특임관을 설치한 배경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여론도 있다.⁴⁹

특임관을 설치하게 된 가장 설득력 있는 이유로는 독일 통일이 국가 대 국가, 즉 기본법 146조에 의한 새로운 국가 건설의 통일이 아니라 기본법 23조에 의한 흡수통일이었기 때문에 정부기구에 통일문제를 다룰 연방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당시 연방정부(총리)가 조속한 통일 이후의 동, 서독의 통합문제에 대해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주장도 있다.⁵⁰ 통일 이후 내독관계부에서 어느 정도 통합문제(특히 경제적 재건)를 추진하였다더라면 업무의 일관성으로 효율적이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의미가 있다. 통일 직후 연

⁴⁹ 통일 당시 내독관계부 차관이었던 프리스니츠(Prisnitz)씨는 통일 이후 내독관계부가 동독의 경제 재건과 통합을 담당하는 부서로 승격되리라 믿었다고 한다.

⁵⁰ 로프 슈바니츠(Rolf Schwanitz) 전 특임관은 콜 총리가 독일 통일 이후 구 동독의 경제 재건과 사회적 통합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고 쉽게 장담했다고 비판하였다.

방총리는 자신이 가장 신임하는 인사를 특임관(혹은 조정관)으로 임명하여 많은 권한을 주었지만 연방총리실이라는 구조적 문제와 통일 이후 발생하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또한 특임관의 직위가 차관급이었으며 소속이 연방총리실, 연방경제부, 연방교통/건설/주택부, 연방내무부로 자주 이관되어 업무의 일관성이 부족하였다.

대통령 중심제인 한국의 정치체제에서 통일문제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의 통합문제는 강력한 기획력과 재정적 지원력을 가지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부총리급 정부 부처가 오히려 필요하지 않을까?

독일 통일 이후 구 동독지역의 낙후성을 극복하는 데 특임관 제도만으로는 효율적이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독일이 통일을 이룬지 거의 25년이 되어가지만 아직 통합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숙제로 남아있다. 2019년 연대협약 II가 완료되면 통합도 이루어 질 수 있을까?

구 동독지역 재건 담당 특임관을 지낸 만프레드 슈톨페(Manfred Stolpe)는 통일 특임관에게는 많은 재원과 권한이 필요하며, 특히 재정문제에 대해서는 거부권과 동의권을 포함한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여야 경제적 재건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증언하고 있다.⁵¹

서독이 동독을 흡수하여 통일을 완수한 후 한국에서는 막대한 통일 비용에 대한 우려가 높다. 독일은 통일 후 독일 통일기금(Fonds Deutsche Einheit, 1990년~1994년), 통일연대세(Solidaritätszuschlag, 1991년 7. 1~1992년 6. 30, 그리고 1995년~현재)과 연대협약(Solidarpakt, 연대협약 I 1995년~2004년, 연대협약 II 2005년~2019년)등의 재원(財源)으로 통일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

⁵¹ 만프레드 슈톨페 인터뷰 (2013. 11.4), 베를린 자유대학 한국학과, P. 9- 14 참고

독일의 이런 3가지 재원을 참고하여 한반도 통일에 어떻게 통일비용을 조달할 지를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재정을 어떻게 분배, 활용할 지에 대해서도 세심한 계획이 요구된다.

물론 독일과 한국은 정치체제, 경제력, 정치문화, 사회적 구조 등 모든 것에서 많은 격차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독일 통일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분석하여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분명한 것은 한반도가 통일되면 독일의 통일 보다 더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다는 예상이다. 우리는 분단 기간이 65년이 지났고, 남, 북한 주민들이 서로 교류(독일처럼 친인척 방문이나 언론 매체를 통한 인포메이션 획득)가 없었고 더욱 한국전쟁이라는 내전을 겪었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통일 이후의 통합과정을 포괄적으로 집행하는 정부의 강력한 부처가 요청된다.

현재의 통일부가 통일 이후에는 북한의 경제적 재건과 남, 북한 사회적 통합을 아우르는 통합부로 명칭을 변경, 북한에 정통한 부총리급 장관을 수장으로 하는 조직으로 과도기 동안이라도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하는 것이 우리가 독일 특임관 제도로부터 배워야 할 점이다.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공동체 의식과 서양과 다른 고유한 정서(즉, 恨과 情)를 가지고 있기에 어쩌면 다른 국가들이 염려하는 것보다 수월하게 한반도 통일을 이루고 사회적, 경제적 통합을 예상보다 빠르게 극복할 가능성도 있다.

참고문헌

〈국문〉

- 김영탁; 독일 통일과 동독 재건과정, 서울, 도서출판 한울, 1997.
 볼프강 쇼이블레; (한우창 번역) : 나는 어떻게 통일을 흥정했나, 서울, 동아일보사, 1992.
 베르너 페니히/ 이은정, “연방정부의 구 동독지역 재건 특임관”,
 우베 몰러, (이봉기 옮김): 대재앙 통일, 독일 통일로부터의 교훈, 서울, 문학세계사, 2006.

〈외국 문헌〉

-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Technologie (Hrsg.), Bilanz der Wirtschaftsförderung des Bundes in Ostdeutschland bis Ende 1998, Bonn, 1999.*
Fuchs, Michael : “Beauftragter” in der öffentlichen Verwaltung, Berlin, 1985,

Hänsel, Heiko : 동서독 통합 관련 기관 편람, 통일부, 2006
Hesse, Joachim Jens und Ellwein, Thomas : Das Regierungssystem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7. Aufl, Band 1.
Hesse, Konrad : Grundzüge des Verfassung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20. Auflage, C.F. Müller Verlag, Heidelberg 1999.
Hopp, Helmut, Beauftragte in Politik und Verwaltung, Bonn, 1993.
Mädig, Heinrich : Öffentliche Finanzen, in: Andersen, Uwe, u.a.: Handwörterbuch des politischen System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Opladen, 2003.

Müller, Uwe , Supergau Deutsche Einheit, Hamburg 2006.

Paqué, Karl-Heinz : Transformationspolitik in Ostdeutschland: ein Teilerfolg. In: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28/2009 (6. Juli 2009).

Schmidt, Helmut : Auf der Suche nach einer Öffentlichen Moral, Deutschland vor dem neuen Jahrhundert, Deutsche Verlags-Anstalt, Stuttgart 1998,

Seitz, Helmut; Zur Versachlichung der Diskussion um die Verwendung der Osttransferleistungen, 2006.

Tofaute, Hartmut : Sonderfonds als Instrumente zur Finanzierung der Kosten der deutschen Einigung. Friedrich-Ebert-Stiftung, 1993.

Zinsmeister, Florian : Die Finanzierung der deutschen Einheit-Zum Umgang mit den Schuldenlasten der Wiedervereinigung. In: Vierteljahrshette zur Wirtschaftsforschung, 2009.

구 동독지역 재건 특임관의 특징

베르너 페니히 / 이은정
(독일 베를린 자유대)



들어가며

독일의 헌법인 기본법은 독일 국민 모두가 주거 지역에 관계없이 동등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정치의 기본원칙으로 규정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 정부는 1950년 이후 지속적으로 취약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취약함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자연공간적인 조건으로 인해서 생길 수도 있고, 2차 세계대전 이후 발생한 천 1,200만명의 피난민 또는 실항민을 통합해야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될 수도 있고, 해안이나 산업지역과 같은 곳에서 구조적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정치적 발전에 기인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서베를린과 동독의 국경에 있던 지역들은 접경지역이라는 특수한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특별 지원을 받았다. 독일 전역에서 동등한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정책은 이렇게 오래 전부터 있었다.

그러나 독일이 1990년 이후 통일과 함께 해결해야 했던 문제는 독일 근대사에 전례가 없었던 것이다. 물론 대규모 영토가 독일연방공화국으로 편입되었던 경우가 한 번 있었다. 그것은 1955년에 자알란트가 독일로 통합되었을 때였다. 독일 서남부에 있는 이 지역은 2차 세계대전의 종결 이후 프랑스령이었다가 주민투표로 다시 독일에 통합되었다. 그렇지만 이 지역에는 독일로부터 분리되어 있던 1945년에서 1955년까지 약 11년 동안 서독과 아주 유사한 정치, 경제 시스템이 존재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독일로 통합되는 것을 결정한 이후 경제와 정치체제에서 통합을 위한 특별 지원조치가 신속하게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다.

그와 달리 동독에는 40년 동안 서독과는 완전히 다른 체제가 존재하였

다. 그로 인해 동독이 1990년에 독일연방공화국에 가입하는 것이 1955년의 자알란트(Saarland)의 경우보다 어려웠다. 신연방지역(구 동독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서독지역과 동등하게 만드는 것은 더욱 어려운 과제였다. 그러나 이것은 독일연방공화국의 기본법에 명시된 독일 정치의 기본원칙이었고 통일이 된 이후에도 기본법은 여전히 독일 헌법으로 그 효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실제 통일 이후 독일 정부는 지속적으로 구 동독지역의 모든 조건을 신속하게 개선하여 서독지역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것은 통일과정에서 이미 분명하게 드러난 구 동독지역으로부터 서독지역으로의 인구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신속히 실현되어야 할 과제였다. 이를 위해 독일연방정부는 “동부 재건”(Aufbau Ost)이라는 모토 하에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연방정부의 다양한 부처와 각 주정부의 기관들이 담당하였다.

연방정부의 구 동독지역 재건 담당 특임관 제도는 동부 재건(Aufbau Ost) 프로그램이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도입된 제도였다. 연방수상실의 차관으로 연방정부의 구 동독지역 재건 담당 특임관을 담당하였던 로프 슈바니츠(Rolf Schwanitz)는 특임관의 활동과 관련해 2000년 4월에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연방수상실을 통해서 동부 재건의 협력을 책임지도록 한 연방정부의 결정은 통일독일 전역에서 동등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정치의 중심적인 과제이며 연방정부 전체의 책임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¹

이 제도가 공식적으로 도입된 것은 1998년이지만 그 이전에도 연방정부는 구 동독지역 재건 코디네이터 또는 특임관과 같은 다른 명칭으로 동부 재건 업무를 특별히 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였었다. 구 동독지역 재건 담당 특임관의 “선구자”로 불릴 수 있는 요하네스 루데비히와 루디 가일(Rudi Geil)

.....

¹ 민사당의 질의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변: 연방정부의 신연방주 특임관의 활동결과 (문서 57)

과 같은 경우 1991년에서 1998년 사이 통일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들이 논의되고 결정되던 연방수상실과 연방경제부에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1998년 이후 연방정부의 구 동독지역 재건 담당 “신연방주 특임관”을 역임한 사람들과 1998년 이전에 연방정부에서 구 동독지역 재건 담당 특임관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구 동독지역 재건 담당을 위한 연방정부의 “신연방주 특임관”

(*: 구 동독지역 출신자)

표 2-1) 역대 구 동독지역 특임관 명단

이름	기간	직위	이전의 직위
Walter Priesnitz 발터 프리스니츠	1985-1991 1991-1996	내독관계부 차관, 내무부 차관으로 구 동독지역 재건 기획팀 총괄책임자	연방공무원, 1996-1999 사이에는 신탁청의 후속기관 중의 하나이며 연방 통일 관련 특별과제청의 소속회사인 토지개발관리회사에 근무
Johannes Ludewig 요하네스 루데비히	1991-1995 1995-1997	연방수상실 구 동독지역 재건 관련 조정업무 담당, 연방경제부 차관 겸 연방정부 구 동독지역 재건 특임관	연방공무원 1997-1999 독일철도회사 사장
Rudi Geil 루디 가일	1997-1998	연방경제부 차관 동부 재건 연방 특임관	주 정부 장관
Rolf Schwanitz* 롤프 슈바니츠	1998-2002	수상실 차관	마지막 인민회의와 연방의회 의원
Manfred Stolpe* 만프레드 슈톨페	2002-2005	연방교통건설 주택부 장관	부란덴부르크 주총리
Wolfgang Tiefensee* 볼프강 티펜제	2005-2009	연방교통건설 도시개발부 장관	라이프찌히 시장
Thomas de Maizière 토마스 드 메지에르	2009-2011	내무부 장관	메클렌부르크- 포어폼메른, 작센 주정부, 수상실 실장
Christoph Bergner* 크리스토프 베르그너	2011-2013	내무부 차관	작센-안할트 주총리
Iris Gleicke* 이리스 글라이케	2013. 12~	경제·에너지부 정무차관	연방하원의원 연방 교통·건설부 정무차관

독일 연방정부의 특임관 제도

독일 연방정부에는 오래 전부터 다양한 정치영역에서 특임관을 임명하는 제도가 있었다. 또한 주정부와 정부 각 부처에서도 특임관을 임명하였다. 특정한 정치영역이 중요하게 부상한다거나 또는 어떤 분야에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받게 해서 힘을 실어주고자 할 때에 특임관이 임명된다. 예를 들어 몇몇 연방주와 도시들의 경우 이민자문제를 담당하는 특임관을 두기도 하였다.

특임관의 영향력은 대부분 그 직책을 담당 한 사람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가 특임관으로 임명되기 전에 활동했던 영역, 인지도 그리고 정치적 영향력 등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특임관에게 부여된 과제가 정치적, 사회적으로 갖는 비중에 따라 그의 영향력도 달라진다. 특임관은 자체적인 실무팀을 갖지만, 이 실무팀의 인적 규모와 예산 규모는 경우에 따라 아주 크게 차이가 있다.

독일에서 특임관이 임명되었던 예를 들자면

- (동유럽에서 독일로 돌아온 독일인) 이주자문제와 소수민족 특임관
- 문화와 언론 특임관
- 정보기술 특임관

인 민주주의를 실현하였던 연방정부와 연방의회가 있었던 분이 다양한 보상 조치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조치가 독일에서는 일반적으로 “본을 위한 보상 (Bonn-Ausgleich)”이라고 불린다.

제1절 통일과 내독관계부 그리고 연방수상실의 역할

독일 연방정부가 통일 이후 동부 재건(Aufbau Ost)을 위해 구 동독지역 재건 담당 특임관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기존의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지 않았는가? 통일 이전 서독에도 한국의 통일부와 유사한 전체 독일을 관장하는 정부부처가 있었지 않는가? 이러한 질문은 독일 통일·통합정책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던질 수 있는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통일 당시 독일의 특수한 맥락에서 찾을 수 있다.

1949년에 설립된 “전 독일부”(Bundesministerium für gesamtdeutsche Frage)가 담당할 역할은 분명히 한국의 통일부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이었다. 1969년에 이 부처의 명칭이 “내독관계성”(내독관계부 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으로 변경되었다. 부처의 명칭을 변경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1969년에 정권교체에 성공한 빌리 브란트(Willy Brandt) 수상이 시작한 새로운 신동방정책 때문이었다. 1969년에 브란트 수상은 정부 연설에서 독일에는 “서로 외국은 아닌” 두 개의 국가의 존재한다고 언급하였다. 그 결과 동독과 서독의 문제는 전 독일의 문제가 아닌 두 국가의 문제가 되었고, 내독관계부는 두 국가 사이의 관계를 담당하는 부처가 되었다.

내독관계부 또는 전독부,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서독 연방정부에는 통일 되기까지 독일의 분단과 통일문제를 담당하는 부처가 존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9년 11월 9일 이후 급속히 진행된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 구 동독지역을 독일연방공화국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행해진 모든 통일관련 정

책은 연방수상실에서 결정되었고, 실행 방안도 수상실의 주도 하에 만들어졌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1990년 10월 통일이 이루어진 이후 내독관계부 통합과정을 담당할 수 있었다. 실제 당시 독일에도 내독관계부이 당연히 이 문제를 담당해야만 한다고 본 사람도 있었다. 내독관계부의 마지막 차관이었던 발터 프리스니츠(Walter Prisztz)도 당시에 “우리가 동부 재건부(Ministerium fuer Aufbau Ost)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것은 다시 말해, 내독관계부를 강력한 파워를 가진 “동부 재건” 전담 부처로 전환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연방정부 내에는 통일된 독일에서 두 개의 독일의 관계를 관장하던 내독관계부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그 결과 내독관계부는 통일과 동시에 해체되었고, 내독관계부에서 근무하던 350명의 직원은 연방내무부 소속으로 신분이 변화하였다.

내독관계부의 해체와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서 대한 구체적인 조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² 당시 독일 정부 내에서 내독관계부 담당했던 역할이 주로 분단의 관리, 예를 들어 동독의 정치범을 석방하고 다양한 형태의 동·서독 주민의 교류를 유지하기 위해 동독과 거래하는 것이었다. 이런 업무는 독일 통일과 함께 사라졌고 그에 따라 내독관계부 담당할 역할 자체가 사라졌다. 그렇기 때문에 내독관계부를 해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한 쪽의 의견이 관철된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독관계부의 해체 결정이 합리적인 것이었다고만은 보기 어렵다.

더욱이 당시 독일 연방정부는 내독관계부 해체되고 난 후 어느 부처가 구체적으로 구 동독지역, 즉 동부 재건을 관장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

² 2012년 여름, 자유대 연구팀은 내독관계부의 해체와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발터 프리스니츠와 인터뷰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2012년 9월 10일 경에 하기로 예정되었던 인터뷰는 성사될 수 없었다. 2012년 8월 26일에 프리스니츠씨가 별세하였기 때문이다. 통일관련 정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통일 당시에 중요한 직위를 맡았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50대 후반에서 60대였고, 통일이 된 지 20년이 넘는 현재 이들은 80대가 넘었다.

획을 세우지 않은 상태였다. 법적으로는 연방정부 내무부가 내독관계부의 후속기관이 되었고, 내독관계부에 근무하던 인원이 전원 내무부에 흡수되었지만, 이들이 모두 신연방지역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내독관계부 대신에 통일독일의 연방정부에 구 동독지역, 즉 동부 재건을 전담할 부처를 둘 수도 있지 않았을까 질문할 수 있다. 독일의 정치체제를 이해하는 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독일의 연방주의 원칙을 통해 설명한다. 독일연방공화국의 각 연방주는 단순히 시, 군, 읍, 면 등과 같은 지방자치단체보다 규모가 큰 행정단위가 아니라 “국가적 성격”을 갖고 있다. 독일연방공화국의 기본법과 함께 존재하는 연방주의 헌법은 독립적인 것이다. 연방정부와 연방주 간에 어느 쪽도 서로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국가가 수행해야 할 과제 또한 연방헌법에 연방정부와 연방주 사이에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구분이 영구불변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협상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가 주정부가 담당하는 정책에 간섭하는 것은 독일의 연방주의체제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 당시에 연방정부가 자체적으로 동부 재건(Aufbau Ost)을 총괄하는 부처를 설치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통일된 독일에서 헌법(기본법)이 요구하는 전 독일 지역에서 동등한 삶의 질을 보장하는 과제를 실천해야하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그러한 부처를 도입하는 것에 관해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협상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도 있었을 것이다. 통일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연방정부가 그와 관련된 과제를 전담할 부처를 두는 것을 비난받을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리고 연방정부가 도입한 구 동독지역 재건 담당 특임관 제도가 실제 그런 필요성에 대한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 연방정부가 1989년까지 통일과 관련한 어떤 계획도 세우지 않았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흥미있는 사실은 통일 과정에서 서독 연방정부가 내독관계부를 해체하기로 결정하면서, 이 부처가 해체된 이

후에 통일독일의 특수한 과제를 누가 그리고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통합과 관련된 문제는 여전히 연방수상실에서 관장하였고, 그 과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구 동독지역 즉 신연방주의 문제를 담당하기 위해 특임관 제도를 활용하게 된 것이다.

강력한 파위를 가진 “동부 재건” 전담 부처를 설치하지 않은 이유를 찾는 과정에서 듣게 되는 또 다른 설명은 “구 동독지역을 대표하는” 강력한 정부부처가 신설되는 것을 기대한 사람이 있었지만, 그 부처의 장관직을 담당할 수 있는 적합한 신연방주 출신 인물이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부처를 도입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통일 이후 치러진 1990년 12월의 연방의회 선거 이후 구성된 연방정부의 내각에는 신연방주 출신의 뛰어난 인물이 눈에 띄지 않았다.³ 새로이 임명된 신연방주 출신의 장관 중에 몇 명은 임기를 채우지도 못하고 물러났다(Günther Krause, Rainer Ortleb). 나중에 독일 연방정부의 수상이 된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였다. 메르켈은 “여성 청소년부”의 장관으로 통일독일의 초대 내각에 등용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헬무트 콜 수상은 구 동독지역을 대표하는 인물이 등장하기를 원하는 주민들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지 않기 위하여 당시 작센주의 법무부장관 슈테판 하이트만(Steffen Heitmann)을 새로이 선출될 연방대통령 후보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하이트만 본인이 이러한 상황의 전개에 당황하여 잘 대처하지 못하였고, 언론 또한 그를 선의로만 대하지는 않았다. (결국 하이트만은 대통령 후보가 되지 못하였다).

통일 직후의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신연방지역 출신이 수장으로 있는 강력한 동부 재건부가 신설되지 못하는데 일조하였다는 사실은 의심의

³ 연방의회: 5인의 (신연방주출신) 특임장관 선서; 동독 첫 연방정부의 정책에 대한 연방의회 총회의 토론(문서번호 1).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것은 왜 통일과 동시에 내독관계부를 동부 재건을 전담할 부서로 전환하여 정착시키지 않았는가 하는 질문에 충분한 답이 되지 못한다. 신연방주 출신의 정치가가 없었다면 서독 출신의 정치가를 이 부처의 장관으로 임명할 수도 있었지 않는가?

그렇게 볼 때 통일 독일의 연방정부에 동부 재건(Aufbau Ost)을 전담할 강력한 부처를 설치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한 다양한 설명 중에서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은 연방주의의 원칙도 적합한 인물의 부재도 아니라 기존의 정부 부처들이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려고 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새로운 부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다른 부처들로부터 관할영역을 넘겨받아야만 하였는데,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각 부처 관료들의 저항을 극복 또는 무시하여야 하였고, 독일의 관료사회에서 그것은 아예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독관계부가 동부 재건부로 전환되지 않았고 새로운 부처가 신설되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실을 구 동독지역 재건 담당 특임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통합과정의 초기에는 헬무트 콜 수상과 기민당/기사당의 의회 원내대표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이다. 통일 초기에 연방정부에서 구 동독지역 재건 담당 조정관으로 임명되어 실제로 1998년에 공식적으로 도입될 “특임관” 역할을 담당하였던 요하네스 루데비히(Johannes Ludewig)가 비교적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콜 수상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다는 것이 알려졌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루데비히는 콜의 의중에 따라 모든 업무를 처리하였다.

헬무트 콜 수상은 신연방주 출신의 연방의회 의원들과 정기적인 모임도 가졌다. 이 모임은 단순히 신연방지역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을 토론하는 장이 아니라 콜 수상이 신진 정치가들에게 정치가 무엇인지 교육하는 장과 같았다. 왜냐하면 새로이 선출된 신연방주 출신의 의원들 중에 직업 정치인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통일된 지 22년이 지난 지금도 신연방주 출신의 연

방의회 의원들이 모이거나, 또는 신연방주의 주총리들과 만나서 이와 유사한 좌담회를 갖는 모임들이 존재한다.

제2절 특임관 제도의 도입

연방정부의 구 동독지역 재건 담당 특임관직이 공식적으로 제도화되기까지 연방정부는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다양한 정책결정을 내렸고, 그와 동반되는 문제점도 확인하였다. 먼저 통일 직후 연방의회에서 5인의 신연방지역 출신 장관을 임명한 것과 같이 누가 구 동독을 대표하는가 하는 인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동부 재건부를 설치하지 않기로 한 것과 같은 정치적 관할영역 문제가 분명히 규정되었다. 그런 결정이 내려지고 난 후에 연방정부는 신연방주 발전이 아주 느리게 진척되고 있으며, 신연방지역만이 안고 있는 특별한 문제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 때에서야 비로소 연방정부가 공식적인 구 동독지역 재건 담당 특임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하였다.

실제 1990년 10월 3일 동독이 독일연방공화국에 가입하고 난 직후에 이미 통합과정이 그 때까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렵고 복잡하며, 많은 비용이 들고 오래 걸리는 것이라는 점이 분명히 드러났고, 정치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안을 내 놓았다.

-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주의 총리 만프레드 슈톨페(Manfred Stolpe)는 신연방주를 특별 경제구역으로 선포하기를 제안하면서 통일 이전에 동독과 접경지역으로 규정되어 특별지원을 받았던 서독의 지방도 그가 제안하는 특별 경제구역에 포함하자고 하였다.
- 바이에른(Bayern)주의 에드문트 슈토이버(E마르크und Stoiber) 총리는 신속한 동부 재건을 위해 가장 큰 문제는 필요한 조치를 위해 급히 승인을 받아야하는 절차가 오래 걸리고 복잡하다는 것을 지적하였

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신연방지역을 특별법 적용 구역으로 선포하여 이 지역에서 만큼은 까다로운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법적·행정적인 절차를 완료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 튜링겐(Thüringen)의 주총리 디터 알트하우스(Dieter Althaus)는 연방 정부의 각 부처마다 신연방지역 담당관을 배치하자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행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각 부처에서 신설할 ‘구 동독지역 재건 담당관’을 위해 내적으로 업무분할을 다시 해야만 하는 것이고, 업무조정을 위한 합의점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제안들은 나름대로 설득력을 갖는 것들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통일을 준비하는 한국의 입장에서 그 제안의 내용을 한 번씩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1990년에 서독에는 동독에 관한 지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과도기의 동독 정부도 동독 국민경제를 시장가격으로 환산하였을 때 어떤 상태이고 어떤 가치가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였다. 결과적으로 1989년 11월부터 1990년 10월 3일 통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동·서독이 서로에 대해 모두 너무 많은 환상을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늦어도 1992년에는 서로에 대한 환상이 깨지고,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긴 시간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요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통일 초기 “동부 재건(Aufbau Ost)”을 위한 정밀한 계획도 독일 통일의 장래 로드맵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독일 정부에게는 동부 재건을 위한 포괄적이고 장기적으로 계획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시간도 주어지지 않았다. 당시에는 가능한 한 빠르게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만이 요구될 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의 행정기관들은 기존에 있는 그리고 그 역할과 효과를 검증받은 제도와 절차를 이용하였다. 다시 말해 서독에 있는 시스템을 그대로 구 동독지역에 신설된 5개 연방주에 옮겨 놓은 것이다. 1991년부터 해결해

야 할 문제의 심각한 정도가 분명해지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커지는 상황에서 서독에서 활용되고 검증된 제도와 절차를 그대로 전이하는 것이 정치와 행정에 일정한 정도의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이러한 여러가지 조건들이 헬무트 콜 수상이 1991년에 연방수상실에 근무하던 루데비히를 구 동독지역 재건 조정관의 직책을 맡기게 된 배경이었다. 그러나 콜 수상은 구 동독지역 재건 담당 특임관직을 연방정부의 공식적인 제도로 도입하지는 않았다. 단지 그가 개인적으로 신임하던 요하네스 루데비히에게 그 업무를 맡도록 하였다. 콜 수상은 루데비히가 1995년 연방경제부 차관으로 자리를 옮겼을 때 구 동독지역 재건 담당관의 직책도 겸임하도록 할 정도로 루데비히를 신임하였다.

연방정부의 구 동독지역 재건을 위한 신연방주 특임관직의 공식적인 설치에 관한 법령이 만들어진 것은 1998년에 연방정부의 정권이 기민당/기사당 그리고 자민당 연정에서 사민당과 녹색당의 연정으로 교체된 이후의 일이다. 그러한 결정은 게하르트 슈뢰더(Gerhard Schröder) 수상이 내렸다.

제3절 구 동독지역 재건담당 특임관 업무의 특성

구 동독지역 재건 담당 특임관직의 경우 그 업무를 시작한 초기부터 적어도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항이 항상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 특임관직을 맡은 사람의 연방정부 내에서의 지위(연방정부 내에 구 동독지역 재건 담당 특임관직을 위해 독립적인 부서가 도입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 중에서 신연방주 관련 과제도 함께 담당하였다. 지금까지 구 동독지역 재건 담당 특임관직을 교통부 장관, 수상실의 차관 그리고 내무부 차관이 담당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특임관직을 담당하는 사람이 연방정부 내에서 차지하는 지위에 따라 그의 영향력이 달라진다.

2. 특임관 개인의 성격과 정치적 비중 그리고 그가 동원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
3. 정보의 접근성과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 여부(볼프 슈바니츠의 경우 정부의 예산심의에 직접 참석하였다.)
4. 특임관 개인의 조정능력과 실질적으로 담당할 조정업무

신연방주의 지속적인 건설이 갖는 의미와 연방과 연방주 간에 조정의 필요성 때문에 1998년 10월 27일에⁴ 수상이 조직령을 발표하고 구 동독지역 재건 담당 특임관직을 공식적으로 신설하였다. 이 직책의 명칭은 그 후 약간 변경되어 “신연방주를 위한 연방정부 특임관”이 공식적인 명칭이 되었다. 특임관실의 설명에 따르면 특임관의 과제는 “신연방주 지원정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지속화하고 최적화”하며, 그것을 연방정부의 부처와 신연방주 간의 협력을 통해 실현하는 것이다.

1998년 구 동독지역 재건 담당 특임관직이 공식적으로 도입된 후 이 직책을 담당하였던 5명 중에서 4명이 신연방주 출신이다. 구 서독 출신인 토마스 드 메지에르의 경우 본인이 신연방주의 주정부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다. 2011년 3월부터 구 동독지역 재건 담당 특임관직을 맡은 크리스토프 베르그너 박사는 연방내무부의 차관이다. 그는 신연방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기획팀을 갖고 있으며 이 기획팀에는 7개의 과가 속해 있다.

- 경제 투자 지원
- 인프라 구축
- 대학과 연구기관
- 의료 건강 체계
- 인구변동
- 민주주의 강화

.....

⁴ 조직령: 연방정부의 신연방주 특임관 임명(문서번호 41).

- 사회주의통일당(사통당, 동독 공산당) 독재 청산

베르그너 내무 차관 본인의 설명에 따르면 그는 구 동독지역 재건 담당 특임관으로서 신연방주의 이익을 대변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구와 제도를 이용하기도 한다:

- 연방의회 동부 재건(Aufbau Ost)-내무상임위원회의 토론 보고자
- 연방주그룹 동부(신연방주 출신 연방의회 의원들과 신연방지역 주대표부의 대표들의 모임)
- 연방의회 원내 기민당/기사당의 “동부 재건”(Aufbaus Ost)위원회
- 대변인모임(연방의회 원내 기민당/기사당의 신연방주 대표들)
- 신연방주 총리들의 지역협의회(신연방지역 총리회의)
- 현대사연구소 이사회
- 사통당독재청산재단 이사회
- 동독보호시설교육 기금의 조정위원회
- 재건은행의 중소기업자문위원회

2011년 3월부터 업무를 시작한 현 구 동독지역 재건 담당 특임관은 기민당 소속이며 이전에는 신연방주인 작센-안할트주의 총리를 역임하였고, 현재 내무부 차관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리스트에 기민당/기사당의 당원들에 의해 구성된 “동부 재건” 위원회 또는 “대변인 모임” 등이 언급된 것이 의아한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다. 왜냐하면 동부 재건의 과제는 정당의 차원을 넘어서 정치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동부 재건과 같이 중요한 과업에 대해 당연히 정부 여당과 야당 간에 논란이 되는 사안이 있다. 예를 들어 사민당은 1992년부터 연방의회에서 동부 재건의 과제를 위한 “공동체 이니셔티브”를 시작할 것을 제안하였다.⁵

.....

⁵ 사민당 제안 : 신연방주 공동체 이니셔티브(문서번호 5).
의결추천과 보고: 신연방주 공동체 이니셔티브(문서번호 7).

이와 유사한 방향에서 연방의회 원내 좌파당도 2005년 12월에 “신연방주와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을 위해 연방의회에 별도의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독일 전역의 발전 격차를 해소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제안은 필요한 연방의회에서 과반수를 얻지 못하고 기각되었다. 그 이유는 기존의 있는 제도만으로도 그러한 과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⁶

제4절 구 동독지역 재건담당 특임관의 과제

1998년부터 연방정부의 공식적인 기구가 된 구 동독지역 재건 담당 특임관의 주요 과제는

- 구 동독지역 재건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모든 부처 간의 업무를 조정하고 여러 개의 부처가 관련된 공동과제(Querschnittsaufgabe)의 원활한 진행
- 동부 재건(Aufbau Ost) 프로젝트의 중점사안을 확정
- 연방의회에 제출할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례보고서 작성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a. 부처 간의 업무조정 능력과 공동업무과제(Querschnittsaufgabe)

통일 직후부터 동부 재건(Aufbau Ost)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광범위하게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분명해 졌다. 나아가 연방정부가 동부 재건을 위해 어떤 일을 하는 지에 대해서 연방의회와 일반여론에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필요도 있었다.⁷ 그렇기 때문에 헬무트 콜 수상은 1991년에 연방수상실에 근무하던

.....

⁶ 총회의 토론: 연방의회에 신연방주와 취약지역 상임위원회의 설치(문서번호 93).

⁷ 시민당 제안: 동부 재건을 위한 상임위원회의 도입(문서번호 20).

루데비히에게 신연방주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관할하도록 하면서 그에게 신연방주 “코디네이터”라는 직함을 부여하였던 것이다.

동부 재건을 전담하는 부처가 부재한 상황에서 신연방주와 관련된 정책을 관할하는 다양한 부처가 함께 협력하여야만 한다는 것이 당연하였지만, 관료제에서 항상 그렇듯이 개별적인 사안이 어느 부처의 관할영역에 해당하는가 하는 문제가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 이후 독일에서는 이러한 업무구조와 절차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대책을 마련할 생각은 없는 지에 대한 연방의원의 질의에 대해 연방정부는 2007년 5월에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각 부처의 많은 부서에서 부처 간 공동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서 신연방주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앞으로도 구 동독지역 재건과 관련된 문제만을 담당하도록 인력을 배정할 계획은 없다.”⁸

“부처 간의 공동과제”라는 단어가 적절하지만 기술적인 인상을 줄 수도 있다. 이 단어는 동부 재건에 필요한 협력과 조정(정보, 계획, 의사조정, 결정, 제도이식에 지원 등) 얼마나 광범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 분명히 보여주지도 못한다.

실제 얼마나 많은 부처가 동부 재건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1993년 6월과 2007년 3월에 연방정부가 연방의회에서 답변한 것을 통해 오히려 더 잘 볼 수 있다.

- (1993년 당시) 행정부 내에 약 165개의 단위 조직에서 신연방주와 베를린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다.
- 이 165개의 단위조직에서 신연방주에 관련된 과제를 담당하는 직책의

.....
총회의결: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례보고서의 작성(문서번호 21).

⁸ 좌파의 질의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변: 연방기관 내에 “신연방주” 관련 업무를 위한 업무구조(문서번호 107, 1p).

연방정부의 답변: 기본적인 문제와 연방수상실의 신연방주 관련 업무 협력과의 공석을 채우는 것에 대해(문서번호 109).

수는 2,395개였다.

- 이 중에 2,194개의 직책은 1989년 11월 9일 이후 또는 1990년 10월 3일 이후에 만들어졌다.
- 2,395개의 직책을 현재 담당하고 있는 사람 중에 1,335명은 1989년 11월에 동독에 거주하였다.⁹
- 그러나 이러한 숫자도 개념 정의에 따라 항상 달라질 수 있다. 2007년 3월 구 동독지역 재건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변을 보면 담당자의 명단이 자세하지도 않고, “신연방지역에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거나 업무의 많은 부분이 신연방지역과 관련된 일을 담당”하는 사람의 수가 약 80명이라고 한다.¹⁰
- 이 질의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변에는 신연방지역 업무와 관련하여 열린 연방과 주 차원에서의 다양한 회의가 표를 통해 설명되어 있다.¹¹

구 동독지역 재건 담당 특임관의 중요한 임무는 부처 간의 조정업무 외에 동부 재건(Aufbau Ost)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파악하고 마련하는 것이다. 이 임무를 해결하는 것이 특임관들에게 항상 큰 과제였다. 이 과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기존에 있는 실질적인 장치가 동원되었다. 무엇보다 연방주 간의 재정균형분배 장치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동부 재건 프로젝트를 위해 필요한 재정을 충원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실행에 옮긴 정책은 세 단계로 나누어진다:

1. 독일 통일기금: 신연방주의 건설과 재건을 위한 특별기금으로 (1990년에서 1994년까지) 특히 사회적 영역에 사용되었으며, 이 기금은 연방주 간의 재정균형배분의 일종이었다. 그러나 그 규모는 일반적인 재정배분

.....

⁹ 시민당의 질의에 대한 답변: 신연방주에서의 연방정부의 활동과 정부부처의 베를린 외청의 업무 (문서번호 8).

¹⁰ 좌파 질의에 대한 연방정부 답변: 동부 재건을 위한 연방기관의 업무구조(문서번호 106, 2p).

¹¹ 기민당/기사당, 자민당 의결제안: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2004년 연례보고서(문서번호 87).

보다 훨씬 컸고 그 액수도 여러 차례 증액되어야만 하였다.

2. 연대협약 I 1995년부터 2004년까지(945억 유로): 이 협약은 연방주 간의 재정균형배분의 틀 속에서 이루어진 지원방안이었다. 그러나 이 때에도 지원되는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일찍 드러났고, 연방정부가 직접 나서서 특히 사회복지분야에서 재정 이전을 통해 도와주어야 했다.
3. 연대협약 II 2019년까지 (1,565억 유로): 이 장치를 통해 신연방지역 경제의 긍정적인 발전이 가능하였다. 물론 신연방지역의 많은 영역에는 여전히 낮은 생산성과 서부지역보다 두 배나 높은 실업률 등 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이 문제들은 당연히 해결되어야만 한다. 특히 연대협약 II가 2019년에 종료되고 유럽연합에 의한 지원 또한 종료되기 때문에 그 때까지는 신연방지역이 자립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인 틀이 마련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작업의 진행상황은 2019년까지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통해서도 보고되어야 한다.¹²

여기에서 항상 중심에 놓인 문제는 첫째 비용의 총액이 증가한 것이었다. 비용이 증가한 원인은 동부 재건(Aufbau Ost)에 필요한 재원이 수정되고 중점사안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었다. 둘째 전체 지원금의 총액을 결정하는 개별항목의 변경과 같은 것 또한 중요한 문제였다. 그것은 특히 이 지원금이 조달되는 방안과(세금의 개정) 관련된 것이다. 셋째 장기적인 채무 변재의 문제이다(채무부담의 분배).

연방의회에 대한 보고에서 연방정부는 동부 재건을 위한 독일의 노력과 유럽의 지원, 그리고 이 두 행정단위 간의 협조를 자주 강조하였다: “동부 재건-독일과 유럽을 위한 기회와 리스크”라고 하는 보고서에서는 신연방지역을 위한 많은 정책들이 유럽의 기금에서 직접적인 도움 또는 지원을 받았

¹² 기민당/기사당, 자민당 의결제안: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2004년 연례보고(문서번호 87).

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¹³

b. 중점사안 확정

부처 간의 해당업무를 조정하고 중점사안을 확정하는 것은 구 동독지역 재건 담당 특임관의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필요한 것과 미진하고 부족한 것을 해결하는 것 외에 중점사안을 확정하는 것은 항상 정치적인 문제이며, 각 연방정부의 구성과 동일한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 연방의회에서 진행된 “동부 재건 프로젝트”의 중점사안에 관한 토론이 바로 그런 변화를 잘 보여준다.¹⁴ 구 동독지역 재건 담당 특임관의 활동 또한 당연히 연방의회와 다른 곳에서도 토론의 주제가 되었다.¹⁵

2004년에 신연방주를 위한 지원업무를 하는 모든 부처의 차관이 참석하는 차관회의가 시작되었다. 정부부처를 재구성할 때에도 항상 이 회의의 구성문제가 고려되었다. 이 차관회의는 실무담당 공무원 차원에서 구성된 실무그룹에 의해 준비된다. 이런 회의를 통해 “동부 재건”과 관련된 문제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중심적인 이슈가 되었다.

- 위계질서에(수상실 우선) 관한 토론과 당연히 다른 기관과 인물의 협력 의지에 달려있는 정부부처 간 협력을 위해 실행되어야 할 문제에 관한 토론
- 재원확보의 가능성과 중점사안
- 신연방주에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할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인프라 구

¹³ 연방정부 보고:동부 재건-독일과 유럽을 위한 기회와 리스크(문서번호 26). 연방의회 총회의 토론: 독일 통일,동부 재(문서번호 28).

¹⁴ 사민당 제안: 신연방지역의 경제건설의 촉진(문서번호 22).
 녹색당 제안:동부 재건을 위한 새로운 동력(문서번호 23).
 자민당 제안:동부 재건 촉진(문서번호 24).
 녹색당 제안 :동부 재건은 긴 안목이 필요(문서번호 29).
 민사당의 제안: 신연방지역과 서부독일의 납세자들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전망의 보장(문서번호 69).

¹⁵ 민사당의 질의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변: 연방정부의 신연방주 특임관의 활동결과(문서번호 5).

축과 사회적 영역의 문제를 강조

- 동부 재건 사업을 위한 중요한 장치로서 각 연방주 간의 재정균형배분과 연대세의(“통일세”) 의미
- 신연방주의 실질적인 수요에 대한 현실적인 산출
- 단순한 수요만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수준을 동등하게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시간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그 시간이 지속적으로 더 길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신연방지역에서의 인구변동과 지역 간의 차이에 주의(예를 들어 신연방 지역의 25개 모델지역을 설치하는 것을 지원)

c.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보고서

연방정부 구 동독지역 재건 담당 특임관의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신연방주에 관한 정보를 규합하고 그것을 연방의회와 일반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그것은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례보고서”의 형태로 만들어지며, 이 보고서에는 신연방주의 상황과 통일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통계와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연례보고서를 편찬하는 작업은 1997년부터, 즉 통일된 지 7년 후에 구 동독지역 재건 담당 “신연방주 특임관직”이 도입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연례보고서를 편찬하는 것에 관해서는 연방의회에서 그 전에도 이미 여러 차례 논의하였었다. 1993년 9월에 민사당은 “통일독일의 국가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연방정부가 통일조약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설명하라는 제안을 연방의회에 제출하였다.¹⁶ 1994년 2월에는 연방내무부 장관이 “동부 재건과 독일 통일에 관한 자료”라는 제목의 610쪽짜리 보고서를 연방의회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수정하여 1995년 10월 3일, 통일 5주년 보고서

.....
¹⁶ 연방의회 민사당 제안: 통일독일의 국가 상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보고(문서번호 9).

로 제출하였다.¹⁷ 연방정부 또한 통일 5주년을 기념하여 “동부 재건-나머지 반의 가야할 길 현황과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다(여기서 놀라운 것은 연방정부가 1995년에 가야할 길의 절반을 왔다고 낙천적으로 평가한 것이다).¹⁸ 그 후에 연방의회에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매년 지속해야 한다는 제안이 여러 번 제출되었고, 1996년 5월 9일에 의회에서 이 안이 가결되었다.¹⁹ 1996년 9월에는 “동부 재건-독일과 유럽을 위한 기회와 리스크”라는 제목의 정부보고서만이 제출되었다.²⁰ 1997년 9월에 정기적인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연례보고서”가 최초로 편집되었다.²¹

통일에 관한 연방정부의 연례보고서의 발간이 결정되기까지의 과정은 “동부 재건”이라는 주제의 비중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잘 보여준다. 연례보고서는 연방의회에서 다른 특별보고서와 부분보고서, 야당의 제안들(많은 경우 기본원칙에 대한 입장의 형태) 그리고 신연방주의 발전 현황과 장래에 관한 주제들과 함께 토론되었다. 이러한 토론에서는 사회경제적인 문제가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통일이 이루어진 지 10년이 되던 해에 민사당은 질의를 통해 동부 재건을 통해 많은 것들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주민들이 사회적 안정감을 상실하였다고 보았다. 그 이유는 “동서의 경제적 격차가 다시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신연방지역에서의 실업률은 (2010년에) 구 연방지역과 비교해서 두 배 높았다. 신연방지역의 임금과

¹⁷ 독일 통일과 동부 재건에 관한 자료(문서번호 11).

독일 통일과 신연방주 건설에 관한 자료(문서번호 14).

¹⁸ 동부 재건-가야할 길의 나머지 반-현황과 전망-신연방주 발전에 대한 연방정부의 보고(문서번호 15).

¹⁹ 민사당 제안: 통일독일의 국가 상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보고서 제출(문서번호 13).

녹색당 제안: "독일 통일의 진전에 관한 보고서"를 연방정부가 매년 작성 제출(문서번호 16).

사민당 제안: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례보고서(문서번호 17).

사민당 제안: 동부 재건을 위한 상임위원회의 도입(문서번호 20).

총회결: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례보고서의 작성(문서번호 21).

²⁰ 연방정부 보고: 동부 재건-독일과 유럽을 위한 기회와 리스크(문서번호 26).

²¹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 1997년 연례보고서(문서번호 31).

급여는 구연방지역 임금의 60%에서 85% 수준이지만 집세와 물가는 동일하거나 곳에 따라서는 서독보다 높은 경우도 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재정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재산의 이전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고 민사당은 주장하였다. 이 질의에 대한 장문의 답변을 통해 연방정부는 신연방주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과 함께 연방정부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아직까지 남아 있는 어려움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 설명하였다.²² “독일 통일 현황과 2020년까지의 발전 전망”에 대한 좌파당의 질의와 그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변은 문서 108²³에서 볼 수 있다. 기민당/기사당은 1999년에 제출한 “동부 재건 이제 제대로 하기”라는 제목의 제안에서 연방정부가 “현재 준비 중이거나 이미 준비되어 있는 예산안과 조세법에서 내용 상 분명하게 신연방주의 지속적인 건설과 동서 지역의 생활수준을 동등하게 만드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하였다.²⁴ 자민당이 2004년에 제출한 “신연방주를 변동의 최첨단으로-신연방주를 위한 총체적인 방안의 지침”이라는 제목의 제안은 훨씬 더 투쟁적인 인상을 준다.²⁵

이러한 토론에서 당연히 각 정당의 이해관계가 일정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동부 재건이라는 과제의 중요성 때문에 항상 반복적으로 재정적인 수요 그리고 중점사안의 확정에 관해 토론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것은 독일의 국내 정치적인 토론이었지만 항상 변화하는 국제적인 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예를 들어 2000년 유로를 둘러싼 위기로 인해 이 토론이 영향을 받았었다.

²² 신연방지역의 현황과 발전에 관한 민사당의 질문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문서번호 53).

²³ 좌파의 질의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변: 독일 통일 현황과 2020년까지의 발전전망에 대하여(문서번호 108).

²⁴ 기민당/기사당 제안: 동부 재건 다시 제대로 추진(문서번호 43).

²⁵ 자민당 제안: 신연방지역을 변동의 최첨단으로-신연방주를 위한 총체적인 지침(문서번호 83).

연례보고서와 이런 다양한 질의, 기본원칙에 관한 페이퍼 그리고 부분 보고서들을 함께 모아보면 그것을 통해 구 동독지역 재건 담당 신연방주 특임관의 활동영역에서 독일 통일 현황과 관련한 정치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제5절 한국에 주는 시사점

“분단은 분배를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다” 라는 말은 동독의 마지막 수상이었던 로타 드 메지에르가 했던 말이다. 독일과 한국의 상황이 아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어떤 식으로 발전할 것인지에 관해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지만 이 말은 분명히 한국에도 해당하는 말이다.

이미 여러 차례 언급된 것처럼 독일의 ‘동부 재건’ 프로그램과 구 동독 지역 재건 담당 “신연방주 특임관”의 업무는 어려운 조정활동과 중점사안의 확정, 다양한 관할영역을 규합 분리하며 그에 필요한 많은 비용을 조달하는 것이었다. 이런 협력 조정업무는 한국의 정치 경제에서도 분명히 필요할 것이다. 많은 경우에 경제 또는 하나의 대기업이 정치로 하여금 행동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일을 벌이기도 하였다.

동독을 독일연방공화국의 정치, 경제, 사회 체제에 통합하고 “동부 재건” 정책을 통해 발전을 가속시키는 문제는 독일 전체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것은 다시 말해 정당의 차원을 떠나서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아마도 신탁청이 재무부에 속해 있는지 노동-사회부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 그 작업방식이 달라졌을 것이다. 그것은 간단히 말해서 숫자가 우선인지 사람이 우선인지에 따라 정책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신연방주와 관련된 정책의 다양한 공통점들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중점 사안들이 있었고, 연방정부의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동부 재건의 진전을 위해서 서로 상이한 우선 순위가 정해지기도 하였다. 통일 이후 지금까지 있었던 4개의 연방정부에서 구 동독지

역 재건 담당 특임관의 위상이 달랐고, 상이한 정당에 소속되었다.

표 2-2) 연방정부와 구 동독지역 재건 담당 “신연방주 특임관”

연방수상	연립정부	구 동독지역 재건 담당 특임관
Helmut Kohl 헬무트 콜 1982-1998	CDU/CSU-FDP 기민당/기사당-자민당	Johannes Ludewig (CDU) 요하네스 루데비히 Rudi Geil (CDU) 루디 가일
Gerhard Schröder 게어하르트 슈뢰더 1998-2005	SPD-Bündnis 90/Grüne 사민당-녹색당	Rolf Schwanitz (SPD) 롤프 슈바니츠 Manfred Stolpe (SPD) 만프레드 슈톨페
Angela Merkel 안겔라 메르켈 2005-2009	CDU/CSU-SPD 기민당/기사당-사민당	Wolfgang Tiefensee (SPD) 볼프강 티펜제
Angela Merkel 안겔라 메르켈 2009 -	CDU/CSU-FDP 기민당/기사당-자민당	Thomas de Maizière (CDU) 토마스 드 메지에르 Christoph Bergner (CDU) 크리스토프 베르그너

독일 통일이 이루어진 지 20년이 넘게 지난 지금에 와서 동부 재건 (Aufbau Ost)을 전담하는 부처가 신설되었더라면 신연방주를 위한 과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었을지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이에 대한 답 또한 독일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구해야만 할 것이다. 다만 지금까지의 독일의 경험은 다음과 같은 것을 확실히 보여준다: 만일에 “북부 건설”과 “북부 특임관”같은 제도를 도입한다면 그것은 한국의 경우 대통령이 직접 관할하는 정부부서 중 대통령실에 속해야 할 것이다. 통일 이후 해결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한 “거대부처”를 만들거나 또는 일종의 “부총리”와 같은 직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독일의 경우 초대 특임관 두 명이 서독 출신의 인사였다. 1998년에서야 롤프 슈바니츠가 구 동독지역 재건 담당 특임관직을 맡게 되면서 구 동독출신에 의해 이 직책이 수행되게 되었다. 통일된 한국에서 그런 직책이 신설되게 될 지, 또는 그 직책이 언제 북한 출신의 인사에 의해 수행되게 될 지, 이 질문에 대해 지금부터 답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

국에서도 이 제도에 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점은 아무도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독일의 경우 신연방지역과 구 서독지역의 차이는 통일이 된 지 20년이 지난 후에도 완전히 극복되지는 않았다: 신연방주의 경제력은 구 서독과 비교해서 약 70% 정도에 달하며 신연방주의 실업률은 구 서독보다 두배 높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신연방주를 위한 지원이 필요할 것이며 그 액수는 아마도 연간 500억 유로가 될 것이다. 이런 모든 어려움과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신연방지역의 평균수명이 1990년에서 2010년 사이에 7년 늘었다는 것이다. 평균수명이 늘었다는 것은 신연방지역의 삶의 조건이 그만큼 개선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 동독지역 재건 담당 특임관 제도가 그를 위해 어떤 기여를 하였는지 구체적인 평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제도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제도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역대 구 동독지역 재건 담당 특임관 인터뷰

제1절 요하네스 루데비히

요하네스 루데비히박사는 1989년 수상실의 경제국장으로 통일과 통합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독일 통일 내각위원회와 통일조약협상과정에 직접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 동독지역 재건 담당 코디네이터로 그리고 1994년 연방경제부 차관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에도 구 동독지역 재건 담당 특임관으로 총 7년 동안 “구 동독지역 재건 Aufbau Ost” 사업의 기획과 조정을 책임졌었다. 헬무트 콜 수상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구 동독지역 재건 담당 특임관을 담당하였던 시기가 특임관의 영향력이 가장 컸던 시기였다. 그 후 독일철도공사 사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수상실 산하 Normkommission의 위원장이다. 루데비히 박사와의 인터뷰는 2013년 9월 5일 베를린에서 열렸다.

인터뷰 진행, 이은정

[질문] 연방정부의 구 동독지역 재건 담당 특임관이라는 공식 직함이 생기기 이전에 구 동독지역 재건 코디네이터직을 담당하셨을 때의 업무와 관련하여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당시의 상황에 관해 설명해 줄

수 있는가? 독일 통일관련 정책문서를 분석하고 있지만 문서를 통해 그 당시 상황을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독일 통일의 경험이 한국에 모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결정할 문제이다. 그러나 독일 통일에 대한 기존의 학술적 연구는 대부분 통일 과정에서 정책결정을 담당한 사람들의 경험을 고려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본인에게 인터뷰를 요청한 학자가 거의 없다. 그러나 본인이 담당했던 통일과정의 경제 재정정책과 관련된 연구서들은 수 없이 많다. 이들 연구자들이 많은 자료를 검토하였다. 하지만 실제 1989년 1990년 당시 문서화하는 작업을 생각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통일과정의 정책결정에 관해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문서를 검토하는 것보다 당시에 정책결정을 담당한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우리는 매일 아침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지속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결정을 내렸다. 그러한 모든 회의에 대한 기록을 만들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문서만을 통해서 당시의 정책을 이해할 수 없다. 문서만을 통해서 전부를 알 수 없다는 것은 통일조약의 협상과정의 예를 보면 알 수 있다.

통일조약은 공식적인 협상을 통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1990년 3월 18일 최고인민회의 선거 후 동독의 과도정부가 구성되고 통일이 가시화되면서 시작되었다. 통일조약의 협상과정에 대해 일반적으로 서독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아무 것도 모르고 경험도 없는 동독의 대표단이 그에 고개를 끄덕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들 하는 이야기이다. 로타 드 메지에르의 동독 과도정부가 서독이 시키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손쉬운 상대는 절대 아니었다. 동독 정부를 대표해서 통일조약 협상을 이끌었던 귄터 크라우제는 아주 명석한 사람이었다. 그는 전공이 정보학이었는데 물리학을 전공한 앙겔라 메르켈 총리처럼 자연과학적 두뇌를 지녀서 아주 빠르게 판단하는 능력을 갖고 있었다.

귄터 크라우제는 1990년 초까지도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았던 사람이다. 그를 처음으로 만난 것은 1990년 3월의 자유총선거 후 우리가 동베를린의 기민당 당사를 방문하였을 때였다. 그 때는 과도정부가 아직 구성되지 않았었다. 당시 동독의 새로운 수상이 될 것이 확실하였던 로타 드 메지에르가 수상실 차관으로 예정된 사람이라며 귄터 크라우제를 우리에게 소개하였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국가조약의 협상은 누가 담당할 것인가 하고 묻자 귄터 크라우제가 본인이 담당할 것이라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장관이 국가조약 협상의 책임을 맡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귄터 크라우제가 마치 당연한 것처럼 자신이 협상책임자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조금 놀라운 일이지는 하였지만 과도적인 상황에서 그런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통일조약의 협상과정에서 서독이 일방적으로 주도하고 동독 대표단은 그냥 고개만 끄덕였을 뿐이라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이야기이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좋은 예가 재산처리문제와 관련된 결정과정이다. 소유권문제에 관해 통일조약에서는 1949년 이후 즉 동독 국가가 건국된 후에 몰수된 재산에 대해서는 “선반환 후보상”의 원칙을 적용하고 1945년과 1949년 사이 소련점령군에 의해 몰수된 재산의 반환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이유가 당시 소련 쪽에서 그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정보는 잘못된 정보이다. 동독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서독측은 모든 재산에 대해서 “선반환 후보상”의 원칙을 적용하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동독의 협상대표가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고집하였다. 이 문제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에 1990년 5월에 체결된 동서독 간의 경제 화폐 사회통합에 관한 국가조약에 몰수된 재산의 처리방안을 제외시켰다. 원래 이 문제는 경제와 관련된 사안이었기 때문에 1차 국가조약에서 다루기로 하였던 것이었다. 그러나 1990년 6월 중순까지도 합의점을 찾을 수 없었다. 6월 중순에 열린 회의에서 귄

터 크라우제가 1945년에서 1949년 사이에 몰수된 재산은 반환하지 않는다는 것이 동독 측의 최종적인 입장이며 만일 서독 측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통일을 포기하자고 단호하게 이야기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의 계획을 포기하고 동독 측의 입장을 따르기로 하였다. 그러나 어떤 이유 때문에 소련이 그런 요구를 했기 때문에 통일조약에서 1949년 이후에 몰수된 재산만 “선반환 후보상”의 원칙을 적용받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일반적인 설명이 되었는지 알 수 없다. 그렇다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굳이 수정하려고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통일조약의 협상과정에서 동독 측이 서독의 일방적인 결정을 무조건 따른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다.

[질문] 1990년 7월 30일 연방내무부의 독일 통일 실무단이 작성한 통일조약 초안에는 신연방주 재건부를 설치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통일조약에서는 이 조항이 빠졌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신연방주 재건부를 설치하는 문제에 관한 논의가 여러 차례 있었다. 헬무트 콜 수상은 이 과제를 위해 새로운 부처를 신설할 경우 그것이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리고 새로운 조직을 신설할 경우 언제 그것을 해체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했다. 조직이 일단 만들어지고 나면 그것을 해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신연방주의 재건문제는 여러 부처 간의 협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문제인데 신설되는 부처가 그런 문제를 혼자서 담당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리고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던 내독부의 경우 그런 큰 문제를 담당할 역량이 있는 조직이 아니었다.

[질문] 1990년 11월에도 내독부 차관이었던 프리스니츠씨와 같은 사람은 내독부가 신연방주 재건부로 전환될 것이라고 언급한 문서가 있다.

실제 내독부를 폐지한다는 결정이 구체적으로 언제 내려진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당시 콜 수상의 입장은 신연방주 즉 구 동독지역의 재건은 수상실에서 주도적으로 계획 관리한다는 것이었고 당시 수상실에서 경제 재정정책을 담당하던 내가 점차적으로 그 과제를 맡게 되었다. 내독부가 그 과제를 담당하는 것과 관련된 논의조차 없었다.

물론 분단시기에 내독부가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것은 확실하였다. 그리고 이 부처가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도 분명하였다. 정치범 석방 등과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한 협상도 내독부가 주관하였던 일이다. 만일 분단시기 동안에 누가 내독관계부를 폐지하자는 주장을 했더라면 그것은 통일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그 자체가 통일을 전제로 하는 헌법, 즉 기본법에 어긋나는 행위였다. 그렇기 때문에 서독에서는 분단시기 동안에 내독부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제시된 경우가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통일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내독부가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었다. 그리고 당시 내독부의 빌름스 장관이 정치적으로 비중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상 본인이 수상실에서 이 작업을 주도해야 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헬무트 콜 수상의 결정에 따라 수상실에서 신연방주 재건사업을 총괄하기 위해 우리는 부처 간의 협력할 수 있는 실무회의를 조직하였다. 그 회의는 매주 화요일 아침 7시에 수상실에서 열렸다. 이 회의에는 외무부를 제외한 신연방주 재건업무와 관련된 모든 부처의 차관과 국장들이 참석하였다. 특히 경제부처와 건설, 사회복지, 노동부 등이 중요한 부처였다. 당시 내가 헬무트 콜 수상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다른 부처에서도 이 회의를 통해 결정된 것을 실행하는 것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다.

나는 구 동독지역 재건 담당 특임관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구 동독지역 재건 코디네이터직을 맡으면서 콜 수상에게 수상실의 경제 재무국장으로 독일경제의 전반적인 문제를 담당할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의 경제정책까지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 동독지역 재건 코디네이터직을 담당하는 것은 무리라고 하였지만 콜 수상은 많은 결정 권한을 갖을수록 파워가 강해지는 것이라고 세 가지 업무를 동시에 담당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의 판단은 현명한 것이었다. 실제 구 동독지역 재건 코디네이터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내가 갖고 있는 다양한 결정권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내가 경제부 차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구 동독지역 재건 코디네이터직은 계속 유지하였다. 그것은 처음에 나에게 주어진 개인적인 과제와 같은 것이었다.

수상실 경제국에서 신연방주에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지는 않았다. 단지 새로운 인력을 충원하였을 뿐이다. 우리 국의 인원은 비서를 포함하여 40명에서 50명 사이였다. 인력규모로 보면 그렇게 큰 조직이 아니었다. 그러나 효율성 면에서 볼 때 조직이 크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적은 인원이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구 동독지역 재건 코디네이터직을 수행하면서 나는 가능하면 중요한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사업이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조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우리 업무가 모든 영역에서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본인이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어서 조금 이상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과정에서 경제정책을 수립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서독에서 범했던 것과 같은 실책은 반복하지 말자는 것이었다. 서독에서는 1958년 이후 계속적으로 석탄보조금을 지출하였다. 그리고 당시에는 그것이 언제 종결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그렇다고 막대한 보조금을 받는 루르 지역의 경기가 새로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 그 결과 이 지역에는 마치 밀바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이 “보조금”을 계속적으로 투입하는 보조경제체계가 형성되었다. 이런 보조금경제체계를 또 하나 만들어

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였다. 그래서 초기투자에 대한 보조금을 제공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본다면 당시 우리가 실행하였던 투자진흥책 외에도 더 많은 방안을 도입했어야만 했다. 특히 구 동독지역에서의 생산업 진흥책으로 20년 간 세금을 감소해 주는 방안을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몇몇 사람들이 생각했던 “구 동독 특별지역”을 만드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었다. 구 동독 특별지역은 또 다른 보조금 경제체계와 보조금에 의존하는 주민을 만드는 결과만 가져올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대안이 아니었다.

한국의 경우도 북한지역을 특별구역으로 선포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특별관리 하에 두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라고 본다. 민주적으로 통일된 국가에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여 빠른 시일 내에 양쪽의 생활조건을 균등하게 만드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방법이다.

우리가 실행한 투자보조금(초기 투자금액의 20%) 외에 추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은 구 동독지역에서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 주는 방안으로, 독일에서 이 아이디어가 1992년경에 제시되었다. 당시 독일경제연합의 회장이 구 동독지역의 경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재건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 약 15년에서 20년 사이의 기간 동안에 구 동독지역에서 생산하는 회사에게 세금을 감면해 주자고 하였다. 그때 우리는 이 아이디어가 좋기는 하지만 그것을 실행하기에는 이미 시기를 놓쳤다고 생각했다. 더욱이 신규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조치로 인해 이미 구 동독에서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에게 세금을 돌려주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아이디어가 1990년에 나왔더라면 충분히 고려해 볼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

종합해서 말하자면 통일 당시 구 동독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실시한 투자지원정책 외에 세금혜택을 추가하는 정책이 있었다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특별구역의 선포와 같이 구 동독지역의 경제를 장기적으로 보조금에 의존하도록 만드는 조치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는 판단하였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한 나의 의견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는 물론 필요하였다. 공동체 과제를 위한 자원(Mittel fuer Gemeinschaftsaufgabe)과 같은 것이 그런 조치에 해당한다. 이 자원은 일정한 금액이 존재하였고 그것이 전부 사용되면 사라지는 것이었다.

[질문] 지역경제의 발전과 지역발전과 관련하여 “지방분권화”가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과연 지방분권화가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인가? 학자에 따라서는 체제전환과정에서는 중앙집권적인 정책결정구조가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은가?

그 문제는 신탁관리청의 업무의 예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1990년 당시 우리는 신탁청의 작업을 통해 동독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기를 기대했다. 신탁청이 담당했던 역할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동독기업을 정리 폐쇄, 또는 민영화라는 명목으로 민간 기업에게 매각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었던 것이 아니다. 가능하면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을 회생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고 회생된 기업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 민간 기업이 인수하도록 하였다. 그 과정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제정책이 동시에 사회정책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구 동독지역에서 행해지는 경제정책이 이 지역 주민들의 심리적 상태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자부심과 같은 문제에 대한 배려가 아주 적었다. 우리는 독일 전역에 유사한

생활조건을 만들어야만 한다는 것을 물질적인 측면에서만 보았을 뿐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독일 전역에서 동등한 삶의 조건을 만드는 작업은 단순히 경제정책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정책에 의해 함께 뒷받침되어야만 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탁청이 구 동독지역에서 추진한 민영화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신탁청이 1994년에 업무를 종결해야만 한다고 미리 못을 박았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던 1994년 12월에 신탁청이라는 기관이 공식적으로 해체된 것이 아쉽다. 지금 생각해 보면 신탁청은 그후로 적어도 3년에서 4년은 더 길게 존속되었어야만 했다. 그리고 실제로도 구 동독지역의 기업을 민영화하는 작업은 신탁청이라는 기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후에 몇 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성사된 것이 많았다. 어떻게 보면 신탁청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신탁청의 후속기관인 통일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문제를 관리 해결하기 위한 연방관청(Bundesamt fuer Einigungsbedingte Vermoegensfragen)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이 관청은 신탁청과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이 관청은 신탁청에 직속된 기구였다. 자체적으로 금융시장에서 크레디트를 얻을 수도 없었다. 반면에 신탁청은 완전히 자율적인 기구로 금융시장에서 자체적으로 용자를 얻을 수도 있었다. 신탁청이 할 일이 아직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료 출신의 신탁청 2대 청장은 특수기구가 너무 오래 존재하면 그 자체로 타성이 생겨서 해체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진다는 논리로 신탁청은 1994년 12월 31일자로 해체된다고 못을 박았다. 그러나 1994년 말까지 모든 민영화작업을 종료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렇기 때문에 BvS가 신설된 것이다. 그러나 BvS와 신탁청은 근본적으로 성격과 위상이 다르다.

우리가 신탁청의 업무방향을 결정할 때 고려한 것은 무엇보다 구 동독지역에 시장경제체제에 적합한 새로운 경제구조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구 동독지역이 장기적으로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생산능력을 보존 확보하는 것이었다. 한반도가 통일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모든 것을 남쪽에서 가져가면 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구 동독 지역과 같이 체제전환을 겪는 지역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좋은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이다. 그를 위해 당시 우리는 이 지역에 시장경제체계를 신속하게 도입한다는 결정을 내렸던 것이다. 물론 일정한 기간의 과도기는 필요했다. 이 시기에 서독의 기업들이 구 동독지역의 경제를 새로운 경쟁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투자자로 나서는 것이 아주 중요하였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 당시 독일의 기업들은 너무도 자신의 단기적인 이해관계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이었다. 예외적인 경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폭스바겐(VW)과 같은 기업이 좋은 예이다. 통일 직후 폭스바겐의 회장이 수상을 만나서 폭스바겐이 구 동독지역에 공장을 건설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오펔(Opel)의 회장도 콜 수상을 찾아와 독일기업으로서 국가적인 과제에 동참하기 위해 구 동독지역의 도시 아이제나흐에 오펔 자동차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투자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화학기업인 BASF의 사장도 그런 의사를 밝히고 구 동독지역에 대규모 투자하였다. 그러나 그런 기업의 수가 너무 적었다.

당시 헬무트 콜 수상은 수상실에서 해마다 여러 차례 “구 동독지역 재건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는 신연방주의 주총리들, 신탁청장, 노조대표 기업과 경제단체의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서 수상은 기업들이 가능하면 빨리 많이 구 동독지역에 투자하기를 부탁하였다. 그러나 많은 기업들이 그에 호응하지 않았다. 특히 젊은 기업인들은 구 동독지역에 투자해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 계산부터 하였다. 독일의 주식법에 따라 경영진이 만일 무모한 투자를 감행할 경우 주주들에 의해 엄격한 제재를 받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고발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은 통일이 라는 문제를 거대한 민족적 과제로 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

서만 행동하였다. 만일 당시 독일 경제계에 기업가들 사이에 신망이 높은 인물이 있어서 그들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주도하였다면 하는 생각을 가끔 해 보기도 한다. 그러나 1990년 당시 독일 경제계에는 그런 인물이 없었다. 1989년에 암살된 도이치 뱅크의 은행장 헤어하우젠Herrhausen 또는 1990년에 암살된 초대 신탁청장 로베더Rohweder와 같은 사람이 아마도 그런 인물이었을 것이다. 로베더 청장의 경우 경제계 출신으로 신탁청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의 후임이 된 브로일 여사와는 아주 다른 지도력을 갖춘 사람이었다. 경제계에서도 많이 존경받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영향력이 큰 인물이었다. 이 두 사람이 경제계에 구 동독경제를 재건하는데 동참하기를 요청했다면 많은 기업인들이 움직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만일 이 두 사람이 암살되지 않았더라면 통일과정이 아주 많이 다르게 진행되었을 것이라고 나는 지금도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대체가능하다고들 이야기한다. 그러나 1990년 당시 독일의 상황에서는 이 두 사람은 아쉽게도 대체될 수 없는 인물들이었다.

[질문] 한국의 경우 1998년 아시아위기 때 국가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정부의 호소에 국민들이 금모으기 운동을 많이 참여했던 경험이었다. 그러나 1990년 당시 통일과정에서 구 동독지역을 재건하기 위해 전 국민이 동참한다는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서독의 젊은이들은 누가 통일하자고 나한테 물어보았냐고 냉소적으로 통일을 보는 사람들도 있었다. 당시 왜 국민적 동참을 촉구하는 대규모 캠페인을 생각하지 않았는가?

그것은 독일의 역사적 경험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었다. 독일 국민들은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기 직전인 1914년에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민이 동참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대거 전쟁채권을 샀다. 나의 조부모님도 전 재산을 들여 전쟁채권을 매입하셨다. 그러나 독일이 전쟁에 패배함

으로써 모든 재산을 잃었다. 그리고 1920년 초반의 살인적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억이 독일인의 뇌리에서 아직 사라진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과정에서 정부가 채권을 발행한다거나 국민에게 동참을 요청하는 것은 고려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런 경험이 100년이 지난 지금도 독일인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다. 만일 앞으로 100년이 더 지난다면 그런 기억이 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1990년에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한국이 통일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잘 처리할 수 있는 좋은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다고 본다. 1998년의 금모으기 운동으로 국민이 재산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국가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는데 상징적인 의미에서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예치한 금액을 이자와 함께 돌려받은 경험이 있다면 통일과정에도 충분히 동참할 것이다. 그것은 통일과정에 전 국민이 동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기억을 잘 유지해야 할 것이다.

통일국가 건설 과정에서 전 국민의 동참을 호소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자산인지 아무리 강조해도 그것은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과 독일의 상이한 역사적 경험 때문에 이 두 나라에서 통일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조건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 만일 한국에서 국민들이 통일국가 건설 과정에서 자신이 관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은 내가 책임져야 하는 우리의 과제라고 믿고 직접 참여한다면 여러 가지 과제를 독일보다 훨씬 쉽게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민족적 감정을 바탕으로 기업들도 동참한다면 정말 독일과는 다른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 한국의 그런 경험에 대해서는 내가 몰랐었다. 민족적 연대감을 바탕으로 통일국가건설에 동참하자는 대국민 호소가 가능하다는 것은 중요한 요소이다.

독일에서는 그런 전 국민적 동참을 호소할 수 없었다. 물론 독일의 경우 정부가 많은 재정을 동원하여 구 동독지역 재건을 추진하였으므로 전 국민

의 세금이 투입되었다는 의미에서 궁극적으로는 전 국민이 동참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는 아주 다른 것이다.

우리가 구 동독지역 재건정책을 추진하면서 범한 가장 큰 실책은 그것을 경제기술적인 문제로만 접근하였던 것이다. 당시 우리는 구 동독지역 주민들이 자부심을 갖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 경제정책만으로는 주민의 그런 느낌을 갖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다.

튀링겐 지역의 주민들이 키가 다른 지역의 주민들보다 한 뼘 더 크다는 말이 있다. 그것은 실제로 주민들의 키가 커서가 아니다. 예나시에 있는 Jen-Optik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이 자부심이 훨씬 크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그렇게 표현한다. 1990년 당시 우리는 예나시에 있던 칼 짜이스회사의 재단을 설립하고 바텐부텐베르크주의 전 주지사였던 로타 슈페트씨를 책임자로 영입하였다. 이 재단에 지원한 금액이 당시 30억 마르크였다. 슈페트씨는 이 돈을 당시 예나에 있던 공장시설을 근대화하는데 전부 투자한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기업을 사 들여서 결국에는 Jen-Optik이라는 하나의 대기업을 만들어 놓았다. Jen-Optik은 구 동독지역에 기업의 본사를 두고 있는 유일한 대기업이다.

지금 생각해 보면 1990년 당시에 우리가 구 동독지역 여러 곳에 Jen-Optik과 같은 대기업을 세우도록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좋았을 것이라고 본다. 당시에 어차피 거대한 규모의 금액을 투자하였기 때문에 예나시와 같은 도시를 5개 정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한 지역에 50억 또는 30억 마르크의 자금을 지원해 주고 그 지역에 본사를 두는 대기업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다. 그때는 세계화도 그렇게 많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기업을 키우기 위한 조건이 지금보다 훨씬 좋았다. 그러나 당시 우리는 경제기술적인 측면에서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기업이 지역주민에게 심리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았다. 결국 우리가 경제만 보고 사람을 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는 경제정책은 항상 사람을 고려하는 사회정책과 맞물려야만 한다고 강조한다. 생각해 보자. 신연방주 5개 지역이 모두 자기 지역을 대표하는 대기업을 갖고 있는 것이 그 지역 주민의 자부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모두 지금보다 키가 한 뼘은 크지 않을까.

[질문] 한국의 경우 그런 식으로 한 지역에 특정한 기업이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지역과 기업이 하나가 된 경험을 이미 갖고 있다. 잘 알려진 자동차회사 현대하면 울산이라는 지역이 떠오를 정도이다. 그런 의미에서 특정한 지역과 기업을 연결시키는 개발전략을 세우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말인가?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다. 한국이 그런 경험을 갖고 있다는 사실도 나는 몰랐다. 그렇게 보면 한국과 독일의 역사적 경험이 정말 다르고 조건도 정말 다르다. 민족적 감정을 토대로 전 국민이 통일국가 건설에 동참하고 기업들이 나서서 각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다면 한국에서 통일 이후 새로운 경제를 구축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독일 통일 당시 우리는 각 지역에 존재하는 대기업 본부가 갖는 상징적 의미를 생각하지 못했다. 실제 분단 이전에는 지멘스의 본부가 베를린에 있었다. 지금도 베를린에는 지멘스구라는 지역이 있을 정도로 지멘스가 베를린에서 중요한 기업이었다. 그러나 분단으로 인해 지멘스 본부가 뉘른과 에어랑겐 즉 바이에른주로 이전하였는데 통일된 이후 지멘스 본사를 베를린으로 다시 이전하는 것을 생각도 하지 않았다.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이다. 지금 독일 대기업의 대부분은 본사가 서독지역에 있다. 예나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Jen-Optik이 유일한 예외이다.

만일 신연방지역에 몇 개의 대기업이 있고 본사가 이 지역의 도시에 있었더라면 그리고 그 도시에 대기업의 이사들이 거주하고 이사회를 개최한다면,

결국 경제적 분권주의가 실현되었더라면 신연방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자부심을 갖을 수 있었을까. 그런 의미에서 분권주의는 정치적인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점을 우리가 당시에 고려하지 못했었다.

통일과정에서 한 가지 꼭 언급해야 할 것을 잊었다. 그것은 노조의 역할이다. 당시 화학노조의 경우 구 동독지역의 화학 생산기지를 유지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고 철강노조는 노동자의 임금보존을 강조하는 정책을 취했다. 그 결과 구 동독의 화학공단은 구조조정을 거쳐서 지금도 남아 있지만 철강분야의 경우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그것은 노조 책임자의 성향 그리고 노조 전체의 전략문제였다. 화학노조의 경우 당시 노조위원장이 구 동독지역의 경제건설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수상실에서 개최하는 구 동독지역 재건 회의에도 꼭 본인이 참석하였다. 반면에 철강노조의 위원장은 그 회의에도 본인이 참석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지만 수상실에서 개최되던 “구 동독지역 재건 회의”에는 신탁청장, 주총리, 경제계와 재계의 대표, 그리고 노조대표가 모두 참여하는 회의였다. 이 회의에 위원장이 직접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많은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 준다.

(질문)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다. 공식적인 명칭이 구 동독지역 재건 담당 특임관으로 정해지기 전부터, 실제로는 1989년 가을 동독의 변화가 시작될 때부터 서독 연방정부의 수상실에서 구 동독지역의 경제 재건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어려운 결정도 여러 가지 내렸을 텐데 그 과정에서 본인이 항상 염두에 두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구 동독지역 재건 담당 특임관의 업무 그리고 구 동독지역의 재건의 성과에 관해서 내가 직접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하라면 그것

은 대체적으로 성공적이었다고 나는 본다. 물론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다시 그런 정책을 담당한다면 조금 달리 접근하고 싶은 부분들도 있다. 그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했다고 본다. 그중에서도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더욱 염두에 둘 것이다. 당시 급격하고 조속한 변화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열망이 강한 압력으로 작용하였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놓친 것들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일은 전체적으로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한다.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나는 1871년 독일을 통일한 비스마르크와 19세기에 세 번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몰트케 장군을 존경한다. 내가 볼 때 이들은 정말 위대한 역사적 인물들이다. 이들은 전쟁에서 승리하였을 때에 인간적인 시각, 즉 상식의 선을 넘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1871년 독일 통일전쟁에서 승리하였을 때에 비엔나까지 진격하겠다는 독일 황제를 말리고 오스트리아를 완전한 적이 아니라 우호적인 이웃으로 남을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모든 것은 적절한 선에서 멈추어야만 한다는 비스마르크의 주장 때문이었다. 정책을 구상하면서 적절한 것이 무엇인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사실이 평범한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실제로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항상 쉬운 일은 아니다. 그것을 나는 항상 염두에 두고 결정하였다.

제2절 로프 슈바니츠

로프 슈바니츠씨는 1989년과 1990년 노이에 포럼 회원, 1989년 11월부터 동독 사민당 당원이 되었고, 1993년부터 2010년 작센주 사민당 부대표, 1990년 3월 18일부터 10월 2일까지 동독 인민회의 멤버, 1990년 7월 23일부터 8월 20일까지 법무부 차관을 역임하였다. 1990년 10월 3일부터 연방의회 의원직을 수행하였고 1998년 10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연방수상실 무임소장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연방보건부 차관을 지내는 등 독일의 정계에서 오

랫 동안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998년 총선에서 승리한 사민당이 연방정부를 구성하고 난 후 처음으로 연방정부의 구 동독지역 재건 담당 특임관직을 공식적으로 도입하였을 때 그는 수상실의 무임소장관으로 연방정부가 임명한 초대 구 동독지역 재건 담당 특임관이 되었다. 슈바니츠씨의 인터뷰는 2012년 7월 12일 작센주의 플라우엔시에 있는 그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열렸다.

인터뷰 진행: 알렉산더 페니히, 아네 바취

로프 슈바니츠는 1990년 10월 3일에 연방의회 의원이 된 이후 (10월 3일부터 12월 연방의회 선거까지는 동독 인민회의 멤버로, 연방의회 선거 이후에는 정식 의원으로) 원내 사민당에서 비밀경찰문서법과 같이 특히 신연방지역과 관련된 주제를 많이 다루었다. 신연방지역 출신으로 초선의원이었던 그에게 연방의회의 업무과정에 익숙해 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로프 슈바니츠의 경우 그나마 동독 인민회의에서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신연방주 출신 초선의원들에 비해서는 쉽게 익숙해 질 수 있었다.

1990년 12월부터 원내 사민당에는 당시 원내 부대표였던 볼프강 티어제가 이끄는 “스터디그룹 IX-신연방주/독일정책”이 구성되었다.

1991년 12월에는 원내 사민당에 부처 간의 경계를 넘어서는 주제를 다루는 크로스그룹이(Querschnittsgruppe) 두 개 구성되었다. 그것은 “동서를 동등하게 만들기”와 “독일 통일” 그룹이었다. 로프 슈바니츠는 독일 통일 그룹의 대표였고, 올라 슈미트가 다른 그룹의 대표였다. 이 두 그룹이 구성되면서 특별히 신연방주와 관련된 주제를 다루기 위한 제대로 된 구조가 갖추어졌고 그 그룹을 통해 연방의회에 제출한 구체적인 제안들이 만들어졌다. 1990~1991년이 비밀경찰문서법이 통과되었던 시기이다.

콜 수상은 당시 수상실의 국장이었던 요하네스 루데비히를 구 동독지역 재건 코디네이터로 임명하였고 나중에 그 직책이 “구 동독지역 재건 담당 특

임관”으로 변경되었다. 루디 가일은 1997년에 루데비히의 후임이 되었다. 당시 야당이었던 사민당은 콜 수상의 이러한 결정을 두 가지 이유에서 비판하였다:

a) 구 동독지역 재건 담당 특임관의 소속을 수상실에서 경제부로 옮기는 것은 구 동독지역 재건 담당 특임관이 담당하는 역할이 부처 간의 경계를 넘어서는 과제를 다루어 왔던 것에서 벗어나 일방적으로 경제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b) 두명의 특임관 모두 행정 차관으로 특임관의 과제가 갖는 복잡성과 중요도에 비해 너무 비중이 적었다 (특히 자신의 부처 외의 영역에서 정책을 관철시키는 것이 어려웠다). 헬무트 콜 휘하의 연방수상실에서는 예를 들어 동프러시아신문은 구독하였지만 신연방주의 일간지를 하나도 구독하지 않았다.

1998년까지 연방의회에는 독일 통일과 관련된 상임위원회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다. 연방의회의 상임위원회는 대부분 연방정부의 부처의 업무분야와 상응하게 구성되었다. 1998년까지는 연방정부에 통일을 다루는 단위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연방의회 상임위원회도 존재하지 않았다.

1998년 9월 27일 연방의회 선거와 사민당-녹색당 연정이 정부를 구성한 후 이 문제에 변화를 주어야 했다. 그래서 연방수상 게어하르트 슈뢰더는 로프 슈바니츠를 “연방정부 구 동독지역 재건 담당관” (이하 특임관)으로 임명하였고 그에게 수상실의 무임소장관의 직위를 주었다.

이러한 제안은 사민당의 독일 통일 크로스그룹에서 하였고 게어하르트 슈뢰더 수상이 연방수상 후보가 되었을 때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크로스그룹의 제안에 따르면 특임관실은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역량과 권한을 가져야만 하였다. 수상실에 특임관의 기구를 구축하는 것과 관련해서 구조적인 것과 내용적인 것에 대한 아이디어는 99%가 이 크로스그룹에서 나왔다. 그러나 이 크로스그룹이 의회에서 일정한 기능을 한 것은 아니었다. 그

저 약 서너명의 크로스그룹 멤버가 특임관의 기획실무팀에 합류하였을 뿐이다. 슈바니츠의 직원이었던 피아레타씨가 특임관실의 사무실장이 되었고, 사민당의 예산담당 사무관이었던 데트레프 비더만과 슈바니츠씨의 개인보좌관이었던 사람이 특임관실의 기획실무팀에 합류하였다.

특임관 기구를 새로이 구성하는 것은 행정부 뿐만 아니라 입법부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였다. 특임관실을 경제부에서 다시 수상실로 이전하는 것은 로프 슈바니츠씨의 입장에서 볼 때 완벽하게 0점에서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였다. 연방수상실에 각 부처에 상응하는 부서가 있고 나아가 부처의 경계를 넘어서는 구조가 있기는 하였다. 그렇지만 슈바니츠씨는 특임관실이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판단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고집하였다. 그 결과 그는 수상실의 각 부서에서 정보를 받아서 신연방지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1998년에 그는 다른 장관들처럼 특정한 부처를 책임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수상실에서 각 부처의 업무를 들여다 볼 수 있었다.

구 동독지역 재건 실무기획팀을 새로이 구성할 때 로프 슈바니츠씨는 전임자가 만들어 놓은 구조 중에 쓸만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업무의 인수인계 과정도 없었다. 단지 연방경제부의 루디 가일씨와 면담이 한 번 있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경제부에서 신연방주 관련된 주제를 다루던 공무원들 중에 몇몇을 새로이 구성될 실무기획팀으로 데려왔다(이러한 조치는 특임관의 입장에서 볼 때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의미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나아가 특별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도 전임자로부터 인수받지 못하였다. 전임자가 남겨 놓았다고 하는 정보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할 뿐이었다. 요하네스 루데비히와의 교류도 없었다. 슈바니츠씨의 휘하에 직원은 총 38명이었다.

당시 특임관으로써 특별히 주의했어야 할 주제는 신연방주 상임위원회, 연대협약의 연장을 위한 작업, 신연방지역의 도시개발과 같은 것이들이었다.

슈뢰터 수상은 로프 슈바니츠씨가 자유로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었다. 논란이 되는 문제가 다루어지는 수상 주재 회의에 그가 참석할 수 있었고 거기서 신연방지역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었다(이러한 일은 일반적으로 차관에게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루데비히씨나 가일씨의 경우 이러한 일을 할 수 없었다. 슈뢰더 수상은 여론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는 특별한 주제들을 수상이 관리하는 문제로 만들었다. 그러나 문제될 소지가 있는 것들은 특임관에게 맡겼다.

예를 들어 1999년에 유럽 지역개발기금이 재원이 남았을 때 그 재원을 신연방주를 위한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슈뢰더 수상이 큰 도움을 주었다. 그는 이 재원을 신연방주들이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동부 재건 프로젝트(예를 들어 드레스덴-프라하 고속도로 건설)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 주었다.

2002년에 특임관직이 롤프 슈바니츠에서 만프레드 슈톨페에게로 인계되면서 특임관이 수상실에 속하였기 때문에 가질 수 있었던 좋은 점, 특히 부처의 경계를 넘는 주제를 다룰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이 다시 사라지게 되었다. 그렇지만 그 때는 이전과는 상황이 달랐다고 한다. 구 동독지역 재건 담당 특임관이 해결해야 할 기본적인 문제들은 (연대협약 II처럼) 이미 결론이 났거나 해결된 상태였고, 동부 재건이 많이 진척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는 수상이 직접 관장할 문제가 아니었다. 바이에른주에서는 연대협약을 종료하는 것이 어떠한 제안을 할 정도였다. 그 때는 동부 재건 프로젝트들의 개별적인 진행이 더 중요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특임관직의 소속을 수상실에서 연방 교통건설도시개발부로 옮기기로 결정하였다.

새로운 특임관 만프레드 슈톨페는 슈바니츠와는 달리 건설교통부 장관으로 자신의 부처를 갖고 있었고, 동독 출신으로 “신연방지역에 대한 지식”도 충분히 갖고 있었다. 그는 특임관의 실무기획팀이 수상실에 있었을 때의 구조를 거의 그대로 넘겨 받았다(이 팀은 현재까지도 그대로 남아 있다. 나아가 부처 간의 경계를 넘는 주제를 다루고 평가하는 권한도 그대로 남아 있

다. 그렇지만 슈톨페가 특임관직을 수행하는 것은 가일이 특임관직을 수행하였을 때처럼 불리한 점도 없지 않았다.

슈바니츠씨는 연대협약 II를 작성하여 연장한 것을 자신의 특임관 임기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한 성과였다고 본다.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연례보고서는 각 부처에서 해당 분야에 대한 문안을 작성하였고, 특임관의 실무기획팀은 최종편집만 담당하였다.

1999년에 시작된 독일 통일 각료위원회는 내각에 신연방주의 문제를 다루는 하위구조를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로프 슈바니츠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부처 간 협력 조정 권한은 일반적으로 수상, 이 경우에는 슈바니츠에게 있었다. 이 각료위원회는 그러나 장관차원에서는 반 년에 한 차례 신연방주의 수도들에서 돌아가며 개최되었다. 특임관 슈바니츠는 실무기획팀과 연방부처의 차관들 그리고 각 신연방주의 해당 관청과 함께 이 회의를 준비하였다. 슈뢰더 수상의 두 번째 임기에는 (2002년부터) 이 회의가 더 이상 열리지 않았다.

신연방주를 순회하는 슈뢰더 수상의 여름여행은 신연방주에 대한 지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고안된 것이었다. 슈뢰더는 그가 니더작센의 주총리였을 때에도 그와 같은 여름여행을 하였었다. 그러나 수상의 여름여행이 언론과 여론에서 정치화되었기 때문에 이 여행은 두 차례만 이루어지고 종료되었다.

연방의회의 신연방주 상임위원회는 1998년에 동부 재건과 관련된 부처 간의 경계를 넘어서는 장기적인 주제를 의회에서 다루기 위해 시작되었다. 로프 슈바니츠는 정부 대표로 이 위원회에 참석하였다. 이전에는 그러한 과제들이 일부는 경제상임위원회의 소위원회에서 다루어졌었고, 2002년에 특임관직이 건설교통부에 속하게 되면서 교통상임위원회의 소위원회에서 다루어지게 되었다.

원칙적으로 볼 때 내무부의 베르그너 차관이 구 동독지역 재건 담당 특임관을 맡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적어도 가일과 같이 행정 차관이 특임관을 맡는 것보다는 낫다. 왜냐하면 특임관직이 정치적인 직

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슈바니츠씨는 입법 차관의 수준에서 특임관직을 맡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가 부처의 영역을 넘어서서 아주 어려운 입장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수상의 동의 또는 지지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도 매우 제한적으로만 도움을 줄 수 있을 뿐이다. 특임관으로서 베르그너 차관의 입지는 수상실에 속했던 특임관 슈바니츠씨 때보다 훨씬 더 약하다.

슈바니츠씨는 1990년에 동부 재건을 담당하는 독립된 부처가 신설되기를 원하였다. 왜냐하면 신연방지역과 관련된 근본적인 원칙에 대한 결정이 여기에서 내려져야 했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독관계부를 존속시키는 것도 의미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인력을 통합하는 것이 아주 문제가 많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독관계부가 폐쇄되었는지 초대 특임관 루테비히 박사가 알지 모르겠다고 그는 말한다. 나아가 슈바니츠씨는 무엇보다 통일 당시 헬무트 콜 수상이 신연방지역의 실질적인 문제를 구조적으로 보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한다. 통일과정을 보는 콜 수상의 시각은 1995년을 넘어서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 때 도입된 독일 통일기금은 사실 임시방편이었을 뿐이라고 한다. 콜 수상은 독일 통일이 빠르게 성공적으로 실행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게다가 그는 원칙적인 문제에 대한 결정을 너무 오랫동안 미루었다. 만일 콜 수상이 통일과정에서 필요한 행정단위를 신설하거나 기존의 기구를 확대 또는 변형하였더라면 그가 문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다는 것을 말했어야만 했을 것이다.

그러나 슈바니츠씨가 볼 때 1998년에 동부 재건을 위한 자체적인 부처를 신설하는 것이 의미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 때는 통일 당시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이 더 이상 아니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미세한 부분에서 협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였고, 그런 업무를 담당하기에는 수상실이 가장 적절한 곳이었다. 특임관으로서 슈바니츠씨에게 불리하였던 것은 그가 자기만의 부처를 갖고 있지 않았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유리한 것은 1998년과 2002년 사이에 녹아 들었다. 그 이후에는 불리한 것을 해결해야만 했다.”

제3절 크리스토프 베르그너

크리스토프 베르그너씨는 1974년부터 1990년까지는 동독의 학술원 소속 생물학 연구소에서 식물에 관해 연구한 자연과학자였다. 1971년부터 동독의 기민당에 가입하였고 1989~1990년의 전환기에 노이에스 포럼의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1993년에서 1995년 사이에는 신연방주인 작센-안할트주의 주총리를 역임하였다. 2005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연방내무부의 정무차관으로 연방정부의 구 동독지역 재건 담당 특임관직을 담당하고 있다. 베르그너차관과의 인터뷰는 2012년 7월 9일에 열렸고 이 인터뷰에는 연방내무부의 구 동독지역 재건 담당 특임관실 실무진이 동석하였다.

인터뷰 진행: 베르너 페니히, 아네 바취, 알렉산더 페니히

[질문] 1990~991년에 동부 재건을 담당할 새로운 부처를 신설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왜 내독관계부가 존속되지 않았는가?

베르그너 차관: 언제부터 특임관의 기능에 관해 공식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는지는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나는 당시 작센-안할트주의 기민당/기사당 원내대표였다. 콜 수상과 연방의회(의 기민당/기사당 원내대표(알프레드 드레거, 기민당)가 구 동독지역 재건 담당관직을 설치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콜 수상은 신연방주 출신의 기민당의 연방의회 의원과 주의회의 원내대표를 정기적으로 모이게 하였다. 내 개인적인 경험은 다음과 같다: 통일 직후 콜 수상이 (기차의 차량 제작을 위한 헤르메스 보증에 관한 논의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요하네스 루데비히에게 지속적으로 많은 힘을 실어 주었다.

어디선가 구 동독지역 재건 담당관직을 신설하자는 말이 나왔다. 그것이 기자의 아이디어였을 수도 있다. 그리고 다음 연방의회 선거에서 루테비히가 연방경제부의 차관으로 임명되었다(1995-1997). 그 이후 루디 가일이 (구 동독지역 재건 담당 특임관으로) 그 후임이 되었다. 가일은 이전에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에서 (1993년에서 1997년까지 기민당 주총리 베르트 자이테 하에서 내무부장관으로) 활동하였었다. 가일의 후임으로 로ルフ 슈바니츠가 수상실에서 신연방주를 담당하였다. 슈뢰더 수상은 동부 재건은 수상이 직접 관할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공언하였다. 슈바니츠의 후임은 만프레드 슈톨페와 볼프강 티펜제였다. 나는 신연방주를 전담할 독립적인 부처를 두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들어본 적이 없다. 내가 개인적으로 받은 인상은 헬무트 콜 수상 본인이 신연방주 관련 과제를 직접 해결하고자 했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슈테판 하이트만은 (1990-2000 작센주 법무부 장관) 1993년 헬무트 콜이 (1994년부터 리하르트 바이체커의 후임으로) 연방대통령직에 앞기고 싶어했던 후보였다. 하이트만이 좀 촌스러웠을 수도 있지만 당시 서독의 기득권 세력들이 그를 불공정하게 대한 것도 사실이다.

에버하트 쿠어트: 당시 나는 내독관계부에 근무했었다. 내 기억으로 당시 신연방주를 전담하는 독립부처에 관한 논의가 있기는 했었다. 발터 프리스니츠씨가(내독관계부 차관) 1991년 1월에 다음과 같은 것을 언급하였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우리는 동부 재건부가 될 것이다.” 그런 부처가 만일 신설되었더라면 그것은 아무런 힘이 없는 불평의 벽이 되었을 것이다. 아니면 다른 부처의 (관할업무의) 일부를 넘겨 받았어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각 부처에서 자신을 불구로 만드는 것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내독관계부는 그 때까지 정치범 교환, 접경지역 지원 그리고 동독과 관련된 정치교육 등 특정한 내독관계의 주제를 주로 다루었다. 당시 동독이 내독관계부를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한 협상은 항상 연방수상실에 의해 이루어졌다.

베르그너 차관: 우리 한국 친구들에게 내가 하나 조언해 주고 싶은 것은 북한을 건설하는 문제를 꼭 정부수반이 직접 관장하는 것으로 만들라는 점이다. 물론 다른 식으로 추진할 수도 있다. 루데비히는 통일 초기 수상실의 국장이었을 뿐이다. 이 문제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을까?

[질문] 어떤 방식으로 과제와 권한이 분할 배분되었는가?

베르그너 차관: 특임관의 과제는 연방정부의 공동 업무령에 의해 규정되었다. 그것은 업무령 21조일 것이다. 그 조항에 자세한 것이 나와 있다. 특임관은 신연방주의 지자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의결이 있을 경우 일정기간 내에 그에 대한 보고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만 그가 거부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 많은 조항들이 단순히 정부의 태도와 관련된 것들이다.

다그마 헤세: 모든 특임관들이 부처 간의 경계를 넘는 주제를 다루어야만 하였다. 그로 인해 내가 꼭 특임관이어야만 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것은 이 직책의 가치와 의미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특임관은 거부권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중이 있는 자리이다.

베르그너 차관: 우리 특임관실에는 수상실에 있는 것과 같은 각 부처에 상응하는 개별 과가 존재한다. 각 영역을 관장하는 과들이 있으며, 특임관으로서 나는 연방정부를 대변한다. 그리고 나는 주정부의 파트너이지만, 연방주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

[질문] 필요한 재정의 규모를 확인하는 문제에서 특임관은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

베르그너차관: 통일 직후 구연방주들은 신연방주를 연방주 간의 균형재정배분체계에 포함시키기를 거부하였다. 그래서 독일 통일기금이 만들어졌

다. 이 기금에는 구연방주들도 참여하였다. 이제는 (신연방주에 재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루르지역에서 반대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1995년부터 연대협약 I이 시작되어서 신연방주도 연방주 간의 균형재정배분체계에 포함되게 되었다. 당시에는 신탁청에 의한 재정이전과 다른 프로그램이 많았기 때문에 연대협약 I은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았다. 그러나 2005년부터, 또는 2005년을 염두에 두었을 때 연대협약 I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당시에는 이 문제에 대한 전문학자들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었다. 당시 작센주의 총리였던 쿠르트 비텐코프가 이 문제에 관한 전문가로 두각을 나타냈다. 이 과정에서 분배의 갈등이 있었고 협상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하였다. 여기서 구 동독지역 재건 담당 특임관의 임무는 필요의 규모를 측정하고 그것을 조정하는 역할이었다.

[질문] 무슨 이유로 구 동독지역 재건 담당 특임관의 소속이 연방 교통 건설주택부(2005년부터 연방 교통건설도시개발부)에서 내무부로 옮겨졌는가?

베르그너 차관: 현 단계에서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이전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사회의 내적인 통합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독일 통일 교통 프로젝트는 거의 완성되었다. 연방수상실의 차관이(롤프 슈바니츠, 사민당, 1998-2002) 서열 상 다른 부처의 차관들보다 (루디 가일, 기민당, 1997-1998, 크리스토프 베르그너, 기민당, 2011년 3월 3일부터 현재까지) 높은 것이 아니다. 단지 수상실과 외무부의 차관이 Staatsminister라는 명칭을 가졌을 뿐이다.

[질문] 왜 더 이전에 신연방지역 출신을 연방정부의 구 동독지역 재건 담당관으로 임명하지 않았나?

베르그너 차관: 요하네스 루데비히가 그 직책에 적극적인 사람이었다. 그래서 신연방지역 출신 누구도 그와 특임관직을 두고 경쟁하려고 하지 않았다.

에버하르트 쿠어트: 아무도 그가 동부 독일 출신이었기 때문에 특임관으로 선출된 사람은 없다. 그보다는 그가 그 임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으며, 그는 독일인으로 그 직위를 받은 것이다.

베르그너 차관: 작센주의 총리 쿠어트 비텐코프나(1990-2002) 튜링겐주 총리 베른하르트 포겔은(1992-2003) 서독 출신으로 신연방지역에서 임무를 잘 수행하였다. 그리고 연방대통령으로는 로만 헤르쾅이 (연방주 출신의 하이트만보다는 좋은 선택이었다. 당시 나는 작센-안할트주 총리로서 연방의회의장이던 리타 쥬스무트에게 연방수상도 서독출신 그리고 연방대통령도 서독출신이니 적어도 연방의회의장은 신연방주 출신이어야 하지 않느냐고 이야기하였다. 그런 이야기를 쥬스무트는 썩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

다그마 헤세: 구 동독지역 재건 담당 특임관의 기능과 직무는 시간이 흐르면서 만들어졌다. 다시 말해 시간이 경과하면서 그렇게 발전했다는 것이다. 이 자리는 구 동독 비밀경찰문서 담당관이었던 요아힘 가옥, 마리안네 비어틀러 그리고 롤란드 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모를 통해 채용되는 것이 아니었다. 특임관직을 수행할 사람은 연방정부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어야 했다. 베르그너 차관의 경우 그가 특임관직을 맡게 된 데에는 개인적인 배경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에버하르트 쿠어트: 게어하르트 슈뢰더 수상은 동부 재건을 수상이 직접 관할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공언하였고, 당시 신연방주 특임관이었던 로프 슈바니츠는 신연방지역 출신으로 연방수상실의 차관이었다. 그래서 그가 더 많은 영향력을 가졌던가?

다그마 헤세: 모든 특임관은 일정한 정도로 정책을 구상할 임무와 자유를 갖는다. 구 동독지역 재건 담당 특임관실이 연방 교통건설 도시개발부로부터 내무부로 옮겨오면서 그 규모가 실제로 축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임관의 직함에 따라(연방장관 또는 차관) 그의 정치적 비중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다. 수상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수상실의 국장이 다른 어느 장관보다 실세일 수 있다. 연방정부 내에서 특임관의 과제가 어디에 놓여 있는가? 특임관은 연례보고서를 발간한다. 이 과제는 특별한 것이다. 한국의 경우 의전적인 문제가 독일에서보다 중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에버하르트 쿠어트: 한국의 경우 특임관을 맡는 사람이 대통령에게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다그마 헤세: 지금 가장 중요한 특임관의 과제는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는 신연방주와 구연방주를 경제적으로 유사한 수준에 올려놓는 것이다. 게다가 2019년에 연대협약이 종료되면 전문인력을 특별히 키우기 위한 장치와 같은 것이 필요할 것이다. 기억에 관한 정책도 여전히 중요하다. 그렇지만 신연방주에서 과거문제를 다루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동독시절의 과거문제를 묻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을 알기 위한 것이다.

에버하르트 쿠어트: 머리 속에 존재하는 장벽이 급속히 제거되고 있는 것을 확실히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얼마나 더 오랫동안 과거청산을 담당하는 기구를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언제라고 고정된 시간의 틀을 정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이와 관련된 문제가 어떻게 전개되는가 그 추이를 보아야만 할 것이다.

다그마 헤세: 신연방주 출신의 연방의회 의원들이 교류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가 있고, 신연방주의 주총리들의 회의가 있다. 일 년에 한 번은 수상이 이 회의에 참석한다. 우리는 이 회의에 자료를 제공한다.

[질문] 어떤 문제들이 남아 있는가?

다그마 헤세: 사회적 분야에서의 동서 융화가 필요하다. 교통분야에서는 이제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경제의 경우 아직은 아니다. 여러 가지가 잘 해결

된 것으로 보이지만 연대협약 II와 유럽연합의 지원이 종료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될 지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한다. 연구에 대한 지원은 지속되어야 하고, 신연방지역의 생산품을 위한 국내외 시장의 개척도 강화해야만 한다. 신연방지역의 실업률이 감소하기는 하였지만 구연방지역, 즉 서독과 비교하면 아직 두 배가 높다. 그리고 아직도 동과 서로 이분해서 보는 논의가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독일은 연방대통령도 신연방주 출신, 연방수상도 신연방주 출신으로 채워져있다. 그것은 어쨌든 긍정적인 표식이다. 그러나 우리가 신연방주 출신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구분할 필요가 없었더라면 더욱 좋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신연방주에 관한 고민을 하면서 그 지역이 신연방주이기 때문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는 서독에도 있는 것이다.

에버하르트 쿠어트: 각 주에 있는 구 동독 비밀경찰문서 담당관이 실제로는 과거청산 담당관이다. 사통당 독재 청산을 위한 연방재단이 영원히 존재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 재단의 활동이 의미가 있다. 연방정부에서는 베르그너 차관이 과거청산문제를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수상실의 문화 언론 차관, 베른트 노이만이 담당한다. 우리는 이전보다 많은 일을 해결하였다. 그렇지만 아직도 목표에 도달하기까지는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아 있다. 나는 이미 말한 것처럼 1986년부터 통일이 될 때까지 내독관계부에서 근무하였다. 당시 우리의 업무는 정치범을 석방하기 위해 돈을 지불하는 것, 문화교류, 접경지역 지원, 동독에 관한 연구와 출판지원 등이었다.

제4절 만프레드 슈톨페

만프레드 슈톨페는 사민당 소속 정치인으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연방정부의 교통부 장관으로 구 동독지역 재건 담당 특임관직을 수행하였다. 통일 직후인 1990년부터 2002년까지는 브란덴부르크주의 총리를 역임하였

다. 그리고 분단시절에는 동독 개신교 협의회의 대표로 다양한 직책을 수행하였다. 분단시기부터 이미 서독 교회와 많은 교류를 주도해 왔기 때문에 통일 직후부터 구 동독지역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정치인이었다. 인터뷰는 2013년 11월 4일 포츠담에서 진행되었다.

인터뷰 진행: 이은정

[질문] 브란덴부르크 주총리였던 분이 2002년에 연방교통부 장관직과 구 동독지역 재건 담당 특임관직을 동시에 담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정이 내려지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나는 1990년 이후 브란덴부르크 주총리직을 수행할 때부터 이미 구 동독지역 재건 담당 특임관의 기능과 업무에 관해서 잘 알고 있었다. 콜 수상 정부 때부터 이 직책이 있었다. 구 동독지역 재건 담당 특임관은 신연방주의 주총리들이 자기 지역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 연방정부와 논의하고자 할 때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연방정부 내의 파트너였다. 통일 직후 신연방주의 주총리들은 자주 자기 주의 문제에 관해 의견을 정기적으로 교환했고 연방정부를 상대로 어떤 의견을 제시할 때에는 서로 의견을 조율하여 공동으로 제안하였었다. 신연방주의 주총리들은 1990년 12월 이후부터 정기적인 모임을 가졌었다. 당시 신연방주가 신설된 지 채 몇 주가 되지 않았을 때 당시 작센주의 총리였던 비텐코프와 내가 만남을 가졌다. 우리 두 사람은 신연방주 중에서 가장 먼저 주총리의 직책을 수행하기 시작한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그 전부터 이미 서로 알고 있었다. 나와 비텐코프는 신연방주의 주총리로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기로 약속하였다. 그리고 나아가 신연방주에게 중요한 사안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서로 협의하고 그것을 연방정부에 함께 전달하기로 합의하였다.

당시 신연방주의 주총리들이 서로 다른 정당에 소속되어 있었다. 당시 브

란텐부르크의 주총리였던 나는 사민당, 작센주의 총리 비텐코프는 기민당 그리고 다른 3개 신연방주의 총리 또한 기민당 소속이었다. 만일 당시 신연방주의 주총리가 모두 사민당 소속이었거나 기민당 소속이었다면 신연방주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사민당이 반대하고 나서거나 또는 기민당이 반대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다른 정당에 소속되었기 때문에 신연방주와 관련된 우리의 제안에 어느 쪽에서도 일방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브란덴부르크의 주총리였던 내가 사민당 소속이었던 것이 일종의 알리바이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도 있다.

우리는 신연방주의 총리 모임을 시작한 후 곧 연방주의 구 동독지역 재건 담당 특임관을 이 모임에 초대하였다. 우리의 의도는 연방주의 구 동독지역 재건 담당 특임관이 이 회의에 참석하여 신연방주의 주총리들과 함께 토론하는 것이 문서화된 편지를 통해 우리의 의도를 전달받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회의를 통해 나는 연방정부의 구 동독지역 재건 담당 특임관의 역할에 관해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고, 여러 명의 특임관과 함께 일하면서 특임관의 영향력이 사람에 따라 아주 상이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연방정부의 구 동독지역 재건 담당 특임관직은 초기에 수상실에 속한 직책이었다. 루데비히 국장이 특임관직을 수행하였을 때에는 특임관실이 큰 역할을 하였다. 그것은 무엇보다 루데비히 국장 개인이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다. 루데비히 국장은 신연방주를 아주 잘 알고 있던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자주 신연방주를 방문하였고 헬무트 콜 수상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던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특임관으로서 신연방주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을 콜 수상을 통해 관철시킬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의 부서를 관장하는 연방정부의 장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체적인 재원도 없었고 조직도 갖지 못했었다. 그것이 큰 문제였다.

그럼에도 연방정부의 구 동독지역 재건 담당 특임관실은 오랫동안 수상

청에 속해 있었다. 1998년에 시민당이 집권하였을 때 게하르트 슈뢰더 수상도 구 동독지역 재건 담당 특임관실을 수상청 소속으로 두었다. 그 때의 특임관은 슈바니츠였다.

2002년에 연방의회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선거운동을 하였을 때 브란덴부르크주의 총리직에서 물러난 나는 게하르트 슈뢰더의 선거운동을 도왔다. 특히 신연방주에서 해야 할 일에 관해 자문해 주었다. 그 때 나는 연방정부의 구 동독지역 재건 담당 특임관실을 더 이상 수상청에 두지 말고 전문 부처에 두기를 제안하였다. 재무부, 환경부, 노동부 등 각자 전문영역과 재원 그리고 조직을 갖고 있는 부처 장관들의 내각회의에서 수상청 소속의 구 동독지역 재건 담당 특임관에게는 뒷 줄의 좌석이 배정될 뿐이었다. 뒷 줄에 앉아 있는 사람이 신연방주를 위한 제안을 하더라도 그것을 관철시키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만일 시민당 정부가 진정으로 신연방주를 위해 일하고 싶다면 연방정부의 구 동독지역 재건 담당 특임관실을 부처의 장관이 담당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그것도 실권이 있고 재원을 움직일 수 있는 부처의 장관이어야만 한다고 하였다. 그럴 경우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처는 연방정부의 재정을 담당하는 재무부 또는 인프라 구축을 담당하는 교통부였다. 교통부는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진행되어야 할 단순히 도로건설 뿐만 아니라 도시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관장하였으며, 각 분야마다 하위조직을 갖고 있다.

내가 교통부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구 동독지역 재건 담당 특임관직을 겸임하였던 3년 간 연방정부의 교통부는 교통부의 사업 중에서 어느 부분이 신연방주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신연방주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해야만 하는지 각별히 신경썼다.

내가 게하르트 슈뢰더에게 구 동독지역 재건 담당 특임관직을 부처의 장관 그것도 재무부 또는 교통부장관이 수행하도록 해야만 한다고 제안하였을 때 나는 연방정부에 입각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당시 내 나이가 이미 66

세였기 때문에 나는 그만 쉬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게 하르트 슈뢰더 수상이 2002년의 총선에서 승리하고 새로운 연방정부의 내각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교통부 장관으로 제안된 신연방주 출신의 정치인과 잘 맞지 않았다. 그가 누구인지 그리고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여기에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슈뢰더 수상이 내각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오랫동안 교통부장관직을 수행할 사람을 찾지 못했다. 그리고 내각을 발표하기 하루 전날 밤 12시에 나에게 전화를 해서는 교통부 장관직을 담당할 신연방주 출신 정치인을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 만일 내가 교통부 장관직을 수락하지 않는다면 서독 출신의 후보들 중에서 내각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그 직책을 맡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것은 내가 구 동독지역 재건 담당 특임관직과 관련하여 제안하였던 모든 것을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1년만 장관직을 수행하기로 하고 연방정부의 교통부장관직을 수락하였다.

그러나 나는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1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여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총 3년 동안 교통부 장관직을 수행하였다. 이 기간 동안에 나는 가능하면 신연방주를 위해 많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물론 신연방주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재무부와 경제부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다. 그리고 환경부와도 협력해야만 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나는 장관으로 내각회의에 참석하면서 알게 되었다. 다른 부처의 사업을 위해 교통부가 담당하는 도로건설 사업이 중요한 역할을 할 때도 있기 때문에 내각회의에서 서로의 의견을 조정하는 것이 어렵지만은 않았다.

그러나 아무도 기적을 만들 수는 없다. 당시 우리는 신연방주의 주민들에게도 그것을 분명히 설명해야만 했다. 동독과 서독은 통일될 때까지 40년 동안 전 영역에서 완전히 상이한 발전을 경험하였던 사회였다.

통일이 되었을 때 나는 부란덴부르크의 총리로서 당시 그와 유사한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상이한 두 체제를 하나로 통합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질문하였다. 내가 가장 먼저 이 질문을 던질 수 있었던 사람은 우연히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주지사였다. 그가 우리 주를 방문하였다. 나는 그에게 위의 질문을 던졌다. 그의 대답은 아주 인상적이었다. 사우스캐롤라이나는 미국의 남부에 속하는 주이다. 그는 미국 남부의 주들은 남북전쟁 이후에 북부의 양키와 동일하게 서게 되기까지 150년의 시간이 필요했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신연방주들도 서독주들과 동일하게 되기까지 150년 정도는 계산해야만 할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런 의견을 듣고 난 후에 나는 다른 여러 사람들과 이 문제에 관해 토론하였다. 그 중에서 특히 두 사람과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는데 그들은 당시 함부르크의 시장이었던 사민당 정치인 포셔라우 그리고 노드라인-베스트팔렌의 주총리 요하네스 라우였다. 포셔라우는 분단이 지속되었던 40년의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와 동일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하였다. 요하네스 라우와 나는 분단시절부터 이미 오랜 친분이 있었던 사이이다. 그는 당시 동서 간의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삼사 년의 시간만 필요할 것이라는 헬무트 콜의 이야기를 믿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물론 콜 수상이 당시 그런 이야기를 하였을 때 그는 주변 사람들이 해 주는 이야기를 실제로 믿었을 수도 있지만 루르 지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한 지역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약 30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하였다. 라우가 이야기한 30년의 시간이 동서독의 삶의 조건을 유사하게 만들기 위해 소요될 기간의 기준이 되었다. 그래서 라우와 나는 연대협약의 적용기간을 30년으로 정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연방 회의를 통해 그것을 관철시켰다. 실제로 연대협약 II가 2019년 12월 31일에 종료되게 된다. 그 때까지 신연방주들은 서독의 연방주들과 유사한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만 할 것이다.

나는 연방정부의 교통부장관직을 수락하였을 때에도 이와 같은 생각을

갖고 시작하였다. 동서독의 격차를 극복하기까지 적어도 30년의 시간이 필요하며, 신속하게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했다. 도로와 철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어야만 각 도시와 산업시설을 연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산업거점 시설도 너무 많은 지역에 건설해서는 안 되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나는 연방정부의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내가 특히 모든 사람에게 분명하게 전하고자 했던 것은 통일이라는 것이 아주 급격한 변혁을 의미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우리가 변혁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통일과 같은 변혁이 왔다고 해서 일이 쉽게 진행되는 것도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통일이 실현되었다고 우리가 낙원에서 살게 된 것도 아니라는 것과 실제로 변화를 위해서 해야만 할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을 항상 강조하였다.

나는 여러 자리에서 통일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교”하였다. 설교라는 단어를 쓰니까 마치 내가 브란덴부르크의 주총리로 목사와 같이 설교한 것으로 들리는데 나는 실제로 법학을 전공한 법조인이다. 단 통일과 관련하여 그 특수성을 강조하기 위해 여러 차례 동일한 이야기를 하였다. 그것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 있다.

먼저 통일이란 정치적 변혁을 의미한다는 것이었다. 정치적 변혁을 위해 새로운 정치제도와 기관을 도입하는 작업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은 의지가 있으면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서독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었다. 브란덴부르크주와 같은 경우 노드라인-베스트팔렌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통일 이전부터 나를 잘 알고 있었던 요하네스 라우가 나에게 브란덴부르크 주총리에 입후보하라고 권했을 때 나는 노드라인-베스트팔렌주가 브란덴부르크주와 자매결연을 맺는다면 입후보하겠다고 했었다. 그리고 실제 브란덴부르크주와 노드라인-베스트팔렌주 간에 자매결연 협약이 체결되었다. 그 후로 노드라인-베스트팔렌주는 약

5,000명의 공무원과 전문가를 우리 주의 각 분야에 파견하였다. 그들은 주 정부의 행정기구, 경제기구 외에 우리 주의 전 분야에 투입되었다. 당시 그들은 우리 주에서 개혁이 실현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다시 한 번 이야기 하지만 통일은 먼저 정치체제의 변혁을 의미한다.

두 번째 변혁은 경제변혁이다. 그것은 모든 것을 중앙에서 통제하던 계획 경제체제를 시장경제체제로 개혁하는 것이다. 계획경제란 다시 말해 모든 것, 즉 나사 하나를 생산하는 것도 국가의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체제이다. 수도 베를린의 관청에 앉아 있는 관료가 외딴 지방의 한 공장에서 생산할 물건의 종류와 양을 계획한다. 동독 시절에는 계획에 오류가 있으면 그것을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존재하였다. 만일 너무 많은 제품이 생산되었다면 남는 것은 아프리카의 국가에 원조물자로 제공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잉여생산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는 없었다. 동독 시절에는 물자가 남아서 쌓여 있었던 경우가 전혀 없었다. 그리고 물자가 부족할 경우에는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필요한 물자를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동독시절에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과 친분을 맺는 것이 중요하였다. 아는 사람들과의 물물교환을 통해 서로 부족한 물자를 보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국가계획경제체제에서 생산하던 기업이 갑자기 국제시장에서 경쟁하는 새로운 시장경제체제에 적응하는 것이 쉬운 과제는 아니었다. 그 때까지 동독의 기업들은 경쟁해야 할 필요가 없었다. 국가가 모든 것을 계획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독의 기업들은 금융시장과 재무 회계에 관한 지식도 전혀 없었다. 국가의 계획에 따라 그들의 회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동독 기업의 관리자들도 기업의 회계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통일 이후 이들 기업은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야만 했다. 각 기업이 경제적 효율성을 가져야만 하게 되었던 것이다. 동독의 계획경제체제에 익숙했던 사람들에게 그런 경제적 변혁은 아주 커다란 과제였다. 실제로 동독의 변혁과정에서 경제적 변혁이 정치적 변혁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로 드러났다. 정치적 변혁은

그나마 조금이라도 조정할 수 있었지만 경제적 변혁은 그러한 조정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세 번째 변혁은 인성, 즉 맨탈리티의 변혁이었다. 통일 초기에 내가 이 세 번째 변혁에 관해서 말했을 때 아무도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독재체제 하에서 사회화된 동독 주민들의 맨탈리티는 자유로운 서독에서 사회화된 사람들과는 달랐다. 독재체제 하에서는 주민들이 항상 조심스럽고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에 익숙해 있었다. 본인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분명히 드러내지도 않고 가능하면 눈에 띄지 않으면서 최대한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의 경쟁사회에서는 항상 자신을 분명히 드러내야만 한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본인을 상품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동독의 독재체제 하에서는 가능하면 눈에 띄지 않으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몇 사람 정도 알고 있으면 충분히 잘 살 수 있었다. 그리고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는 주민들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삶의 과정이 이미 결정되어 있었고 그러한 결정을 수동적으로 따르기만 하면 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해야 할 일은 거의 없었다. 사람은 그런 상황에도 잘 적응하기 마련이다. 반면에 새로운 체제에서는 주민들이 항상 스스로 적극적으로 결정해야만 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재능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하였다. 아무도 무엇을 해야만 한다는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동독의 사회주의 체제는 개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필요가 없는 사회였다. 모든 것이 이미 상부의 결정에 의해 정해졌기 때문이다. 국가가 집세를 결정해 주고, 교통요금도 결정해 주었다. 분단 당시 포츠담시의 대중교통 버스의 요금은 동독 화폐로 12 페니하였다. 그 외에도 국가가 모든 것을 이미 조정해서 정해 주었다. 생필품의 가격 또한 국가에 의해 정해졌다. 동독 정부의 결정에 의해 빵값이 빵의 원료인 밀 가격보다 저렴하였다는 것은 동독 경제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이미 여러 차례 논의되었다. 밀보다 저렴한 가격의 빵을 사서 닭의 사료로 주었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가 동독

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일이다. 이러한 동독 주민들의 사고방식을 변혁시키는 것이 쉬운 과제는 아니었다.

나는 통일 초기부터 이 점을 특히 강조하였다. 실제로 우리는 변혁과정에서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만 했었다. 이 과정에서 아무도 소외시키거나 배제해서는 안 되었다. 다행히도 나는 브란덴부르크 주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아주 유능한 인재를 얻을 수 있었다. 그는 한스 오토 브로이티감이었다. 그는 분단 시기에 동베를린 주재 서독 상주대표부의 대표로 와 있었다. 나는 그 때부터 브로이티감씨를 알고 있었다. 1989년에 그는 서독대표로 유엔이 있는 뉴욕에 가 있었다. 그를 브란덴부르크의 법무장관으로 초빙하였던 중요한 이유는 그가 정치적 현실적인 균형감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통일 초기에 동독 주민들의 과거경력문제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우리는 과거문제와 관련하여 연방정부와 다양한 차원에서 입장을 조율하면서 과거문제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되어야만 하는 것이며 “복수”하기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우리의 입장은 당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투투주교를 만나면서 더욱 확고하게 되었다. 투투주교는 여러 차례 독일을 방문하였었다. 그와 만나는 자리에서 과거문제를 다루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는 가능하면 아무도 배제하지 않도록 노력하라고 조언하였다. 어떤 사람도 새로운 체제의 아웃사이더로 몰려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이 사회적 불만세력이 되고 그들이 사회문제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 브란덴부르크 주에서는 사통당의 후신인 민사당의 정치인들도 개인적으로 범법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체제 내로 통합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당시 로타 비스키가 브란덴부르크주의 민사당 대표였던 것이 우리에게서 큰 행운이었다. 비스키는 사통당 내의 개혁세력에 속하던 사람이다. 우리는 브란덴부르크주가 설립된 초기 4년 동안 아주 많은 일들을 함께 처리하였다. 약 20개의 법안이 주의회에서 합의를 통해 도입될 수 있었다.

[질문] 통일 이후 브란덴부르크주가 다른 주와 구별될 수 있는 특별한 길을 걸었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연방정부의 구 동독 지역 재건 담당 특임관과 관련된 문제로 1990년 통일조약에 관한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당시 동독의 수상이었던 로타 드 메지에르가 구 동독의 재건을 위한 “동부 재건부”와 같은 신연방주만을 위한 부처의 신설을 제안하였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우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터뷰한 많은 전문가들은 “동부 재건부”와 같은 신연방주만을 위한 특별부처가 도입되지 않고 구 동독 지역에서 분권적 연방주의 원칙에 따라 5개의 신연방주를 구성하므로써 구 동독의 새로운 정체성이 형성되지 못했다고 설명하였다. 그것이 통일 이후 동서의 통합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던지는 질문은 무엇 때문에 신연방주를 위한 특별부처가 새로이 도입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다. 통일 초기에 쿠르트 비텐코프를 비롯한 신연방주의 총리들과 신연방주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공동 보조를 취하기 위해 서로 협력했다고 하지 않았는가?

물론 신연방주와 관련된 분명한 사안이 있을 때 신연방주의 주총리들이 공동으로 보조를 취하였다. 특히 유일한 사민당 소속 주총리였던 나는 신연방주의 다른 주총리들과 협의하는 것에 많은 신경을 썼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우리 주만 배제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시에는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노동고용창출 프로그램과 같은 노동시장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했었다.

2002년 총선을 위한 선거운동 중에 나는 게어하르크 슈뢰더와 함께 차를 타고 선거유세에 자주 나갔었는데 그 때마다 나는 선거에서 이겼을 때에는 구 동독지역 재건 담당 특임관실을 더 이상 수상청에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신연방주를 위한 독립적인 특별부처를 신설하지도 말라고 하였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새로이 신설될 부처가 재원을 동원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새로이 신설될 부처를 위해 경제부, 교통부 또는 다른 부처에서 재원을 빼어서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순간부터 각 부처들은 자신들은 더 이상 신연방주를 위해 특별한 사업을 추진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취할 수 있다. 그것은 신연방주를 전담하는 부처에서 할 일이라고 하면 그만일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슈뢰더에게 가능하면 많은 재원을 움직일 수 있는 부처의 장관이 구 동독지역 재건 담당 특임관을 맡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가능하면 모든 부처가 신연방주와 관련된 업무를 함께 담당하도록 하면서 그들이 지속적으로 신연방주에 관심을 갖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만일 내각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신연방주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우는 소리만 한다면 내각의 구성원들 모두가 얼마 안 가서 신연방주라는 이름조차 거론하는 것을 싫어하게 될 수도 있었다.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도 연방정부의 각 부처가 신연방주와 관련된 일에 관심을 갖도록 만들어야만 하였다.

한 예를 들자면 당시 연방정부의 보건부 장관인 올라 슈미트는 신연방주에 많은 관심을 가졌고, 통일 이전 동독의 의료경험 중에서 무엇이 특별히 중요하였는가 하는 질문을 던졌다. 슈미트는 당시 동독의 시스템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고민하였었다. 동독 체제 하에서 의료체계의 특성은 폴리클리닉이라고 불리는 집단진료체제가 존재하였다. 그러한 제도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었다. 그런 고민을 통해 여러 명의 의사들이 공동으로 진료하는 공동진료병원 제도가 통일된 독일에서도 도입되게 되었다.

[질문] 한국에는 분단 시기 서독 연방정부에 존재하였던 내독관계성과 유사한 통일부가 존재한다. 우리는 현재 한반도가 통일되었을 때 통일부와 같은 부처가 북쪽 지역의 재건을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장관님은 방금 신연방주의 재건만을 담당하는 독립적인 부처가 바람직하지 않으며 구 동독지역 재건 담당 특임관직은 차관이 아니라 꼭 장관이 수

행해야만 한다고 강조하였다.

물론 독일의 경우에는 그렇다는 말이다. 특히 구 동독지역 재건 담당 특임관의 경우 내각의 구성원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 장관이어야만 한다. 한국의 경우 정부가 많은 재원과 조직을 갖춘 특별부처를 통해 통일 이후의 과제를 담당해야만 한다고 본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 단지 독일 통일 당시에는 기존 부처의 장관이 내각회의에서 동료로서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것이 중요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연방주만을 전담하는 부처를 두지 않았다. 정부구조를 만들때 중요한 것은 주어진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그를 통해 신연방주의 잠재력을 허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학술 경제 모든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다.

[질문] 당시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구 동독지역 재건 담당 특임관직을 겸임한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이다. 장관님 이전까지 차관이 특임관직을 겸임하였고 현재도 내무차관이 특임관직을 겸임하고 있다.

새로운 정부가 우리의 결정을 번복한 것이다. 그러나 차관으로 구 동독지역 재건 담당 특임관직을 수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현재 구 동독지역 재건 담당의 특임관인 베르그너 차관 또한 업무를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

[질문] 통일 초기에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생각하면 구 동독지역 재건 담당 특임관직을 교통부 장관이 겸임하는 것도 바람직하였다. 그러나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구 동독지역 재건 담당 특임관직을 처음부터 재무장관이 겸직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는가?

재무장관이 재정을 결정한다는 의미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그 직책을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 또한 중요하다. 슈뢰더 정부의 경우 재무장관은 한스 아이헬이었다. 그는 서독 출신으로 좋은 동료였다. 다시 생각해 보면 재무부에 특임관실을 두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내각회의에서 서로 잘 협조하였다.

[질문] 2002년 당시에 교통부 장관이 구 동독지역 재건 담당 특임관직을 겸직해야 한다는 결정이 먼저 내려졌고 슈뢰더가 적절한 인물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장관님이 할 수 없이 교통부장관직과 특임관직을 겸임하게 되었다는 것이 정확한 해석인가?

슈뢰더 수상과 선거유세를 다닐 때 우리가 먼저 구조를 결정한 것은 아니었다. 단지 내각의 일원이 특임관직을 수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점에 의견이 모아졌고 신연방주 출신이 한 명 내각에 포함되어야 하고 그가 특임관직을 담당하도록 하자는 것에 우리가 합의하였다. 그러나 교통부 장관직을 수행할 사람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 직책을 맡게 되었다는 관점에서 보면 구조에 대한 결정이 먼저 내려지고 난 후에 내가 특임관직을 겸임하게 되었다는 말이 맞다.

[질문] 구 동독지역 재건 담당 특임관실이 수상청에 소속되었을 때와 교통부 또는 내무부로 분리되어서 교통부 장관이 특임관직을 수행하였을 때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 롤프 슈바니츠씨는 인터뷰에서 특임관실이 수상청에 속했기 때문에 여러 부처에 해당하는 업무를 조율하는데 유리하였다고 하였다. 장관님은 교통부장관과 특임관직을 겸임하면서 여러 부처에 해당하는 업무를 조율하기도 하였는가?

교통부 내에 그 업무를 전담하는 차관이 있었다. 그 조직의 구조는 지금

현재 내무부의 베르그너 차관실에 포함된 구 동독지역 재건 담당관실과 유사하였다. 특임관실의 일상적인 업무는 교통부 내에서 특임관실을 담당하는 차관이 다른 부처의 차관들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면서 조율하였다. 그는 특히 신연방주 주정부의 총리실 책임자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회의에도 참석하였다. 실무 차원에서는 이 회의를 통해 많은 것이 결정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특임관실에서 이 회의에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다.

[질문] 혹시 적어도 통일 직후에는 특임관직을 다른 직책과 함께 겸직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이 직책만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는가. 장관님의 경우도 그렇지만 루데비히 특임관의 경우에도 수상청 내에서 금융재정과 관련된 직책을 담당하면서 동시에 특임관직을 수행하였다.

특임관실이 교통부에 소속되었을 때에는 여러 명의 교통부 차관 중에 한 명이 특별히 신연방주의 문제를 담당하였다. 그는 신연방주의 문제만을 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재원과 조직을 갖고 있었다. 당시 그 업무를 담당한 사람은 티로 브라우네 차관이였다. 그를 인터뷰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브라우네 차관은 당시 교통부에 소속된 10000명의 직원 중에서 특임관실을 위한 조직을 새로이 구성하였다.

[질문] 당시 장관님이 특임관직을 수행할 때 도입되었던 특임관실의 조직이 지금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베르그너 차관도 현재 구 동독지역 재건 담당 특임관실을 위한 부서를 따로 두고 있다. 그런데 정무차관이 특임관직을 수행하는 것과 사무차관이 특임관직을 수행하는 것 사이에 특별한 차이를 보았는가?

내가 보기에 중요한 것은 특임관들이 실제로 무엇을 이루었는가 하는 것

이 중요하다. 그의 직책이 정무차관인지 사무차관인지 중요하지 않다. 루데비히의 경우 그의 역할이 중요했던 이유는 그가 헬무트 콜 수상의 최측근이었기 때문이다. 티로 브라우네의 경우 사무차관이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공무원이었다. 물론 밖에서 볼 때 정무차관이 더 효과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는 연방의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공무원 출신의 사무차관이라고 해서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었다. 루데비히와 브라우네 같은 사람들은 정무차관이 아니었지만 아주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정무차관과 사무차관의 차이를 언급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각자의 능력이다.

[질문] 오랜 시간 동안 브란덴부르크의 주총리를 지내신 분이 2002년부터 구 동독지역 재건 담당 특임관직을 수행하셨는데 두 가지 직책을 수행하면서 신연방주의 문제를 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었는가?

브란덴부르크주의 주총리직을 수행하면서 나는 신연방주가 안고 있는 문제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브란덴부르크주는 신연방주들이 안고 있는 문제의 종류를 전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나아가 나는 주총리로 신연방주의 다른 주총리들과 지속적으로 모임을 가져왔었다. 그렇기 때문에 구 동독지역 재건 담당 특임관이 되었을 때 나는 이미 신연방주의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었다. 교통부장관이 되었을 때 내가 새롭게 배워야만 했던 것은 지역 간의 상이한 발전이 동서 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서독에도 해당한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서독의 도시 중에서 구조개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가 있다는 것이다.

나의 지역구는 브란덴부르크주 코트부스시이다. 이 지역은 광산산업을 위주로 하던 산업지역이었다. 그러나 광산을 폐광하게 되고 섬유산업이 사향길로 들어가면서 도시 자체가 경제적 구조조정을 해야만 하는 어려움을 겪

고 있었다. 코트부스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노드라인-베스트팔렌주의 도시는 쾰젠키르헨시였다. 이 자매결연을 통해 코트부스시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인원을 파견해 주었고 전문가를 보내 자문해 주기도 하였다. 특히 건축법 전문가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건축법은 230개의 새로운 조항을 포함하였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였다. 이 과정에서 쾰젠키르헨 사람들이 코트부스시에 아주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브란덴부르크주의 총리직을 수행하는 동안 한 번도 이 도시를 방문하지 않았었다. 연방정부의 교통부장관이 되어서 나는 처음으로 쾰젠키르헨과 뒤이스부르크시를 방문하였다. 그를 통해서 루르지역의 도시들도 신연방주의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이후 나는 연방정부의 지원을 동서라는 지리적인 요소에 의해 결정할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필요에 따라 결정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것 때문에 나는 신연방주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그들은 내가 신연방주를 배신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연방 교통부 장관인 나의 입장에서 볼 때 중요한 것은 신연방주뿐만 아니라 서독 내에서도 지역적인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신연방주 내에서도 경제적으로 성공적인 발전지역이 있는 반면 비교적 낙후한 지역이 있다. 브란덴부르크주의 경우에도 포츠담을 비롯한 베를린 주변지역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발전하였다. 포츠담시가 자알란트의 수도인 자아부뤼켄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 한편 브란덴부르크주의 일부 지역은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 도시가 공동화되는 문제를 겪고 있다. 특히 많은 젊은 여성들이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고 난 지역에 남은 젊은 남성들 중에서 극우파가 세를 넓히기도 하였다.

브란덴부르크의 주총리로서 나는 각 지역을 다니면서 가능하면 젊은 여성들을 많이 고용하라고 독려했다. 문제는 독일의 이중적 직업훈련 체계에서 도제를 선발 교육하는 장인들이 젊은 여성을 고용하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여담이지만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장인의 부인들이 젊은 여성이 자신의 남편과 함께 일하는 것을 싫어하였다는 것이었다. 실제 젊은이들이 직업훈련을 받을 연령에 도달하였을 때 남성보다는 여성이 훨씬 성숙하고 성적도 좋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고용하면 좋은 인력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남성의 경우 지적 발전의 속도가 여성보다 조금 늦다. 나는 인구변동 문제에 관해서는 내가 책을 써도 될 정도로 할 말이 많다. 특히 중요한 것은 능력있는 젊은 여성을 지역에 남아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이들이 실제로 각 지역의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인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질문] 실제로 통일 이후 구 동독지역에 새로운 정체성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보는가? 할레-예나 대학의 연구팀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통일 후에 구 동독지역에 연방주의에 입각하여 5개의 주가 형성되고 지방분권주의가 관철되면서 각 지역의 정체성은 형성되었지만 실제 하나의 정체성은 형성되지 않았다고 한다. 장관님도 실제로 그렇게 보시는가?

구 동독지역에는 역사적으로 볼 때 구 동독지역의 정체성이 형성되었던 시기가 없다. 나치체제 하에서도 그렇고 동독 시절에도 올림픽과 같은 스포츠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팀을 응원하였고 지금도 다른 사람들이 구 동독의 상황에 관해서 이야기하면 이 지역에도 “우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학자들이 주로 연구하는 주제이다.

이 문제는 기억의 문화와 유사한 것이다. 어떤 사람이 동독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나쁜 감옥이 동독이었다”라는 식으로 언급하면 구 동독지역의 주민들은 그것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싫어한다. 그런 경우에 그런 논지를 반박하기 위해 “우리”라는 구 동독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각 지

역의 정체성이 형성되고 있다. 브란덴부르크주 뿐만 아니라 다른 신연방주들도 서독의 쉘레스비히-홀슈타인주와 자기 주를 비교하기도 한다. 이렇게 각 지역의 상이한 정체성이 형성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누가 구 동독지역을 하나로 묶어서 비난하면 그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라는 구 동독지역 공동체적 감정이 형성되기도 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 문제를 더 심화하기 원한다면 포츠담 시에 소재한 현대사 연구소의 학자들과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브란덴부르크 지역은 정체성과 관련하여 동독 시절에도 좋은 조건을 갖고 있지 않았다. 작센과 튀링겐 지역과 같은 경우 동독시절에도 자기의 전통을 지속적으로 갖고 있었다. 메클렌부르크나 폼메른과 같은 지역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브란덴부르크는 프리시아의 핵심지역이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지역정체성이 형성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브란덴부르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프리시아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독시절에는 브란덴부르크지역이 있었던 것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 나는 동독시절 교회협의회에서 근무할 때 베를린-브란덴부르크 지역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브란덴부르크 지역이 역사적으로 존재하였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지역의 사람들도 브란덴부르크지역의 존재를 몰랐었다. 브란덴부르크 지역의 상징은 붉은 독수리이다. 그것은 12세기때부터 이 지역의 상징이었다. 나는 의도적으로 그것을 항상 갖고 다닌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왜 티롤의 상징을 들고 다니냐고 물어 왔다. 그것이 나에게서는 아주 충격적이었다. 12세기 이래 지속적으로 브란덴부르크 지역의 상징이었던 붉은 독수리를 독일사람조차 당연히 티롤의 상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질문] 만일 우리가 1990년으로 시간을 다시 돌릴 수 있다고 가정해 보자. 1990년 통일 직후에 구 동독지역 재건 담당 특임관직을 신설하고자 할 때에도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신연방주만을 위한 독립적인 특별부처를 신설하지 않고 다른 부처의 장관이 특임관직을 겸직하는 것을 선호할 것인가. 1990년

당시 내독관계부의 차관이었던 프리스니츠씨의 경우에는 내독관계부를 신연방주 재건부로 변경시킬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였다.

아마도 통일 직후 몇 년 간은 신연방주 재건부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하도 볼 수도 있다. 단 그 기간 동안에 이 부처는 많은 권한과 재원을 보장 받아야만 한다. 그런 경우에는 독립적인 신연방주 재건부를 설립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특임관실을 기존의 장관실에 배치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슈뢰더 수상이 언급한 것처럼 특임관은 신연방주 를 잘 아는 사람이어야만 했다. 그가 꼭 신연방주 출신일 필요는 없지만 그 래도 이 지역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만 한다.

[질문] 한국의 경우 1990년대 초반에는 통일부 장관이 부총리급으로 격 상되었던 때가 있었다. 통일이 되었을 때 과도기에 재건부 장관의 지위를 이 렇게 격상시키는 것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런 조치는 통일 직후 일정한 과도기에는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 물 론 한반도의 통일문제는 독일 통일과 비교할 때 훨씬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 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 부수상이 신연방주 문제를 전담하 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해 보지 않았다. 통일 직후에 콜 수상이 수상청 의 국장을 구 동독지역 재건 담당 특임관으로 임명하였을 뿐이다.

[질문] 그렇지만 통일 직후 3~4년의 과도기에 그런 식으로 신연방주 재건 부를 설치하고 장관의 지위를 격상하는 것이 실제로는 바람직했다고 보는가?

그렇다. 그것은 분명히 그렇다. 특히 통일 초기에는 신연방주에 관한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담당자가 많은 권한을 갖고 있어야

만 한다. 그것은 독일의 연방정부의 경우 재무부장관 정도의 권한과 비교할 만한 것이어야만 했다. 연방정부 내에서 재무부 장관은 일종의 거부권을 갖고 있다. 재정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관해서는 그가 동의해야만 한다. 그와 유사한 권한은 구 동독지역 재건을 담당하는 장관이 갖는 것이 신연방주의 신속한 재건을 위해 분명히 바람직했을 것이다.

[질문] 2002년에 장관님께서 구 동독지역 재건 담당 특임관직을 맡았을 때에는 이미 “독일 통일” 프로젝트가 많이 진행된 상태였다.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상태였다. 잘못된 계획도 많이 있었고 계속 진행해야만 할 일들도 많이 있었다. 그러나 교통계획의 시각에서 볼 때 신연방지역 뿐만 아니라 바이에른 또는 바덴뷔텐베르크 지역에도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다.

[질문] 2014년이면 베를린 장벽 붕괴 25주년이 되는 해이다. 장벽이 붕괴된 지 25년이 되는 시점에서 볼 때 독일 통일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독일은 통일된 국가이다. 물론 각 지역의 특색은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젊은 세대들은 그들이 어떤 지역 출신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동서의 차이가 의미가 없다. 역사적으로 볼 때 독일의 경우 통일을 경험하는 것이 1990년이 처음이 아니었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놀라겠지만 실제로 1866년 프러시아의 팽창 그리고 1871년 비스마르크에 의한 독일 통일 등을 통해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통일을 경험하였다. 그 때에도 독일의 각 지역이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쉬운 과제는 아니었다. 오스트리아를 독일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서는 상이한 평가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 과제는 성공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고 난 후에 1,400만명이나 되는 피난민이 독일 사회에 통합되어야만 했던 경험도 있다. 오더-나이스강 동쪽 지역으로부터 독일로 이주해 온 수 많은 피난민들을 통합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를 위해 동독에서는 약 두 세대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만 했다. 동독의 경우에는 실향민단체를 허용하지 않았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새로운 사회로 피난민을 통합하는 작업뿐만 아니라 동독이 주변국가들과 화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다.

통일과 관련되어 마지막으로 언급할 것은 통일과정은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어야만 하는 과제라는 것이다. 1990년 당시 연방은행 총재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구 동독지역의 체제전환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갖고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함께 하였었다. 그런데 1990년 말로 연방의회 선거일정이 잡히면서 통일문제가 선거의 이슈가 되었다. 1990년 초까지만 해도 헬무트 콜 수상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구 동독지역의 주민들에게 3~4년 후에는 그들도 서독과 동일한 삶의 수준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고 그를 통해 구 동독지역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표를 획득할 수 있었다. 결국 그는 통일을 선거전략에 이용하였던 것이다.

[질문] 통일문제를 선거에 연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을 분리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가? 통일문제를 선거전략과 분리할 수 있는가?

한 가지만 언급하자. 통일 이전에도 나는 동독 개신교 협의회의 법률전문가로 여러 지역을 방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때 나는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나의 의견을 분명히 밝힐 수 있었다. 1990년에 통일이 실현될 것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을 때 서독의 여러 사람을 만나서 이야

기 하였다. 그 과정에서 나는 두 가지 문제를 논하면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다. 첫 번째는 1990년 말로 정해진 연방의회 선거를 연기할 수 없는가 하는 문제 그리고 통일이라는 거대한 과제를 두고 대연정을 구성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문제였다. 나의 의도는 통일문제가 선거전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통일문제가 선거전략의 일부가 되면서 화폐통합의 경우에도 많은 실책이 범해졌다. 당시 시장에서 동독 마르크와 서독 마르크의 교환비율은 1:10이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1:1의 비율로 화폐를 교환한다는 말도 되지 않는 결정이 내려졌다. 그 이유는 동독인들의 환심을 사서 더 많은 표를 얻기 위해서였다. 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통일문제가 정치적으로 다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대연정을 구성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 내가 새로이 가입한 사민당의 동료들조차도 내가 아주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였다. 내가 동독출신이기 때문에 정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였던 것 같다. 그러나 지금도 나는 통일문제는 선거와 분리되고 일상적인 정치적 논쟁으로부터 분리되어야만 한다고 본다.

내가 두 번째로 제안한 것은 구 동독지역에 5개의 신연방주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큰 단위 헤센 또는 라인란트-팔츠 정도 크기의 주를 구성하는 것이었다. 물론 구 동독 전체를 하나의 주를 구성할 수는 없었다. 그것은 동독을 거부하는 주민들의 일반적인 정서가 있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서독의 연방주들이 구 동독지역에 가장 큰 연방주가 새로이 등장하는 것을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구 동독지역의 북쪽지역을 하나로 묶고 작센, 튀링겐 지역을 주로 만들어서 2개 또는 많아야 3개의 주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나의 의견에 드 메지에르도 동의하였었다. 당시에는 작센과 튀링겐을 하나의 주로 묶는다고 해도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정치적 변화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었고 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 그리고 당시 동독주재 소련대사가 구

동독지역의 북쪽에 하나의 주가 등장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그들에게 메클렌부르크와 브란덴부르크 그리고 폼메른 지역을 하나로 묶는 것은 프리시아를 다시 부활시키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소련이 그것을 반대하였던 것이다.

결국 1990년 통일 전에 내가 제안했던 두 가지 중요한 방안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었다.

1980년대에 나는 독일이 통일될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 그 이유는 소련이 세계적인 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엘베강에 소련군을 주둔시켜야만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냉전이 지속되는 한 소련이 동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었다. 그래서 나는 우리 딸에게 독일 통일은 언젠가 이루어지겠지만 그것이 약 40~50년 후의 일이 될 것이고 그 때가 되면 나는 양로원 베란다에 앉아서 너희들이 통일을 자축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었다. 나는 고르바초프가 그렇게 쉽게 동독을 포기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그래서 1989년 11월에 콜 수상이 독일 통일을 위한 10개 조항과 연방제 국가를 제안하였을 때 그것을 대환영했다. 그 때 러시아가 궁극적으로 서방국가들과 협력하기 위해 동독을 포기하기로 결정할 것이라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다. 그러나 나의 예측은 벗어났다.

1990년 2월 소련 모스크바를 방문한 모드로우에게 동독에서 자유선거 이야기가 나왔을 때 모드로우는 아주 낙관적으로 공산당이 적어도 40%의 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고 한다. 2백만의 공산당 당원을 기준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자유선거에 동의하였던 것이다. 이 문제를 또 다른 주제로 몇 시간을 이야기해도 모자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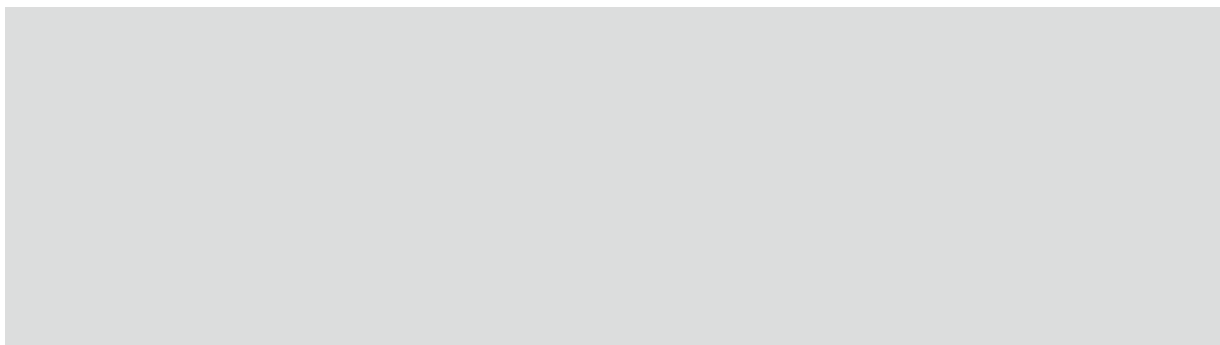
1989년 12월 초에 미국 외무장관 베이커가 포츠담으로 나를 방문하였다. 그는 당시 동독에 내전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나는 동독사회에 안정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자유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유일한 방안이라고 하였다. 소련의 대표가 나를 찾아 왔을 때에도 나는 동일한 이야기

를 하였다. 그리고 3월 18일에 선거가 있었다. 당시 사민당이 아주 실망하였다. 그러나 동독주민들은 통일 이후에 곧 서독과 동일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한 헬무트 콜을 더 신뢰하였다. 사민당의 수상후보였던 오스카 라퐁텐은 통일이 많은 문제를 가져오고 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이라는 것만을 강조하였을 뿐이었다.

독일의 통일이 가시화되기 시작하였을 때 나는 곧 오스카 라퐁텐을 찾아 갔었다. 그에게 1955년에 자알란트가 독일에 가입하였을 때 어떤 협약을 체결하였는가 물었다. 당시에 체결된 계약에는 두 지역을 통합하기 위해 과도기를 두고 경제, 화폐 체제를 전환하는 방안까지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나는 당시 동서독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자알란트를 서독으로 통합하였던 과정을 모델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민당 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몽상가로 보았다. 그러나 나는 지금도 그 방안이 그렇게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본다.

앞으로 한국은 쉽지 않은 길은 가야만 할 것이다. 나는 한국이 이러한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아주 궁금하다. 기회가 닿으면 한국문제에 관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구 동독지역 재건 특임관 분야 정책문서



문서 목록

문서번호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I	인터뷰-크리스토프 베르그너 차관 연방정부 신연방주 특임관 (2009년- 현재)	2012년 7월 9일	크리스토프 베르그너	
II	인터뷰-롤프 슈바니츠 전 연방정부 신연방주 특임관 (1998-2002)	2012년 7월 10일	롤프 슈바니츠	
1	연방의회: 5인의 (신연방주출신) 특임장관 선거; 통독 첫 연방정부의 정책에 대한 연방의회 총회의 토론	1990년 10월 4일	연방의회, 연방정부	Plenarprotokoll 11/228
2	사민당의 집의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변: 신연방주에서의 행정 건설	1991년 7월 10일	연방정부, 연방의회 원내 사민당	Drucksache 12/916
3	연방정부의 답변: 신연방주 발전기획팀에 연방정부에서 파견된 직원	1991년 10월 18일	연방정부	Drucksache 12/1338
4	총회의 심의: 신연방주에서의 행정 건설	1992년 1월 17일	연방의회	Plenarprotokoll 12/71
5	사민당 제안: 신연방주 공동체 이니셔티브	1992년 6월 22일	연방의회 원내 사민당	Drucksache 12/2874
6	연방의회 총회 심의: 신연방주 공동체 이니셔티브	1992년 9월 24일	연방의회	Plenarprotokoll 12/107
7	의결추천과 보고: 신연방주 공동체 이니셔티브	1993년 2월 10일	연방의회 경제심사위원회	Drucksache 12/4306
8	사민당의 집의에 대한 답변: 신연방주에서의 연방정부의 활동과 정부부처의 베를린 외청의 업무	1993년 6월 29일	연방정부/연방내무부/ 연방의회 원내 사민당	Drucksache 12/5300
9	연방의회 민사당 제안: 통일독일의 국가 상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보고 제출	1993년 9월 10일	연방의회 원내 민사당	Drucksache 12/5652
10	연방정부의 답변: 연방공무원을 위한 "야생보너스"	1993년 11월 11일	연방의회, 연방정부	Plenarprotokoll 12/189
11	독일 통일과 동부 재건에 관한 자료	1994년 2월 4일	연방정부	Drucksache 12/6854

문서번호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12	연방의회 총회토론: 독일 통일과 동부 재건 상황에 관한 자료	1994년 6월 23일	연방의회	Plenarprotokoll 12/235
13	민사당 제안: 통일독일의 국가 상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보고 제출	1995년 9월 1일	연방의회 원내 "좌파"	Drucksache 13/2227
14	독일 통일과 동부 재건에 관한 자료	1995년 9월 8일	연방정부	Drucksache 13/2280
15	동부 재건-기야할 길의 나머지 반-현황과 전망-신연방주 발전에 대한 연방정부의 보고	1995년 9월 29일	연방정부	Drucksache 13/2489
16	녹색당 제안: "독일 통일의 진전에 관한 보고서"를 연방정부가 매년 작성 제출	1995년 10월 10일	연방의회 원내 녹색당	Drucksache 13/2572
17	사민당 제안: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례보고서	1995년 10월 11일	연방의회 원내 사민당	Drucksache 13/2586
18	총회의 심의: 연방정부 보고: 독일 통일 5년; 독일 통일과 동부 재건에 관한 자료	1995년 10월 12일	연방의회, 연방정부	Plenarprotokoll 13/61
19	의결추천 및 보고: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례보고의 작성	1996년 1월 31일	연방의회 내무상임위원회	Drucksache 13/3643
20	사민당 제안: 동부 재건을 위한 상임위원회의 도입	1996년 5월 8일	연방의회 원내 사민당	Drucksache 13/4572
21	총회의결: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례보고서의 작성	1996년 5월 9일	연방의회	Plenarprotokoll 13/104
22	사민당 제안: 신연방지역의 경제건설의 촉진	1996년 5월 22일	연방의회 원내 사민당	Drucksache 13/4702
23	녹색당 제안: 동부 재건을 위한 새로운 동력	1996년 6월 18일	연방의회 원내 녹색당	Drucksache 13/4946
24	자민당 제안: 동부 재건 촉진	1996년 6월 19일	연방의회 원내 자민당	Drucksache 13/4979

문서번호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25	총회의 토론: 동부 재건	1996년 6월 20일	연방의회	Plenarprotokoll 13/113
26	연방정부 보고: 동부 재건 - 독일과 유럽을 위한 기회와 리스크	1996년 9월 30일	연방정부	Drucksache 13/5657
27	사민당 제안: 독일 통일에 대한 연방정부의 보고	1996년 10월 9일	연방의회 원내 사민당	Drucksache 13/5731
28	연방의회 총회의 토론: 독일 통일, 동부 재건	1996년 10월 10일	연방의회	Plenarprotokoll 13/128
29	녹색당 제안: 동부 재건은 긴 인목이 필요	1997년 6월 3일	연방의회 원내 녹색당	Drucksache 13/7789
30	의결추천 및 보고: 동부 재건을 위한 새로운 동력	1997년 6월 5일	연방의회 경제상임위원회	Drucksache 13/7839
31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 1997년 연례보고서	1997년 9월 1일	연방정부	Drucksache 13/8450
32	녹색당 제안: 신연방지역을 위한 새로운 기회	1997년 10월 1일	연방의회 원내 녹색당	Drucksache 13/8645
33	총회의 토론: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연례보고서	1997년 10월 9일	연방의회	Plenarprotokoll 13/197
34	사민당 제안: 신연방지역을 위한 경제건설 방안의 새로운 모색	1998년 4월 20일	연방의회 원내 사민당	Drucksache 13/10436
35	기민당/기사당, 자민당 제안: 신연방주를 위한 성장과 고용정책의 지속	1998년 5월 27일	연방의회 원내 기민당/기사당, 자민당	Drucksache 13/10821
36	민사당의 질문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변: 신연방지역의 현재 상황	1998년 5월 27일	연방정부	Drucksache 10809
37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1998년 연례보고	1998년 5월 27일	연방정부	Drucksache 13/10823

문서번호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38	총회의 토론: 신원방지역을 위한 새로운 기회	1998년 5월 28일	연방의회	Plenarprotokoll-13/238
39	연방정부의 진망보고서: '동부 재건 우선'	1998년 6월 17일	연방정부	Drucksache 13/11073
40	총회의 토론: 독일 통일 현황에 관한 연방정부의 1998년 연례보고서	1998년 6월 25일	연방의회	Plenarprotokoll 13/245
41	조직명: 연방정부의 신원방주 특임관 임명	1998년 10월 27일	연방정부 수상	
42	대정부 질의: 1998년 12월 16일의 작센 정부와 "신원방주" 내각위원회의 회의	1998년 12월 9일	연방의회	Plenarprotokoll 14/13
43	기민당/기사당 제안: 신원방지역 건설 다시 제대로 추진	1999년 6월 22일	연방의회 원내 기민당/기사당	Drucksache 14/1210
44	민사당 제안: 신원방지역의 생활수준을 (서독과) 동등하게 만들고 법 안정성을 향상하기 위한 로드맵- "신원방지역 관련 정책을 수상의 책임 하에"	1999년 6월 24일	연방의회 원내 민사당	Drucksache 14/1277
45	기민당 제안: 동부 재건은 지속되어야 한다	1999년 9월 7일	연방의회 원내 기민당	Drucksache 14/1542
46	총회의 토론: 동부 재건(외)	1999년 9월 9일	연방회의	Plenarprotokoll 14/53
47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1999년 연례보고	1999년 10월 18일	연방정부	Drucksache 14/1825
48	민사당의 질의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변: 신원방주에서의 내각회의 결과	1999년 10월 28일	연방정부, 민사당	Drucksache 14/1896
49	동부 재건에 관한 다양한 제안들에 대한 의결추천 및 보고	1999년 11월 10일	연방의회 신원방주 상임위원회	Drucksache 14/2032

문서번호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50	총회의 토론: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1999년 연례보고서	1999년 11월 11일	연방의회	Plenarprotokoll 14/69
51	사민당과 녹색당의 제안: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보고의 지수	1999년 11월 30일	연방의회 원내 사민당과 녹색당	Drucksache 14/2238
52	독일 통일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1999년 연례보고서에 대한 의결추천 및 보고	2000년 1월 28일	연방의회 신연방주 상임위원회	Drucksache 14/2608
53	신연방지역의 현황과 발전에 관한 민사당의 질문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변	2000년 1월 31일	연방정부, 연방의회 원내 민사당	Drucksache 14/2622
54	신연방지역 현황과 발전에 관한 민사당의 질문의 심의에 대한 기민당/기사당의 의결제안	2000년 3월 15일	연방의회 원내 기민당/기사당	Drucksache 14/2930
55	신연방지역 현황과 발전에 관한 민사당의 질문의 심의에 대한 민사당의 의결제안	2000년 3월 15일	연방의회 원내 민사당	Drucksache 14/2921
56	총회의 토론: 신연방지역 현황과 발전에 관한 민사당의 질문에 대한 심의	2000년 3월 16일	연방의회	Plenarprotokoll 14/93
57	민사당의 질문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변: 연방정부의 신연방주 투입관의 활동결과	2000년 4월 13일	연방의회 원내 민사당	Drucksache 14/3217
58	총회의 토론: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1999년 연례보고서	2000년 5월 19일	연방의회	Plenarprotokoll 14/106
59	기민당/기사당의 질문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변: 신연방지역을 위한 집중적인 지원정책	2000년 9월 22일	연방의회 원내 기민당/기사당	Drucksache 14/4125
60	녹색당 제안: 독일 통일 10년	2000년 9월 26일	연방의회 원내 녹색당	Drucksache 14/4132
61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2000년 연례보고서	2000년 9월 26일	연방정부	Drucksache 14/4129
62	통일 10년 이후 통합과정의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입장을 제출하기를 요구하는 민사당의 의결제안	2000년 9월 27일	연방의회 원내 민사당	Drucksache 14/4143

문서번호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63	기민당/기사당 제안: 독일 통일 10년	2000년 9월 29일	연방의회 원내 기민당/기사당	Drucksache 14/4168
64	총회의 토론: 통일 10년 후 통합과정의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입장 제출	2000년 9월 29일	연방의회	Plenarprotokoll 14/122
65	총회의 토론: 동부 재건을 위한 연방정부의 계획	2001년 2월 8일	연방의회	Plenarprotokoll 14/149
66	기민당/기사당 제안: 독일 2015년: 현대적인 독일의 통합을 위한 모범으로서의 동부 재건	2001년 5월 15일	연방의회 원내 기민당/기사당	Drucksache 14/6038
67	자민당 제안: 신연방주의 장래를 위한 적극적 투자를 시작-인구 유출 중지-동부 재건을 위한 10 포인트 프로그램	2001년 5월 16일	연방의회 원내 자민당	Drucksache 14/6066
68	총회의 토론: 독일 통일 현황에 관한 연방정부의 2000년 연례보고서	2001년 5월 17일	연방의회	Plenarprotokoll 14/170
69	민사당의 제안: 신연방지역과 서부독일의 납세자들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전망의 보장	2001년 6월 28일	연방의회 원내 민사당	Drucksache 14/6492
70	총회의 토론: 신연방주의와 서부독일의 납세자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전망의 보장	2001년 7월 5일	연방의회	Plenarprotokoll 14/182
71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2001년 연례보고서	2001년 9월 26일	연방정부	Drucksache 14/6979
72	자민당 의결제안: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2001년 연례보고서	2002년 1월 30일	연방의회 원내 자민당	Drucksache 14/8132
73	총회의 토론: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2001년 연례보고서에 관한 연방정부의 보고	2002년 1월 31일	연방의회	Plenarprotokoll 14/215
74	민사당 제안에 대한 의결추천 및 보고: 신연방지역과 서부독일의 납세자들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전망의 보장	2002년 3월 18일	연방의회 신연방주 상임위원회	Drucksache 14/8567
75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2001년 연례보고서에 대한 의결추천 및 보고	2002년 3월 19일	연방의회 신연방주 상임위원회	Drucksache 14/8620

문서번호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76	총회의 토론: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2001년 연례보고서; 기민당/기사당 제안-독일 2015년- 현대적 독일을 위한 모범으로서의 동부 재건	2002년 3월 22일	연방의회	Plenarprotokoll 14/228
77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2002년 연례보고서	2002년 9월 9일	연방정부	Drucksache 14/9950
78	조직명: 연방정부의 신연방주 특임관직의 연방교통부로 이임	2002년 10월 22일	연방정부 수상	
79	총회의 토론: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2002년 연례보고서에 관한 연방정부의 보고	2003년 1월 16일	연방의회	Plenarprotokoll 15/19
80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2003년 연례보고서	2003년 9월 17일	연방정부	Drucksache 15/1550
81	총회의 토론 :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2003년 연례보고서	2003년 10월 16일	연방의회	Plenarprotokoll 15/66
82	기민당/기사당 제안: 신연방지역에 미래를 부여	2004년 5월 4일	연방의회 원내 기민당/기사당	Drucksache 15/3047
83	자민당 제안: 신연방지역을 변동의 최첨단으로-신연방주를 위한 총체적인 지침	2004년 5월 26일	연방의회 원내 자민당	Drucksache 15/3202
84	사민당/녹색당 제안: 신연방지역의 지속적 성장의 보장	2004년 5월 26일	연방의회 원내 사민당, 녹색당	Drucksache 15/3201
85	총회의 토론: 신연방지역에 미래를 부여(외)	2004년 5월 27일	연방의회	Plenarprotokoll 15/111
86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2004년 연례보고서	2004년 9월 24일	연방정부	Drucksache 15/3796
87	기민당/기사당, 자민당 의결제안: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2004년 연례보고서	2004년 11월 9일	연방의회 원내 기민당/기사당, 자민당	Drucksache 15/4163
88	총회의 토론: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2004년 연례보고서	2004년 11월 11일	연방의회	Plenarprotokoll 15/138

문서번호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89	신연방주의 장래와 관련된 다양한 제안에 대한 연방의회 교통건설주택상임위원회의 의결추천과 보고	2005년 1월 20일	연방의회 교통건설주택상임위원회	Drucksache 15/4706
90	총회의 토론 :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2004년 연례보고서 (외)	2005년 3월 18일	연방의회	Plenarprotokoll 15/167
91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2005년 연례보고서	2005년 9월 28일	연방정부	Drucksache 15/6000
92	좌파 제안: 연방의회에 신연방주와 다른 구조취약지역을 위한 상임위원회의 설치	2005년 12월 1일	연방의회 원내 좌파	Drucksache 16/130
93	총회의 토론: 연방의회에 신연방주와 취약지역 상임위원회의 설치	2005년 12월 15일	연방의회	Plenarprotokoll 16/8
94	기민당/기사당, 시민당 의결제안: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2005년 연례보고서	2006년 2월 15일	연방의회 원내 기민당/기사당, 시민당	Drucksache 16/650
95	자민당 의결제안: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2005년 연례보고서	2006년 2월 15일	연방의회 원내 자민당	Drucksache 16/693
96	좌파 의결제안: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2005년 연례보고서	2006년 2월 15일	연방의회 원내 좌파	Drucksache 16/692
97	총회의 토론: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2005년 연례보고서	2006년 2월 16일	연방의회	Plenarprotokoll 16/19
98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2005년 연례보고서에 대한 연방의회 교통건설주택상임위원회의 의결추천 및 보고	2006년 4월 6일	연방의회 교통건설주택상임위원회	Drucksache 16/1200
99	의결추천 및 보고: 연방의회에 신연방주와 취약지역상임위원회의 설치	2006년 4월 10일	연방의회 원로위원회	Drucksache 16/1220
100	좌파 질의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변: 신연방주의 발전	2006년 7월 17일	연방정부, 좌파	Drucksache 16/2241
101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2006년 연례보고서에 대한 연방의회에서의 대정부 질문	2006년 9월 27일	연방의회, 연방정부	Plenarprotokoll 16/53

문서번호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102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2006년 연례보고서	2006년 10월 2일	연방정부	Drucksache 16/2870
103	총회의 토론: 독일 통일 현황에 관한 연방정부의 2006년 연례보고서	2006년 11월 9일	연방의회	Plenarprotokoll 16/63
104	의결추천 및 보고: 독일 통일 현황에 관한 연방정부의 2006년 연례보고서	2007년 1월 16일	연방의회 교통건설주책상임위원회	Drucksache 16/4041
105	좌파 질의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변: 독일 통일 연례보고	2007년 2월 21일	연방정부, 좌파	Drucksache 16/4359
106	좌파 질의에 대한 연방정부 답변: 동부 재건을 위한 연방기관의 업무구조	2007년 3월 15일	연방정부, 좌파	Drucksache 16/4693
107	좌파의 질의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변: 연방기관 내에 "신연방주" 관련 업무를 위한 업무구조	2007년 5월 3일	연방정부, 좌파	Drucksache 16/5212
108	좌파의 질의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변: 독일 통일 현황과 2020년까지의 발전 전망에 대하여	2007년 5월 23일	연방정부, 좌파	Drucksache 16/5418
109	연방정부의 답변: 기본적인 문제와 연방 수상실의 신연방주 관련 업무 협력과의 공석을 채우는 것에 대해	2007년 7월 20일	연방정부, 좌파	Drucksache 16/6110
110	연방정부 답변: 연방 교통 건설부 신연방주국 내의 공석에 관해	2007년 8월 10일	연방정부, 좌파	Drucksache 16/6218
111	대정부 질의: 독일 통일 현황에 관한 연방정부의 2007년 연례보고서	2007년 9월 19일	연방정부, 연방의회	Plenarprotokoll 16/114
112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2007년 연례보고서	2007년 9월 21일	연방정부	Drucksache 16/6500
113	총회의 토론: 독일 통일 현황에 관한 연방정부의 2006년과 2007년 연례보고서	2007년 11월 9일	연방의회	Plenarprotokoll 16/124
114	좌파 의결제안: 독일 통일 현황과 2020년까지의 발전 전망에 관해	2008년 3월 5일	연방의회 원내 좌파	Drucksache 16/8417

문서번호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115	총회의 토론: 연방의회에 신연방주상임위원회의 설치(외)	2008년 3월 7일	연방의회	Plenarprotokoll 16/149
116	독일 통일 현황에 관한 연방정부의 2008년 연례보고서	2008년 9월 24일	연방정부	Drucksache 16/10454
117	기민당/기사당, 시민당 제안: 독일 통일 현황에 관한 연방정부의 2008년 연례보고서	2008년 11월 12일	연방의회 원내 기민당/기사당, 시민당	Drucksache 16/10852
118	녹색당 의결제안: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2008년 연례보고서	2008년 11월 12일	연방의회 원내 녹색당	Drucksache 16/10855
119	좌파 의결제안: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2008년 연례보고서	2008년 11월 12일	연방의회 원내 좌파	Drucksache 16/10854
120	총회의 토론: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2008년 연례보고서 (외)	2008년 11월 13일	연방의회	Plenarprotokoll 16/187
121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2008년 연례보고서에 대한 의결추천 및 보고	2009년 5월 25일	연방의회 교통건설주책상임위원회	Drucksache 16/13121
122	총회의 토론: 독일 통일에 대한 연방정부 2008년 연례보고서	2009년 5월 28일	연방의회	Plenarprotokoll 16/224
123	독일 통일에 대한 연방정부 2009년 연례보고서	2009년 6월 11일	연방정부	Drucksache 16/13360
124	조직명: 연방정부 신연방주 특임관직을 연방내무부로 이전	2009년 10월 28일	연방수상	
125	좌파 룰란트 클라우스 의원의 질의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변: 연방 교통 도시개발부로부터 내무부로의 신연방주 관련 문서의 이전 일정	2009년 12월 4일	연방정부, 연방의회 원내 좌파 룰란트 클라우스의 의원	Drucksache 17/160
126	좌파 룰란트 클라우스 의원의 질의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변: 연방 교통 도시개발부로부터 내무부로의 신연방주 관련 문서의 이전	2009년 12월 30일	연방정부, 연방의회 원내 좌파 룰란트 클라우스의 의원	Drucksache 17/382

문서번호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127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초안에 대한 연방정부의 실명·독일 통일에 대한 연방정부의 2009년 연례보고서	2010년 9월 17일	연방의회, 연방정부	Drucksache 17/2971
128	독일 통일에 대한 연방정부 2010년 연례보고서	2010년 9월 22일	연방정부	Drucksache 17/3000
129	좌파 의결제안: 합의된 "독일 통일 20년"에 대한 토론에 관하여	2010년 9월 28일	연방의회 원내 좌파	Drucksache 17/3079
130	사민당 의결제안: 합의된 "독일 통일 20년" 토론에 관하여	2010년 9월 29일	연방의회 원내 사민당	Drucksache 17/3078
131	총회의 토론: 독일 통일 20년	2010년 9월 30일	연방의회	Plenarprotokoll 17/62
132	의결추천 및 보고: 독일 통일 현황에 관한 연방정부의 2010년 연례보고서	2010년 12월 8일	연방의회 내무 상임위원회	Drucksache 17/4147
133	녹색당 의결제안: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2010년 연례보고서	2010년 12월 15일	연방의회 원내 녹색당	Drucksache 17/4229
134	좌파 의결제안: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2010년 연례보고서	2010년 12월 15일	연방의회 원내 좌파	Drucksache 17/4228
135	총회의 토론: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2010년 연례보고서	2010년 12월 17일	연방의회	Plenarprotokoll 17/82
136	좌파 제안: 신연방주 차관 임명	2011년 4월 12일	연방의회 원내 좌파	Drucksache 17/5522
137	서면질의: 연방정부 신연방주 특임관의 기능	2011년 4월 29일	좌파 프랑크 템펠 의원, 연방정부	Drucksache 17/5675
138	총회의 토론: 신연방주 차관	2011년 5월 12일	연방의회	Plenarprotokoll 17/108
139	의결추천 및 보고: 신연방주 차관 임명	2011년 6월 20일	연방의회 내무 상임위원회	Drucksache 17/6242

문서번호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140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2011년 연례보고서	2011년 11월 9일	연방정부	Drucksache 17/7711
141	의결제안: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2011년 연례보고서	2011년 12월 13일	연방의회 원내 좌파	Drucksache 17/8153
142	사민당 의결제안: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2011년 연례보고서	2011년 12월 13일	연방의회 원내 사민당	Drucksache 17/8152
143	총회의 토론: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2011년 연례보고서; 신연방주 차관	2011년 12월 16일	연방의회	Plenarprotokoll 17/150
144	총회의 질의: "신연방지역의 경제 현황과 전망"에 대한 평가서	2012년 3월 7일	연방의회-녹색당 브리타 하셀만 의원	Plenarprotokoll 17/164

문서 요약

인터뷰(문서번호 I, II)

문서
번호 I

인터뷰-크리스토프 베르그너 차관 연방정부 신연방주 특임관(2009년-현재)
2012년 7월 9일

담당자 / 기관_ 크리스토프 베르그너

내용:

(제목 참조)

출처_ 인터뷰

문서
번호 II

인터뷰-롤프 슈바니츠 전 연방정부 신연방주 특임관(1998-2002)
2012년 7월 10일

담당자 / 기관_ 롤프 슈바니츠

내용_

(제목 참조)

출처_ 인터뷰

문서 요약

문서요약(문서번호 1~144)

문서
번호 1

연방의회 5인의 (신연방주출신) 특임장관 선서 : 통독 첫 연방정부의 정책에 대한 연방의회 총회의 토론

1990년 10월 4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연방정부

내용_

통일 이후 처음 구성된 독일 연방의회에는 144명의 신연방주 출신 의원이 있었다. 그 중에 5명이 '특임장관'으로 임명되어서 선서를 하였다.

이어서 헬무트 콜 수상이 '통일된 독일연방공화국 초대 정부의 정치에 관한 연방정부의 입장'을 발표하였다.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문서
번호 2

사민당의 질의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변: 신연방주에서의 행정 건설

1991년 7월 10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연방의회 원내 사민당

내용_

(제목 참조)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문서
번호 3

연방정부의 답변 : 신연방주 발전기획팀에 연방정부에서 파견된 직원
1991년 10월 18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내용_

(제목 참조)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문서
번호 4

총회의 심의 : 신연방주에서의 행정 건설
1992년 1월 17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내용_

(제목 참조)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문서
번호 5

사민당 제안 : 신연방주 공동체 이니셔티브
1992년 6월 22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원내 사민당

내용_

사민당은 다음과 같은 사안에 초점을 맞춘 '신연방주 공동체이니셔티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였다 :

- 실업 대신 일자리를 창출
- 소유권이 해결되지 않아서 투자유치를 하지 못하는 문제들의 해결
- 산업지역의 핵심을 유지-신탁청의 업무 개혁
- 사회적 조건을 (서독에) 균등하게 맞추기
- 독일 통일 재정의 확대와 그에 따른 부담의 공정한 배분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문서
번호 6

연방의회 총회 심의 : 신연방주 공동체 이니셔티브
1992년 9월 24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내용_

연방의회는 1992년 6월 22일 총회의에서 사민당이 제안한 '신연방주 공동체 이니셔티브'에
관해 토론하였다(의사일정 11a).

(그 외에 총회에서 논의된 통일과 관련된 사안: 신연방주의 스포츠를 육성하기 위한 프로
그램(금메달 계획 2000), 신연방주에서 더 많은 환경보호를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
기 위한 제안 등이 있었다).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문서
번호 7 의결추천과 보고 : 신연방주 공동체 이니셔티브
1993년 2월 10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경제상임위원회

내용_

(제목 참조)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문서
번호 8 사민당의 질의에 대한 답변 : 신연방주에서의 연방정부의 활동과 정부부처의 배
 를린 외청의 업무
1993년 6월 29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연방내무부/ 연방의회 원내 사민당

내용_

(제목 참조)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문서
번호 9

연방의회 민사당 제안 : 통일독일의 국가 상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보고 제출
1993년 9월 10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원내 민사당

내용_

(제목 참조)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문서
번호 10

연방정부의 답변 : 연방공무원을 위한 “야생보너스”
1993년 11월 11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연방정부

내용_

서독에서 신연방지역으로 파견된 공무원들의 초과비용에(일반적으로 야생보너스로 불리
운다) 대한 일괄적인 보상총괄액에 대해 1990년부터 1993년까지의 추정액만이 제시되었다.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문서 번호 11 독일 통일과 동부 재건에 관한 자료
1994년 2월 4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내용_

연방정부는 연방의회에 독일 통일 현황과 동부 재건에 대해 610쪽의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자료를 통해 통일이 되었을 당시의 상황과 1993년 6월 30일까지의 동부 재건의 결과를 볼 수 있다.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문서 번호 12 연방의회 총회토론 : 독일 통일과 동부 재건 상황에 관한 자료
1994년 6월 23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내용_

(제목 참조)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문서
번호 13

민사당 제안 : 통일독일의 국가 상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보고서 제출
1995년 9월 1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원내 “좌파”

내용_

(제목 참조)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문서
번호 14

독일 통일과 동부 재건에 관한 자료
1995년 9월 8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내용_

연방정부는 연방의회에 독일 통일 현황과 동부 재건에 대한 532쪽의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자료는 1994년 4월 2일에 내용을 수정하였고 1995년까지의 기간이 보충되었다.

이 보충된 자료를 통해 통일 이후 5년 동안 연방, 주 그리고 지자체에서 시행된 정책의 전체적인 윤곽을 볼 수 있다.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문서
번호 15동부 재건-가야할 길의 나머지 반-현황과 전망-신연방주 발전에 대한 연방정부
의 보고

1995년 9월 29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내용_

연방정부는 33쪽의 보고서를 통해 독일 통일 현황과 동부 재건에 관해 연방의회에 보고하였다.

통일이 된 지 몇 년이 지난 지금도 동부 재건이 완성되기까지 가야할 길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동부 재건에 대한 평가는 분명히 긍정적이다. 신연방지역의 법적, 조직적 통합은 거의 완결되었다. 그에 반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경쟁력있는 경제를 건설하겠다는 목표는 아직 달성되지 않았다. 1994년의 경제성장률이 6.5% 그리고 1995년에는 1995%로 신연방지역은 세계의 성장지역 중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에 속한다. 이러한 발전이 완만한 가격인상률에 의해 동반되었다.

전체 독일의 국내총생산에서 신연방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1년의 7.2%에서 1994년에 10.4%로 상승하였다. 그것은 몇 년이 안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매년 3%씩 증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활동인구 일인당 국내총생산을 근거로 산출한 전체 경제의 생산성은 1994년에 서독의 53% 수준이었다. 이것이 1991년에는 31%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신연방지역 경제의 자체적인 성취력은 여전히 낮다. 1991년과 1994년 사이에 연방과, 주 그리고 지자체, 유럽연합 그리고 사회보장보험의 예산에서 약 4,750억 마르크가 신연방주에 제공되었다. 신연방주는 1995년부터 개편된 연방주 간의 균형재정배분을 통해 재정적으로 도움을 받게 되었다.

신연방지역 성장의 받침은 지속적으로 높은 투자의 역동성이다. 1991년에서 920억 마르크가 투자된 이래 신연방주의 시설투자는 1995년에 2,100억 마르크에 달하였다. 그 중에 1,700억 마르크는 국내외 외국에서 온 기업투자였다.

몇 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신연방주에 넓게 포진한 중소기업층이 형성되었다. 그것은 48만명의 자영업자와-그 중에 약 3분의 1이 여성-3백 2십만명의 종업원의 수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문서
번호 16

녹색당 제안 : “독일 통일의 진전에 관한 보고서”를 연방정부가 매년 작성 제출
1995년 10월 10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원내 녹색당

내용_

(제목 참조)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문서
번호 17

사민당 제안 :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례보고서
1995년 10월 11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원내 사민당

내용_

(제목 참조)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연방정부

내용_

독일 통일 5년을 기념하여 연방정부는 의회에서 독일 통일현황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였다. 이어서 열린 총회의에서는 독일 통일에 관한 보고와 관련된 다양한 사안이 다루어졌다.

- 연방정부의 입장 발표 : 독일 통일 5년
- 연방정부의 설명 : 독일 통일과 동부 재건에 관한 자료(회의 일정 3b)
- 연방정부의 설명 : 동부 재건-갈 길의 나머지 반-현황과 전망-신연방주의 발전에 대한 연방정부의 보고서(회의 일정 3c)
- 녹색당 제안 : “독일 통일의 발전에 대한 보고서”를 연방정부가 매년 작성(추가 일정 2)
- 시민당 제안 : 독일 통일에 대한 연례보고서(추가일정 3)

(총회의에서 논의된 통일관련 사안 : 민사당 제안-1990년 화폐통합 때 2:1 교환비율로 인해 줄어든 교환금액을 우선 노인과 싱글 부모에게는 일부 다시 보상해 주는 법 초안; 연방회의-통일조약 3조에 언급된 지역에 대한 자연보호법에 관한 법 초안; 시민당 제안-신연방주에서 적용되는 특별 해고보호법의 연장에 관한 법 초안; 민사당 제안-통일조약 44조에 정해진 절차에 관한 법 초안; 민사당 제안-동독의 재산에 관한 전반적인 분석; 시민당 제안-사통당 SED 피해자의 복권 개선; 제안-“독일 연방 공화국 역사박물관” 재단의 설립에 관한 법의 개정; 민사당의 제안에 대한 법무 상임위원회의 보고-가입지역에서 실질적인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민법적으로 소유권을 관철하는 것을 연기; 민사당 질의-신탁청이 회생 가능한 기업을 민영화하는 과정에 독일재건은행이 추가로 10억 마르크를 투입하기로 결정; 민사당 제안-연방의 고용인과 베를린시의 고용인의 동등한 대우를 위한 법 초안; 시민당 제안-신연방주의 지자체들이 사회시설로 인해 넘겨받은 구 부채문제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문서
번호 19

의결추천 및 보고 :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례보고의 작성
1996년 1월 31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내무상임위원회

내용_

연방의회 내무상임위원회는 연방정부가 독일 통일 연례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기를 요구하는 녹색당과 사민당의 제안에 대한 의결추천에 대해 보고하였다. 이 제안은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문서
번호 20

사민당 제안 : 동부 재건을 위한 상임위원회의 도입
1996년 5월 8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원내 사민당

내용_

(제목 참조)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문서 번호 21 총회의결 :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례보고서의 작성
 1996년 5월 9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내용_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례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민당의 제안이 기민당/기사당, 자민당과 사민당 의원의 동의로 채택되었다.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문서 번호 22 사민당 제안 : 신연방지역의 경제건설의 촉진
 1996년 5월 22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원내 사민당

내용_

사민당은 연방의회에 '신연방지역 경제건설의 촉진'을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 복잡한 지원체계의 간소화: 지원금에 대한 컨트롤 개선
- 베를린을 포함한 신연방지역에 대한 연방의 경제지원을 중기적인 차원에서 1996년의 지원수준을 기준으로 확정
- 창업을 위한 용기 지원: 부족한 자기자본의 극복
- 신연방지역의 연구단지 개선과 재활성화
- 주택 건설, 노후주택 현대화, 인프라의 지속적인 구축, 환경 개선
- 직업생활을 시작하는 젊은 세대가 잘못된 시작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
- 신연방지역을 위한 고용연대협약을 체결
- 함께 힘을 모아 동부 재건 비용 조달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원내 녹색당

내용_

녹색당은 연방의회에 ‘동부 재건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이 제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앞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은 연대세를 감축하지 말 것
- 신연방주에서의 노동시장 지원 정책을 지속할 것
- 신연방주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판로를 확보할 것
- 동유럽과 중부유럽으로 경제의 경계를 개방할 것
- 지역지원 정책을 신연방지역의 문제에 맞추어서 새로이 조정할 것
- 친환경적인 미래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세금체계를 친환경적으로 개혁할 것
- 고용자 임금의 일부를 재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임금협약의 실현과 종업원 지주제의 강화
- (주택과 건물의) 보수와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건축지원을 위한 새로운 방안
- 신연방주와 협력 하에 환경오염을 제거하기 위한 장기적인 프로그램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문서
번호 24

자민당 제안 : 동부 재건 촉진

1996년 6월 19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원내 자민당

내용_

기민당/기사당은 연방의회에 '동부 재건의 지속'에 관한 제안을 하였다. 그것은 연방정부가 그때까지 이루어 놓은 성과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신연방주에 자체적인 능력으로 투자를 유치하고 일자리를 보장할 수 있는 자립경제를 건설한다는 목표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그 제안의 중점사항들은 보면 :

- 투자 지원의 개선
- 신연방주에서 자기자본의 강화와 새로운 기업의 정착을 지속적으로 지원
- 지속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투자 지원
- 지원영역법에 따라 세금에 의한 지원금의 적절한 사용
- 인프라 확대구축의 지속
- (경제관련) 승인절차의 간소화와 가속화
- 민간자본의 축적을 위한 적절한 조건의 구축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문서
번호 25

총회의 토론 : 동부 재건
1996년 6월 20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내용_

이 총회의에서는 동부 재건과 관련된 다양한 사안이 논의되었다.

- 사민당 제안 : 신연방지역 경제건설을 촉진(의사일정 4a)
- 사민당 제안 : 동부 재건 상임위원회의 설치(의사일정 4b)
- 녹색당 제안 : 동부 재건을 위한 새로운 동력(추가일정 2)
- 기민당/기사당, 자민당 제안 : 동부 재건 촉진(추가일정 3)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문서
번호 26

연방정부 보고 : 동부 재건-독일과 유럽을 위한 기회와 리스크
1996년 9월 30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내용_

연방정부는 '동부 재건-독일과 유럽을 위한 기회와 리스크'라는 보고서에 관해 연방의회에 보고하였다. 여기에서 다루어진 사항은:

- 신연방주의 전체적인 경제발전
- 신연방지역 기업들이 갖고 있는 특별한 문제
- 인프라의 현황과 (건강, 연금, 교육과 같이) 특수한 정치영역
- 임금협상 파트너들의 책임
- 신연방지역에서의 경제지원
- 다른 정치영역에서의 지원(가족, 대학, 연방군, 주택 등)
- 주정부와 지자체의 과제
- 유럽연합에 의한 구조지원기금과 보조금 정책
- 예측과 전망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문서
번호 27

사민당 제안 : 독일 통일에 대한 연방정부의 보고
1996년 10월 9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원내 사민당

내용_

사민당은 연방정부가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자세한 보고서를 연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한 1996년 5월 9일의 의결사항을 아직 충족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제안을 통해 다음 해부터는 광범위한 보고서를 기일에 맞추어 제출하기를 요구하였다.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내용_

연방의회는 총회의에서 독일 통일 현황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관해 토론하였다.

- 독일 통일에 관해 합의된 (일반적인) 토론(의사일정 3a)
- 연방정부의 설명 : 동부 재건-독일과 유럽을 위한 기회와 리스크(의사일정 3b)
- 신연방주의 경제건설에 관한 연방정부의 입장 제출(추가일정 3)
- 녹색당 제안 : 동부 재건 효과적으로 추진(추가일정 4)
- 시민당 제안 : 신연방지역에서의 사회적 경제적 위기가 참여화되는 것을 방지(추가일정 5)
- 시민당 제안 : 독일 통일에 대한 연방정부의 보고(추가일정 6)

(총회의에서 논의된 통일 관련 사안: 민사당의 제안에 대한 2차 3차 심의-1990년 화폐통합 때 2:1 교환율로 인해 줄어들은 금액을 우선 노인과 싱글부모에게 일부 다시 보상해주는 법초안; 민사당의 제안에 대한 법무상임위원회의 의결추천 및 보고-통일조약 44조의 절차에 관한 법초안; 민사당 제안에 대한 법무상임위원회의 의결추천 및 보고-통일조약의 조정, 개정, 보충.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문서
번호 29

녹색당 제안 : 동부 재건은 긴 안목이 필요
1997년 6월 3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원내 녹색당

내용_

녹색당은 연방의회에서 ‘동부 재건은 긴 안목을 필요로 한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그 이유는 동부 재건을 위한 경제지원이 장기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지침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지침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따라 만들어져야 한다 :

- 장기적인 지원전략
- 동부 재건을 위한 지원금의 액수를 적어도 앞으로 5년 간은 현재 지급되고 있는 수준으로 확정
- 제조업과 생산위주의 서비스영역에 대한 중점적인 지원
- 지원 프로그램의 간소화
- 신연방지역에서 비교적 성과가 좋은 산업중심지를 위한 거점지역 지원의 지속
- 신연방지역의 인프라 구축 프로그램을 연방과 주의 공동의 과제로 설정
- 주거와 공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 명확하게 고용정책적인 요소들의 개발
- 중부와 동유럽 이웃의 시장과 협력의 이용 발전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문서
번호 30

의결추천 및 보고 : 동부 재건을 위한 새로운 동력
1997년 6월 5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경제상임위원회

내용_

연방의회의 경제상임위원회는 녹색당의 “동부 재건을 위한 새로운 동력” 제안을 부결하였다.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내용

연방정부는 128쪽에 달하는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례보고서에 관해 연방의회에 보고하였다.

물질적인 측면에서 본 통일과정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신연방지역의 인프라와 일상 생활을 위한 물자공급이 확실히 개선되었고 나아가 정치, 행정, 사법 등 주민들의 삶과 관련된 모든 영역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 통일 초기부터 연방정부와 (서독의) 구연방주들이 집중적으로 참여하면서 법치국가의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효과적인 행정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 1995년부터 신연방주들이 전체 연방주 간의 균형재정배분체계에 통합되면서 통일로 인한 과도기는 종료되었다.

서독 국민총생산의 4%에서 5%가 신연방주에 이전되었다. 연방정부가 신연방주를 위해 지출한 액수는 1995년 1,350억 마르크, 1996년에 1,380억마르크였다. 1997년의 연방예산안에 서독 이와 유사한 수준(1,400억 마르크)가 (신연방주를 위한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다.

1996년에 국내총생산의 실질적인 성장이 2%가 되면서 (신연방지역) 건설의 진행과정이 느려졌다. 1997년에 공개된 공식적인 실업율이 18.7%였다 (1996년 1월 16.8%). 1995년 말에 서독 임금의 87%였던 (신연방주의) 평균임금이 1996년 말까지 약 89%로 상승하였다.

1996년 7월 1일부터는 신연방주의 연금이 매년 7월 1일 그 지역의 임금수준의 변화에 따라 결정된다. 이전까지는 1년에 2회 조정되었다.

1997년에는 연방이 신연방주에게 도시건설을 위한 정책을 위해 5억 2천만 마르크를 지원한다.

연방정부는 베를린의 문화진흥을 위한 목적으로 1995년과 1996년에 총 3억 5천 4백만 마르크와 4억 3백만 마르크를 지원하였다. 1997년에는 4억 1천 3백만 마르크가 넘는 금액이 지원될 것이다.

물질적 측면에서 본 통일과정과는 달리 “내적 통합”은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원내 녹색당

내용_

녹색당은 연방의회에 '신연방지역을 위한 새로운 기회'라는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그 포커스는 다음과 같다 :

- 적체되어 있는 문제의 해결
- 신연방지역-건설-지원 지속
- 지역지원의 효율성 강화
- 연대세를 유지할 필요
- 친환경적인 구조변화가 동부 재건에 도움
- 연구중심지역으로서의 신연방주 강화
- 노동시장을 위한 동력
- 열악한 교육환경과 기회 문제 해결
- 지속적인 공공 치안의 유지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내용_

연방의회 총회의에서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1997년 연례보고서와 다른 통일관련 주제들이 논의되었다.

- 신연방주 경제건설에 대한 연방정부의 설명
-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례보고서
- 녹색당 제안 : 신연방지역을 위한 새로운 기회
- 녹색당의 제안 ‘동부 재건은 긴 안목이 필요’에 대한 경제상임위원회의 의결추천 및 보고

(총회의에서 논의된 통일과 관련된 사안 : 민사당 제안-동독시절 채무관련법의 개정을 통해 신연방주의 지자체 소유 그리고 조합 소유의 주택들에 대한 강제 민영화를 중단; 민사당 제안-동독의 국가재산을 통일조약에 맞게 사용할 것; 동독의 국가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요구한 민사당의 제안에 대한 예산상임위원회의 의결추천 및 보고; 민사당의 제안에 관한 노동사회상임위원회의 의결추천 및 보고-신연방주의 해고된 광산노동자들을 위한 실업연금; 민사당 제안-신연방주의 산업핵심지역의 보존과 개선; 녹색당 제안-공영주택 건설 이니셔티브를 위해 구 동독의 채무법 이용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문서
번호 34

사민당 제안 : 신연방지역을 위한 경제건설 방안의 새로운 모색
1998년 4월 20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원내 사민당

내용_

사민당은 연방의회에 '신연방지역을 위한 경제건설 개념을 새로이 정립'하자는 제안을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신연방지역을 국가 혁신정책의 중심지로
- 특히 혁신적인 기업의 자기자본비율의 개선을 위한 지원
- 동부 재건을 위한 새로운 제도적 틀을 만들 것
- 경제지원절차의 간소화
- 신연방지역 경제성장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지금 실행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원내 기민당/기사당, 자민당

내용_

기민당/기사당과 자민당은 연방의회에서 '신연방주의 경제성장과 고용정책을 지속한다'라는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통일 이후 지난 8년 동안 신연방주의 생활수준을 서독과 같은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일들이 추진되었고 많은 부분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 현재 경제, 정치 그리고 임금협상에 책임을 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실업률의 감소와 경제발전을 달성하는 것이다.
- 신연방주들은 앞으로 몇 년 동안 국가의 지원과 도움을 필요로 한다.
- 신연방주의 산업에 대한 조사에서 확인된 미진한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이다.
- 지자체와 모든 공공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들은 고용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의 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전부 신속하게 이용한다.
- 연방정부는-노조가 더 이상 협력하지 않는다고 한 결정과 상관없이-‘신연방지역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공동 이니셔티브’를 유지한다.
- ‘독일 통일 과정에서 사통당-독재 후유증의 극복’을 위해 설치된 앙케이트 위원회를 통해 진행된 과거청산작업의 성과를 치하한다.
- 가장 중요한 과제는 내적인 통일의 완성이다.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문서
번호 36

민사당의 질문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변 : 신연방지역의 현재 상황
1998년 5월 27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내용_

신연방지역의 상황에 대한 민사당의 질의에 연방정부는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1997년과 1998년 연례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내용

연방정부는 연방의회에서 158쪽에 달하는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1998년 연례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독일 통일을 가장 인상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물질적 발전이나 인구변동이 아니라 1997년 7월과 8월에 오더강에 대홍수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전 독일인이 함께 힘을 모았던 것이다.

가장 중요한 정치적 과제는 여전히 모든 생활영역에서 내적 통합을 완성하는 것이다.

신연방주의 경제력은 최근까지 확실히 증가하였다. 신연방지역의 산업 수출이 약 26% 증가하였다(단 전년도의 절대적인 수출량이 적었기 때문에 증가폭이 크게 보일 수 밖에 없다).

이 지역의 의사, 치과의사 등의 분포율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의료혜택은 분명히 향상되었다.

연금수준이 명백히 상승하였다. 알려진 기준연금이 1990년 후반기에 670 마르크였는데 반해 1997년 후반기에는 1,680마르크로 상승하였다. 그것은 서독의 기준연금과 비교할 때 40%에서 85%로 상승을 의미한다. (기준연금-연금 수령액의 평균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독일 연금체제에서 45년 동안 평균적인 연금 가입비를 납입한 사람이 연금생활자가 되었을 때 수령하는 연금액수를 말한다).

지금까지 오십만호 이상의 주택이 새로 건설되었으며 기존의 주택의 절반 이상이 개량공사와 현대화공사를 거쳤다.

5백 7십 만개의 전화가 새로 설치되었고 전화망의 전산화는 1997년 말까지 완성될 것이다. 현재 신연방주에는 16개의 국립대학, 28개의 전문대학, 14개의 예술, 음악대학이 있으며 학생수는 이십만 팔천명이 넘는다(1989년에는 십 삼만 천명이었다).

1997년의 (신연방주의) 총생산의 실질적인 성장률은 1.6%다. 신연방주의 성장률이 처음으로 서독의 성장률보다 낮았다(서독 2.2%). 전체 산업 중에서 가공업의 성장이 가장 두드러졌다. 그러나 가공업이 (신연방주의)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6%이다(서독의 경우 27%). 전년도에 가공업 생산이 약 9% 성장하였고 주문량은 12% 증가하였다.

경제지원 정책과 인프라의 구축 확장 그리고 일반적인 생활조건의 개선을 위해 소요될 비용은 약 520억 마르크로 추정된다.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내용_

연방의회에서 통일과 관련된 다른 여러 주제들과 함께 신연방주의 경제건설의 기본원칙에 관련된 제안들이 논의되었다.

- 사민당 제안 : 신연방주 경제건설 개념의 새로운 모색(의사일정 6a)
 - 민사당 제안 : 신연방주를 위한 고용과 교육정책의 즉각적인 프로그램(의사일정 6b)
 - 녹색당의 제안에 대한 경제상임위원회의 의결추천 및 보고 : 신연방주를 위한 새로운 기회(의사일정 6g)
 - 기민당/기사당, 자민당 제안 : 신연방주를 위한 성장정책과 고용정책의 지속(추가일정 5)
- (이 총회의에서는 그 외에 통일과 관련된 사안들이 논의되었다 : 신연방주의 농업의 구 동독 채무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 및 그와 관련된 다른 의사일정들; 민사당의 제안-소련군 점령기간 동안 점령군의 결정으로 몰수된 재산의 반환 불가; 민사당 제안-동독의 국가 재산을 통일 조약에 상응하게 사용할 것).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내용_

연방정부는 연방의회에서 8쪽의 '동부 재건의 우선'이라는 제목의 전망보고서에 관해 설명하였다.

연방정부는 동부 재건이 절대적으로 우선순위를 가진다는 정책을 고수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은 연방예산과 연방정부가 관리하는 유럽재건 프로그램을 통해 마련한다. 이 정책의 기본적인 입장은 다음과 같다 :

- 신연방주의 경제가 경쟁력을 갖고 자기 힘으로 주민들에게 고용기회와 충분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경제정책의 우선적인 목표이다.
- 일자리를 창출하고 보장하는 것은 산업의 기반이 확대되고 생산성이 증가될 때에만 가능해진다. 그것은 무엇보다 기업가의 과제이다. 그런 의미에서 임금협상의 당사자들 또한 생산성에 부응하면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임금협약을 체결해야만 한다.
- 연방정부는 투자와 혁신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지원과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동부 재건을 지속적으로 도와줄 것이다.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내용_

연방의회는 총회의에서 통일 관련 다른 주제들과 함께 독일 통일 현황에 관한 연방정부의 1998년 연례보고서에 관해 토론하였다.

- 연방정부의 전망보고서 “동부 재건 우선”(의사일정 17a)
-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연례보고서(의사일정 17b)
- 경제상임위원회의 의결추천 및 보고 : 기민당/기사당, 자민당의 제안 “신연방주를 위한 성장정책과 고용정책의 지속”; 사민당 제안 “신연방지역을 위한 경제건설 개념의 새로운 모색”; 민사당 제안 “신연방주를 위한 고용과 교육정책의 즉각적인 프로그램”(의사일정 17e)
- 민사당의 질문 : “신연방지역의 상황에 대해”(의사일정 17f)
- 녹색당의 제안 : 정치적 개선을 통한 동부 재건의 전진(추가일정 8)

(총회의에서 논의된 통일과 관련 사안 : 기민당/기사당, 자민당-“미약한 대금지불 의식의 개선”; 리테, 바아, 브라우네 의원의 제안-“신연방주 생산품의 판매시장 개척지원”; 사민당 제안-상업에서 대금지불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문서 번호 41 조직령 : 연방정부의 신연방주 특임관 임명
 1998년 10월 27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수상

내용_

(제목 참조)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문서 번호 42 대정부 질의 : 1998년 12월 16일의 작센 정부와 “신연방주” 내각위원회의 회의
 1998년 12월 9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내용_

연방정부의 신연방주 특임관 롤프 슈바니츠(사민당)의 입장표명 :

수상이 앞으로 두 달에 한 번씩 신연방주를 방문하여 주정부의 대표들과 만날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러한 모임에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지역의 문제, 특히 경제상황과 노동정책의 상황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첫 모임은 작센 주정부와의 모임이 될 것이다.

이 모임은 1998년 12월 16일 드레스덴에서 열릴 것이다.

총회의에서 이 주제에 관한 토론이 있었다.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원내 기민당/기사당

내용_

기민당/기사당은 연방의회에 “동부 재건 이제는 제대로 하기” 제안을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민당과 게어하르트 슈뢰더 수상은 동부 재건을 최우선적인 과제로 삼겠다고 약속하고 그에 필요한 미래 프로그램을 실천에 옮기겠다고 약속하였다.
- 이 약속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동부 재건을 힘있게 밀어부칠 동력을 주거나 방점을 찍은 그들의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 그렇기 때문에 연방정부가 이제는 계획된 또는 현재 준비 중인 연방예산법과 조세법에 동부 재건을 지속하고 동서 지역의 생활수준을 조속히 동등한 수준으로 만들 수 있는 정책의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그를 위해 연방정부 내에서 필요한 협력을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문서
번호 44

민사당 제안 : 신연방지역의 생활수준을 (서독과) 동등하게 만들고 법 안정성을 향상하기 위한 로드맵-“신연방지역 관련 정책을 수상의 책임 하에”

1999년 6월 24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원내 민사당

내용_

민사당은 연방의회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제출하였다 : ‘신연방지역의 생활수준을 (서독과) 동일하게 향상시키고 법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로드맵’-“신연방주 관련 정책을 수상의 책임 하에”

통일된 지 10년이 지난 후에도 신연방지역의 문제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독일 연방공화국 연방구조의 지방분권주의원칙에 따라 더 많은 권한이 연방에서 신연방주와 지자체로 위임되어야만 했다. 그런 상황에서 신연방지역에서의 “공정성과 발전”을 위한 파이롯 프로젝트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프로젝트의 중점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

- 지역경제의 순환과 지역 아젠다를 위한 모델 창조
- 고용정책의 지역화
- 주 차원의 사회-친환경적 신연방주 변혁을 위한 혁신 프로그램 개발
- 신연방지역에서 소유권 보장과 다양한 양식의 소유권을 동등하게 지원
- 지자체 재정능력의 강화, “사회적 친환경적 공동체 과제”를 위한 기금 또는 신연방지역 혁신은행 설치
- 정치 결정구조의 민주화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원내 기민당

내용_

민사당은 연방의회에 ‘동부 재건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제안을 제출하였다. 그 중점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630 마르크-일자리”와 “위장 자영업자”에 관한 법의 정지
- 소득세 개혁을 앞당기고 영업소득세를 폐지
- 독일 통일 교통프로젝트를 신속히 진행하고 지금까지 계획된 정책들을 실현할 것
- 창업자, 수공업자와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의 복잡한 신청절차를 간소화
- 의도적으로 대금의 지불을 늦추는 것은 자본구조가 허약한 신연방지역의 기업에게는 존재를 위협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비양심적인 대금지불 지연을 저지해야 한다.
- 신연방지역에서 지불하는 특별 주거비수령권을 상향 조정된 전 독일의 주거보조비로 대치
- 구조 취약지역, 유럽연합의 최외곽 국경 지역에 접경지역 지원금과 같은 특별조치를 통해 발전기회를 제공
- 농업분야에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거나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재산은 회계에서 제외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문서
번호 46

총회의 토론 : 동부 재건(외)
1999년 9월 9일

담당자 / 기관_ 연방회의

내용_

연방의회는 총회의에서 통일과 관련된 다른 주제들과 함께 동부 재건과 관련된 다양한 사안들을 토론했었다 :

- 기민당/기사당 제안 : ‘동부 재건 이제 제대로 하기’(의사일정 9a)
- 민사당 제안 : 신연방주의 생활수준을 (서독과) 동일하게 향상시키고 법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로드맵-“신연방지역 관련 정책을 수상의 책임 하에”(의사일정 9c)
- 사민당, 녹색당 제안 : 신연방주의 경제적 강화 ‘독일 통일의 구현을 위한 전제조건’(의사일정 9d)
- 자민당 제안 : ‘동부 재건은 지속되어야 한다’(추가일정 5)

(총회의에서 논의된 그 외에 통일과 관련된 사안들 : 기민당/기사당 제안-전국적인 전기세 동일화-신연방지역에서의 새로운 전기세 정지; 자민당 법 발의안-‘교통계획 촉진법의 개정 에 관한 두 번째 법’; 자민당 제안-‘독일 통일 교통 프로젝트가 신속히 실현되어야’)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내용_

연방정부는 연방의회에서 100쪽에 달하는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1999년 연례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독일 통일의 실현은 단순한 재정적 도움과 경제성장을 넘어서는 문제이다. 내적 통합은 감정적 기반과 공동체 의식 그리고 사회적 책임감도 필요로 한다.

소련군 점령기간 그리고 동독 시절의 역사와 분단독일의 역사를 청산하는 작업은 장기적인 과제이다.

1만 1천명의 군인과 5만명의 인민군 군속들이 (새로운 체제로) 통합되었다. 신연방주 출신의 40만명 병역의무 대상자들이 연방군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였다.

1999년 3월 26일 베를린에서 유럽회의의 각 국 정상들에 의해 결정된 “아젠다 2000”은 농업정책과 구조정책의 개혁 그리고 (유럽연합의) 자체세원에 대한 규정의 개정을 포함하였다.

1999년 동부 재건을 위한 중요한 축 : 혁신, 연구 그리고 발전의 지원을 위해 32억 마르크; 지역경제 지원을 위해 26억 마르크; 인프라 지원을 위해 189억 마르크; 노동지원을 위해 137억 마르크; 구 동독과 신탁청의 채무 변제를 위해 16억 마르크; 특별수요를 위한 연방정부의 추가비용 140억 마르크. 1999년의 연방예산에서 동부 재건을 위해 지출된 총 비용은 400억 마르크였다.

동독으로부터 물려받은 채무부담을 상환하기 위해 1995년 1월 1일부터 채무상환기금의 후속기관으로서 상속채무상환기금이 연방특별기금으로 도입되었다. 이 기금의 부채의 최고 수준은 2002년 경에 약 3천 6백억 마르크가 될 것이다. 1998년 말의 부채 상황은 채무상환기금에 진 부채 1,127억 마르크; 새로이 융자받거나 동독의 부채로 인해 신탁청에 진 부채와 신탁청 관리 기업에 대한 장기채무 총 2,044억 마르크; 구 부채상환법에 따르면 동독의 주택건설회사의 부채는 84억 마르크였다.

신연방주의 일인당 납세액은 서독의 구연방주에서보다 훨씬 적다. 신연방주의 정부가 자체 세입을 통해 예산을 충당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져서 1998년에는 약 42%가 되었다 (서독의 구연방주 68%).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문서
번호 48

민사당의 질의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변 : 신연방주에서의 내각회의 결과
1999년 10월 28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민사당

내용_

(제목 참조)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문서
번호 49

동부 재건에 관한 다양한 제안들에 대한 의결추천 및 보고
1999년 11월 10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신연방주 상임위원회

내용_

(제목 참조)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내용_

연방의회에서 통일과 관련된 주제들과 함께 동부 재건에 관한 다양한 사안이 토론되었다.

-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수상의 정부설명(의사일정 3a)
-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1999년 연례보고서(의사일정 3b)
- 기민당/기사당 제안 :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연례보고서의 지속(의사일정 3c)
- 신연방주 상임위원회의 의결추천 및 보고 : 녹색당의 제안-‘신연방주의 경제력 강화-독일 통일의 구현을 위한 전제조건’; 기민당/기사당 제안-동부 재건 이제 제대로 하기; 자민당 제안-‘동부 재건 지속해야’; 민사당 제안-‘신연방주의 생활수준을 (서독과) 동일하게 향상시키고 법적 투명성을 향상하기 위한 로드맵’-“신연방주 관련 정책을 수상의 지도 하에”(의사일정 3d)

(총회의에서 토론된 통일과 관련한 그 외의 다른 사안들 : 기민당/기사당 제안-독일 통일 교통 프로젝트 8호 뉴른베르그-에어푸르트-할레/라이프찌히-베를린 철도 건설의 실현; 자민당 제안-독일 통일 교통 건설 프로젝트가 조속히 실현되어야 한다.)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문서
번호 51

사민당과 녹색당의 제안 :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보고의 지속
1999년 11월 30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원내 사민당과 녹색당

내용_

사민당과 녹색당은 연방의회에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보고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제안을 하였다.

이 제안은 연방정부가 독일 통일 현황에 관한 보고를 1999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지속할 것을 요구한다. 이 보고서는 매년 가을 독일 통일 기념일에 연방의회에서 토론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문서
번호 52

독일 통일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1999년 연례보고서에 대한 의결추천 및 보고
2000년 1월 28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신연방주 상임위원회

내용_

신연방주 상임위원회는 사민당과 녹색당이 제안한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보고를 1999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지속하자는 안에 동의하였다.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문서
번호 53

신연방지역의 현황과 발전에 관한 민사당의 질문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변
2000년 1월 31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연방의회 원내 민사당

내용_

연방정부는 신연방지역의 현황과 발전에 대한 133개의 (예를 들어 동독 재산의 가치, 여성 지원, 도로와 고속도로의 건설 등) 개별 질문이 포함된 민사당의 질의에 대해 132쪽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문서
번호 54

신연방지역 현황과 발전에 관한 민사당의 질문의 심의에 대한 기민당/기사당의
의결제안

2000년 3월 15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원내 기민당/기사당

내용_

(제목 참조)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문서
번호 55

신원방지역 현황과 발전에 관한 민사당의 질문의 심의에 대한 민사당의 의결제안
2000년 3월 15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원내 민사당

내용_

(제목 참조)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문서
번호 56

총회의 토론 : 신원방지역 현황과 발전에 관한 민사당의 질문에 대한 심의
2000년 3월 16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내용_

연방회의는 민사당의 질의 '신원방지역의 발전에 관해'에 대해 토론하였다.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문서
번호 57

민사당의 질의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변 : 연방정부의 신연방주 특임관의 활동
결과

2000년 4월 13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원내 민사당

내용_

(제목 참조)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문서
번호 58

총회의 토론 :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1999년 연례보고서

2000년 5월 19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내용_

연방의회에서는 통일과 관련된 다른 주제들과 함께 독일 통일 현황에 관한 연방정부의 1999년 연례보고서에 관해 논의하였다.

신연방주상임위원회의 의결추천 및 보고 :

-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1999년 연례보고서에 대해
- 사민당과 녹색당의 제안에 대해 :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보고를 지속할 것
- 기민당/기사당 제안 :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연례보고서의 지속 (의사일정 15a)
(그 외에 통일에 관해 논의된 사안들 : 기민당/기사당 제안-투자지원 지속-지역 경제구조 강화; 기민당/기사당 제안-전국적인 전기세의 동일화-신연방지역의 새로운 전기세 정치; 기민당/기사당 제안-신연방주에 기술지향적 기업 창업에 대한 지원 지속; 민사당 제안-기술 지향적 기업창업에 대한 장려와 지원은 (FOTOUR) 필요에 맞춰서 발전되어야 한다)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문서
번호 59

기민당/기사당의 질문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변 : 신연방지역을 위한 집중적인
지원정책

2000년 9월 22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원내 기민당/기사당

내용_

(제목 참조)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원내 녹색당

내용_

사민당과 녹색당은 연방의회에 '독일 통일 10년'의 제목 하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였다_

- 연방의회는 동부와 서부의 독일인을 위한 발전이 전체적으로 아주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신연방지역의 독일인의 생활 수준이 1990년 이후 분명히 개선되었다(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한 현황).
- 연방의회는 연방정부가 동부와 서부 독일의 생활수준을 동등하게 만들고 실업률을 감소하며 장래성이 있는 경제구조, 국제적인 수준의 교육과 연구환경, 건설한 인프라를 발전시키고 민주적 문화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노력들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내용

연방의회는 통일에 관한 다른 주제들과 함께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1999년 연례보고서에 관해 토론하였다 :

연방정부는 2000년의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96쪽의 연례보고서를 통해 연방의회에 보고하였다.

독일 통일 10주년을 기념하여 (통일과 관련된) 중요한 단계와 사건들 그리고 통일의 전반적인 흐름을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전년도의 (설문조사에서) 신연방지역의 주민의 약 절반이 통일이 이익이 되었다고 보았고, 약 40%는 잘모르겠다 그리고 15%만이 개인적으로 손해를 보았다고 평가하였다.

1999년에는 신연방지역에서 평균적으로 약 134만명이 실업자로 등록하였다. 신연방주에서의 실업률은 1998년의 18.2% 에서 1999년에는 17.6%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 비율은 서독과 비교하였을 때 아직까지도 두 배가 높은 것이다.

1992년 신연방주의 총경제 성장률은 2.0%로 서독의 경제성장률 2.8%에 비해 또 다시 낮은 수치를 보였다. 그러나 1999년의 신연방지역의 총 생산의 성장률은 구연방주에 비교해 거의 뒤지지 않는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1999년에는 (신연방주에) 9만 2천개의 회사가 창업되었다. 파산하는 회사의 숫자 또한 약 8만 5천개로 약간 감소하였다.

17개의 독일 통일 교통 프로젝트에 총 690억 마르크의 투자금액이 들어갈 것이다. 그 중 1999년 연말까지 330억 마르크의 투자금이 지출되었다.

주택공급의 개선은 특히 유리해진 조세정책 280억 마르크에 달하는 구 채무의 부분적인 면제, 재건은행을 통한 790억 마르크에 달하는 금액을 저렴한 이자의 융자금으로 지불한 것 그리고 80억 마르크의 사회적인 주택건설 지원금 등이 함께 작용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갈탄지역의 조건 개선을 위해 1999년에 11억 마르크가 사용되었다. 갈탄지역의 조건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이 시작된 1991년 이래 연방정부와 주들이 지불한 금액이 약 100억 마르크이다.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문서
번호 62

통일 10년 이후 통합과정의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입장을 제출하기를 요구
하는 민사당의 의결제안

2000년 9월 27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원내 민사당

내용_

(제목 참조)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문서
번호 63

기민당/기사당 제안 : 독일 통일 10년

2000년 9월 29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원내 기민당/기사당

내용_

(제목 참조)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문서
번호 64

총회의 토론 : 통일 10년 후 통합과정의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입장 제출
2000년 9월 29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내용_

연방의회는 통일에 관한 다른 주제들과 함께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2000년 연례보고서에 대해 토론하였다.

- 통일 10년 후의 통합상황에 관한 정부의 설명 제출(의사일정 16)
- 연방정부의 보고 :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2000년 연례보고서(추가일정 8)
- 사민당 녹색당의 제안 : 독일 통일 10년(추가일정 9)

(통일과 관련되어 토론된 다른 사안들 : 자민당 법 발의안 : 국경과 장벽의 토지를 이전의 소유자에게 판매하는 것에 대한 법의 개정을 위한 법 : 민사당 : 구 동서독 국경지역의 토지와 건물의 반환 : 동독 비밀경찰 서류 담당관의 선출)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문서
번호 65

총회의 토론 : 동부 재건을 위한 연방정부의 계획
2001년 2월 8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내용_

연방의회는 신연방주의 상황에 대한 사민당 내의 논란과 관련해 동부 재건에 대한 연방정부의 계획에 대해 토론하였다.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문서
번호 66

기민당/기사당 제안 : 독일 2015년 : 현대적인 독일을 위한 모범으로서의 동부
재건

2001년 5월 15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원내 기민당/기사당

내용_

기민당/기사당은 연방의회에 ‘독일 2015년-현대적 독일을 위한 모범으로서의 동부 재건’
이라는 제안을 제출하였다.

- 경제와 연구 중심지 신연방주의 강화-자립적인 경제발전 기반 마련
- 인프라 개선-높은 생산성을 달성하기 위한 기반 마련
- 교육정책-항상 배우는 사회를 목표로 인지
- 도시재건을 촉진-비어 있는 주택의 수를 감축
- 농업경제적 구조 유지-친환경적 개선을 위한 기회로 이용
- 노동시장과 임금정책-현지의 조건에 맞춤
- 공공기관 근무자의 급여와 공무원 월급 그리고 프리랜서에 대한 사례비 수준을 동등하게 개선-신연방지역에 대한 특별규정 폐지
- 자립, 지역화 그리고 더 많은 투명성-신연방지역에서의 연방주의 개혁을 위한 작업 착수
- 시민사회에 대한 기여로서 행정의 현대화
- 기억의 문화
- 유럽연합의 동유럽으로의 확대-독일 동부의 연방주들이 유럽의 중심
- 연대협약 II와 연방주 간의 균형재정배분에 관한 협상을 종결-신연방주들이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전망을 제시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2001년 5월 16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원내 자민당

내용_

자민당은 연방의회에 '신연방주의 장래를 위한 적극적 투자를 시작-인구유출 중지-동부 재건을 위한 10 포인트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이 제안을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 교통 인프라 구조 확장
- 학술연구의 인프라 확장
- 젊고 능력있는 인재의 유출 중단
- 중소기업정책이 노동정책이다
- 창업자를 위한 더 좋은 기회
- 주택건축과 재산형성을 더욱 강력하게 지원
- 현대적인 전일제 보육시설 지원
- 법률체계의 강화
- 접경지역을 위한 정책 제시
- 연대협약 II와 연방주 간의 균형재정배분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문서
번호 68

총회의 토론 : 독일 통일 현황에 관한 연방정부의 2000년 연례보고서
2001년 5월 17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내용_

연방의회는 총회의에서 통일 관련 다른 주제들과 함께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2000년도 연례보고서에 관한 논의하였다.

- 기민당/기사당 제안 : 신연방지역을 위한 집중 지원 정책(의사일정 4a)
- 기민당/기사당 제안 : 독일 2015년-현대적인 독일을 위한 모범으로서의 동부 재건
- 연방정부의 2000년도 연례보고서에 대한 신연방주 상임위원회의 의결추천 및 보고
- 자민당 제안 : 신연방주의 장래를 위한 적극적 투자를 시작-인구유출 중지-동부 재건을 위한 10 포인트 프로그램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민사당의 제안 : 신연방지역과 서부독일의 납세자들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전망의 보장

2001년 6월 28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원내 민사당

내용_

민사당은 '신연방주와 서부독일의 납세자들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전망의 보장'이란 제목의 제안을 연방의회에 제출하였다. 여기서 민사당은 2005년에 연대협약 II와 연방주 간의 균형재정배분이 시작될 때까지 연방정부가 재정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경제 프로그램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였다. 그 프로그램의 목표는 신연방지역과 구연방지역이 경제적으로 더욱 격차가 벌어지는 것과 그것이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고 신연방지역의 발전을 구연방지역의 수준으로 올리는 과정의 속도를 촉진하는 것이다. 그 중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신연방지역에서의 혁신과 투자 그리고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구상과 경제 지원 그리고 노동시장 지원을 결합시킨다
- 신연방지역의 노동, 생산주문 그리고 지역의 기업을 선호하는 기업유치를 위한 연대행동을 결성. 연대의 파트너는 연방, 주, 은행과 기업이다.
- 지자체의 투자를 위한 총액제를 부활
- 신연방지역의 농업이 지역의 경제순환구조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보장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문서
번호 70

총회의 토론 : 신연방주와 서부독일의 납세자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전망의
보장

2001년 7월 5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내용_

연방의회는 민사당이 2001년 6월 28일에 제안한 '신연방주와 서부독일의 납세자들을 위
해 신뢰할 수 있는 전망의 보장'에 관해 논의하였다.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내용_

연방정부는 88쪽의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2001년도 연례보고서를 연방의회에 제출하였다 : 신연방주에서 건설에 집중되었던 경제구조가 이제 산업생산에 의해 주도되는 구조로 변동되고 있다. 독일 통일 이후 약 530,000개의 새로이 창립된 회사가 시장에서 살아 남았고 그 중에서 110,000개가 수공업분야에서 창립되었다. 신연방지역의 총생산을 보면 경제활동인구 1인당 총생산의 수준이 1991년에 구연방주 수준의 34%였다가 2000년에는 68%로 상승하였다. 생산성의 증가율은 1998년에 1.6%로 2.3%를 기록한 구연방주보다 낮았지만, 이제는 다시 상승하고 있다. 2000년에 신연방주의 생산성 증가율은 2.1%였다 (구연방주 0.7%). 제조업의 경우 총 자산가치 증가는 2000년에 8.3%로 5.6%를 기록한 구연방주보다 훨씬 높았다. 제조업 종사자는 1999년과 비교해서 2.9%이 증가하여 613,000명이 되었다. 신연방지역의 임금이 구연방지역의 임금과 동등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작업은 지속되었다. 지난 5년 동안의 수출성장률은 1995년의 11.8%에서 2000년의 21.2%로 거의 두 배가 되었다.

자동차산업이 신연방지역의 경기를 주도하는 분야로 발전하였다. 자동차 생산업체들과 납품업체들은 1991년부터 신연방지역의 새로운 생산기지에 100억 마르크 이상의 금액을 투자하였다. 현재 신연방주들 간에는 경제발전의 차이를 거의 측정할 수가 없다. 그러나 각각의 신연방주 내의 지역적인 차이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구연방주에서와 유사하게 신연방주에서도 경제성장의 중심지역이 형성되고 있다.

접경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 경제지원의 틀 내에서 (“지역경제구조 개선”을 위한 공동과제) 신연방지역의 접경지역, 메클렌부르크 포어포메른, 브란덴부르크와 작센주는 2001년에 총 219억 마르크를 지원받았다. 그리고 추가로 유럽연합의 구조기금으로 2000년에서 2006년까지 238.6억 마르크를 지원받을 것이다.

연방정부는 새로이 시작한 “신연방지역 도시 재건” 프로그램으로 주택과 도시건설 지원 정책을 완성하였다(2002년에서 2009년까지 21.8억 마르크). 1999년에서 2002년 사이에 교통 인프라를 위한 투자 프로그램의 틀에서 사용되는 금액의 약 59%가 신연방주의 국도를 건설하는데 사용되었다.

신연방주는 분단으로 인해 개발되지 못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2005년에서 2019년까지 총 3,060억 마르크의 지원금을 받게 될 것이다. 연대협약 II를 통해서 지원되는 금액 외에 연방정부가 2,060억 마르크를 특별수요지원금으로 지급할 것이다. 이 금액의 사용 방안에 대해서는 연방정부가 자기 책임 하에 결정하게 된다.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문서
번호 72

자민당 의결제안 :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2001년 연례보고서
2002년 1월 30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원내 자민당

내용_

(제목 참조)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문서
번호 73

총회의 토론 :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2001년 연례보고서에 관한 연
방정부의 보고
2002년 1월 31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내용_

연방의회는 통일 관련 다른 주제들과 함께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2001년 연
례보고서에 관해 논의하였다.

-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2001년 연례보고서에 대한 심의(의사일정 2a)
- 녹색당 제안 : 신연방지역 경제의 수출과 시장을 강화; 기민당/기사당 제안 : 해외 수
출 기회를 이용-동유럽 시장의 활용을 강화(의사일정 2b)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문서
번호 74

민사당 제안에 대한 의결추천 및 보고 : 신연방지역과 서부독일의 납세자들을 위
해 신뢰할 수 있는 전망의 보장

2002년 3월 18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신연방주 상임위원회

내용_

(제목 참조)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문서
번호 75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2001년 연례보고서에 대한 의결추천 및 보고

2002년 3월 19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신연방주 상임위원회

내용_

(제목 참조)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문서
번호 76

총회의 토론 :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2001년 연례보고서; 기민당/기사당 제안-독일 2015년-현대적 독일을 위한 모범으로서의 동부 재건

2002년 3월 22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내용_

연방의회는 통일관련 다른 주제들과 함께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2001년 연례보고서에 관해 논의하였다 :

-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2001년 연례보고서와 기민당/기사당의 제안 '독일 2015년-동부 재건을 현대화된 독일을 위한 모범으로'에 대한 신연방주 상임위원회의 의결추천 및 보고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내용_

연방정부는 연방의회에 120쪽의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해 2002년 연례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최근의 엘베강 홍수는 통일 이후 지난 12년 동안 그리고 그 이전에 이루었던 성과의 많은 부분을 며칠 사이에 파괴하였다. 연방정부는 곧바로 약 5억 유로의 즉시지원-프로그램과 12가지 사안의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2002년 8월 19일 특별 내각회의는 전체 지원사업을 위한 재정규모를 약 100억 유로로 결정하였다. 그를 위해서 2004년 1월 1일 실시될 예정이던 2차 세계개혁이 1년 연기되고 법인세를 2003년 1년에 한해 1.5% 인상하여 26.5%로 조정하였고, 유럽연합의 구조기금에서 나오는 재원 중에 사용되지 않은 부분을 활용하고 교통예산을 조정할 것이다.

1998년 연방정부의 정권이 교체되면서 이루어진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분석은 동부 재건이 몇 년 안에 완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세대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라고 확실히 밝혔다. 그것은 통일 직후 널리 퍼졌던 신속한 동부 재건에 대한 가정이 환상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나아가 아젠다 2000에 관한 유럽 연합 회원국들과의 협상의 틀 내에서 신연방주가 2000년에서 2006년 사이에도 유럽 지역정책에서 최우선 순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세개혁을 통해 일반 가구와 기업이 2005년 말까지 매년 약 560억 유로의 부담을 덜게 될 것이다. 게다가 친환경적인 조세개혁으로 연금가입비가 2002년에 추가 장치가 없었을 때보다 1.5% 낮았다.

신연방주에서 교통분야에 대한 투자의 무게추는 총 규모가 350억 유로인 (2001년 말까지 약 205억 유로 투자) 독일 통일 교통 프로젝트이다.

연방정부는 2002예산연도에 신연방주와 베를린을 위해 “지역 경제구조의 개선”이라 불리는 공동과제의 틀에서 8억 6천 8백 5십만 유로, 그리고 7억 5천 1백만 유로에 대한 지불보증을 제공하였다. 이런 지원금의 규모는 연방주들이 재정적인 기여를 하면서 두 배로 증가하였다.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문서 번호 78 조직령 : 연방정부의 신연방주 특임관직의 연방교통부로 이임
2002년 10월 22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수상

내용_

(제목 참조)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문서 번호 79 총회의 토론 :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2002년 연례보고서에 관한 연
방정부의 보고
2003년 1월 16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내용_

연방의회는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2002년 연례보고서에 대해 논의하였다.

출처 :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내용_

연방정부는 연방의회에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2003년 연례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연례보고서에서 연방정부는 2000년에 연방의회에서 의결한 사안, 즉 동부 재건의 지원과 관련되어 실행된 정책과 중요한 정치분야에 대해 정기적으로 자세한 설명을 제출하라는 결정을 실천에 옮겼다.

신연방주와 지방을 위한 노력은 장기적인 지역정책이며 구조정책이다. 그 목표는 지역 발전의 역동성 강화-지역 간의 상이한 발전기회를 균형있게 조정-지속적인 지역 발전을 위한 틀을 목표로 합당하게 개선한다는 의미의 공간정책-상이한 정치영역을 서로 맞물린 지역 정책을 위한 아이디어가 될 수 있도록 통합

동부 재건을 위한 지원장치가 다음과 같은 지원 중점 사안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작년에 새로 만들어졌다 : 투자지원-혁신지원-인프라 확충과 교육과 “노동시장에 처음 참가할 수 있는 교량”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통한 노동시장정책

유럽연합의 확장은-2004년 5월 1일자로 유럽연합에 10개국이 새로이 가입-동부 재건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그것은 우선 신연방지역을 유럽연합의 변경지역에서 거대한 유럽 내수시장의 중심지로 만들 것이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동력을 가져올 것이다.

2002년의 엘베강과 도나우강의 홍수 피해를 제거하기 위해 도입된 “홍수” 특별 프로그램은 특히 농촌지방의 인프라의 재건도 지원하였다. 나아가 2002년에 즉각적인 조치를 위해 “농업구조와 해안보호 공동과제를 위한 연방재원”(BAK Bundesmittel)에서 2천 1백 9십만 유로가 해당 신연방주에 지원되었다. 이를 통해 브란덴부르크주가 2백 1십만 유로, 작센이 1천 2백만 유로 그리고 작센-안할트주가 7백 8십만 유로를 받았다. 이 사업들은 2003년부터 “건설보조기금”을 통해 연방정부가 3억 2천만 유로, 주정부가 2억 유로 그리고 유럽연합에서 5천 유로 재정을 제공받았다.

투자지원의 중요한 사업으로는 현재 “지역 경제구조 개선”과 투자보조금 프로그램이 있다. 이런 프로그램은 낮은 이자의 융자와 재건은행과 독일형평은행 (Deutsche Ausgleichbank)이 통합되어 만들어진 새로운 중소기업은행이 제공하는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보완되었다.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문서
번호 81

총회의 토론 :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2003년 연례보고서
2003년 10월 16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내용_

연방의회는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2003년 연례보고서에 대해 논의하였다.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원내 기민당/기사당

내용_

기민당/기사당은 연방의회에 “신연방지역에 미래를 주라”라는 제목의 제안을 제출하였다. 이 제안을 통해 연방정부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행하라고 요구하였다 :

- 연대협약 II의 틀에서 2019년까지 신연방주에 지원하기로 한 금액 1,560억 유로에 대해서 더 이상 이익을 제기하지 않을 것
- 유럽차원의 구조정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유럽연합과의 협상을 통해 신연방주들이 2007년에서 2013년까지 “지원대상-1-그룹”으로서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영향력 행사
- 경제성장을 위한 클러스터를 만들고 강화할 수 있는 지원전략을 개발
-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발전을 간과하지 말 것
- 소위 말하는 특별 경제구역에 대한 소모적인 논의를 종결하고 대신 신연방주에 지금보다 훨씬 넓은 행동반경을 보장할 것
- 신연방지역에서 생산성, 실업률 그리고 노동시장의 수요에 맞는 임금을 지급하도록 허용
- 유럽연합의 확장과 관련 중요한 교통 프로젝트의 경우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명시하고, 유럽연합의 특별 프로그램 “유럽 통합 교통 프로젝트”라고 규정
- 신연방지역의 기업환경의 특성에 더 적합하도록 맞춘 연구지원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원내 자민당

내용_

자민당은 연방의회에 “신연방주를 변동의 최첨단으로-신연방주를 위한 총체적인 지침”이라는 제안을 제출하였다; 이를 통해 연방정부가 다음과 정책을 시행하기를 요구하였다 :

- 동부 재건을 위한 전체적인 계획의 작성
- 연방주의 자율결정권을 허용하는 조항을 동원하여 건설임금협상 노동법에 대한 연방법의 규정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방식으로 모델지역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다.
- 독일 통일 교통 프로젝트에 우선순위를 부여
- 연방과 주 차원에서 연구를 위해 공동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을 지속
- 비양심적인 대금지불 지연으로 인해 이자부담과 자금난을 겪어야 하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독일 전역에 적용되는 거래세를 책임량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에서 실질적인 거래량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
- 유럽연합 확장의 틀 속에서 접경지역이 된 지역을 위해 1994년까지 시행되었던 접경지역 지원법에 상응하는 규정을 도입할 것
- 유전자기술에 관한 법을 혁신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여 친환경적인 유전자기술의 잠재력을 충분히 이용할 것
- 환경보호와 자연보호, 소비자보호와 동물보호 부문에서 유럽연합의 지침을 따르는 과정에서 독일만의 특별한 길을 가는 것을 중시하고 수정하기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원내 사민당, 녹색당

내용_

녹색당은 연방의회에 “신연방지역의 지속적인 성장을 보장”이란 제안을 제출하였다 :
그 제안에서 녹색당은 연방의회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기를 요구한다 :

- 신연방지역의 지원정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2019년까지 지원하기로 합의한 연대협약 지원금 1,560억 유로를 승인
- 연방주위위원회의 결과를 고려하여 “지역경제구조의 개선”이라는 공동의 과제를 국가 경제지원의 효과적인 장치로 유지
그리고 연방의회가 연방정부에 다음과 같은 것을 요구하라고 녹색당은 제안하였다“
- 연방주들과 함께 기존의 강점과 발전잠재력을 우선적으로 지원
- 혁신지원과 연구지원에서 중점사안을 분명히 규정
- 중소기업 지원과 중소기업 재정보조를 행하면서 신연방지역 경제의 특수한 수요를 향상 주목할 것
- 전체 독일의 지속적인 과제로 관료주의를 축소하는 길을 계속 갈 것
- 한 지역의 특별한 강점과 잠재력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으로, 예를 들어 잘 구성된 친소비자적인 농업을 계속 지원하는 것과 같은 방법을 통해 구조가 취약한 지역의 발전을 도모
- 신연방지역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전략, 특히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 전략을 계속 유지할 것
- 이미 시작된 노동시장 개혁을 지속할 것
- 유럽연합의 구조정책을 결정할 때 2007년부터 최상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을 위한 공정한 과도기 규정을 적용하고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역에 집중하도록 영향력을 발휘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문서
번호 85

총회의 토론 : 신원방주에 미래를 부여(외)
2004년 5월 27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내용_

연방의회는 통일과 관련된 다른 주제들과 함께 동부 재건의 기본원칙에 관련된 다양한 제안을 논의하였다 :

- 기민당/기사당 제안 : 신원방주에 미래를 부여(의사일정 5a)
- 녹색당 제안 : 신원방주의 지속적 성장의 보장(추가일정 3)
- 자민당 제안 : 신원방주를 변동의 최첨병으로-신원방주를 위한 총체적인 지침

(총회의에서 논의된 이 외에 통일관련 사안들 : 연방회의가 제출한 연방자연보호법의 개정을 위한 초안에 대한 2차와 3차 심의-자민당 제안 : 신원방지역 교통 프로젝트의 예산을 감축하지 말 것)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내용_

연방정부는 연방의회에 100쪽의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2004년 연례보고서를 제출하였다 : 신연방주의 전체 경제성장은 2003년에 전년도에 비해 0.2% 상승하였다. 이것은 구연방지역 보다 약간 높은 수치이다(2003:0.1%). 2000년 이래 처음으로 신연방지역과 구연방지역의 격차가 약간 좁혀졌다. (경제활동인구 일인당 총생산을 기준으로 하는) 생산성이 구연방지역의 수준에 74.6%에 달하였다.

관광산업의 성공 : 신연방주는 1992년에서 2003년 사이에 유럽연합과 연방정부 그리고 연방주들의 포괄적인 지원을 받아서 전 독일의 숙박객 중에서 신연방지역의 숙박 비중은 10.1%에서 20.2%로 높일 수 있었다.

신연방주의 지역자원을 잘 묶어서 대기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부족한 것, 특히 연구와 개발에 노력한다. 이를 위한 이니셔티브인 “지역 기업”은 네 개의 프로그램을 포함한다-이노레기오(InnoRegio), 혁신적인 지역 성장거점, 내일의 시장을 위한 지역 간의 연대, 그리고 혁신능력 배양을 위한 센터(혁신세포). 이 프로그램을 위해 2004년에 9천 8백만 유로가 지원되었고, 1999년에서 2007년 사이에 총 5억 5천만 유로가 계획되었다.

신연방주들은 2005년에서 2019년 사이 특별수요에 대한 연방보조금으로 총 1,050억 유로를 받을 것이다. 이로서 연방정부는 지금까지 매년 시행된 지원을 중단없이 이어갈 것이며 2005년의 지원금 금액은 약 105억 유로이다. 추가로 연방정부는 2005년에서 2019년까지-목표 금액으로-511억 유로를 초과지원 형태로 신연방주에 투입할 것이다.

유럽연합의 팽창으로 국경지역이 변경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이 가입한 국가들과의 연결고리로서 경제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독일의 국경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Interterr. III 기금을 통해서 지원되는 재원으로 이것은 국경을 넘어서는 경제적 사회적 “거점”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브란덴부르크와 작센주의 경우 이 프로그램을 통해 2000년에서 2006년 사이에 2억 2천 9백만 유로를 지원받았다.

연방교육부는 신연방지역의 교육과 연구를 위해 2003년에만 20억 2천만 유로가 넘는 금액을 지원하였다. 이 액수는 연방교육부의 전체 예산에 24.2%였다. 참고로 신연방주의 인구가 독일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20.8%이다.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문서
번호 87

기민당/기사당, 자민당 의결제안 :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2004년 연
례보고서

2004년 11월 9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원내 기민당/기사당, 자민당

내용_

기민당/기사당, 자민당은 의결제안을 제출_ 연방정부가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례보고
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규정에 대한 2000년 5월 19일의 연방의회의 의결사항의 효력이
2004년에 종료되므로 연방정부로 하여금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연례보고서를 제출하도
록 한다.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문서
번호 88

총회의 토론 :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2004년 연례보고서
2004년 11월 11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내용_

연방의회는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2004년 연례보고서에 관해 논의하였다.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문서
번호 89

신연방주의 장래와 관련된 다양한 제안에 대한 연방의회 교통건설주택상임위원
회의 의결추천과 보고

2005년 1월 20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교통건설주택상임위원회

내용_

(제목 참조)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문서
번호 90

총회의 토론 :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2004년 연례보고서(외)
2005년 3월 18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내용_

연방의회는 동부 재건에 관한 다양한 제안과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례보고서에 관해 논의하였다.

- 기민당/기사당 제안 : 신연방지역에 미래를 부여
- 자민당 제안 : 신연방지역을 변동의 최첨병으로-신연방주를 위한 총체적인 지침
- 연방정부의 보고서에 대한 기민당/기사당, 자민당의 의결제안 :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2004년 연례보고서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내용_

연방정부는 연방의회에 96쪽의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2005년 연례보고서를 제출하였다. 2005년 10월 3일은 독일 통일 15년이 되는 날이다. 이에 소위 말하는 동부 재건에 관한 짧은 중간 평가가 있었다.

2002년과 2004년 지난 3년 간 신연방주와 베를린을 위해 약 63억 유로의 규모로 공공이익을 위한 작업을 (Gemeinnuetzige Arbeit-Bewilligung) 지원할 수 있었다. 이 지원금을 포함하면 총 투자액이 약 264억 유로에 달하였다. 그를 통해 상업부문에서 6만 6천개의 정규직 자리가 (그 중 약 2만 1천개는 여성을 위한 자리) 만들어졌다. 2005년의 연방예산에 신연방주와 베를린을 위해 6억 5백만 유로의 현금재원이 확보되었다.

2004년 7월에 유럽연합의 행정부는 2007년부터 적용될 구조기금의 규정에 관한 초안을 만들었다. 이 초안에 따르면 2007년에서 2013년까지의 지원기간에 약 1,000억 유로의 재원이 추가되며 지원내용과 지원지역 또한 확대될 예정이다. 신연방주들의 많은 지역이 지원대상-제 1 구역으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에는 “농업구조와 해안보호를 위한 공동체 과제”에 대한 지원형태로 신연방주에 약 2억 1천 6백만 유로의 연방지원금이 지출되었다. 여기에 주 차원에서 추가로 제공한 액수를 포함하면 총 지원액이 약 3억 5천 6백만 유로이다. 이 프로그램을 위해 국가 단위에서 제공하는 재원에 유럽 연합의 재원이 또 추가된다. 유럽연합의 최대 매칭펀드법에 의해 지원대상 1구역인 신연방주의 경우 최대 75%까지 유럽연합에 의한 지원이 가능하며 그 결과 연방정부가 지원한 1 유로당 6 유로의 총지원금이 (유럽연합, 연방, 주) 신연방주를 위해 제공될 수 있었다. 2004년에 신연방주들은 “농업구조와 해안보호를 위한 공동체 과제”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 외에 유럽연합의 다른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구조기금을 통해 약 4억 7천만 유로를 지원받았다.

1991년에서 2004년까지 철도, 도로, 수로를 위한 연방예산과 지자체 교통재정법의 틀에서 총 1,540억 유로가, 그 중 600억 유로가 신연방주에 투자되었다. 2005년 3월 17일 연방수상이 정부연설을 통해 발표한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한 20억 유로 프로그램에서 신연방주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35%이다.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문서
번호 92

좌파 제안 : 연방의회에 신연방주와 다른 구조취약지역을 위한 상임위원회의 설치
2005년 12월 1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원내 좌파

내용_

(제목 참조)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문서
번호 93

총회의 토론 : 연방의회에 신연방주와 취약지역 상임위원회의 설치
2005년 12월 15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내용_

“연방의회에 신연방주와 다른 취약지역을 위한 상임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좌파의 제안에
대한 연방의회의 토론이 있었다.

이 제안은 연방의회 원로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하였다.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2006년 2월 15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원내 기민당/기사당, 사민당

내용_

기민당/기사당, 사민당(정부 여당)은 연방의회에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2005년 연례보고서에 대한 의결제안을 제출하였다. 연방의회가 의결할 사항은 :

- 연대협약 II에 신연방주 지원을 위해 계획된 지원금을 합의한 액수 1,560억 유로 승인
- 연방과 연방주 그리고 유럽연합의 재원의 사용을 최적화하여 신연방주의 성장기회를 개선
- 독일 통일 교통 프로젝트가 신연방주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신속하게 실현
- 신연방지역에서의 경제지원과 연구개발지원을 높은 수준에서 지속할 것
- 투자지원금을 현재의 수준으로 연장할 것
- 외국투자자에 대한 홍보를 위해 산업투자회 (IIC-Industrial Investment Council)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
-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협약을 앞으로도 유지할 것
- 연립정부의 구성을 위한 합의에 따라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 즉 신연방주들에게 제한된 기간 동안에 연방규정에서 벗어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해 주고 그를 위한 부처 간의 실무구역을 구성할 것
- 연방주와 함께 “미래의 지역”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
- 성공적인 신연방지역 도시재건과 사회적 도시 프로그램을 높은 수준에서 지속할 것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문서
번호 95

자민당 의결제안 :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2005년 연례보고서
2006년 2월 15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원내 자민당

내용_

자민당은 연방의회에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2005년 연례보고서에 관한 의결 제안을 제출하였다. 연방의회가 연방정부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하기를 요청하였다 :

- 동부 재건을 위한 전체적인 계획의 작성
- 연방주의 자율결정권을 허용하는 조항을 동원하여 건설임금협상 노동법에 대한 연방 법의 규정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방법으로 모델지역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다.
- 성장 클러스터를 확립하고 강화할 수 있는 지원전략을 개발할 것
- 5개 신연방주가 자체적으로 교육과 연구의 중점사안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줄 것
- 개발 취약지역을 간과하지 말 것(외)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문서
번호 96

좌파 의결제안 :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2005년 연례보고서
2006년 2월 15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원내 좌파

내용_

좌파는 연방의회에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2005년 연례보고서에 관한 의결제안을 제출하였다. 그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

- 사회정의와 노동, 투자와 혁신, 야만적인 시장의 팽창에 대한 정치적 통제력과 내수강화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정책
- 미래산업과 미래기업이 혜택을 보는 새로운 형태의 산업과 구조정책
- 신연방지역의 잠재력에 대한 배려의 강화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문서
번호 97

총회의 토론 :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2005년 연례보고서
2006년 2월 16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내용_

연방의회는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2005년 연례보고서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문서
번호 98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2005년 연례보고서에 대한 연방의회 교통건설주택상임위원회의 의결추천 및 보고

2006년 4월 6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교통건설주택상임위원회

내용_

(제목 참조)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문서
번호 99

의결추천 및 보고 : 연방의회에 신연방주와 취약지역상임위원회의 설치

2006년 4월 10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원로위원회

내용_

연방의회에서 신연방주와 취약 구조지역의 문제를 다루는 상임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좌파의 제안이 거부되었다.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좌파

내용_

연방정부는 좌파의 질의에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정부는 2005/2006년의 통계 : a.경제활동인구와 (여성/남성) 경제활동율; b. 실업자와 (여성/남성) 실업률; c. 인구; d. 인구당 소득; g. 국내총생산; i. 수출; o. 소비자 파산절차; q. 가능 교육훈련인원과 교육훈련비율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보고 : d. 25세 이하 인구; e. 유입되는 이민자와 유출되는 이민자 사이의 차; h. 제조업의 매출액; j. 특허등록; k. 경제활동인구 중 연구 개발 종사자의 비율; l. 창업수; m. 기업 파산; n. 과도한 부채를 안고 있는 가계; p. 각 사회계층에 따라 분류한 순자산

위의 언급된 수치의 변화는 기본법 72조 2항에 (독일 전역에서 동일한 생활수준을 보장할 의무) 의거 신연방주에 대한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문서
번호 101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2006년 연례보고서에 대한 연방의회에서의
대정부 질문

2006년 9월 27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연방정부

내용_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2006년 연례보고서에 대한 연방의회의 질의시간에 연방 교통건설도시개발부의 (신연방주 특임관이 소속) 입법 차관인 울리히 카스파릭이 5분여의 도입설명을 하고 난 후에 의원들의 (15개) 질의에 응답하였다 .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내용_

연방정부는 연방의회에 100쪽의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2006년 연례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신연방주에 대한 체계적이고 충분한 지원에 힘입어 연방정부는 이번 임기 내에 인프라 개선과 신탁청 후속기관들의 처리해야 하는 문제들도 거의 해결을 넘어서 다음과 같은 일곱 개의 활동영역을 중점사안으로 만들 것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

1. 투자유치 개선, 2. 중소기업 지원, 3. 연구와 개발에 더 많은 투자, 4. 노동시장을 위한 노력을 지속 강화, 5. 지역경제의 성장을 위한 연대의 지원과 성장중심지와 그 주변지역을 집중적으로 강화, 6. 농촌지역의 삶의 질을 보장하며 발전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 7. 적극적인 시민사회의 지원.

전체 경제적으로 볼 때 신연방주는 지난 5년 동안 평균 1.0% 성장하여 0.8% 성장한 구연방주보다 약간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전체적인 생산성은 2005년에 구연방주의 79%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건설업종을 제외한 제조업이 뚜렷한 상승세를 보여 2000년에 서독 수준의 78%에서 2005년에는 85.5%가 되었다. 가공업만을 보면 생산성의 수준이 서독의 80% 정도이다; 생산성의 격차가 매년 약 1.5%씩 감소되고 있다.

동서 간의 소득 격차가 좁혀져서 신연방지역의 소득 수준이 서독의 82%까지 접근하였다.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내용_

연방의회는 통일과 관련된 다른 주제들과 함께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2006년 연례보고서에 관해 논의하였다 :

- 연방정부의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2006년 연례보고서에 대한 보고
- 기민당/기사당, 사민당 제안 : 혁신지원을 통해 동부 재건을 촉진
- 연방정부 보고 : 독일 국가의 개혁 프로그램-혁신 강화-변동 속의 안전을 지원-독일 통일 완결
- 교통 건설 도시개발 상임위원회의 의결추천과 보고에 대한 심의 : 연방정부의 보고-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2005년 연례보고서; 기민당/기사당, 사민당의 의결제안-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2005년 연례보고서; 좌파 의결제안-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2005년 연례보고서
- 좌파 제안에 대한 심의 : 베를린/본 법의 종료법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문서
번호 104

의결추천 및 보고 : 독일 통일 현황에 관한 연방정부의 2006년 연례보고서
2007년 1월 16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교통건설주택상임위원회

내용_

(제목 참조)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문서
번호 105

좌파 질의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변 : 독일 통일 연례보고
2007년 2월 21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좌파

내용_

연방정부는 좌파의 질의 3개에 대해 답변하였다.

- 신연방지역의 전문인력 부족에 대해 : 정치적인 조치에서 우선시되는 것은 전체 경제적인 조건을 적합하게 만들고, 특히 조세정책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특히 중소기업을 위해 저해되는 규제를 제거하고 효율적인 교육체계를 조성하는 것 등이다.
- 일자리를 창출하고 보장하는 것에 대해 :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반적인 조건을 개선해야 하며, 투자와 혁신을 지원하고 수요에 부합하는 인프라를 확충하고 산학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젊은 인구가 신연방지역으로부터 유출되는 것에 대해 : 젊고 잘 훈련된 인구의 유출로 인해 발생하는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그들이 살고 있는 해당 지역 또는 도시가 더 매력적인 곳이 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좋은 취직 전망, 사회적 인프라를 포함한 지역 시설, 삶의 질에 대한 평가 그리고 지역의 이미지 등이 다른 중요한 요인들이다.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문서
번호 106

좌파 질의에 대한 연방정부 답변 : 동부 재건을 위한 연방기관의 업무구조
2007년 3월 15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좌파

내용_

연방정부는 좌파의 9가지 질의에 대해 답변하였다.

- 신연방주와 관련된 업무만을 담당하거나 또는 그런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직원의 수 (표)
- 연방 교통건설도시개발부의 지도 하에 동부 재건을 위한 지원업무를 하는 부처의 차관회의의 상시멤버는 연방 경제부, 노동사회부, 재무부, 농림 식품 소비자보호부 그리고 수상청이다. 이 차관회의는 비정기적으로, 주제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개최된다.
- 연방과 주 그리고 지자체 간에 신연방주와 관련된 업무구조(표)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좌파의 질의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변 : 연방기관 내에 “신연방주” 관련 업무를 위한 업무구조

2007년 5월 3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좌파

내용_

연방정부는 좌파의 36개 질의에 대해 답변하였다 :

- 많은 부처에서 신연방주와 관련된 문제를 부처 간 크로스과제로 처리하고 있다. 앞으로 신연방주와 관련된 주제만을 다루는 인력을 확보할 의도는 없다.
- (질의) 신연방주와 관련된 문제를 부처 간의 공동과제로 처리할 수 있기 위해 연방수상실과 각 부처에 어떤 특별한 업무과정과 구조가 존재하는가? 각 부처에서는 신연방주와 관련된 주제를 해당 전문부서에서 처리한다. 그 때 전문적인 시각에서 문제를 처리하면서 신연방주의 특수한 상황에 유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연방정부의 신연방주 특임관직이 연방 교통건설주택부에 속했다. 당시 특임관이 신연방주를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의 차관회의를 시작하였다. 이 회의는 지금까지 다섯 차례 열렸고 회의준비는 공무원 선에서 실무그룹이 담당하였다.
- 예산심의위원회의 회의에서 예산법 11조 3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신연방주와 베를린을 위한 “동부 재건”의 진척에 관한 보고서와 연방정부의 입장이 설명되었다.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좌파의 질의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변 : 독일 통일 현황과 2020년까지의 발전전망에 대하여

2007년 5월 23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좌파

내용_

연방정부는 좌파의 134개 질의에 답변하였다.

- 기본법과 관련하여 : 연방정부는 앞으로도 독일의 동서 지역에서 동등한 삶의 조건을 만들 의무가 있다.
- 재정이전과 관련하여 : 연방정부는 신연방지역으로의 재정이전 상황을 1991년에서 1998년 사이의 기간에만 별도로 파악 기록하였다. 그 시기에 이전된 재정의 총액은 약 6,850억 유로이다. 1999년 이후에는 재정이전에 관한 개별조사를 하지 않았다. 그것은 독일의 양 지역이 점점 하나로 통합되어가고 있는 것의 표현이다(다양한 표)
- 2005년도 신연방주와 베를린에 대한 연방의 초과지원 : 표
- 연방 건설공간계획청(BBR)의 2020/2050년도 공간계획전망에 따르면 독일 인구는 2020년에 총 0.5%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8천 2백 5십만에서 8천 2백 십만으로). 신연방주에서는 약 6.7%의 인구감소가 예상된다.(표)
- 연대협약 II의 틀에서 신연방주와 베를린은 균형재정배분법 11조 3항에 따라 특별수요에 대한 연방보조금을 받는다. 이 보조금은 아직 남아 있는 인프라구조 보충의 필요성과 같이 분단으로 인해 발생한 특수한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그리고 비대칭적으로 낮은 지자체의 재정능력에 균형을 잡기 위해 사용된다.(표)
- 신연방주는 2000년에서 2006년 사이의 마지막 지원기간 동안 총 195억 5천만 유로의 유럽연합의 재원을 받았다. 그리고 연방정부가 관리하는 “유럽지역개발기금”(ERDF) 그리고 “유럽사회기금”(ESF)에서 34억 유로가 신연방주에 지급되었다.(표)
- 신연방주 민간 계의 순자산은 1993년 이후 약 63% 증가하였다(실질증가 42%).
- 신연방주와 구연방주의 기업규모에 관하여 : 표를 통해 설명.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문서
번호 109

연방정부의 답변 : 기본적인 문제와 연방 수상실의 신연방주 관련 업무 협력과의
공석을 채우는 것에 대해

2007년 7월 20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좌파

내용_

연방정부는 좌파의 서면질문에 대해 답변하였다 :

2005, 2006 그리고 2007년에는 신연방주 내각위원회가 신연방주의 주정부들과 정치적 의
견을 교환하기 위해 3차례 모임을 가졌다.

연방정부의 활동과 결정에 관한 개별 부서와 공무원의 기여에 관해서는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문서
번호 110

연방정부 답변 : 연방 교통 건설부 신연방주국 내의 공석에 관해
2007년 8월 10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좌파

내용_

공석이었던 7.5개의 자리 중에서 3개는 이제 인원이 확충되었고, 2.5개의 자리를 충원하기 위한 절차가 마지막 결정단계에 있다. 2개의 공석인 자리를 충원하는 작업은 선발되었던 사람이 갑자기 거부하여 재선발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 두 자리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충원될 것이다. 7.5개의 공석 중에서 6.5개의 자리는 고급공무원에 해당하는 자리이다.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문서
번호 111

대정부 질의 : 독일 통일 현황에 관한 연방정부의 2007년 연례보고서
2007년 9월 19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연방의회

내용_

대정부 질의 :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2007년 연례보고서에 대해 연방정부 신
연방주 특임관인 볼프강 티펜제가 모두 설명을 하고 의원석에서 나온 9개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였다.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내용

연방정부는 연방의회에 100쪽의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2007년 연례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신연방주는 2005년과 2019년 사이에 연대협약 II의 바구니 I의 틀에서 제공될 1,050억 유로의 특별 수요에 대한 연방보조금을 목적에 부합하며 효과적으로 사용할 의무가 있다. 연방정부의 신연방주 특입관은 2006년 11월에 신연방주들과 바구니 II를 통해 지불되는 연방정부의 지원에 대해 합의하였다. 바구니 II의 대상은 현재 경제, 혁신, 연구와 개발, 교통, 도시건설, 지역 재건과 스포츠 영역에서의 지원 프로그램이다. 협의한 바에 따르면 2005년에 지원될 바구니 II의 규모는 약 58억 유로였다.

신연방지역의 총생산은 실질적으로 3.0%로 2.7%를 기록한 구연방주보다 조금 높다. 주민 일인당 경제성과는 2006년에 신연방지역이 서독의 수치에 약 2/3였다(67.3%). 신연방주의 조세력은 서독의 조세력의 37.8%이며 근로소득은 서독의 77% 수준이다.

건설업은 2006년에서 4.4% 증가된 총가치생산의 성과를 거두어 1995년 이래 처음으로 신연방주의 총경제발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신연방지역의 실업자 수는 2005년에 비해 2006년에 약 13만4천명이 줄어서(-8.3%) 약 148만명이 되었다. 실업률은 2005년의 18.7%에서 17.3%로 감소하였다. 그래도 구연방지역의 실업률에(9.1%) 비교하면 신연방지역의 실업률이 여전히 두 배나 높다.

2010년대에는 신연방지역이 인구변동의 결과로 인해 숙련 노동력을 대체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노동시장에서 노동력 부족현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신연방지역에서 극우파적인 현상과 경향이 지속해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극우파 정당이 신연방지역의 주의회에 의석을 차지할 정도로 깊게 뿌리를 내렸다.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내용_

연방의회는 통일에 관한 다른 주제들과 함께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2006년과 2007년 연례보고서에 관해 논의하였다 :

-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2007년 연례보고서에 관한 심의(의사일정 33a)
- 교통 건설 도시개발 상임위원회의 의결추천과 보고에 대한 심의-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2006년 연례보고서에 대해;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2006년 연례보고서에 대한 기민당/기사당, 사민당의 의결제안에 대해(의사일정 33b).

(총회의 보고서에 기록된 통일에 관한 다른 사안들 : 11월 9일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억; 자민당, 기민당/기사당, 녹색당, 좌파의 제안-자유와 통일 기념비의 설치).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문서
번호 114

좌파 의결제안 : 독일 통일 현황과 2020년까지의 발전전망에 관해
2008년 3월 5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원내 좌파

내용_

좌파는 연방의회에 '독일 통일 현황과 2007년까지의 발전전망'에 관한 제안을 제출하였다.

그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2008년 연례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동시에 신연방주의 주정부와 지자체 노조 그리고 시민단체 대표들과 합의 하에 2019년까지의 동부 재건을 위한 전체적인 계획을 작성하여 2008년 10월에 연방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제출해야 한다.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내용_

연방의회는 통일과 관련된 다른 주제들과 함께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2006년과 2007년 연례보고서에 관해 논의하였다 :

- 좌파의 제안에 대한 원로회의의 의결추천과 보고에 대한 심의 : 연방의회에 신연방주와 취약구조지역을 위한 상임위원회 도입(의사일정 24d)
- 좌파의 제안에 대한 심의 : 독일 통일 현황과 2020년까지의 발전 전망에 대하여(의사일정 24b)
- 좌파 제안에 대한 심의 : 신연방주를 위한 자원 사용의 합목적성과 투명성의 증대(의사일정 24d)

(그리고 좌파의 제안 : 신연방주의 대규모 연구기관 설립)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내용_

연방정부는 연방의회에 108쪽의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2008년 연례보고서를 제출하였다. 2007년에 신연방지역의 경제는 전년도에 비해 2.2% 성장하였다(2005년 0.4%, 2006년 1.9%). 2000년 이후 신연방지역에서의 산업가치생산이 총 44% 정도 증가하였다. 신연방지역의(베를린 제외) 산업가치생산이 독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의 15.3%에서 2007년의 19.3%로 증가하였다. 참고로 구연방주의 성장률은 24.4%였다.

전년도에는 전체 독일의 자동차산업에서 생산한 제품의 11.9%가 신연방주의 자동차산업 단지에서 생산되었다(2006년 10.0%). 2000년에서 2007년까지 차량생산이 81% 증가하였다. 전자산업과 정보처리분야에서도 2000년 이후 생산이 약 134% 증가하였다. 화학산업 또한 2000년 이후 생산이 48.4% 증가하였다.

첨단산업 클러스터-선발경쟁의(총 지원금 2억 유로) 1차 선발과정에서 5개가 선발되었는데 그중에 2개가 신연방주에서 지원하였다. 작센-안할트, 작센 그리고 튀링겐주의 “중부독일 솔라벨리” 클러스터와 작센주의 “Energy Efficiency Innovations from Silicon Saxony-Cool Silicon” 클러스터였다.

독일에 설치된 풍력발전기기의 약 40%가 신연방지역에 있다. 2006년에 풍력발전기 증설의 절반이 신연방지역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브란덴부르크와 작센-안할트에 집중되었다.

2007년 신연방지역의 실업자 수는 2006년과 비교해 평균 190,000명 감소되어(-12.8%) 129만명이 되었다. 실업률은 약 2% 감소하여 2006년의 17.3%에서 15.1%로 줄었다.

연방 건설공간계획청의 인구변동에 관한 예측에 따르면 신연방주의 주민 수는 2025년까지 2005년에 비해 11.4%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2008년에 “농업구조와 해안보호 개선”을 위한 공동체과제 프로그램에 6억 6천만 유로가 지원되어 (2007년 6억 1천 5백만 유로) 연방재원이 오랫동안 다시 전년도보다 늘었다. 그 중에서 2억 1천 5백만 유로가 신연방주를 위해 사용될 것이다. 특히 의미가 있는 것은 농촌지역에 광케이블을 설치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이다.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원내 기민당/기사당, 사민당

내용_

기민당/기사당과 사민당은(여당) 연방의회에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2008년 연례보고서에 대한 의결제안을 제출하였다. 연방의회가 연방정부에게 다음과 같은 사안을 실행하기를 요구하라는 제안이다 :

- 동독의 평화적인 혁명과 민주적 재출발 그리고 독일 통일 20주년을 기념하는 적절한 행사와 프로젝트를 통해 동독 역사의 청산을 강조하고 기념관의 건립계획을 실현할 것
- 앞으로 몇 년 간의 연방예산에서 “지역 경제구조 개선”을 위한 공동체과제 프로그램의 재원을 높은 수준으로 증액 보장할 것
- 혁신적이고 조직의 경계를 넘어서는 능력 네트워크를 집중적으로 확충하고 그것을 엑셀런스로 추가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연방주를 지원할 것
- 유럽교통축 1을 (메시나-뮌헨-에어푸르트-할레/라이프찌히-베를린) 로스토크를 통해 자스니츠를 지나 스칸디나비아까지 연장하는 것과 교통축 22를 (프라하-드레스덴-베를린-로스토크/자스니츠) 2010년에 계획된 TEN-기본지침의 개정에서 프로젝트로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평화혁명 20주년이 되는 2009년에는 입법부 임기가 종료되기 이전에 제출하며 정기적인 보고를 지속할 것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원내 녹색당

내용

녹색당은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2008년 연례보고서에 대한 의결제안을 연방 의회에 제출하였다. 연방의회가 연방정부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요구하도록 요청하였다 :

- 연대협약의 재원이 신연방지역 ‘건설에 적합하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성장과 지속성을 도와줄 수 있는 지출의 이론에 (WNA) 따라 시대에 맞는 투자개념을 도입할 것
- 신연방주와 베를린을 위해 연방정부가 (연대협약 II의 바꾸니 II를 통해) 제공하는 초과지급분을 신연방지역의 교육과 연구환경의 강화를 위해 적절하게 사용할 것
- 유럽연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농업정책 건강성 검증의 틀에서 (신연방지역의 농업이) 더 좋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발휘할 것
- “농업구조와 해안보호의 개선”을 위한 공동체과제를 “농촌지역 개발”을 위한 공동체 과제로 발전시키고 특히 재정적으로 더 좋은 조건을 제공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에서는 지속적으로 퍼주기만하는 방식의 지원사업을 금지하고 그 대신에 일자리 창출, 환경보호, 자연보호, 종의 다양성, 기후보호, 교육 그리고 사회적 자원의 강화 등과 같이 뚜렷이 볼 수 있는 사회적 성과를 이루어내는 것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 것
- 토지 소유권을 연방이나 연방소유 기업이 갖고 있는 농업용지와 임업용지의 민영화를 새롭게 조정할 것
- 연방 프로그램 “민주주의를 위한 능력-극우주의에 대항하는 상담네트워크”에서 서독을 더 지원하기 위해 신연방지역을 위해 지원하는 재원을 축소하지 말 것

출처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원내 좌파

내용_

좌파는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2008년 연례보고서에 관한 의결제안을 연방의회에 제출하고, 연방의회가 연방정부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청하기를 요구하였다 : 신연방지역에서 동등한 삶의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고려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 신연방지역의 연금가치를 서독수준에 맞출 것
- 모든 조치를 검증하고 세금이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연방지역과 서부독일의 구조가 취약한 지역에 법령이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Gesetzesfolgenabschätzung-GAF)를 도입할 것
- 연대협약의 재원을 줄이는 속도를 늦출 것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내용_

연방의회는 통일과 관련된 다른 주제들과 함께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2008년 연례보고서에 관해 논의하였다 :

-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2008년 연례보고서에 관한 연방정부의 설명(의사일정 19a)
- 연방의회 교통건설도시개발상임위원회의 의결추천과 보고에 대한 심의 :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2008년 연례보고서’와 관련한 연방정부의 설명에 대한 기민당/기사당과 사민당의 제안에 대해;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2007년 연례보고서’와 관련한 연방정부의 설명에 대해(의사일정 19b)
- 좌파의 제안 ‘신연방주를 위한 재원사용의 투명성과 합목적성의 증대’에 대한 교통건설도시개발 상임위원회의 의결추천 및 보고에 대한 심의(의사일정 19c)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문서
번호 121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2008년 연례보고서에 대한 의결추천 및 보고
2009년 5월 25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교통건설주택상임위원회

내용_

연방의회 교통건설도시개발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추천하였다 :

- 2008년 11월 12일자 기민당/기사당 사민당의 의결제안 수용 :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2008년 연례보고서
- 2008년 11월 12일자 좌파의 의결제안 거부 :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2008년 연례보고서
- 2008년 9월 24일 연방정부의 보고 수용 :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2008년 연례보고서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내용_

연방의회는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2008년 연례보고서에 관해 논의하였다 :

- 교통건설도시개발상임위원회의 의결추천과 보고에 대한 심의 :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2008년 연례보고서'에 관한 기민당/기사당, 사민당의 의결제안;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2008년 연례보고서'에 관련된 연방정부의 보고에 대한 좌파의 의결제안;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2008년 연례보고서'에 관련된 연방정부의 보고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내용_

연방정부는 128쪽의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2009년 연례보고서를 연방의회에 제출하였다.

2009년은 특별한 방식으로 1989년 가을 동독에서 일어났던 평화적 혁명, 용감한 저항 그리고 시위를 기념하는 해이다. 이 사건들은 20년 전에 동부독일에서 민주주의의 주춧돌이 되었고 장벽의 붕괴와 함께 독일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디딤돌이 되었다.

신연방주에서 국내총생산은 일인당으로 계산하였을 때 2000년에서 2008년 사이에 약 14.1%(베를린을 제외하면 19.1%), 반면에 구연방주에서는 9.1% 증가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인 경제발전을 보면 독일의 동부와 서부 간의 경제성과의 격차가 여전히 크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다. 그 원인은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 거기에는 예를 들어 자본력이 강한 대기업의 수가 비교적 적다는 것도 포함된다. 신연방지역의 경제는 거의 중소기업이 주를 이루고 소수의 대기업이 있을 뿐이다.

신연방지역에서 제조업의 임금비용은 2008년에 구연방주 수준의 약 88% 정도일 뿐이었다. 2008년 11월에 신연방지역의 실업은 실업자수가 백만 삼천명이 되었고 비율로는 11.8%로 1991년 이후 최저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독과 비교하면 (6.0%) 신연방지역의 실업률이 여전히 두 배 높다.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의 틀에서 연방노동청과 연방노동사회부는 신연방주에서 약 51억 유로의 비용을 지출하였다. 그 결과 2008년에 신연방주에서는 사회법 III권에 해당하는 노동지원 영역에서 평균 258,000명 그리고 308,000명이 구직자를 위한 기본보장영역에서 지원을 받았다.

신연방주는 유럽연합의 구조기금을 통해 2007년에서 2013년까지 약 151억 유로의 지원금을 받았다. 거기에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재원 15억 유로 그리고 중요한 노동시장 정책을 위한 프로그램과 교육프로그램을 위해 약 13억 유로를 유럽연합으로부터 받았다. 경기활성화를 위해 2009년과 2010년에 기업의 조세부담을 70억 유로씩 절감해 주기로 한 2008년의 기업세 개혁 이후 연방정부는 2008년 가을에 총 300억 유로에 달하는 첫 번째 경기부양책을 2009년과 2010년에 실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세금부담을 줄이고 사회보장 비지출을 안정화하며 가족에 투자하기 위한 정책조치”는 2008년 10월 7일에 결정되었다.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문서 번호 124 조직령 : 연방정부 신연방주 특임관직을 연방내무부로 이전
 2009년 10월 28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수상

내용_

(제목 참조)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문서 번호 125 좌파 롤란트 클라우스 의원의 질의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변 : 연방 교통 도시개발부로부터 내무부로의 신연방주 관련 부서의 이전 일정
 2009년 12월 4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연방의회 원내 좌파 롤란트 클라우스 의원

내용_

(제목 참조)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문서
번호 126

좌파 롤란트 클라우스 의원의 질의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변 : 연방 교통 도시개발부로부터 내무부로의 신연방주 관련 부서의 이전

2009년 12월 30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연방의회 원내 좌파 롤란트 클라우스 의원

내용_

(제목 참조)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문서
번호 127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초안에 대한 연방정부의 설명 : 독일 통일에 대한 연방정부의 2009년 연례보고서

2010년 9월 17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연방정부

내용_

(제목 참조)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내용

연방정부는 148쪽의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2010년 연례보고서를 연방의회에 제출하였다.

2010년은 1990년과 그 후에 신연방지역에서의 변동과 민주주의의 건설에 대한 기억이 특별한 한 해였다. “통일의 이정표”라는 책자를 통해 그 과정을 다시 돌이켜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국내총생산을 일인당으로 계산해 보면 2000년과 2008년 사이에 신연방주에서 약 14.5%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반면에 서독에서는 9.2% 증가했을 뿐이다. 2009년에는 신연방지역이 경제금융위기의 타격을 약하게 받았던 덕에 이 지역의 일인당 국내총생산이 서독의 73%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전년도와 비교한 국내총생산의 실질적인 변화는 2009년에 독일 전체가 -4.9%였다. 그러나 신연방지역의 경제성과는 -2.9%로 (베를린을 제외한 신연방주는 -3.5%) 서부독일보다는 약간 좋은 수치를 보였다.

미래를 위한 투자법을 (지자체 투자 프로그램) 통해 연방은 연방주와 지자체에 교육 인프라와 다른 인프라 구조를 위한 추가적인 투자를 위해 총 100억 유로의 재정을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2010년 8월 15일까지 제출된 총 38,500개의 투자계획안 중에서 11,100개가 신연방주에서 제출되었다.

모든 민간 경제활동인구의 실업률을 보면 신연방주에서 실업률은 2006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 2005년의 18.7%에서 2008년에 13.1%로 많이 감소하였고 2009년에는 13.0%로 또 한번 약간 감소하였다.

신연방주의 의사 수는 1993년에서 2009년까지 약 22.7% 증가하여 45,865명이 되었다. 그러나 신연방지역의 일부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의사부족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못하였다. 2004년 1월 1일부터 동독의 의료체계 폴리클리닉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상된 의료센터의 설치가 가능해졌다. 의료보험의 인가를 받은 의사들의 연방협의회의 2005년 의료센터조사에 따르면 2005년 9월 30일 현재 의료센터의 수가 연방 전체에 269개였는데 반해 2009년 12월 31일에는 1,454개로 증가하였다.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원내 좌파

내용_

좌파는 연방의회에 합의되었던 “독일 통일 20년” 논의에 대한 의결제안을 제출하였다. 연방의회가 연방정부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요구하도록 요청하였다 :

- 신연방지역을 위한 법률의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
- 신연방지역이 갖고 있는 좋은 경험들을 통해 배우는 것을 보건의료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공공 보육시설의 수준과 같이 다른 정치분야에도 확대할 것
- 연금점수 산정 기준에서 신연방지역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기존의 계산 방식은 유지하면서 (연금점수 1점 = 신연방주 주민 연간 소득 26,900유로, 구연방주 주민 32,000유로) 신연방주 연금 1점의 가치를 서독 연금 1점의 가치와 동등하게 만드는 법안을 조속히 제출할 것 (2012년 현재 신연방주 1점 = 24.92유로, 구연방주 1점 28.07유로)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원내 사민당

내용

사민당은 연방의회에 합의되었던 “독일 통일 20년” 논의에 대한 의결제안을 제출하였다. 연방의회가 연방정부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요구하도록 요청하였다 :

- 아래에서 제시되는 모든 요구사항에 대해 “삶의 수준을 동등하게 만드는 것”이 최우선순위를 가진다는 원칙 하에서 실행에 옮길 것
- 이후 10년 간 연대협약 II가 종료될 때까지 (2019) 세입감소로 인한 추가부담을 신연방 지역의 연방주와 지자체에 넘기지 말 것
- 이미 좋은 성과를 보인 “신연방주 도시재건” 프로그램을 기민당/기사당과 사민당 간의 연정에서 합의한 기반 위에서 2016년까지 현재의 규모로 유지할 것
- 독일 통일 교통 프로젝트를 조속히 완료할 것
- 신연방지역의 경제활동인구의 자격수준을 향상시킬 것
- 이미 널리 공고되었고 2009년 11월 메제베르그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결정된 총체적인 “취약구조지역을 위한 인구-계획안”을 조속히 제출할 것
- 토지이용 관리회사의 호수 수로 매각방식에 관한 협상에서 호수의 무제한적이며 공적인 이용을 제약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속히 합의된 결론을 이끌어 낼 것
- 2014년부터 시작되는 유럽연합 지원의 다음 단계에 대한 협상에서 신연방주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것.

출처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문서
번호 131

총회의 토론 : 독일 통일 20년
2010년 9월 30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내용_

연방의회는 독일 통일 20년에 관해 논의하였다.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문서
번호 132

의결추천 및 보고 : 독일 통일 현황에 관한 연방정부의 2010년 연례보고서
2010년 12월 8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내무 상임위원회

내용_

(제목 참조)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원내 녹색당

내용_

녹색당은 연방의회에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2010년 연례보고서에 대한 의결제안을 제출하였다. 연방의회가 연방정부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하도록 요청하였다 :

- 연대협약 II의 바구니 I과 마찬가지로 연대협약 II 바구니 II의 경우에도 2005년에 결정된 재정 규모에서 필요한 감축단계를 확정하여 그것이 구속력을 갖도록 할 것
- 신연방지역을 위해 특히 중요한 경제지원 도구인 “지역경제구조 개선을 위한 공동체과제” (GRW)와 “농업구조와 해안보호 개선을 위한 공동체과제” (GAK) 프로그램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조정하여 퍼주기식의 지원을 방지할 것
- 전국적으로 최저임금을 도입하여 신연방지역에서 저임금분야를 줄일 것
-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의 구조적인 재정부족문제를 해결할 것
- 연대협약 II의 바구니II의 확정된 항목인 도시건설지원에 대한 재원감축에서 신연방지역을 위해 중요한 프로그램인 “신연방지역 도시재건”, “사회적 도시”, 신연방지역 회복과 개발을 위한 조치, “신연방주 문화재보호” 등을 제외할 것
- 이번 의회 임기 내에 연금체계를 단일화하는 작업을 시작할 것
- 신연방지역에서의 대규모 농업구조가 형성되는 것을 더 이상 지원하지 말 것
- 토지이용개발회사처럼 연방에 속한 기업이 소유한 농업용지와 임업용지의 민영화를 중지하고 토지이용개발회사의 민영화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원내 좌파

내용_

좌파는 연방의회에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2010년 연례보고서에 대한 의결제안을 제출하였다. 연방의회가 연방정부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하도록 요청하였다 :

- 연금법 또는 희생자보상법과 같이 법 적용에서 아직도 신연방지역의 주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내용을 종결할 법안을 제출할 것
- 신연방지역을 위해 법의 결과가 주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모든 법률과 정책이 신연방주와 경우에 따라서는 서독의 취약구조 지역에 주는 영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할 것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문서
번호 135

총회의 토론 :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2010년 연례보고서
2010년 12월 17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내용_

연방의회는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2010년 연례보고서에 관해 논의하였다.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원내 좌파

내용_

좌파는 '신연방지역을 위한 차관을 임명'하는 제안을 연방의회에 제출하였다. 연방의회가 연방정부에게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하도록 요청하였다 :

- 연방정부의 신연방주 특임관직을 신연방지역 차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연방수상실에 소속되도록 할 것
- 연방정부의 정부업무규칙을 조정하여 신연방지역 차관이 연방정부의 회의에 참석할 권한을 부여하고 기본적으로 정치적 의미가 있는 모든 문제에 결제하는 형태로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할 것.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문서 번호 137 서면질의 : 연방정부 신연방주특임관의 기능
2011년 4월 29일

담당자 / 기관_ 좌파 프랑크 템펠 의원, 연방정부

내용_

(제목 참조)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문서 번호 138 총회의 토론 : 신연방주 차관
2011년 5월 12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내용_

연방의회는 좌파의 제안 ‘신연방지역 차관 임명’에 관해 논의하였다.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문서
번호 139

의결추천 및 보고 : 신연방주 차관 임명
2011년 6월 20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내무 상임위원회

내용_

(제목 참조)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내용

연방정부는 84쪽의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2011년 연례보고서를 연방의회에 제출하였다. 작년에 독일 통일 20주년의 기쁨을 계기로 본 다양하고 광범위한 결산들은 통일과정이 새로운 단계에 도달하였음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이제는 신연방주의 발전에 대한 평가에서 지배적이었던 동서 간에 “동등함과 추격하는 시각”이 다양한 고찰방법에 의해 대체되어야만 한다.

베를린을 제외한 신연방주는 연방정부의 신연방주 특임관의 조정 하에 연방정부와 함께 “인구변동 속에서 기본사회보장을 미래에 맞추어 계획하기”라는 정책계획을 결정하고 일반에 공개하였다.

신연방지역의 일인당 국내총생산은 서독의 73%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서독의 구조취약지역과 비교하면 신연방지역의 이들 연방주들의 수준에 83%까지 도달하였다. 9.5%의 성장률을 보인 생산업은(베를린 제외 10.3%) 신연방지역의 경제를 이끄는 동력이다.

신연방주의 지역을 지원할 때 유럽연합의 지원들을 고려해야 한다. 소위 말하는 유럽연합 행정부의 “지역지침”과 승인된 지원지역지도를 통해 2007년에서 2013년까지의 기간 동안 지역지원이 허용되는 지역을 확정하고, 지원가능 비용을 제한하였으며, 최대 허용되는 지원금 비율도 지정하였고 그리고 지역지원에서 주의해야 할 절차의 세부사항도 규정하였다. 베를린을 제외한 신연방주는 이 규정에 따르면 예외없이 유럽연합-비교에서 구조취약지역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라이프찌히, 할레 그리고 브란덴부르크의 남서부는 2011년 초에 최대 지원금수혜 지위를 상실하였다.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원내 좌파

내용_

좌파는 연방의회에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2011년 연례보고서에 대한 의결제안을 제출하였다. 연방의회가 연방정부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하도록 요청하였다 :

- 아직까지도 신연방주의 주민에게 불리한 연금법을 종료할 법안을 제출할 것
- 최저임금도입과 같이 앞으로 제출된 법안에서는 동서를 구분하는 것을 중지하며 동부 독일과 서부독일의 주민을 동등하게 대우할 것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원내 사민당

내용_

사민당은 연방의회에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2011년 연례보고서에 대한 의결제안을 제출하였다. 연방의회가 연방정부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하도록 요청하였다

- 기존의 동서의 “동등성과 추격에 관한 전망”을 분화된 고찰방법으로 대체하자는 연례보고서의 표현과 달리 앞으로 “삶의 수준의 동등함”을 달성하는 것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둘 것
- 어떤 방식으로든 연대세를 감축하거나 혹은 폐지하려는 의도를 포기할 것
- 성공적인 프로그램인 “신연방지역 도시재건” 그리고 “사회적 도시” 등을 “대연립정부”의 합의에 기초하여 2010년의 지원규모를 2016년까지 유지하면 구 채무지원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
- 신연방지역의 인구변동에 대한 총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 연방정부의 일부 구성원이 최근 발표한 최저 임금에 대한 요구에서 신연방주를 “실험 지역”으로 이용하지 말 것
- 신연방지역의 연구 개발의 인프라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을 제출할 것
- 새로이 시작될 유럽연합 지원기간에 대해 현재 진행되는 협상에서 신연방주의 이익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할 것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문서
번호 143

총회의 토론 :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2011년 연례보고서; 신연방
주차관

2011년 12월 16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내용_

연방의회는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2011년 연례보고서를 통한 연방정부의 보고와 좌파의 제안 '신연방주 차관직 신설'에 대한 내무상임위원회의 의결추천과 보고에 관해 논의하였다.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문서
번호 144

총회의 질의 : "신연방지역의 경제 현황과 전망"에 대한 평가서

2012년 3월 7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녹색당 브리타 하셀만 의원

내용_

연방의회의 질의시간에 녹색당의 브리타 하셀만 의원이 "신연방주의 경제 상황과 전망"에 관한 평가서를 통해 특히 동서지방의 구조취약지역의 지원을 위해 얻은 결론'을 물었다. 크리스토프 베르그너, 내무부 입법차관 겸 신연방주 특임관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 "연방정부에게 동등한 생활수준을 만드는 일은 여전히 중요한 정치적 목표이다. 동부 재건의 틀에서 이룬 성과가 이 평가서를 통해 의심되는 것은 아니다. 연대협약 II는 논란의 대상이 아니며 연방정부가 지난 몇 년 간 실천한 지원 또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DIP

